

김정일 연구 모은 글

1999.12

통일부
모은 글

•
•
•

이 책은 북한의 통치자 김정일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한 글들을 묶어 펴낸 것이다. 저자들의 원고를 수정하거나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실었으며, 그 내용이 통일부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다. 이 책이 김정일과 북한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

• 차 례 •

1. 김정일의 성장과정과 후계체제 확립 .(정창현)	3
1. 김정일의 출생과 성장과정	8
2. 김정일 등장과 후계자 결정과정	38
3. 유일지도체제(후계체제)의 확립	52
4. 맺음말	88
2. 김정일의 개인적 특성	(박갑수) ... 95
1. 신체적 특성	97
2. 정신적 특성	108
3. 행태적 특성	117
4. 접촉 유의사항	123
3. 김정일의 통치력	(고유환) .. 127
1. 통치스타일과 통치력 강화수단	129
2. 김정일의 통치방식과 정책성향	143
3. 김정일시대 개막과 체제정비 및 발전전략	153
4. 김정일의 권력기반	(김영수) . 185
1. 공식적인 권력기반	187
2. 인맥 및 지지그룹	200
3. 권력기반의 사회환경	267

5. 김정일 정권의 정치구조와 정책	(류길재) . 285
1. 김정일 정권의 형성과정	290
2. 김정일 정권의 정치구조	315
3. 김정일 정권과 개혁·개방	344
4. 김정일 정권과 남북한 관계	372
5. 김정일 정권과 대외관계	389
6. 김정일 정권의 정책과 북한의 정치체제 전망	403



김정일의 성장과정과 후계체제 확립

정창현(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기자)

1. 김정일의 출생과 성장과정
2. 김정일 등장과 후계자 결정과정
3. 유일지도체제(후계체제)의 확립
4. 맺음 말

· 제 1 장 ·

김정일의 성장과정과 후계체제 확립

북한이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를 맞고 있다. 김정일이 1974년 후계자로 지명된 후 24년만에 세대교체가 완료됐다. 1997년 10월 3년상을 마친 김정일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에 공식 취임했다. 다음해 9월 5일 헌법개정을 통해 김정일은 북한의 최고지위로 격상된 국방위원장에 취임했다. 1994년 7월 김일성주석이 사망한 후 4년만이다. 김정일체제의 공식출범은 '혁명2세대(빨치산2세대)'의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1994년 김일성주석 사망 후 계속된 김정일의 승계 가능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돼 버렸다.

북한은 '수령제 정치체제'로 운영되는 사회주의국가다. 모든 것이 수령에게 집중돼 있는 독재체제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북한사회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의미는 절대적이다. 현재 북한의 수령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다. 그가 전권을 쥐고 북한사회를 움직이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대화의 상대는 당연히 김정일국방위원장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김정일에 대한 인식은 과거의 선입견과 불확실한 풍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추측과 설이 난무하고 있고, 연구논문에도 이러한 설들이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소개되고 있다. 기껏해야 '매우 특별한 인물', '수수께끼의 인물'이라는 정도의 인식이 고작이다. 확인되지

않은 첩보로 그려진 김정일의 면모는 한 국가의 최고통치자와는 거리가 멀다.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는 인물, 남북정상 회담의 한 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그의 실체에 너무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¹⁾

1997년 망명한 황장엽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김정일을 '위험한 인물'로, '통치능력이 떨어지는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10월과 올해 10월 1일 두차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이와는 다른 인상을 피력했다. 지난해 평양에서 돌아온 정주영회장은 김정일이 “논리가 정연하고 활발하다”고 평했다. 설사 연출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연세도 드시고 거동도 불편하다고 해서 직접 왔다”며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 가 정주영회장을 만난 사실이나 정회장을 극구 가운데 자리에 모시고 기념촬영을 한 사실은 우리에게 극히 이례적인 모습으로 비춰졌다.

올해 10월 12일 (주)현대 아산이 작성해 통일부에 제출한 '북한 방문결과보고'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록'을 보면 김정일은 한국사정에 대해 상당히 밝고, 노련한 인물임을 보여준다.²⁾

이러한 서로 다른 평가는 김정일이 우리에게 여전히 미지의

1) 중앙일보의 유승삼(劉承三) 논설위원은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인 1994년 7월 12일 '총체적 북한 무지(無知)'란 제목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은 자성과 의문을 던졌다.

“우리가 북한사정에 이렇게 무지하고 어두울 수가 있을까. 땅을 밟고 있고, 북한의 일거수 일투족이 그대로 우리의 운명과 직결되는 환경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대북한 정보가 이토록 알팍하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견해도 이처럼 천차만별일 수가 있는 것일까..... 이 기막힌 현실은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무지를 드러내준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김정일이 후계자가 될 것이 확실해진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들이 김정일이란 인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나.”

2) 김당, 「김정일-정주영·정몽헌 부자 대화록-“남쪽 발전한 것은 올림픽 유치했기 때문”」, 『신동아』, 1999년 11월호.

인물임을 보여준다.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은 3월 24일 통일부의 국정개혁 보고회의에서 “북한 김정일을 다시 보라”고 말했다. 그동안 김정일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으니 이제 그의 실체를 제대로 봐야 한다는 지시였다. 김대통령은 “과거 정권은 김정일을 형편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그렇지 않다. 우리는 김정일이 아버지가 죽은 뒤 북한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은 김정일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등장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따라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고위급 회담, 더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대중-김정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알아야 한다. 우리 내부에 잠재해 있는 잘못된 ‘우상(偶像)’을 깨고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체제에 대해 객관적인 인식을 가질 때 성공적인 회담과 진정한 남북의 화해와 협력시대를 열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김정일의 출생과 성장과정, 후계자로 부상해 자신의 권력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1. 김정일의 출생과 성장과정

1) 출생을 둘러싼 논쟁

김정일은 지금까지 온갖 의문과 신비에 휩싸인 인물로 묘사된다. 그의 직책과 저작(著作)들이 공개되고 있지만, 겉모양 이외에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수많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논란만 무성하다. 그의 출생연도와 출생지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다. 북한은 김정일이 1942년 2월 16일 백두산밀영에서 태어났다고 선전한다. 반면, 남한학계에는 이에 대한 이설이 다양하게 나와 있다.

먼저 진성계는 북한의 선전과 달리 김정일이 1941년에 소련땅 시베리아(사마르칸트)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다.³⁾ 북한이 세습체제 구축과정에서 김정일 출생연도를 1941년으로 계속 사용해 오다가 1982년부터 아무런 해명도 없이 출생연도를 1942년으로 고쳤고, 출생지도 백두산으로 조작해 공식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김일성이 1940년 10월에 소련땅으로 넘어갔다는 점, 사마르칸트가 중앙아시아지역에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는 김일성이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근처의 브야츠크에서 태어났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중앙일보가 88여단에서 한때 김정숙과 같이 생활했던 이재덕의 증언을 보도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수용됐다.⁴⁾ 이때까지만 해도 소련지역으로 넘어간 김일성의 활동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소련지역으로 넘어간 동북

3) 진성계 편저, 1990 『김정일-그는 누구인가』, 동화연구소, 32쪽

4) 『북한당국, 김정일출생지 조작했다-백두산 태생'은 거짓, 소 하바로프스크서 낳아』 『중앙일보』 1991.10.4. 이기봉, 1993 『김정일, 그는 어떤 인물인가』 남북문제연구소; 徐大肅著, 吉田博司 역, 1996 『金日成과 金正日』 암파서점 등이 모두 김정일의 브야츠크 출생설을 주장했다.

항일연군 병력이 하바로프스크 북방에 있던 브야츠크(일명 북아영)와 블라디보스톡 북방의 보로실로프(일명 남아영)에 분리돼 근거지를 마련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았다. 특히 남아영이 북아영으로 합쳐져 1942년 8월에 88여단이 출병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만주 항일빨치산에 대한 일제의 탄압으로 내가 속해 있던 동북항일연군 3군 3지대가 소련영내의 하바로프스크 북쪽 80km지점에 있는 브야츠크 아영으로 이동을 완료한 1941년 11월 김정숙을 처음 만났다”며 “김정숙은 당시 김일성과 결혼, 임신한 상태였으며 곧 김정일을 낳았다”는 이재덕의 증언이 잘못됐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김정일이 보로실로프에 자리잡고 있던 동북항일연군 남아영에서 태어났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김일성이 브야츠크로 이동한 시점(1942년 8월)과 김정일의 출생(1942년 2월) 사이의 불일치를 파악해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다. 이종석은 김일성과 김정숙의 실질적인 부부생활은 김일성의 제2방면군이 소만국경 근처 소련 영내로 이동해 간 뒤인 1941년경부터 이뤄졌을 것이라며 “당시 김일성부대가 블라디보스톡 시 근처의 보로실로프 아영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숙은 김정일을 그곳 아영이나 아니면 블라디보스톡 시내의 병원에서 출산했을 것”으로 추측했다.⁵⁾ 허만위도 일제 기록과 중국에 거주하는 항일빨치산 출신의 증언을 통해 김정일이 보로실로프에서 태어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⁶⁾

이 주장은 김일성이 1940년 10월 소만국경을 넘어간 후 1942

5) 이종석, 1995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84쪽

6) 허만위, 1996 「김일성가의 극비 김정일출생지의 허구성」(상)(중)(하) 『북한』 4.5.6월호

년 8월 브야츠크로 이동할 때까지 보로실로프 근처에 건설된 남아영에 거주했다는 점에서 움직일 수 없는 정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정황증거에만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만위가 인용하고 있는 항일빨치산 출신자들의 증언도 엄밀하게 검토해보면 허점투성이다. 허만위의 논문에 실린 몇사람의 증언을 그대로 옮겨본다.

“김정일이 남아영이나 그 부근 어디서 태어났는가에 대해 여영준은 거기까지는 몰라도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1942년 2월까지 김일성부부가 남아영에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김선은 김일성의 처 김정숙이 남아영 부근 소련병원에서 김정일을 낳았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 김선의 진술을 그대로 옮겨보자. '남아영에는 약 10여명의 여성대원들이 있었다. 그중 4명이 아기를 낳았다. 나와 김정숙, 김명화, 김명숙이다. 김정숙은 김일성의 부인이었다. 나의 해산은 1941년 12월이었다. 나는 해산을 병영 안에서 하지 않았다. 시내에 있는 소련병원에서 했다..... 남아영의 나 이외 다른 세사람도 여기 소련병원에서 아기를 낳았다.'”⁷⁾

그러나 여영준의 증언은 김일성부부가 남아영에 있었다는 점만을 확정하는 것이고, 김선은 김정일의 출생연도를 잘못 증언하고 있다.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다.⁸⁾

7) 허만위, 「김일성가의 극비 김정일출생지의 허구성」 『북한』1996.5, 158쪽

8) 실제로 김선은 1997년 3월 연길 자택에서 만난 필자에게 자신의 증언이 왜곡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근거에서 '백두산 출생'을 주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북한은 브야츠크와 보로실로프 출생설을 모두 부정한다.

북한은 김정일이 백두산의 빨치산 밀영지 통나무집(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 막사)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1987년 2월 12일 백두산 밀영을 김정일 혁명사적지로 지정하고, 귀틀집을 지어 성역화(聖域化)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이 1941년 6월부터 1943년 3월까지 이 귀틀집에 있으면서 국내와 장백지구 반일조직들을 지도했다고 주장한다. 이 시기에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것이다.

북한은 1988년 8월 김정일이 태어난 곳에서 216미터 떨어진 백두산 사자봉 자락의 장수봉(해발 1,800미터)을 정일봉(正日峰)이라 이름지었다. 김일성은 1998년 6월 출간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8권에서 김정일이 1942년 2월 16일 새벽 백두밀영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했다.

국내학자들은 김일성 부자의 세습체제를 준비해온 추종자들이 김정일의 출생지가 민족의 영산이요 혁명의 본거지인 백두산인 것처럼 선전함으로써 김정일에게 민족의 정기(精氣)와 혁명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충성심을 고취하려는 속셈이라고 분석한다.⁹⁾

일단 김정일이 1941년이 아닌 1942년 2월 16일 항일유격대 지도자 김일성(金日成)과 항일유격대원 김정숙(金正淑) 사이에서 태어난 것은 확실하다. 김일성이 김정숙을 처음 만난 것은 1935

돼 일본과 남한의 언론에 소개됐으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선은 김정숙과 한때 같이 생활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일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직접 보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9) 진성계, 앞의 책, 33쪽; 이종석, 앞의 책, 285쪽

년 3월 만주의 한 유격구였던 능가영의 공산당 비서처였다. 김일성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내가 김정숙을 처음으로 본 것은 다홍왜 회의를 하던 무렵입니다. 회의 후였던지 도중이었던지 삼도만에 갔습니다. 연길현에 속한 고장입니다. 삼도만 능지영이라는 곳에 당비서처가 있었는데 김정숙은 그 비서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능지영에서 소집된 비서처일꾼들의 회의장소에서 김정숙을 만나보았습니다. 그후 나는 마안산에서 우리 부대에 편입된 김정숙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명화와 함께 만강에서 나를 맞아주던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는 의지가 지할 데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가 믿고 의지할 곳이란 혁명전우들의 품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숙은 그후부터 내내 우리와 함께 싸웠습니다.”¹⁰⁾

1940년 10월 말 김일성과 김정숙은 소련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정식으로 결혼했다. 현재 중국 심양에 거주하고 있으며 과거 김정숙과 함께 중소국경을 넘었던 서순옥은 “중소국경을 넘기 전 훈춘에서 김일성과 김정숙이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간단한 결혼 의식을 가졌다”고 말했다.¹¹⁾ 이듬해 3월 1일 김일성과 김정숙은 연해주에서 단둘이 찍은 기념사진을 한 장 남겼다.

김일성부부가 소속돼 있던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은 블라디보스토크 북방에 있는 보로실로프 인근에 남아영(또는 B야영이라고 불림)을 건설했다. 1942년 8월경 김일성이 새로 개편된 동북항일연군 교도려(일명 88특별여단)의 제1교도영 영장으로 부임하기

10) 김일성, 『세기의 더불어』 8권, 159쪽

11) 1997년 3월 심양 서순옥 자택에서 인터뷰.

위해 남아영에서 북아영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김일성부부는 이곳을 주활동 무대로 삼았다.

여기서 그동안 주목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김일성이 최소한 1941년과 1942년 두차례 만주에 다녀왔다는 점이다.

북한 문헌에 따르면 김일성은 1941년 4월 초 '북방의 훈련기지'(남아영을 의미)를 출발, 동녕(東寧)을 거쳐 5월 10일 왕청(汪淸)에 도착했다. 이를 후 김일성은 전날(5월 11일) 소부대를 이끌고 온 김정숙과 함께 안도(安圖)에 도착한 후 부대를 셋으로 나눠 김정숙 소부대를 먼저 백두산 지역으로 보냈다. 6월 중순 김일성은 백두산에 도착해 소백수골에서 김정숙과 다시 만났다.

이날 김일성은 김정숙을 비롯, 전령병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김정숙이 작성한 문건들을 검토하며 회의준비를 했다. 이날 밤에 대해 북한 조선로동당출판사가 1992년 발간한 『백두산밀영』에는 “사령부 귀틀집에서는 그날 밤에도 오래도록 불이 꺼질 줄 몰랐다”고 서술돼 있다. 3일 후 김일성은 김정숙에게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소부대들과 소조들,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할 데 대하여” 전적으로 위임한 후 연길(延吉)을 거쳐 다시 왕청으로 갔다.

그 후 김일성은 두만강 연안의 왕청, 훈춘 등지에서 주로 활동하며 몇 차례 두만강을 건너 국내에도 비밀리에 잠입했다고 한다. 결국 1941년 6월 중순 김일성, 김정숙 부부가 잠시 만났을 때 임신해 다음해 2월 16일 김정일을 출산했다는 주장이다.

김일성이 소련으로 넘어갔다가 만주지역으로 넘어온 사실은 최근 연구와 일제기록, 중국측 자료로 확인된다.¹²⁾ 특히 1992년

12) 외다하루키,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창작과 비평사: 신주백, 1994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대한 연구」 『역사와 현실』12호

중국의 당문서보관소에서 발간한 『동북지구 혁명역사 문건취집』에는 1941년과 1942년 시점의 김일성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다수의 문건들이 수록돼 있다. 그중에서도 ‘동북항일연군2·3로군 월경(越境)인원 통계표’, ‘동북항일연군 1로군 월경 인원 통계표’, ‘동북항일연군 B아영 1941년·1942년 피파견(被派遣) 각분대 인원 명단’ 등이 주목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이 적어도 두차례 이상 연해주를 떠나 만주지역에 파견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첫번째는 1941년 4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고, 두번째는 1942년 5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이다.¹³⁾ 1차 파견대의 명단에 김정숙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1차 파견에 대한 내용은 신주백의 연구에 자세히 분석돼 있다.

“1941년 3월 교정활동을 마친 제1로군 월경부대는 김일성을 지대장으로 하는 제1지대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음력 4월 9일’ 저녁, 김일성 등 총 29명의 제1로군 병사들은 위증민을 찾기 위해 훈춘 방면으로 돌아왔다. 5월 20일, 김일성은 부대를 세갈래로 나누어 안도, 둔화, 화룡, 무송 등지에서 위증민을 찾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때 위증민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다른 한편 김일성은 박덕산에게 김철우 등 9명의 대원을 거느리고 왕청지방에서 ‘민중관계를 개척’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왕청현 자자구의 ‘4, 5곳’에서 예전의 조직관계를 회복한 것을 비롯하여, 왕청역, 흥동선, 도문 부근의 남북대동에서 노동자, 농민과 연계를 맺었다. 김일성 자신도 연길현 명월구의 작은 마을에서 ‘이전의 관

13) 중국당안관,요녕성당안관,김립성당안관,흑룡강성당안관, 1992 『동북지구혁명역사문건취집』 甲 65, 297쪽

계를 회복'했다. 김일성의 표현에 따르면, 새로 획득한 대원이 공작을 잘했기 때문에 '그에게 공작임무를 맡겼'다고 한다. 김일성의 월경부대는 8월 19일 대전자 남부에 집결하여 월경 이후의 활동을 총결했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활동도 보고하고 새로운 지시도 받기 위해 김철우 등 10명의 대원을 거느리고 8월 28일 밤 쌍성자에 돌아왔다.¹⁴⁾

김일성의 1차 만주파견 때 활동사항은 김일성이 직접 자신의 상관인 후보중에게 보고한 문건에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김일성은 적어도 1941년 4월부터 8월까지의 만주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첫번째 파견 일자이다. 중국의 공식 문건이 정확하다면 김일성, 김정숙 부부는 4월 10일 이전에 임신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¹⁵⁾ 그러면 김정숙의 예상 출산일은 12월 말이 된다. 그렇다면 김정숙은 두달 반이나 늦게 출산한 셈이 된다. 의학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한 중국문헌들은 이재덕이 아기를 낳은 시점이 1943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문헌에 따르면 동북항일연군 2로군 소속인 이재덕은 1941년 1월 2일 국경을 넘어 연해주 지역의 북야영에 도착했고, 그해 8월 28일 다시 만주로 파견됐다가 다음

14) 신주백, 앞의 글, 187-188쪽

15) 김일성의 1차 파견 출발일인 4월 10일을 신주백은 음력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양력으로는 5월 10일경이 된다. 그래도 정상적인 출산보다는 1달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필자는 중국문헌에 나오는 날자가 양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일성이 중소국경을 넘은 것은 1942년 10월 22일, 23일경인 것은 많은 자료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김일성의 1차 파견날자가 기록된 중국문헌에도 김일성이 중소국경을 넘은 것이 10월 22일로 기록돼 있다. 결국 중국문헌에 기록된 4월 10일은 양력일 가능성이 크다.

해 12월 9일 부대로 복귀했다.¹⁶⁾ 이재덕이 부대에 복귀해 아기를 낳자면 적어도 1943년 가을 정도는 돼야 한다.

이재덕은 1994년 중국에서 발행되는 잡지 『부녀생활』(3월호)에 실은 ‘고국에 잇닿은 마음(情系故土)’이란 글에서 김정숙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1943년 나의 딸딸이 항일연군의 에이(A)아영에서 태어났다. 그때는 투쟁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으므로 굶주림과 질병이 수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것은 김일성 동지께서 나에게 식료품들과 진귀한 대미합고기를 보내주신 일이다. 당시 김정숙 동지의 차남도 젓 부족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보다 젓이 많아 드문히 우리 딸애와 함께 그에게 젓을 먹이곤하였다.”

그녀가 젓을 물린 아이는 김정일이 아니라 김정일의 동생 김평일(48년 사망)이라는 것이다. 그녀의 증언은 중국의 공식문건과 일치한다.

김일성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김정일이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아직까지 북한에는 김정일이 태어났을 때 백두산에 같이 있었다는 관련자들이 다수 생존해 있다. 조선혁명박물관장 황순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익현(金益賢), 전 인민군총참모장 최광(崔光)의 부인인 김옥순(金玉順) 등 항일유격대 참여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김정일이 백두산 소백수골 귀틀집에서 태어났으며 다음해 3월 중순 다시 이곳을 찾은 김일성

16) 중국당안관,요녕성당안관,김림성당안관,흑룡강성당안관, 1992 『동북지구혁명 역사문건취집』 甲 65,182쪽

을 따라 연해주로 떠났다고 증언한다.

김일성의 전령병 출신인 김익현은 “1942년 초부터 백두산 밀영에서 생활하게 됐다”며 2월 16일 아침에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던 대원들이 모두 귀를집 앞에 모였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증언했다.¹⁷⁾ 김일성, 김정숙의 결혼식에 참여했던 박정숙은 김정숙의 행적과 관련해 “1940년 이후 소대부 활동할 적에 김정숙 동지가 백두산 밀영에 계셨는데, 그 밀영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1942년 2월 16일 탄생하셨고, 그때 통신원을 통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모두 기뻐했던 기억이 나오. 1943년에 애기가 1년 정도 크니까 정숙 동지는 애기를 안고 다니면서 소련 하바로프스크 근처 북밀영(88여단이 있던 브야츠크를 지칭)에도 가시고 군단을 왔다갔다 하면서 활동하셨소”라고 증언했다.¹⁸⁾

전 인민군 총참모장이었던 최광도 자신이 김일성과 함께 1943년 봄 백두산 밀영에 도착해 김정일을 만났다고 회고했다.¹⁹⁾

그러나 북한측 생존자들의 증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결국 김정일이 백두산 밀영에서 출생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조작된 신화’인지 김정일이 소련땅에서 태어났다는 한국학계의 견해가 ‘잘못된 추론’인지는 앞으로 해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만 김정일 ‘소련출생설’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언이나 문헌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이재덕, 김선 등의 증언이 중국의 공식문헌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

17) 『금수강산』1999년 2월호

18) 문명자,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을 말한다』 『말』1994년 9월호, 48쪽

19) 『조선신보』1994.10.3

문이다.

물론 출생지가 백두산이든 소련의 밀영이든 간에 김정일이 브야츠크의 막사에서 젓먹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은 분명하다. 소련 땅에 있을 때 어린 김정일은 '유라'라는 애칭으로 불렸다.²⁰⁾

김정일이 김일성과 김정숙이라는 항일 빨치산 부부의 아들로, '밀영'에서 태어나, 군인들 속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은 그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특징을 부여한 것만은 사실이다. 전 노동당 고위간부였던 신경완은 이 점을 이렇게 지적했다.

“김정일은 거칠고 황량한 병영에서 성장했지만,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들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병영이 갖고 있는 두터운 의리와 어려움 속에서도 푹푹 뭉치는 빨치산식 가족주의의 기운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할 수 있다.

어린 김정일은 김일성의 호위병·전령병이었던 전문섭(全文燮), 조명록(趙明祿), 백학림(白鶴林)의 등에 업혀 자라났다. 김정일에 대한 이들의 보살핌은 지극했다. 김정일은 주위의 사람과 사물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결속력이 강한 아버지 동료들의 사랑 속에서 성장했다. 삭막한 전선에서 태어난 김정일은 열악한 환경 속의 병사들에게겐 위안이자 희망이었고, 반면 안스럽기에 더욱 정성스

20) 해방 후 김정일을 돌봤던 강길복은 재미언론인 문명자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제가 어머니(김정숙)께 듣기로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백두산 밀영에서 탄생했을 때 두분의 이름을 한자씩 따서 정일이라 지었답니다. 그후 소련에 들락날락하면서 형제의 이름을 유라, 슈라라고 했는데, 해방후에 어머니께서 정일이라고 부르라고 해도 주변에서 유라가 입에 올라 계속 유라라고 불러 걱정하셨지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수령님이 강하게 나가셨어요. 그래서 유라, 정일 반반쯤 부르다가 종전되고 나서 완전히 정일로 불렀습니다.” 문명자, 앞의 글, 49쪽. 1960년 7월 발행한 김정일의 남산고급중학교 졸업앨범에는 김정일의 이름이 '김유라'로 적혀있다는 견해도 있다.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 (1994;중앙일보사) 53쪽

런 보살핌을 받았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뛰어들어 이들은 고향의 동생, 조카들을 생각하며 김정일에게 정성을 쏟았다.”²¹⁾

이렇게 빨치산대원과 김정일 사이에 형성된 인간적 유대가 1970년대에 김정일이 후계자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김정일은 출생·유년기 시절 주로 군(軍)과 관련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조건은 그에게 유격대식 생활방식과 독한 성격을 형성시켰지만, 반면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결속하는 빨치산 1세라는 인적 자원을 마련해 주었다.²²⁾ 김정일이 김일성 주석 사망 후 ‘선대(先代) 혁명원로’의 우대를 표방한 것도 이러한 인간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귀국과 학생시절

1945년 9월 19일 원산을 통해 비밀리에 입국한 김일성은 다음날 기차편으로 원산을 출발해 22일 평양에 도착했다. 이후 김일성은 소련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빠르게 권력을 장악

21) 정창현, 『겉에서 본 김정일』 (1999.토지), 18-19쪽

22) 이와 관련 김일성은 현재 호위사령관으로 있는 리을설(李乙'설') 원수를 예로 들었다. “해방후 그가 부관으로 일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경비상태를 돌아보고 우리 집 부엌에서 김정일과 함께 식사를 하던 일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 정도로 리을설은 어린 김정일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내가 현지도도를 나갈 때마다 리을설은 김정일을 곁에 앉히고 다니었습니다. 그는 김정일을 언제나 잘 이해해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김정일 동무가 왜 지금도 리을설을 믿고 고맙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리을설이 부관장으로 있으면서 자기를 따듯이 돌보아주었기 때문입니다.....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어린 시절을 쓸쓸하게 보내고 있을 때 부모와 친척들을 대신하여 그를 육친의 정으로 세심하게 보살펴준 사람이 바로 리을설과 같은 나의 전우들이었습니다.” 김일성, 앞의 책, 311쪽

해 나갔다. 소련지도자들은 이미 193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과 항일유격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당시 소련의 최고지도자였던 스탈린도 김일성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 중국에는 주보종과 김일성을 역까지 데려다 준 주보종의 운전기사 유의권(劉義權)이 아직 생존해 있다. 북한은 1998년에 발간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8권(계승분)을 통해 김일성이 1945년 소련군의 대일전(對日戰) 참전 직전에 모스크바를 비밀리에 방문했으며, 해방 후 북한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던 주요 소련군 지도자들과 가까이 지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원래 국제연합군(88여단을 의미)은 제2원동 전선군에 배속되어 군사작전을 하게 되어 있었으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주로 제1원동 전선군과 연계를 가지었습니다. 원동 쏘련군 총사령부가 조직된 다음부터 나는 제1원동전선 사령관 메레즈코브, 군사위원이었던 스피코브와 거래를 많이 하였습니다. 제25집단군 사령관 치스짜코브나 집단군 지휘성원인 레베제브와도 친분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대일작전의 개시와 함께 부대를 이끌고 조선지역으로 진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동 쏘련군 총사령부의 소재지는 하바롭스크였습니다. 나는 하바롭스크에 드나들면서 와실렙스끼(극동소련군총사령관)와도 낯을 익히고 말리놉스끼(자바이갈전선군 사령관)와도 친교를 맺었습니다.”²³⁾

“대일작전을 앞둔 어느날 나는 연합군 지휘관들과 함께 모스크바로 향하였습니다. 쏘련군 총참모부가 소집한 회의에 가보니 메레즈코브와 스피코브를 비롯해서 대일작전과 관련되어 있는 각

23) 김일성, 앞의 책, 448쪽

전선사령부의 책임일군들도 벌써 다 와 있었습니다. 나는 모스크바에서 쥬코브도 만나보았습니다. 그가 독일주둔 소련 점령군 총사령관과 독일 관리감독 리사회 소련대표로 있을 때입니다.

소련사람들은 있는 성의를 다하여 우리를 접대하였습니다. 그것은 외교적 관례를 벗어난 특별한 환대였습니다. 우리는 모스크바에 체류하는 동안 레닌묘도 참관하고 역사박물관에도 가보았습니다.....며칠 후 그들은 우리를 쥬다노브에게로 안내하였습니다. 그 당시 쥬다노브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겸 비서의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그는 쓰딸린과 스티코브를 통해 조선의 빨치산 김일성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는데 듣던 바보다는 훨씬 더 젊어보이는 것이 기쁘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쓰딸린도 우리의 활동에 류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쥬다노브는 나와서 상봉 결과를 쓰딸린에게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후에도 쥬다노브와 여러차례 만나 깊은 친교를 맺었습니다. 메레즈코브도 쓰딸린에게 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쥬다노브와의 회견을 마친 나는 스티코브와 함께 원동으로 돌아왔습니다.”24)

이 회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김일성이 해방 전에 쥬다노프를 비롯한 소련공산당의 최고지도부와 소련 극동군의 최고간부들과 만났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1946년 김일성이 조선공산당 당수인 박헌영(朴憲永)과 함께 비밀리에 모스크바를 방문해 스탈린과 쥬다노프를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보다 훨씬 이전에 김일성은

24) 김일성, 앞의 책, 450-455쪽

소련의 당·군 지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해방 후 소련군이 김일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1945년 9월 22일 오전 평양에 도착한 김일성은 함께 입북한 빨치산 동료들을 북한 각 지방으로 보내 정세파악과 공산당 조직을 장악케 하고 자신은 평양에서 주도권 확보에 골몰했다. 김일성은 “평양에 입성한 다음날부터 전우들과 함께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고 회고했다. 그 결과 10월 5일의 예비회담을 거쳐 1945년 10월 10일부터 ‘서북 5도당 대표자 및 열성자회의’가 개최되었고,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分局)이 설치됐다. 책임비서는 김용범(金鎔範)이었다. 김일성은 집행위원에 불과했지만, 그가 공산당 권력의 실세임이 점차 뚜렷해졌다. 그 다음날인 10월 14일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장군 환영 평양시민대회’가 개최됐다. 이를 계기로 김일성은 대중적 기반과 권력기반을 굳힐 수 있었다. 이 때야 비로소 김일성은 김정숙과 아들 김정일에게 돌아오라는 연락을 보냈다.

김정일은 1945년 11월 말 소련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군함을 타고 어머니 김정숙과 함께 함경북도 웅기(지금의 선봉)항에 입항했다. 일행은 소련에서 마지막으로 귀국하는 빨치산 여자대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김일성의 호위·전령병이었던 전문섭과 조명록의 등에 업혀 웅기항에 내릴 당시 김정일의 나이 만 3살이었다.

그러나 웅기에 내린 김정일은 곧바로 평양에 들어갈 수 없었다. 당시 김일성은 건당(建黨)·건군(建軍)·건국(建國) 작업에 정신이 없었고, 아들 김정일을 비롯한 가족을 챙길만한 여유가 없었

기 때문이다. 김정숙은 입국 후 주로 청진에서 활동했다. 김정일이 평양에 들어온 것은 1945년 12월이었다. 김일성이 북조선공산당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1945.12.17)를 통해 책임비서로 선출된 직후였다. 3차 확대집행위원회를 통해 국내과 공산주의자들을 제압한 김일성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던 셈이다.

귀국 후 김정일은 함북 청진 등지에서 40여일을 보냈다. 물론 함께 입국한 빨치산들과 함께였다. 소련 위수사령부에서 생활하면서 김정일은 빨치산들의 등에 업혀 청진 일대의 농촌과 공장 등지를 돌아다녔다. 당시는 해방직후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지방의 공산당·정권기관이 창건되던 시점이었다.

김정일은 4살 때인 1946년 고관 자녀들만을 교육하기 위해 평양 남산재에 특설된 남산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김정일 입학 당시 담임은 일제시대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국민학교 교사로 와있던 황숙희란 여자였다. 그러나 유치원 원장과 황선생은 김정일의 등살에 쫓겨나고 말았다. 이후 김일성대학 특설학부를 졸업한 전금선이 김정일을 담당했다.

전금선은 김정일을 정성으로 돌봐주어 김일성 부부를 기쁘게 했다. 이를 계기로 전금선은 후에 인민무력부장이 된 오진우의 부인이 되고 정무원 보통교육부장으로 승진해 김정일 이상화 작업에 앞장섰다. 전금선은 공사석을 막론하고 입만 열면 '김정일 지도자동지께서는 원아 때부터 남다르게 뛰어난 총명과 담력과 지혜를 가졌다'고 말했다. 더구나 그녀는 '지도자동지는 유치원 선생님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을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바람에 선생들을 당황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며, 원아들 속에서 뛰어난 통솔력으로 언제나 원아들을 휘어잡아 대장노릇을 했다'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김정일을 찬양했다.

유치원생에 지나지 않은 어린 김정일에 대한 이상화 작업이 전금선 같은 사람에 의해 일찍부터 시도되고 있었던 것이다.

김정일은 1948년 9월 유치원 고급반 과정을 마치고 남산 인민 학교에 입학했다. 남산 인민학교는 노동당, 내각, 민족보위성 등 중앙기관의 고급관료 자녀들을 특별 교육하는 학교였다. 김정일은 이 학교 내에서 최고위급 간부 자녀들만으로 편성된 특별학급에서 공부했다. 김일성대학 사범학과를 나온 김연실이 그의 담임이었다.

생모인 김정숙은 김정일에게 다정하면서도 대단히 엄격했다고 한다. 김정숙은 김일성이 현지지도를 나갈 때 김정일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반 인민들에 대하여 가질 태도와 생각들을 배우게 했다. 보통강 개수공사장, 미림벌 모내기 등의 노력동원현장에도 김정숙은 김정일을 데리고 나갔다. 어린 김정일을 돌보던 강길복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당시 어머니(김정숙)께서는 집안일 해놓고는 항시 공장이나 농촌 등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실정을 파악해 수령님께 보고하곤 했는데 이때 꼭 저와 친애하는 동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47년에 제사공장에 갔던 일이 생각나는데 어머니께서 친애하는 동지에게 여성노동자들의 손가락이 다 갈라져 피가 나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어머니께서 친애하는 동지 책상에다 장구를 갖다 놓으셨던 게 특히 기억납니다. 친애하는 동지가 그걸 가지고 놀며 자체적으로 연구해 자꾸 어머니께 물으면 가르쳐주곤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니 어머니께서는 예술 부문에도 밝으셨던 것 같습니다.”²⁵⁾

25) 문명자, 앞의 글, 48쪽

김정숙이 김정일을 어린시절부터 다양한 경험을 시켰다는 사실은 북한의 다양한 선전물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항이다.

1948년 9월 김정일은 남산유치원을 거쳐 남산인민학교 인민반에 입학했다. 이 해에 남동생인 김평일이 수상관저 연못에 빠져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다음해 김정일은 어머니를 갑자기 잃는 아픔을 겪게 된다. 김정숙은 1949년 9월 22일 남산병원 특별 병실에서 해산하다 죽고 만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다. 잠깐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간 김정숙은 영원히 병원을 나오지 못했다. 김정숙은 최용건, 김일, 김책 등 빨치산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운명했다.

당시 김정숙은 최용건 등의 손을 일일이 잡고 내가 죽은 후에 정일이를 잘 길러 장군님을 받들어 우리 빨치산의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여 완성하고 꽃피워 나가는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달라고 유언한 후 눈을 감았다고 한다. 김책(金策), 김일(金一), 최용건(崔庸健) 등은 장례식 때 김정숙의 영구 앞에서 '동지적 의리로 유언을 지켜 김일성 장군의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여 완성할 수 있는 훌륭한 공산주의 혁명가, 혁명위업의 계승자, 후계자로 키우겠다'고 맹세했다고 한다.²⁶⁾

장례식 때 최용건이 추도사를 통해 “동지적 의리와 의무감을 갖고 김정일을 키우겠다고 맹서했다”는 일화는 제법 알려져 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어린 김정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²⁷⁾

26)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앞의 책, 86쪽

어린 시절 겪은 여러 사건들이 김정일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남한 언론들은 이 때부터 김정일의 성격이 빗나가기 시작했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김정숙이 죽은 후 김정일은 한때 방황의 나날을 보낸 것이 사실이다. 다음은 신경완의 목격담이다.

“어머니와 동생의 죽음은 김정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 고독과 슬픔에 잠긴 김정일은 상당기간 방황을 해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빨치산 출신인 김명화, 황순희, 최인덕(崔仁德), 전문섭, 백학림 등이 김정일을 타이르고 달랬지만 좀처럼 그의 마음을 되돌려 놓지 못했다.

나도 여러차례 목격했지만 김정숙이 사망한 후 김정일은 동생 경희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인민학교에 갔다가 수업이 끝나면 다시 경희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다. 이 광경을 보고 당시 많은 평양시민들이 눈물지었다.”²⁸⁾

김정숙이 사망한 후 김일성이 거처하는 수상관저의 살림은 후에 김일성의 2번째 부인이 되는 김성애(金聖愛)와 소설 『임꺽정』으로 유명한 홍명희(洪命熹)의 딸 홍기연이 담당했다. 김정일은

27) 강길복은 당시 김정일이 슬픔을 이기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친애하는 동지는 여덟 살이고 경희 동지는 세 살이었습니다. 경희 동지가 엄마를 찾으며 울면 친애하는 동지가 ‘경희야, 울지 마라, 아버지 앞에서 울면 어카겠나’하고 달래고 우리들에게도 ‘경희가 자꾸 울면 아버지가 가슴 아파 하시니 경희 앞에서 눈물 보이지 마오라고 신신당부해 지도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자기방에서 혼자 옵니다. 제가 가서 ‘동생 또 들어오면 어카겠나’하면 눈물 쓱쓱 씻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는 아버지 앞에서나 동생 앞에서 눈물 안 보이려고 혼자 울었습니다.” 문명자, 앞의 글, 49쪽

28) 정창현, 앞의 책, 32쪽

주로 홍기연과 강길복의 보살핌을 받았다고 한다.

1950년 6·25전쟁이 터지자 김정일은 숙부인 김영주(金英柱)를 따라 자강도 강계, 만포와 만주 길림시 교외로 피난을 갔다. 김정일의 피난길에는 담임 김연실과 수상관저의 살림을 맡아보던 홍기연과 강길복이 동행했다. 그후 김정일 일행은 양강도 장자산으로 이동했고, 1952년 봄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평양으로 돌아왔다. 평양 근처 최고사령부에서 김일성과 50여일을 같이 보낸 후 김정일은 1952년 11월 22일 만경대 혁명가 유자녀학원 4학년에 편입했다.

후에 김정일은 “사람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간직할 수 없었던 가장 고귀한 것을 나는 그 전화의 불길 속에서 체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²⁹⁾ 전쟁의 포화가 멎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53년 9월 1일 김정일은 평안남도 승호군 삼석인민학교 5학년에 편입했고, 그 후 1954년 2월 평양 제4인민학교 5학년으로 전학했다.

이 무렵 김일성의 재혼은 김정일에게 큰 충격이었다. 어머니인 김정숙의 일을 돌봐주던 김성애가 하루아침에 새엄마가 됐으니 그럴만도 했다. 일반적으로 김성애는 수상관저의 타자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신경완은 김성애가 수상관저의 교환수였다고 1952년에 결혼했다고 증언했다.³⁰⁾

29)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김정일장군락사』 (조선신보사, 1994)5쪽에서 재인용.

30) 스즈키 마사유키는 김일성과 김성애가 1956년에 재혼했다고 주장한다. 공개 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김경진, 김평일이 53년, 54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은 52년경에 사실상 결혼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스즈키 마사유키/유영구 역, 『김정일과 수령제사회주의』 (1994; 중앙일보사), 104쪽

“김성애는 농사꾼의 딸로 태어나 고급중학교를 마치고 1947년 경 인민군에 입대했다. 군입대 후 김성애는 최고사령부 무전수로 근무했고, 얼마 후 김일성 수상의 관저 교환수로 발탁됐다. 여기서 그녀는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의 눈에 들어 수상관저의 책임교환수로 있으면서 관저의 살림살이까지 관리하게 된다. 특히 김정숙이 사망한 후에는 홍명희의 딸인 홍기연과 함께 수상관저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

전쟁 발발 후 김성애는 계속 최고사령부의 살림살이를 맡아보았다. 그런데 전쟁이 어느 정도 교착상태가 되자 김일성의 안살림을 맡아 줄 안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용건, 김일 등 항일유격대 출신 간부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계속 사양하는 김일성을 설득해서 승락을 받고, 항일유격대 출신의 간부들이 마땅한 사람을 고르기 시작했다. 기본은 원만한 성품과 수상관저의 살림살이를 잘 아는 사람이 우선시되었다.

그러다보니 결국 물망에 올랐던 많은 사람 중에서 그전부터 수상관저의 살림을 맡아보았던 김성애와 홍기연이 물망에 올랐다. 이때 홍명희가 자기의 딸은 수상을 보필하기에는 자격미달이고 김성애가 적당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래서 김성애로 낙점이 됐고, 극히 일부의 정치국원과 군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출할 결혼식이 진행됐다. 1952년 가을 무렵이었다.”³¹⁾

김정일은 자기집 교환수로 일하며 생모의 잔심부름이나 했고, 자기보다 10여살 연상에 불과한 김성애가 계모가 되자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당 중앙위원인 박정애(朴正愛)를 비롯해 김명화, 황순희, 박정숙 등 지난날 김정숙과 친밀했던 항일유

31) 정창헌, 앞의 책, 33-34쪽

격대 출신들이 타일러도 막무가내였다. 김정일은 1953년 숙부 김영주가 결혼하자 주로 김영주의 집에서 학교를 다녔고, 오극렬, 오진우 등의 집을 전전했다. 김성애와 김정일의 관계에 대한 신경완의 증언은 더 구체적이다.

“김성애와 김정일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다. 우선은 연령적으로 14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특수성, 즉 1948년에 김성애가 중학교 졸업하고 군대에 들어가 통신대→최고사령부 총참모부 무전수→수상 교환실→수상전담 교환수로 있었는데, 이때부터 수상관저를 들락날락했다. 당시 김정일이 6살 때로 김성애는 어머니의 비서격이었다. 김정일에게는 누이격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10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계모로 등장했다. 사실상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좋은 면도 있었지만, 김정일 쪽으로 보면 더 안좋은 측면도 있었다. 누이가 갑자기 어머니가 된 격이었다. 김정일은 계모 밑에서 자라지 않고, 전쟁 시기에는 강길복, 홍기연이 길렀다. 결혼 직후 김성애한테 아이가 생겼다. 1952년 가을쯤에 결혼해서 1953년 말에 첫딸인 경진을 낳았다. 연년생으로 1954년에는 평일이 출생했다.

김성애와 김정일의 동생 경희와는 사이가 더 좋지 않았다. 경희는 처음부터 김성애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김성애의 딸인 경진하고 경희하고 몇살 차이 만나니까 같이 자랐다. 김성애가 같이 대우한다고 하더라도 섭섭함이 많이 발생하게 마련이었다. 도시락을 쌀 때 반찬에 차별대우를 했다는 소리가 일부 나이든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경희가 유치원 다닐 때도 김정일이 직접 손잡고 갔다. 이복형제간에 싸움이 생기면 똑같이 타이른다

해도 서러움이 생기기 마련이었다.

여기에 가정불화가 생길 소지가 있었다. 경희와 김정일은 김영주에게 가서 호소하곤 했다. 김영주는 전쟁 중에 결혼했는데, 그 집에 자주 가곤 했다. 어머니와 같이 활동했던 김옥순(최광의 부인), 박정숙 집에도 자주 들렀다. 계모 김성애보다 소련에 있을 때부터 키워주던 사람들과 사이가 더 좋았다. 김정일은 밖에서 며칠씩 자고 오기도 했다.

김정일은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가 속상해 할까봐 의식적으로 어머니라는 호칭을 썼다. 그러나 경희는 끝내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다. 밥도 차려주면 먹지 않고 자기가 차려먹었다. 경희가 결혼식할 때도 김성애는 거의 간섭을 못했다.

경희는 장성택(張成澤, 현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함께 모스크바대학에 유학갔다 1972년 김일성의 60세 생일을 앞두고 돌아왔다. 이들을 마중하기 위해 친가와 외가 친척들이 모두 평양 정거장으로 나갔다. 그런데 기차에서 내린 경희는 만경대에서 나온 재종할머니 등에게 반갑게 인사를 다하면서도 김성애한테는 눈도 한번 안맞추고 가버렸다.”³²⁾

김정일은 철이 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정과 아버지를 위해 김성애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또 성장하면서 부딪칠 일도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김성애가 민주여성동맹 위원장이 된 후 치맛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돼 버렸다.

1954년 9월 1일 김정일은 평양 제1중학교에 입학했다. 북한은 이 시기에 김정일이 만경대와 칠골 혁명사적지 참관을 조직

32) 정창현, 앞의 책, 35-36쪽

(1955.4)했고 보천보, 삼지연을 비롯한 백두산일대의 혁명전적지를 답사(1956.6)해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행군길'을 개척했다고 선전한다.

1957년 9월 1일 김정일은 평양 남산고급중학교에 입학했다. 남산고급중학교에 진학한 김정일은 이 학교 민주청년동맹 부위원장(당시 위원장은 교원)을 지냈으며 1960년 7월 졸업했다. 북한의 김정일 전기들은 예외 없이 그의 학업성적이 전과정, 전과목에서 최우등이었으며 그가 학생들 사이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아직 이 선전의 진위를 밝혀줄 만한 자료나 증언은 없다.

다만 이 때부터 김정일은 사회과학 분야에 대해 과외학습을 받았다는 사실은 여러 증언에서 확인된다. 김정일은 또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비롯한 당(黨)·정(政)·군(軍)의 대규모 정치행사와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했다. 북한은 김정일이 1958년 만세대의 살림집 건설을 위한 부재생산, 대동강 유보도 1계단 건설 마감정리작업, 1959년 평양학생소년궁전 건설, 대동강 호안공사에 학생들과 함께 참여했다고 선전한다.

김정일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김일성과 빨치산 출신들은 그를 특별 배려했다. 김정일을 집에 머무르게 하고 평양 시내의 유명한 선생과 가정부를 따로 두며 그에게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했다. 당시 노동당 조직부 지도원을 하던 숙부 김영주가 거의 매일 집을 찾아 김정일을 돌봤다고 한다. 김일성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김정일에게 학과별·취미별로 가정교사를 배정해 학업과 취미 생활에 전념케 했다.

빨치산 동료들의 지극한 배려는 김정일의 생모이자 자신들의

빨치산 혁명동지인 김정숙의 유언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들 빨치산 1세대들은 그후 김정숙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권력자인 김일성에 영합하기 위해서 김정일에게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다. 김정일 역시 자신들에게 온갖 힘을 기울이는 이들에게서 혈육 이상의 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에 김정일은 여러 차례 해외나들이를 했다. 김정일은 중학교 3학년 때 김일성의 동유럽 공산국가 순방길에 동행했다. 고급중학교 2~3학년 때 세계 청년학생축전에 참가했고, 졸업을 앞두고 진학할 대학을 선택하기 위해 소련과 동유럽 지역을 탐방하기도 했다. 김정일이 “동독에 유학했다”, “모스크바대학에서 공부했다”는 말들은 바로 김정일의 고등중학교 시절 잦은 해외여행 때문에 생긴 얘기들이다.

1959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소련공산당 제21차 대회에 참가했을 때 김정일을 처음으로 직접 만나 본 황장엽의 회고를 들어보자.

“1959년 1월 나는 김일성을 수행하여 소련공산당 제21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갔다. 당시 김정일은 고급중학교 졸업반이었는데 우리와 동행했다. 나는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을 따라 중앙당 청사에 나오는 것을 몇 차례 본 적은 있어도 직접 만나보기는 처음이었다. 김정일은 내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온 것을 알고는 특별히 호감을 갖고 대했고, 나 역시 그를 지도자의 아들로서 따뜻하게 대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했다. 김정일은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아 나에게 대학의 학과 내용에 대해 이것저것 많은 것을 물어왔다.”³³⁾

33)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봤다』(1999:한울), 126쪽

이때 이미 김정일은 김일성의 호위나 건강문제에 대해 관여하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황장엽의 회고를 들어보자.

“그는 아버지를 모시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쏟았다. 아침마다 자기 아버지가 나갈 때 부축을 하고 나서는가 하면, 신발을 신겨 주기도 했다..... 김일성은 아들의 부축을 받을 때면 마냥 흡족해했다. 저녁에 김일성이 돌아오면 김정일은 부관들과 의사, 간호원 등 수행원들을 집합시켜 놓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런저런 지시를 하곤 했다. 김일성을 수행한 대표단 중에는 정치국원들도 많았는데, 김정일이 사업을 직접 관장하고 부관들과 수행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일을 지시한다는 것은 상식을 초월한 행동이었다.

하루는 김정일이 소련의 공업농업전람관을 가보자고 해서 그를 데리고 갔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자꾸 질문하여 통역하는데 애를 먹었다. 그래서 나는 웬 기술에 그리 관심이 많으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³⁴⁾

북한은 이 시기에 김정일은 엄청난 독서광이었으며, 아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다고 선전한다.³⁵⁾

1960년 9월 김정일은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했다. 당시 풍조가 “사람이 대성하려면 외국유학을 다녀와야 한다”는 분위기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외국유학을 떠날 것으로 추측했다고 한다. 그는 유학을 떠나지 않고 김일성

34) 황장엽, 같은 책, 126-127쪽

35) 허담, 1996 『김정일의 위인상』 조선신보사 참조

대학을 선택했다.

한때 김정일은 소련 유학을 권유받기도 했다. 김정일은 허담(許談, 전 조국평화통일위원장)에게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면 다른 나라 종합대학에 가서 공부할 것을 권고하지만 나는 우리나라에서 배우려고 합니다”라며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에서 공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황장엽의 회고록에도 비슷한 대목이 나온다.

“모스크바 종합대학도 가보고 싶어하여 안내를 했는데, 같은 간 소련공산당 조선담당 과장이 김정일에게 아부를 한답시고 한 마디했다.

‘동무도 고급중학을 졸업하고 모스크바 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시겠지요?’

그러자 김정일이 발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평양에도 김일성종합대학이라는 훌륭한 대학이 있어요. 나는 김일성대학에서 공부할 것입니다.’³⁶⁾

이와는 다르게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김정일이 남산학교 고등반까지 수료한 후 동독항공학교로 유학갔으나 망나니 성품으로 인해 끝까지 수학하지 못하고 2년만에 중퇴, 1961년 김일성종합대학에 편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대학 진학을 앞둔 고급중학시절 외국여행을 한 것이 잘못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1960년 9월 김일성대학에 입학한 김정일은 다음해 7월 22일 노동당에 입당, 대학 당위원회 세포에서 당생활을 시작했다. 이때

36) 황장엽, 앞의 책, 127쪽

부터 아버지를 따라 '정치 현장실습'을 했다. 대학시절 김정일은 김일성의 저작을 중심으로 1년에 만페이지씩 읽는 이른바 '만페이지 책임기운동'을 발기하는 등 다양한 학내정치활동을 폈다고 북한전기들은 쓰고 있다.

김정일은 대학시절부터 김일성, 김영주 등의 배려로 본격적인 '정치지도자'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노동당 정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채희정(蔡喜正) 등 김일성의 비서들과 도유호(都宥浩), 김석형(金錫亨), 김광진(金洸鎭), 정진석(鄭鎭石), 박시형(朴時亨), 이재형(李在亨) 등 당시 각분야의 최고 실력자들로 김정일을 위한 지도교수 그룹이 구성됐다.

노동당 정치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지도교수 그룹의 활동을 수시로 보고 받고 대책을 토의하는가 하면 교수들의 활동을 백방으로 지원해 주었다. 당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영주가 이들을 관장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김영주는 중앙당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 박수동(朴壽東)을 김일성대학 당위원장으로 파견하여 학교에서도 김정일 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했다.

김정일은 대학 4년 동안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각 분야를 전공한 지도교수들의 강의를 통해 지도자 수업을 받았다. 당투쟁사 부문에선 장성엽(張成燁: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의 친형)이 개인교수를 했고, 과학원 경제학연구소장 김광진(金洸鎭)에게 정치경제학을, 김일성대 역사학부장 박시형에게는 혁명사론, 과학원 산하 어문학연구소장 김병제(金秉濟)에게 어학을 각각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⁷⁾

이와 같이 김정일은 대학 4년동안 학문적으로 일반지식에 관한 전문적 고등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사상

37)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앞의 책, 65-66쪽

이론을 체계적으로 습득했다. 그는 김일성 수상 참사실의 참사로 있으면서 김일성 명의로 된 논문의 초안 집필자였던 채희정으로 부터 김일성의 논문과 저작에 대해 체계적인 강의를 받기도 했다.

북한은 김정일이 대학시절에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할데 대하여'(1960.10), '현대 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1961.7), '지방경제를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1962),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郡)의 위치와 역할'(졸업논문),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원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자,' '대학생들 속에서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등의 논문을 썼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들은 개인교수들에게서 받은 과제였다고 한다. 김정일의 정치적 관심과 실력을 배양하려는 김일성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개인교수들은 그에게 계획적으로 과제를 주고 정리된 논문을 수정해 주는 일에도 맡았다. 그 중 '지방경제를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은 그해 8월 지방당 및 경제일군 '창성(昌城)연석회의'에서 당방침의 기초자료가 되기도 했다.³⁸⁾

그의 졸업논문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었다. 이는 엄청난 특례였다. 북한에서는 대학졸업 뒤 박사원에 들어가 몇년 공부하고 학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제출한 학사논문이 통과되어야만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김정일은 대학시절 아버지를 따라 '현지지도'에 동행하는 혜택을 누렸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양시내의 공장들과 주변농촌은 물론이고 양강도(兩江道) 풍산(豊山), 함흥(咸興)의 용성기계공장 과 비닐론공장 건설장, 수풍발전소, 남포제련소, 황해제철소 등을

38)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같은 책, 66-67쪽

방문했다. 실무를 통해 실물경제를 배우면서 아버지의 '현지도' 방식을 속속들이 체득한 셈이다.

이밖에도 그는 김일성의 해외여행에 반드시 동행했고, 대학 4학년 때에는 숙부 김영주와 함께 소련 등 공산권 국가를 일주한 바 있었다고 한다. 그에게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키워주려 했던 배려였다.

게다가 김정일은 대학 당위원회 소속이면서도 노동당 중앙의 주요회의를 방청할 수 있는 특혜를 누렸다. 대학 3·4학년 때는 당 정치위원회 회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비롯해 내각회의, 최고인민회의, 군 계통의 군사간부회의, 정치간부회의 등 중요한 회의에는 대개 참석했다. 이는 김일성의 아들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었다.³⁹⁾

김정일이 대학을 다니던 때는 김일성대학에서 사상투쟁이 극심할 때였다. 친소적 경향을 갖는 소련파, 소련유학파를 겨냥한 것이었다. 북한에서 '반종파투쟁'의 회오리가 몰아친 것은 1956년 가을부터였고, 1958년 3월쯤에는 사태가 매듭지어졌다. 그러나 대학에선 불씨가 남아 있었다. 여전히 소련식 교과서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교원들 가운데 소련식 입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흔했다. 김일성세력으로서선 최고학부인 김일성대학이 수정주의, 교조주의 잔재의 본거지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기에 충분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김정일이 동료학생, 교원들과 함께 대학 개편작업에 참가했던 것이다.

김일성대학에서는 김정일의 월권행위에 반발하는 교원과 학생들이 일부 있었으나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면 다른 대학으로 쫓겨갔다고 한다. 신경완은 "김일성대학 경제학부 학생 8명이 원

39)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앞의 책, 67쪽

산경제대학으로 한번에 전학간 일도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 및 지도자로 떠올랐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엄청난 특혜와 특별학습을 통해 김정일은 최고의 엘리트교육을 받은 후계자로 육성됐다. 김정일의 대학생활은 체계적인 '정치지도자' 훈련과정이었다.

2. 김정일 등장과 후계자 결정과정

김정일 후계체제는 후계자 지명, 후계체제의 형성, 그리고 후계체제의 공개화라는 3단계를 거쳐 형성되었다.⁴⁰⁾

제1기는 1964년 김정일이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1974년 2월 13일 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당비서 겸 정치위원으로 선출되고 당내에서 후계자로 지명되기까지이다.

제2기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로부터 1980년 10월 10일 제6차 당대회에서 그가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비서,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공식석상에 등장하기까지이다.

제3기는 제6차당대회 이후 김일성 사망 때까지이다.

여기서는 제1기와 제2기 시기를 주로 다루기로 한다.

1) 후계자 부상과정

김정일은 1964년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배속됐다. 이때부터 김정일은 본격적으로 북한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다. 김정일은 1964년 4월 초에 지도원 직급으로 중앙당

40) 스즈키 마사유키, 앞의 책, 103쪽 참조

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내각을 담당하는 중앙지도과에 있다가 종합지도과로 자리를 옮겼다. 2년 가까이 지난 뒤에 중앙지도과 책임지도원으로 승진했다. 이때 김정일은 한쪽으로는 김일성 경호를 담당하는 호위처 업무도 관장했다.

노동당의 조직지도부는 북한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부서이다. 그 중에서도 중앙지도과, 종합지도과, 간부지도과, 검열지도과가 가장 중요한 부서이다. 중앙지도과는 내각과 내각 산하 각 중앙기관·부처,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등 전 국가적 통치(행정)기구를 직접 지도한다. 종합지도과는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사회안전국 총정치국, 철도성 총정치국 등 정치국이 있는 특수 국가기구를 종합적으로 지도한다. 결국 중앙지도과와 종합지도과가 국가의 중앙기구를 직접 관리하는 조직이다. 쉽게 얘기해서 권력 핵심기구 중의 핵심이다. 김정일이 노동당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에서 출발했음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중앙지도과에 있을 때 내각과 내각사무국을 담당했다. 내각의 총리, 부총리들, 사무국장, 사무국 관리 등을 지도하는 자리였다. 종합지도과에서는 인민무력부, 사회안전부 등을 담당했다. 일개 지도원이라고 하면 남쪽에서는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북한에서는 다르다. 예를 들어 중앙지도과 지도원의 경우 내각 산하기구의 당위원회의비서, 내각 상(장관), 부상(차관)급을 상대하며 국장급은 상대도 하지 않는 실세자리다. 김정일의 경우 내각 당위원회를 담당했다고 한다.

김정일은 먼저 국가기구를 관장하는 중앙지도과에 근무하면서 당중앙위원회 내부사업 전반을 이해했다. 김정일은 한때 내각수상 참사실(비서실)로 옮겨 정부의 내부사업도 파악했다. 이때 김정일은 당과 정부 사업의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과격적인 조치였다. 24세 밖에 안된 김정일이 당 조직지도부장인 숙부 김영주 밑에서 당과 정부의 전반적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정일은 본격적으로 당내 권력기반 장악에 나섰다. 때마침 그가 당 조직지도부에 들어온 지 얼마 후인 1967년부터 노동당 권력 내부에선 일대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바로 '갑산파사건'이었다.

김일성빨치산파에 속하면서 1940~50년대 권력투쟁에서 살아남은 갑산파의 선두주자 박금철(朴金喆), 이효순(李孝淳) 등은 1967년 5월 중순 노동당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대대적인 비판을 받고 숙청됐다.

1967년 5월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혹독한 비판이 있는 후일단 갑산파는 모두 해임됐다. 박금철과 이효순은 지방 농기계작업소의 부지배인으로 쫓겨났다 노동자로 전락했고, 재차 '종파주의자 집단수용소'인 특별교양소에 감금됐다. 이들에게 동조한 김도만(金道滿: 선전담당 비서 겸 선전선동부장)과 박용국(朴容國: 국제부장), 허석선(許錫宣: 과학교육부장), 고혁(高赫: 부수상), 하양천(何仰天: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등도 숙청되었다.

당시 김정일은 당 조직지도부가 전원회의를 조직·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산파 숙청과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깊숙이 관여했다. 그때 그의 나이 25세였다.

유일사상체계 확립 방침이 공개된 것은 1967년 6월 말의 4기 16차 전원회의였다. '이효순·박금철사건'은 김일성의 사상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립하고 모든 당활동에서 이를 관철시켜 나간다는 '유일사상체계'가 시동을 거는 단초를 제공했다. 김일성의 절대권력이 자리잡는 '수령제' 탄생의 결정적 계기가 된다. 김정일은 이들의 숙청을 주도해 당내 입지를 강화했다.

1967년에 김정일은 지방의 여러 공장과 기업소들을 둘러보는 기회를 가졌다. 북한은 김정일이 1967년에 룡성기계공장을 비롯해 함흥모방직공장, 구성방직공장, 평양제사공장, 대안전기공장, 숙천군협동농장, 청산리협동농장을 지도했다고 선전한다.

당 조직지도부에서 '박금철·이효순사건'을 마무리한 김정일은 1968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문화예술지도 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노동당 내에서 당의 조직사업을 장악하는 조직지도부와 함께 선전선동부는 당의 선전사업을 장악하는 핵심부서로 손꼽힌다. 당시 사상비서는 양형섭(楊亨燮)이었지만 전반적인 선전사업보다는 교육 과학부문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했고, 김정일의 눈치를 살피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숙청된 선전선동부장 김도만의 후임인 김국태(金國泰)는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 김책(金策)의 아들이다. 그는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생활이 잦았다. 실질적으로 선전선동부는 일개 과장에 불과했던 김정일의 수중에 놓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1967년 말이 되어서야 박금철·이효순의 당권도전 여파가 진정되었다. 이때만 해도 노동당 내부에는 '김일성-김영주-다음세대'의 후계구도가 관철되는 듯한 분위기였다.⁴¹⁾

그러나 이번엔 빨치산 그룹 내의 '군부강경파'가 노동당의 후계구도에 반발했다. 1968년 중반부터 군부지도자인 민족보위상 김창봉(金昌奉), 대남사업총국장 허봉학(許鳳學) 등이 김영주에 반기를 들었다. 1968년 10월 노동당은 군 전반에 검열사업을 진행했다. 노동당은 또 한차례 숙청비람에 휩싸였다.

김정일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인민군 당원회의의 일정을 준비하고 보고서 작성, 토론 준비, 결정서·문건 작성을 직접 준비했다.

41) 김광용, 앞의 글, 95쪽

주목할 대목은 이 시기 김정일이 대학에서 배운 것을 실지 업무에 적용·집행함과 동시에 전국·전당적 범위에서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박금철·이효순사건'과 '김창봉·허봉학사건'을 겪으면서 김정일은 자연스럽게 권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안목을 갖게 되었다.

김정일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잡은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박금철·이효순사건은 영화예술분야에도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갑산과가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 당시 갑산(甲山) 공작위원회의 역할을 과대포장하려 했던 것이다. 박금철은 당 선동선동부장이던 김도만을 시켜 자신을 김일성과 동격화하려 한 '일편단심'이란 영화를 제작했다. 박금철이 서대문형무소에 있을 당시 그의 처가 남편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줄거리였다. 이 부분에 대해 빨치산출신들은 집중 비판했다. 그밖에도 여러 편의 영화가 문제시됐다.

이미 고등중학교 시절부터 영화·연극·음악 등에 관심이 많던 김정일의 당시 직책은 문화예술 지도과장이었다. 1967년 9월초 평양의 예술영화촬영소에서 열린 영화예술분야에 대한 박금철·김도만의 '반당적(反黨的) 여독' 청산을 위한 확대정치위원회에서 25살의 김정일이 뒷처리를 자임하고 나섰다. 김일성은 못이기는 체 영화예술분야에 대한 책임을 맡겼다. 이를 계기로 김정일은 당의 사상사업 전반을 장악하는 실권자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정일은 이때 시나리오 창작사인 4·15 창작사를 만들고 현대적 기계와 영화제작 설비를 사들였다. 그리고 작가, 영화인들의 대우를 개선하고 직접 당원증을 교부해 주는 등 회유와 특혜를 베풀어 이들을 사로잡았다. 1970년 6월에는 작가, 연출가들을 모

아 놓고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는 담화를 했다고 한다. 이 무렵 김정일은 중앙당 사무실은 거의 비우다시피 하고 평양 대극장과 조선영화촬영소에서 상근하면서 작가와 영화인들을 독려했다.

이 시기에 김정일은 영화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밀림아 이야기하라' 등을 제작했다. 그리고 이 영화들을 5대 '혁명 가극'으로도 만들어 무대에 올렸다. '혁명원로'들은 김정일이 만든 가극과 영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김정일은 1969년 초 선전선동부 부부장직에 올랐다.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선전선동부장 김국태나 사상담당 비서 양형섭이 있었지만 선전사업에 관한 권한은 이미 김정일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김정일은 조직비서였던 삼촌 김영주가 질병 치료차 외국과 휴양지에 주로 나가게 되자, 김일성대학 당위원장을 맡았던 박수동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앉혀놓고 조직지도부의 업무까지 관장했다. 노동당의 양대 핵심부서인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를 장악한 김정일은 1970년초에 이미 권력 핵심의 강력한 실권자로 떠올랐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권위에 직접 관련된 문제나 노동당의 역사적 의의를 부각시키는 것에 관한 문제는 거의 독자적으로 처리했다. 새로운 노동당 당원증을 도안·작성·교부하는 문제, 김일성의 초상을 도안·작성·제작·교부하는 문제, 김일성 훈장과 선물에 관한 문제 등을 주관했다.

이 무렵부터 문화예술부분 종사자들 사이에서 '영명한 지도자', '친애하는 지도자'라는 호칭이 나오기 시작했다. 또한 김일성의 측근들도 이때부터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간주했다. 김정일 옹호자들은 나아가 문화예술부문에서 시작된 김정일 우상화

작업을 차츰 사상사업부문으로 확대했다. 그들은 “영명하신 지도자 동지는 당사업의 천재요, 수령님의 사상이론을 완벽하게 재현한 사상이론의 천재요, 수령님의 영도예술과 고매한 덕성을 완벽하게 재현한 영명하신 지도자”라고 찬양하기 시작했다. 김정일이 1970년대 초 노동당의 양대 축인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장악한 것이다.

1973년 4월 김정일은 『영화예술론』을 발표했다. 이로써 김정일은 문화예술을 이론에서 실천까지 지도하고, ‘종자론’으로 대표되는 자신의 독자적인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당 선전선동 부문에서 확고한 위치를 다질 수 있었다.

이 시기에 김정일은 채찍과 당근, 강도높은 조직·사상생활과 선물을 적절하게 구사하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였다. 빨치산 1세대들은 김정일의 능력과 능숙한 용인술(用人術)에 만족했다고 한다. 이들은 김정일의 등장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김일성에게 조속히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식 확정할 것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1970년대는 우리의 국가안전기획부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전황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2) 후계자 논의의 배경과 결정과정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될 때 그의 나이는 고작 33세에 불과했다. 무엇이 북한지도부로 하여금 일찍부터 그를 후계자로 결정해 20여년간 정치훈련을 쌓도록 했을까. 당시 북한이 직면했던 안팎의 조건들이 후계자논의를 불러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결론이다.

실제로 1960년대 후반 권력의 핵을 이루던 김일성과 빨치산그

룹이 이 무렵 후계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이 있다. 계승자를 자칭 잘못 내세워 전임자를 배반하거나 하루도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다.

후계문제가 절박했던 데는 우선 외부요인이 깔려 있었다.⁴²⁾

소련에서 스탈린 사후에 권력을 장악한 흐루시초프는 1956년 2월의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대대적으로 스탈린 비판에 나섰다. 그 영향은 즉각 북한의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1956년 8월 29일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8월 전원회의를 앞두고 심각한 당내투쟁이 벌어진 것이다. 연안파의 윤공흠(尹公欽, 당시 상업상)이 같은 파의 최창익(崔昌益, 내각 부수상), 소련파의 박창옥(朴昌玉, 내각 부수상) 등과 공동전선을 펴 김일성의 '개인 숭배'와 '중공업 우선정책'을 공공연히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전원회의에서 차례로 김일성 비판연설을 감행하려 했다. 중앙위원 다수의 찬동을 얻는 합법절차를 밟아 '김일성 실각'을 기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윤공흠의 연설이 김일성과에 의해 제지되고 주도자들은 중국으로 망명했다. 이들의 거사계획은 물거품으로 끝났다. 이른바 '8월종파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김일성 권력에 대한 도전의 불은 일단 꺼졌다. 그러나 김일성은 큰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신경완은 "김일성과 빨치산그룹은 소련의 영향으로 노동당 내에서도 도전세력이 꿈틀거린 데 심한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소련상황이 레닌과 스탈린이 후계자를 옹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고 증언했다.

42) 김광용, 1995 『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앞의 책, 김광인, 1998 『북한 권력승계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을 주로 참고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일성과 빨치산세력은 내부적으로 후계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한편 중국은 1960년대 중반에 문화혁명의 물결에 휩싸였다. 문화혁명의 소용돌이에서 홍위병이 김일성에게 '수정주의자'의 올가미를 씌운 데 대해 북한지도부는 격분했다.⁴³⁾

소련과 중국의 사태가 김일성과 빨치산세력에게 후계문제를 서둘러 처리하도록 내몰았던 게 분명하다. 신경완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1년까지 소련과 중국의 권력동향을 자세히 소개하는 당내부 '통보자료'를 발간했다”고 증언했다.⁴⁴⁾ 이 자료는 중국과 소련에서 후계문제를 잘못 처리해 겪은 진통을 상세히 소개한 것이었다. 1주일에 한차례씩 당중앙의 지도원급, 내각 성(省)의 부국장급, 도당의 책임지도원급, 군당의 부장급까지만 배포됐다. 자료배포와 함께 간간이 간부들에게 후계문제의 절박성을 호소하는 토론도 조직했다. 당시 북한지도부가 얼마나 후계자문제에 부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후계문제의 절박성은 비단 외부요인 때문만은 아니었다. 노동당 안에서도 1960년대 중반에 심각하고 복잡한 권력투쟁의 양상이 나타났다. 김일성계는 1956년 '8월종파사건' 이래 1년 만에 걸친 '반종파투쟁'을 통해 연안파, 소련파 제거에 성공했다. 그 결

43) 당시 북한의 정세인식에 대한 신경완의 증언. “북한지도부는 강청(江靑), 왕홍문(王洪文)을 비롯한 4인방이 유소기(劉少奇), 등소평(鄧小平)을 공격하는 걸 보고 부르조아에 대한 문화혁명이 아니라 혁명 노간부들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로 인식했다. 모택동이 중국공산당의 오랜 전통을 무시하고 후계문제를 비원칙적으로 처리해 폐단이 나타났다고 단정했다. 더우기 문화혁명 과정에서 혼란을 진정시키는 데 앞장서 후계자로 결정된 임표(林彪)가 쿠데타를 시도하다 발각돼 죽은 것도 후계문제를 제대로 처리 못한 탓으로 돌렸다.” 정창현, 앞의 책, 100쪽

44) 정창현, 앞의 책, 100쪽

과 1961년 노동당 제4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 직계 빨치산세력이 당중앙위원회에 대거 등용됐다. 대회에서는 범빨치산파로 분류할 수 있는 갑산파의 등장도 눈에 띄었다. 갑산파는 해방전에 함경북도 갑산지역에서 만주의 김일성부대와 연결되어 지하활동을 한 갑산공작위원회 관련자들이다. 1961년 제4차 당대회 이후 적어도 6년 남짓은 북한정치가 조용했다.

그런데 1967년에 갑산파가 도전세력으로 나서 후계문제 처리가 더욱 급박해졌다. 1967년 5월의 당중앙위원회 4기 15차 전원회의의 현안이었던 '박금철·이효순사건'은 후계문제와 직접 관련된 사건이었다. 1950년대의 8월종파사건이 김일성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면 '박금철·이효순사건'은 2인자 자리를 놓고 벌어진 첫 권력투쟁이었다.

북한지도부에게 다시 한번 후계자 문제를 생각하게 한 사건이었다. 어떤 형태로든 당내혼란을 막기 위해 후계자 선정을 서두를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성애의 치맛바람도 적잖은 역할을 했다. 1969년 2월 조선민주여성동맹 위원장이 된 김성애는 월권행위를 일삼았다. 마치 김성애가 노동당 위에 군림하는 듯한 현상까지 나타났다. 김성애는 김일성이 1971년 1월 전국농업대회에서 “김성애의 얘기는 내 얘기와 마찬가지로”라고 한 말을 빌미로 치맛바람을 휘둘렀다. 그녀는 최고권력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2인자로 행세했다. 김성애는 김일성의 전처 김정숙의 흔적을 역사에서 지우려고 했다. 김정숙을 언급한 문구는 모두 삭제되었고, 김정숙 관련 집필자는 좌천되거나 노동자로 전락되었다. 또한 중국에서 강청이 그랬던 것처럼 김성애는 빨치산 원로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노골화했다. 나아가 동생인 김성갑(金聖甲)·김성호(金聖浩)를 중용했고, 이들은 조

선시대 왕비의 혈족처럼 하나의 분파를 이뤄 점차 안하무인격으로 행세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당연히 빨치산 출신들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일 먼저 김성애의 행동에 반기를 든 것은 호위국의 전문섭(朱文燮), 백학림(白鶴林), 조명록(趙明祿) 등으로 이들은 빨치산 시절 김정숙과 친밀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김성애의 치맛바람과 그 일파의 비행을 조사해 당시 영화·가극제작에 정신이 없던 김정일과 함께 1974년 6월 평양시당 대회에서 김성애를 몰락시키게 된다. 몰락한 후 김성애는 6개월 두문(杜門)을 당해 자모산 별장에 연금되었다. 그동안 그녀는 1973년 9월 김정일의 후계자 결정 후에도 공식석상에 나타나 일반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친애하는 당중앙'이라고 하는데, 여맹회의에서도 존칭을 쓰지 않고 '정일'이라고 호칭해서 주위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았다. 이것은 그녀가 김정일을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금된 후에야 김정일에 대한 호칭도 바뀌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당시 당의 조직비서로 당의 참모장격이었던 김영주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었다. 김영주는 1960년대 들어 '김일성-김영주-다음세대'라는 잠정적인 후계구도에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러나 김영주가 등장한 이래 '박금철·이효순사건'을 필두로 '김창봉·허봉학사건'이 불거졌고, 이들이 숙청된 뒤에도 김영주가 후계자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능력과 건강 때문이었다. 김영주는 정치안목이 부족해 조직지도부장을 하면서 좌경적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고, 1960년대 중반 이후 병치레로 휴양소와 소련, 루마니아를 전전했다. 결국 김영주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와중에서 김성애가

후계구도의 틈을 비집고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것이다.

위기감을 느낀 빨치산 원로들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의 병도 후계문제에 위기감을 더했다. 목뒤의 혹이 갈수록 커졌던 것이다. 이에 따라 '김일성-김영주-다음세대'의 후계구도는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시 북한 권력핵심부에서 이뤄졌던 논의에 대해서는 신경완의 증언이 가장 자세하다.

“김일(金一), 최용건, 오진우, 최현 등 빨치산 그룹들과 김영주 사이에서는 김영주의 병이 완쾌되기 어렵다면 그 자리를 다음 세대에 주어 정치훈련을 쌓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김영주대(代)라는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다음세대로 후계자를 이월하자는 것이었다. 혁명 1세대가 활동할 때 다음세대의 후계자, 즉 김정일에게 실권을 이양해 후계자로 옹립한다는 취지였다. 주로 빨치산그룹에서 나오기 시작한 이런 얘기들은 1970년 제5차 당대회 준비과정에서부터 본격화되었고, 김정일을 후계자로 옹립하기 위한 수순이 밟아졌다.

제5차 당대회를 전후해 김일, 최용건, 최현 등 빨치산 원로들은 김정일을 당중앙위원으로 선출해야 하고 '중앙위원이 곤란하면 후보위원이라도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던 김정일은 직급으로 보아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김정일이 28세로 나이가 어리고 안팎의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들의 제안을 일단 보류했다.

김일성은 '김정일이 아직 서른밖에 안됐다'며 반대의사를 보였다. 좀더 넓은 범위에서 후계자를 찾아보자는 얘기도 있었다. 그래서 혁명1세대 가운데 소장격인 백학림(白鶴林), 전문섭(全文燮),

2세대들 가운데는 오극렬, 오용방, 최상옥, 김두남 등이 후계자로 면밀한 검토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그동안 지켜본 결과 '김정일과 견줄 사람은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1973년 4월 15일 김일성의 61회 생일을 계기로 8월 30일 개최된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결정하되 우선 조직·선전부문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기로 내부합의를 보았다. 이어서 9월 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5기 7차전원회의에서 이미 3월부터 시작된 3대혁명소조 활동을 점검하면서 3대혁명소조를 이끌고 있던 김정일을 당중앙위원회 조직담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 선전담당 비서 겸 선전선동부장으로 선출했다."

1973년 9월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는 3대혁명 소조운동 수행상황 문제, '대안(大安)의 사업체계'에 맞는 독립채산제 실시문제, 김정일의 당비서 확정문제가 다뤄졌지만, 김정일의 비서 선출은 비밀로 감춰졌다.

김정일은 노동당의 핵심인 조직과 선전부문에 관한 무소불위의 당권을 넘겨받아 후계자의 탄탄대로에 설 수 있게 됐다. 4명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맡아 하도록 권력을 집중했던 것이다. 당시 노동당 내부 분위기는 급속하게 김정일쪽으로 기울었다. 누구도 김정일의 권력세습에 반기를 들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북한은 형식적인 추대결의문을 쌓아놓고서 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8차 전원회의는 하부에서 올라온 결의문에 기초해 김정일을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공식 결정했다. 빨치산 1세대가 내부논의를 시작한 지 4년만에 김정일이 공식후계자로 확정되었던 것이다. 이 회의는 김정일에게

당정치위원회 위원 자리를 주는 동시에 ‘공화국영웅’ 칭호를 안겨 주었다. 이때부터 북한언론은 김정일을 ‘당중앙’으로 호칭하기 시작했다. 일본인 이시카와 쇼오(石川昌)는 정치위원으로 김정일을 뽑던 날 국가부주석 김일이 주저하는 김일성을 설득해 김정일을 정치위원에 선임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⁴⁵⁾

빨치산 1세대들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적극 내세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한 사례로 황장엽은 “일부 사람들은 김일성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원로들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세운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 항일투사 가운데 그런 견해를 내놓을 만한 인물도 없었고, 무엇보다 설사 그런 의견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일성이 조금이라도 반대의사를 표시했다면 그렇게 될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⁴⁶⁾

반면 김일성은 김정일을 후계자로 선정하는 데 ‘항일혁명투사’들이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그의 회고록에서 밝혔다.

“김정일동무를 받드는데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앞장에 서 있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김정일동무를 수령의 유일한 후계자로 내세운 것은 그가 당과 국가, 군대를 령도해야 민족의 장래가 담보되고 백두산에서 개척한 주체의 혁명사업이 한치의 편차도 없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그를 수령의 후계자로 추대했다는 것은 곧 군대가 그를 민족의 령수로 내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일, 최현, 오진우와 함께

45) 石川 昌, 『金正日書記その人と業績』(1987; 雄山閣出版社), 82쪽

46) 황장엽, 앞의 책, 172쪽

임춘추는 김정일동무를 우리 당과 국가의 수위에 추대하는데서 선구자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⁴⁷⁾

어느 주장이 정확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김정일의 성장과정에서 항일빨치산세대가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다는 점, 그뒤 김정일이 일관되게 ‘혁명선배’, 즉 빨치산 우대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김정일이 적극 밀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후계자로 선정된 김정일은 정치위원, 조직지도 비서와 부장, 선전선동 비서와 부장이라는 1인 5역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이어 1976년 10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5기 12차 전원회의는 김정일을 ‘김일성 수령의 유일한 후계자’, ‘영명한 지도자’, ‘친애하는 지도자’로 공식 결정했다. 김정일에게 남은 일은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에 측근들을 채워넣고 권력 장악력을 높여가는 일 뿐이었다.

3. 유일지도체제(후계체제)의 확립

198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개막된 노동당 6차대회에 김정일은 처음으로 외부세계에 얼굴을 드러냈다. 이날 김정일은 주석단 맨앞줄 왼쪽 끝에 자리를 잡았으며 대회집행부 명단상으로는 김일성, 김일, 이종욱, 오진우에 이어 다섯 번째였다. 이어 14일에 그는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당 비서, 군사위원으로 선출됐다. 김일성, 김일, 오진우 다음으로 서열 4위였다. 정치국, 비서국, 군사위원회의의 모든 지위에 임명된 유일한 경우였다.

47) 김일성, 앞의 책, 310쪽

한마디로 6차당대회는 김정일이 후계자임을 내외에 천명하는 행사였다. 6차당대회는 준비에서 회의진행에 이르기까지 김정일의 책임아래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 후계자로 확정된 1974년 2월 이후 6차당대회에 이르는 6년동안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김정일이 어떻게 자신의 통치체제를 마련했는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공식화되자마자 본격적으로 자신의 통치체계를 구축해가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노동당, 군대, 정부, 대남사업의 순서로 차근차근 자신의 후계체계를 확립했다. 1973년 하반기부터 1976년 중반기까지였다. 이때가 되면 후계 체계의 구축은 일단 완료된다. 김정일은 후계체제(북한은 이를 '유일지도체제'라 부른다) 확립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면서도 시기적인 단계와 과정을 거쳐 더 집중적으로 조직, 진행시켰다.⁴⁸⁾

1)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김정일은 당조직비서, 사상비서를 맡아 당권을 쥐고 자신의 체제 구축의 방법으로 '당의 유일지도체제 확립'을 새롭게 제기했다. 유일지도체제의 확립은 곧 김정일 후계체계의 구축을 의미했다. 한마디로 김정일이 김일성과 동등한 위신과 권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당과 국가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집중시키고, 그의 결정에 따르는 체계였다.

1960년대 초반까지 김일성세력은 반대파를 제거하면서 당적 사상체계 확립을 내세웠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새롭게 들고 나온 사람은 김영주 당조직지도부

48) 김광용, 앞의 논문, 106쪽

장이었다. 김영주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만들어 1967년 8월 제4기 16차 전원회의에서 토의, 채택했다. 10대 원칙을 모든 사업과 생활에서 지침으로 삼고 행동하며 그에 준해서 당생활을 총화하도록 강제했다. 여기서 유일사상이란 김일성의 사상을 의미한다. 유일사상체계 확립이란 김일성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김일성이 숨쉬고 말하는 대로 같이 숨쉬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작업이 본격화되고, 김일성의 혁명역사를 새롭게 쓰고, 김일성역사연구실을 전국 부락마다 만들며, 도처에 동상을 세우고 김일성이 가는 곳마다 사적비, 사적관, 현지도도 교시판 등을 대대적으로 만들었다.

이때 만들어진 10대 원칙은 김정일이 1974년에 만든 '10대 원칙'과는 내용이 약간 다르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확정되자 당유일사상(김일성 사상)의 유일한 해석자, 계승자임을 명확히 했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25일 실시된 '당 선전선동부문 일꾼들의 회의와 강습'에서 '당 사상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기본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나는 수령님이 창시하신 주체사상·주체혁명이론·주체의 사업방법의 절대적 신봉자이며, 이것을 더욱 발전·풍부화시켜 나갈 유일한 계승자다"라고 선언했다.

이 말은 자신의 지도이념·지도이론과 방법이 주체사상의 이론과 방법이라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주의(金日成主義)'를 최초로 공표했다. 이로써 김일성은 마르크스주의나 레닌주의, 모택동주의처럼 공산주의운동 역사에 몇 안되는 하나의 사상조류를 형성한 '위대한 혁명가'로 추대된 셈이다.

김정일은 '주체사상과 주체의 혁명이론과 주체의 방법론 3가지

를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김일성주의'라고 규정하며 혁명적 수령관으로 김일성주의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신념화, 충성의 절대성·무조건성이 강조되었다. 그는 김일성주의를 실천할 방안으로 '유일지도체제론'을 처음으로 제창했다. 김정일은 "나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것이 곧 수령님에게 집중시키는 것이다. 나의 결론과 결정과 비준은 곧 수령님의 그것이다. 유일지도체제 확립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기본핵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세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기본내용에 자신의 '유일지도체제' 확립문제를 제기해 권력승계의 이념을 계승·발전시켰다.

김정일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기본 수단으로 1967년 김영주가 만든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에 유일지도체제 확립문제를 포함시켜 1974년 4월 4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토의·결정해 공식 발표했다. 그후 9월에 열린 제5기 9차 회의에서 공식 채택했다. 당시 9차 회의는 비밀회의로 일체의 공식적인 보도가 없었다. 황장엽도 "김정일이 김영주가 예전에 작성한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김일성을 더욱 이상화하는 방향에서 개작했다"고 회고했다.⁴⁹⁾ 북한이 공개한 10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해야 한다
-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49) 황장엽, 앞의 책, 173쪽

-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의의이다
- 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6)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 7)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품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 8)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 9)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지도 밑에 전당·전국·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해나가야 한다.50)

'10대 원칙'이란 다름아닌 김일성의 신격화와 그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一色化)하는 등 온통 김일성 우상화의 내용뿐이었다. 전당, 군, 국가가 김일성, 김정일만의 영도와 지도, 교시와 결론만으로 움직여야 하며, 유일한 후계자인 자신에게도 목숨을 바쳐 충성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주도적으로 10대원칙을 작성, 공표함으로써 김정일은 북한사회

50)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1987:조선로동당출판사), 101-124쪽

의 이념 해석권을 장악했다. 반당적·반혁명적인가 아닌가의 판별을 오직 김정일 자신만이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했다. 북한의 당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이 10대 원칙에 따라 살고 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곧바로 반당적·반혁명적 행위로 단호하게 처벌받게 됐다.

이제 남은 문제는 채택된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어떻게 전당, 전군, 전국에 침투시키는가 하는 문제였다. 김정일은 일련의 단계와 과정을 거쳐 치밀하게 추진했다.

우선 김정일은 자신의 독특한 지도이론과 방법론을 수립하고 이를 전당·전부문에 지도적 지침으로 확산해 나갔다. 이를 위해 김정일은 직접 관련 문건들을 작성해 배포했다.

김정일은 1973년 8월의 '새로운 당생활체계를 전당으로 일반화할데 대하여'란 문건을 작성해 정치국에 제출해 통과시킨 뒤 생활체계 확립의 근거로 삼았다. 같은 해 11월에는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으로 김일성주의 학습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를 써서 배포했다. 다음해 1974년에는 더욱 본격적인 양상을 보였다. 2월에는 '온사회가 김일성주의를 계승할데 대하여'를, 4월에는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와 '당내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 데 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내놓았다. 5월에는 '출판·보도부문에서 주체를 세우고 유일사상을 관철할 데 대하여'를, 8월에는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더욱 다그칠 데 대하여'를 출간했다.

주체사상에 기초해 새롭게 작성된 이 문건들은 그 뒤 노동당의 이론적·실무적 지침이 됐다. 김정일이 쓴 논문들은 대부분 정치국에 제출됐고, 공식 결정으로 채택됐다.

김정일은 이같은 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례가 없는 방법을

사용했다. 대규모의 강습회를 조직해 진행한 것이다. 과거에도 주요 결정이 내려질 때 해당부분 관련자들에 대한 강습회가 열린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이 주도한 대강습회는 참가대상이나 강습기간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중앙당이나 지방당의 간부들만을 참가시킨 것이 아니라 전국의 해당부문 일군들 모두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다. 도당·군당 비서들은 물론 군당·군당기업소의 지도원까지 조직·선전·경제부문의 유급 일군 모두가 대상으로 포함됐다. 최고 부문에서 최하 말단까지 전국·전부문의 당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례없는 규모의 강습회였다.

강습기간도 종전에는 5일 정도였으나 이번에는 15일, 20일이 걸렸고, 심지어는 1개월까지도 진행됐다. 강의방식도 변화됐다. 과거에는 강의만 진행했으나 이번 강습회에서는 하루는 강의하고 다음날은 집체토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방식으로 1974년 2월에는 전당적인 '당 선전선동부문 일꾼들의 회의와 강습', 3월에는 '당 조직부문 일꾼들의 회의와 강습', 4월에는 '경제부문 일꾼들의 회의와 강습', 5월과 6월에는 '도·시·군당 및 공장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들의 회의와 강습'을 진행했다. 김정일은 직접 회의와 강습에 참여해 강의하고 회의를 주재했다. 다음해인 1975년 2~3월에는 다시 도·시·군당 책임비서들과 중앙당 간부들을 한자리에 모아 회의와 강습회를 열었다. 신경완은 유일사상체제와 유일지도체제의 확립 방안에 회의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증언했다. 이 회의가 끝난 후 3대혁명소조의 지도를 전면 개편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해 11월에는 도당 책임비서와 중심군당 책임비서, 중앙당의 부부장급 이상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회의와 강습이 벌어졌다.

같은 달 도당책임비서, 도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중앙당의 부부장급 이상 간부, 정무원의 장차관급 간부 등을 한자리에 모아 '항일유격대식 김일성수령님식 사업방법을 몸으로 체득 관철하자'는 제목으로 강습회가 조직됐다.

나머지 일반 당원 및 대중들에게도 이러한 방식과 체계가 적용됐음은 물론이다. 북한주민들에게 강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는 신경완의 증언이 유일하다.

“김정일은 우선 선전선동사업부에서 사업체계와 지도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했다. 그 주요한 방식은 학습·강습·대중강연체계로 구체화됐다. 예를 들어 대중강연체계는 대중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선전선동부의 지도원들이 연사로 나와 강연하는 것이다.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중앙당·도당·군당의 지도원들이 연사로 파견된다. 학습은 당원일 경우 당에서, 비당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근로단체에서 정기·부정기로 시행하며, 당정책과 혁명역사에 관해 자습했다. 학습성과는 '학습총화과정'을 통해 검증받아야 했다. 강습은 대개 일반강습과 집중강습으로 나뉘어진다. 중요한 당정책의 전환이나 중요 문건들이 발표될 때 집중강습을 실시했다.”⁵¹⁾

김정일의 지시나 문건이 일반대중들에게까지 조직적으로 침투되도록 강습과 학습을 일상화한 것이다.

김정일은 이러한 선전선동체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이 체계를 규범화, 정기화했다. 예를 들어 수요강습시간에는 실무기술을 위주로 강습이 진행됐고, 금요일에는 노동이나 군사학습

51) 정창현, 앞의 책, 140쪽

을, 토요일학습시간에는 당정책과 혁명역사를 위주로 정치학습이 시행됐다. 한마디로 당간부부터 일반주민까지 실새없이 강습과 학습을 하도록 했다.

김정일은 당원들에게 '10대 원칙'의 생활화를 요구하는 한편, 자신이 직접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수령의 높은 정치적 신임에 보답하자!' 등이 그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구호와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가 뒤따라 만들어졌다. 김정일이 직접 '검열그루 빠'를 이끌고 지방으로 검열을 다닐 정도였다. 1974년부터 75년 초까지 김정일은 거의 지방에 체류하는 일이 잦았으며, 그 집행 여부를 점검해 지방선전부문 일군들을 대거 교체했다.

이처럼 김정일은 1973~74년 2년 동안 10대 원칙 및 당 사상 사업체계 확립 등 이론과 방침을 만들어 시달렸고, 1975년에는 그것이 집행, 실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지도, 검열했다. 김정일이 당과 국가안전보위부를 통해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 '10대 원칙'이 확고하게 섰고, 당사업 제도와 규율이 일사분란하게 확립됐다고 한다. 항일유격대식 전통과 사상체계의 토대 위에 주체의 사상체계, 김일성-김정일 사상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남은 과제는 1980년 11월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정일 후계 체제를 대외적으로 공식 선언하는 정치일정 뿐이었다. 대회에서 김정일은 노동당 규약개정을 통해 자신의 지도이론을 반영하여 명문화했다. 그는 당의 기본성격을 김일성주의 당으로, 당의 목표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로 규정했고, 자신의 지도이론인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당규약에 포함시켜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했다.

2) 노동당의 개편

김정일은 노동당에서 1967년부터 추진해온 '유일사상체계' 확립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자 당·정·군 내에 '후계체제(유일지도체제)' 확립을 동시에 추진했다. 김정일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 '10대원칙'에 기초해 1973년 9월부터 1974년 중반까지는 노동당에, 1974년 후반부터 1975년 중반까지는 군대 안에, 1975년부터 1976년 중반까지는 정권부분과 대외·대남부분에 유일지도체제를 수립했다.

김정일은 이미 1973년 9월 조직사상비서로 선출된 이후 유일지도체제에 전념하던 차였다. 유일지도체제란 한마디로 김정일의 지시만을 따르는 지도체계, 보고체계,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에 조직체계를 재편하고 지도서를 배포해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강습을 통해 사상무장을 시켰고, 그후로는 자신이 직접 다니며 확인, 검열하는 일에 주력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기에 김정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북한 사회를 변모시켰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신경완이 1990년대 초 처음 언론에 입을 열기 전까지 외부세계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신경완은 이 시기에 김정일이 한 일들을 다음과 같이 압축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후 1974년에는 지도이론과 방침을 작성·수립했으며, 1975~76년에는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지도, 강습에 나섰다. 특히 1974년 말부터 75년 중반까지 김정일은 말 그대로 번개처럼 여기에 나타났다가 저기에 나타났다가 하는 식으로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심지어는 양강도 산골에까지 모습을 드

러내며 유일지도체제 확립을 설새없이 다그쳤다. 그러느라 김정일은 기차, 비행기 안에서 수면을 취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1975~76년에는 각종 회의와 강습을 주재하느라 김정일에게는 매우 바쁜 나날이 계속됐다.”⁵²⁾

유일지도체제 확립문제는 1974년 10월의 당 제5기 9차전원회의에서 다루어졌다.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은 ‘당·군·정권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집중시키고 나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처리, 집행되고 보고되는 일사불란한 지도체계와 무조건 복종하는 조직 규율을 세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것이 바로 유일지도체제의 핵심이었다. 김정일이 조직·사상·구체적 실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관장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김정일은 당내부 사업지도서와 당조직, 부서, 직능조정 등을 통해 당사업체계를 대폭 수정해 당 조직을 짝 조였고, 이를 통해 자신의 통치기반을 강화했다.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했다. 또 중앙과 지방에 대한 검열사업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신이 간부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

김정일이 유일지도체제 확립에서 기본 중심문제로 제기한 것은 ▲당조직기구 체계의 개편문제, ▲당사업의 기본핵인 당·군·국가 간부사업체계를 재정비 수립하는 문제, ▲당사업 지도검열 체계의 정비와 당 간부대열의 정화(淨化), ▲지도이론과 방침·방식의 침투, ▲간부·당원들의 당조직 생활과 그의 지도체계의 정비 강화, ▲당선전 사업체계의 정비 수립문제 등이었다.

김정일은 우선 노동당 내 유일지도체제 확립을 위해 당 핵심 참모부서들인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위시한 당조직기구들

52) 정창현, 앞의 책, 143쪽

을 자기의 요구에 맞춰 정비하고 간부사업체계를 보강했다. 즉 당 사업의 기본문제인 당·정·군 간부의 선발기준과 임명·해임, 양성 훈련의 절차와 질적 문제 등을 규정한 것을 기본내용으로 간부사업체계를 세우는 데 관심을 집중했다.

그는 당의 핵심참모부서인 조직지도부가 당·정·군 등 전반적인 간부문제(인사권)를 장악·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지도부의 기구를 개편하고 간부사업체계를 새로 만들었다. 과거에는 간부문제를 당 간부의 지도아래 각 부서별, 기관별로 분산 취급했다. 김정일은 이를 당 조직지도부가 직접 장악·전담할 수 있도록 기구를 신설했다.

조직지도부 간부사업담당 기구로서 간부 1·2과와 3과(군대간부담당), 4과(사법·검찰·사회안전·국가보위간부), 5과(정권간부), 6과(경제부문간부), 7과(교육·과학·문화·예술), 8과(언론·출판·보도부문간부)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김정일은 모든 간부문제를 조직지도부에 집중시키고 조직지도부장 겸 조직비서인 자신의 직접적인 지도·통제아래 간부사업이 진행되도록 했다.

특히 김정일은 인사원칙을 세우기 위해 간부사업지도서(지침서)를 직접 만들었다. 여기에는 모든 간부의 선발·임명 기준과 절차, 간부의 승진과 해임, 교육훈련의 절차 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인사 지침서를 만들고 여기에 따라 모든 인사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당내 경제부서 등을 제외한 부서에는 간부과를 신설하고 조직지도부 해당 간부담당과와 협의해 산하 경제·교육·과학·문화·예술·언론·보도·출판 부문의 간부문제를 사무적으로 다루도록 변경했다. 그것도 최종 임명 결정권은 조직비서에게 집중시켰다.

간부사업지도서는 간부의 임명·해임에 대한 기준을 어느 수준

에서 검토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이었다. 정치국 비준대상은 장관급 직위 및 기타 중요 요직이다. 당중앙위원회 부장·부부장, 정무원의 부장·부부장, 군대의 사단장·독립여단장·정치위원, 도급의 도당책임비서·행정경제위원장·각기관의 도급책임자, 도급 공장기업소의 당위원장·지배인, 외교부의 대사급 이상 직책이 해당된다.

비서국 비준대상은 그 이하의 직책으로 중앙당 과장·책임지도원·지도원, 지방당의 군당위원회 비서·도당의 부장급 이상 간부들, 행정기관의 정무원 국장·부국장, 도인민위원회 부장·국장들이 포함된다. 그밖의 간부들은 자체기관의 당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비준을 하도록 규정했다. 비준받은 인물을 최종적으로 임명권자가 임명했다. 한 인물의 임명·해임 비준은 철저히 집단적 토의과정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했다. 즉 해당인물에 대한 인사기록철인 '주민요해(了解)대장'과 관련문건들을 놓고 찬반토론이 진행돼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임명권자는 집계적 토의결과인 비준에 대해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임명권자의 권한행사는 다분히 형식적 성격을 띠게 됐다.

모든 간부들에 대한 인사서류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보존된다. 인사서류에는 한 인물에 대한 출신성분부터 당생활기록 및 각종 평가서 등 특정인물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담겨져 있다. 조직지도부는 인사기록을 검토해 정치국 및 비서국으로 자료를 송부한다. 간부임용 때 이미 조직부에서 1차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관련부서의 임명·해임 등 인사문제는 조금 다르게 규정됐다. 정무원의 경제관련 부서에 대응해 중앙당에 설치된 경제부서들, 즉 기계공업부·중공업부·경공업부·농업부·재정경리부 등은 정무원의 해당 경제부서의 '행정관계'간부들에 대한 인사권

을 보유하도록 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조직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정무원의 경공업위원회의 간부들, 즉 행정관련 부장·국장·과장 등에 대한 인사권은 당중앙위원회 경공업부에서 관할하지만 정무원 경공업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당간부들에 대한 인사권은 조직부에서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인민무력부(1998년 9월 인민무력성으로 개편됐다)도 동일하다. 인민무력부 내의 사단장·참모장 등 군사간부들에 대한 인사권은 당군사위원회 간부과에서 관할하지만 총정치국 산하 정치관련 간부들(주로 정치부 요원들)은 당조직부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다음으로 김정일은 유일지도체제 확립을 위해 지도검열을 강화했다. 당·군·정·경제·과학·교육부문 할 것 없이 모든 부문과 단위의 전반사업을 직접 지도·검열할 수 있는 지도검열체계를 세운 것이었다. 김정일은 자신이 장악하고 있던 당 조직지도부가 전권을 쥐고 지도검열을 할 수 있는 사업체계를 만들었다. 지도검열사업지도서와 지도검열사업 요강(要綱)도 새로 만들었다. 이에 준해 지도검열이 이뤄지도록 지도검열체계를 세웠다.

우선 조직지도부에 중앙검열 1·2과와 지방검열 1·5과를 신설하고 측근들을 간부로 임명했다. 지도검열은 김일성·김정일의 현 지지도 전후를 비롯,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직 진행하며 당·정·군 모든 부문의 정형(定型)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도록 지도검열체계를 뜯어 고쳤다.

이때 만들어진 지도검열체계의 특징은 '검열의 이원화'였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당과 국가기관에서 교차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열의 체계화를 위해 검열의 종류를 일상검열·집중검열·특수검열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일상검열은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검열이고, 집중검열은 특정시기, 특정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검열을 의미한다. 특수검열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현지지도로 나가기 전에 대상지역의 실상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검열하는 것으로 사전조사의 성격을 띤다.

김정일은 특별히 집중검열을 위해 노동당 안에 '집중검열 그룹'을 신설했다. 1960년대에도 일반적인 집중검열은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이 만든 '집중검열 그룹'은 중앙당간부들로 구성돼 유일지도체제(후계체제)가 제대로 확립되고 있는가를 검열하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전국가적·당적 지도사업에 관한 검열권한을 갖고 있는 막강한 존재였다. 당·국가의 간부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김정일은 유일지도체제 확립을 위해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조직, 근로단체 조직의 조직생활체계와 지도체계를 새로 만들었다. 여기서 지도체계란 지휘계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하급기관 지도방법론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각급 당조직들이 매일 2시간 학습과 주간 집체학습·학습총화, 주간 강연회 참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당생활과 당조직규율을 강화하는 데 지도적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지도체계를 개편했다. 당생활은 모든 간부와 당원들이 당적 분공(분담해 맡은 일)의 집행·보고, 당조직에 의거 2일·주간·월간 당생활총화를 기본으로 하도록 했다.

원래 조직지도부의 기본기능과 임무는 간부들과 당원·맹원들의 당·근로단체 조직생활을 직접 지도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부가해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의 당생활지도기구들인 당생활지도과

를 확대개편해 책임지도제를 강화했다.

오늘날의 북한사회를 파악하는 데 주민 5명중 1명꼴로 당원이
고, 당원들은 꼭짜인 당생활체계 아래 놓여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 단적인 예를 각 조직단위별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당생
활총화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1960~70년대 초반에도
당기관에서 당생활총화제도가 실시됐다. 신경완은 “1960년대는
당생활총화가 형식적인데 그쳐 불참자가 많았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만 모여 앉아 상호비판하는 식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던 것을 김정일이 1970년대 중반부터 당기관의 모든 사람
들이 일정기간의 생활전반을 털어놓고 총결(總結)하는 형태로 바
꾸어 놓은 것이다. 당 생활총화 때 '당세도', 관료주의, 행정대행
주의 등이 주로 표적이 됐다고 한다.

이를 통해 김정일은 간부와 당원·맹원들의 당·근로단체 조직
생활을 일층 강화했다. 이것은 김정일이 간부와 당원·맹원들에
대한 조직적인 통제를 강화해 모든 당원·맹원들의 조직생활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집중되는 조직생활과 지도체계를 세
운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당원들의 조직생활을 원활하게 감독하기 위해 생활
체계의 확립을 위해 상당한 신경을 썼다. 북한에서 생활체계란
모든 간부·당원·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당과 근로단체에서
어떻게 조직생활과 사상생활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체계이다. 구
체적으로 조직생활과 사상생활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어떻게 당
조직으로부터 임무를 받으며, 그 집행은 어떻게 하고 보고는 어
떻게 하는가, 생활총화는 어떻게 하는가 등 조직생활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내용을 세세히 규정했다. 즉 당에서 받은 임무를 정
확히 완수했는지, '유일사상 10대 원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는 앉았는지 등을 모여 상호비판, 토론하는 모임을 정기화한 것이다.

신경완은 “1977~78년 쯤에 이르면 모든 당원이 정규화된 당 생활에 참가하게 돼 전혀 ‘빈잠이 없는 상태’로 됐다”고 증언했다. 모든 당원들이 당 생활과정에서 회의, 강연, 학습, 군사훈련 등에 빠짐없이 참가하는 게 의무가 돼 ‘딴맘먹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당 활동이 빈틈없이 짜이다 보니 폐단 또한 적지 않았다. 신경완은 “당원들이 지나치게 규범화된 틀에 얽매어 기계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창조적 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증언했다.⁵³⁾ 능동적 자세를 취해야 할 간부들이 당의 지시만 외곬으로 실행하는 경향 때문에 사회경제적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한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유일지도체제 확립을 위해 북한 전역의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상황들을 신속히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보고·통보체계를 세웠다. 김정일은 정보가 힘이란 점을 꿰뚫어 보았던 것이다.

김정일은 전당·전군·전국의 모든 단위와 부문의 기관, 기업소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3선(線)·3일(日) 보고·통보체계’와 자신에게 직접 보고·통보하는 ‘직보(直報)체계’를 만들었다. 3선(線) 또는 3통(通)이란 당조직계통·행정계통·국가보위부계통을 의미한다. 이 조치가 있는 후 이들 기관은 3일만에 한 번씩 북한전역에서 일어난 상황을 정기적으로 중앙당 조직지도부에 보고·통보해야 했다.

53) 정창현, 앞의 책, 151쪽

직보체계란 비상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시, 유일사상체계·유일지도체계 위반과 관련된 문제가 발견된 즉시 전화·전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김정일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말한다. 군대에서 3선·3일 통보체계는 군대 안의 당조직계통(정치부)·참모부계통·군대보위부계통을 말한다.

김정일은 이처럼 전당·전군·전국에 걸쳐 3통(3선)·3일 통보체계와 직보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엄격하게 실시하는 질서와 규율을 준수하도록 강요했다. 통보체계와 직보체계를 통해 김정일은 평양의 집무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북한 전역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중앙조직을 장악한 김정일은 다음으로 하부조직에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해나갔다. 이는 이른바 당 하부지도 사업체계를 세우는 일이었다.

김정일은 모든 하부지도사업은 당위원회 주관 아래 조직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당위원회에서는 조직지도부가 중심이 되며, 한 부문별로 되는 지도사업은 해당부서가 주동이 되어 조직·진행하되, 조직지도부의 통제를 받도록 규정했다. 김정일은 하부지도사업의 계획서와 지도사업요강의 작성과 비준절차, 지도사업의 방법, 지도사업의 결속 총화방법을 세세히 규정했다. 중앙기관에서 모든 사업을 설계·계획하고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제의서'를 작성해 자신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직·집행하도록 규정했다. '제의서'의 작성과 제출·절차·방법 등도 새로 지침서를 만들도록 했다. 이를 통해 김정일은 하부지도사업을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직·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한다.

중앙기관에서 하부기관 지도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침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 모든 일을 집행하도록 개편한 것이

다.

일단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지시한 김정일은 전반적인 지도검열을 진행했다. 1973년 말부터 조직지도부 검열부문이 중심이 된 지도검열그룹을 유능한 성원들로 구성, 전국의 모든 부문과 단위의 당조직에 파견했다. 이때의 지도검열은 김정일 자신이 새롭게 제시한 방침들과 구호, 지도서들이 하급 당조직들에서 어떻게 접수되고 실행되며 간부들의 사상적 준비 정도, 특히 1973년 9월의 노동당 제5기 7차 전원회의 결정의 집행상황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2개월간의 검열 결과 당시 함경남도당 선전선동부장을 비롯한 많은 지방당 간부들이 김정일이 제시한 방침과 구호를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충실히 집행하지 않고 있다 해서 해임됐다. 김정일은 이들을 광산과 탄광으로 보내 생산노동을 통해서 사상적으로 단련시켰다. 이렇게 검열을 통해서 김정일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측근들로 간부대열을 충원할 수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김정일은 조직과 기구의 재편으로 인한 과도기상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각종 지도서를 발간했다.

우선 당부문사업과 관련해 1974년 9월 '당사업독본(讀本)'을 발간했다. 이 책은 중앙당 '간부고급당학교' 당건설강좌 교수들과 함께 수개월 동안 준비작업을 거쳐 만들어졌다. 이 독본은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 배치사업 등 모든 사업체계와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괄해 당간부들의 당활동 교과서로 활용됐다.

이보다 구체적인 지침서로 '간부사업지도서'가 작성, 배포됐다. 이 지도서에는 모든 간부의 선발·임명의 기준과 절차, 간부의 승진과 해임, 교육훈련의 절차 등이 규정돼 있었다. 아울러 각 부서별 담당업무의 내용, 과장·책임지도원·지도원·보조지도원 등 간

부의 직능이 각각 세세하게 규정됐다. 신경완은 “이 지도서에 조 회(朝會)는 어떻게 하고, 과외업무는 어떻게 하는가, 담화방법과 추천서 작성법 등 간부사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고 증언했다.

김정일은 당생활, 즉 조직생활과 사상생활의 실천방법·참석범 위·총화·진행방법 등을 규정하는 ‘당생활지도서’도 발행, 배포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지도·검열 부문도 업무를 표준화·제도화할 필요가 있었다. 김정일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도검열사업지도서’와 ‘지도검열요강’을 만들었다. 이는 모든 부문과 단위에 대한 검열체계를 확립하고, 검열방법과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도검열의 효율성과 만일에 발생할지 도 모르는 월권시비를 미리 막으려는 조치였다.

김정일의 유일지도체제 확립방식이 북한말로 ‘권력을 내려먹이 는 식’은 아니었다는 증언도 있다.

“김정일은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면서 무조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그대로 시행하 도록 했다. 독본·지도서·요강의 발간은 이를 위해 필요한 지침서 였다. 김정일은 사전에 조직체계를 재편하고 지도서를 배포해 방 법을 가르쳐주었으며, 강습을 통해 사상무장을 시켰고, 그 후로는 자신이 직접 다니며 확인, 검열하는 일에 주력했다.”⁵⁴⁾

유일지도체제의 확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3대혁명소조운 동’이다. 김정일은 1973년부터 진행되고 있던 ‘3대혁명소조운동’

54) 정창현, 앞의 책, 155쪽

을 후계체제 확립의 친위대(親衛隊)로 개편했다. 3대혁명소조운동 대열을 확대 개편하기 위해서 3대혁명소조운동 중앙지도부가 신설됐다. 당 조직지도부에는 3대혁명소조운동 지도과가 신설됐다.

이때부터 3대혁명소조운동이 김정일의 직접적인 지도통제·장악 아래 유일지도체제 확립의 선봉장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이로써 김정일은 유일지도체제 확립에서 기본이 되는 당 조직기구의 개편, 간부사업체계, 검열사업체계, 당원·간부들의 당생활체계와 지도체계, 통보·보고체계, 국가보위부의 신설, 3대혁명소조운동의 확대 개편 등 주요한 조치들을 마무리했다. 이어 전반적인 검열을 진행, 그 결과를 갖고 간부층의 물갈이작업이 진행됐다. 그리고 나서 김정일은 유일지도체제의 다음 단계로 전 간부를 자기식의 지도이론과 지도방법·방침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대강습을 조직·진행했다.

1974년 2월 전당적인 '당 선전선동부문 일꾼들의 회의와 강습'을 시작으로 같은 해 3월에는 '당 조직부문 일꾼들의 회의와 강습'을, 4월에는 '경제부문 일꾼들의 회의와 강습'을, 5월과 6월에는 '도·시·군당 및 공장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들의 회의와 강습'을 대대적으로 조직, 진행됐다.

회의와 강습에서는 해당부문의 도·시·군당 및 공장기업소 당위원회 지도원급 이상 과장, 부부장, 비서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참가시켰고, 각 강습회의는 20일간씩 진행되었다. 회의와 강습에는 김정일이 직접 참여해 강의도 하며 지도했다.

김정일은 또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내에 총무부, 사적부, 주석부를, 도·시·군당위원회는 사적부를 신설했다. 또 경제부서들을 경제1·2·3부로 조직개편해 경제부문 전반에 대한 당적 지도통제

를 더욱 강화했다.

당시 이러한 움직임은 외부에서 감지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노동당이 모든 부문을 장악하는 '당적 영도 체계'가 일사불란해졌다. 당의 영도가 거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일련의 변화를 지켜본 신경완의 증언이 참고된다.

“70년대 전반기만 해도 당적 지도에 허점이 많아 각 부문에 영향력이 확고히 뿌리내리지 못한 감이 있었다. 정권기관·군·사회안전기관 등에서 당적 지도가 지금처럼 강하지 못했고, 더러는 반발도 있었다. 군(郡)행정위원장이 군당(郡黨)의 지도를 안받으려는 분위기나 군당책임비서가 대가 약하면 군단위의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가 당을 깔보는 경향도 나타났다. 70년대 중반에 김정일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유일사상체제·유일지도체제 강화로 1977년쯤 되어 이런 경향은 거의 사라졌다. '당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과정에서는 조직생활·사상생활에 대한 지도체계,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체계의 확립이 중시됐다.”⁵⁵⁾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과 함께 당의 영도가 강화되자 '당권위의 절대화'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른바 당의 '행정대행주의(行政代行主義)'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당의 지위·역할이 높아지면서 당간부들의 행세주의, 관료주의, 행정대행주의라는 악습도 커진 것이다. 당이 정권기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권력기구화될 소지가 높아진 것을 의미했다. 특히 좋은 성분 덕에 학교 졸업 후 바로 당간부로 배치된 사람들에게서 이런 경향

55) 정창현, 앞의 책, 157쪽

이 심했다고 한다.

부작용이 나타나자 김정일은 권력을 당에 집중시키는 한편 당 간부들의 행세주의, 관료주의, 행정대행주의를 뿌리뽑는 일에 착수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 자체가 주민들에게 불신당하고 끝내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간부들의 악습을 바꾸는 게 간단치는 않았다고 한다. 지속적 교양과 내부투쟁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중앙당에도 각 과별로 '당분조' '당세포'가, 부별로 '부분당'이 있고, 그 위에 '초급당' '당위원회'라는 사슬구조가 영겨 있었다. 김정일은 당분조·당세포에서 소속당원의 관료주의, 행정대행주의, 세도를 막는 사상투쟁을 전개하였다.

처벌도 강화되었다. 예전에는 관료주의나 세도로 적발되더라도 비판 끝에 마무리하는 경향이었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김정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각급 당회의에서 당세도나 관료주의, 행정대행주의로 3차례만 비판받으면 일단 현 직책은 그대로 둔 채 '노동직장'에 쫓겨가 노동활동으로 단련을 받은 뒤 복귀하게 했다. 쫓겨온 간부들은 이곳에서 '습성이 바뀌었다'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계속 노동·상호비판으로 몇 개월 혹은 몇 년간 지내야 했다.

당의 '행정경제기관 업무' 대행이라는 불합리를 막는 과정에서 1970년대 후반 이래 당중앙의 집행부서 중 경제관련부서가 유독 자주 바뀌기도 했다. 당쪽에서 불필요한 기구와 사람이 많을수록 행정대행과 '행세부리기'가 잦다고 보고 잇달아 기구통폐합과 간부축소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이었다.

당기관 내의 당조직을 강화하는 조치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하나의 예로 중앙당 '당위원회비서'는 예전에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겸하던 것을 75년부터 제1부부장급의 전임 당위원장을 따로 임명했다. 마찬가지로 '부문당 비서'는 중앙부서 과장이 겸하던 것을 부서내 간부사업담당 부부장이 전임하도록 급을 높였다.

그밖에 주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군당비서·부장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도 뒤따랐다. 주민들에게 공급해야 할 물자를 지방당 간부들이 사전에 빼돌리는 일이 잦아 원성을 샀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 증반이전에 된장, 간장 등 주민들의 실수요품을 공급하는 상점은 군 소매관리소-군(郡) 상업부에서 관할했는데 물자배정표는 군당경제부가 작성하는 폐단이 있었다. 자연히 군당 쪽에서 배정표를 멋대로 작성해 당간부들의 '물자 빼돌리기'에 이용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김정일은 군사업부장-군소매관리소장이 물자배정표를 직접 작성케 하고 상점을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군당 등 하급당이 행정 경제부분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부정행위를 일삼는 곳에서는 대개 유사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부정으로 처벌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군대조직의 개편

김정일은 노동당 개편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자 바로 이어서 군대 안의 유일지도체제 확립에 힘을 집중했다. 군(軍) 유일지도체제 확립의 첫 단계로서 1974년 하반기에 군대 내 당조직에 대한 일제 검열지도를 조직·진행했다.

노동당의 '군통제' 강화정책은 1969년을 전환점으로 하고 있다. 1969년에 발생한 '김창봉·허봉학사건'이 계기였다. 1969년 1월 6일~14일에 열린 인민군당 제4기 4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이를 위한 자리였다.⁵⁶⁾ 이 회의에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오진우가

나서 민족보위상 김창봉) 등을 비판했다. 김창봉 등은 군대내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방해, 혁명전통 계승에 대한 반대 및 저지, 군대안에 가족주의적 종파 형성, 훈련보다 부업과 축성작업 강조 등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비판받았다. 대남공작 책임자 허봉학도 같은 신세가 됐다.

이 여파로 군총참모장 최광 등 군수뇌 일부와 부수상 김광협, 사회안전상 석산 등이 실각했다. 이들에게는 당 정책의 불이행과 군벌관료주의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예를 들어 김정일은 1969년 1월 19일 “군벌관료주의자들이 얼마나 당조직을 무시하고 전횡을 부렸는가 하는 것은 당회의들에서 사령관이 결론을 하게 하고 정치부가 당 정치사업에 대한 통보를 참모부를 통해서 하도록 강요한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면서 “그들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좌지우지하였을 뿐 아니라 총정치국이 당중앙위원회의 해당 부서들과 련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당중앙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를 거부해 나섰다”고 지적했다.⁵⁷⁾

인민군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군 당위원회와는 별도로 당의 정책결정을 집행하는 정치기관인 인민군 ‘총정치국’, 대대급 이상 부대에 ‘정치부’를 신설하는 한편, 인민군 내에 정치위원제를 도입했다. 즉 사단·연대 단위에는 정치위원을, 대대·중대 단위에는 정치지도원을 중앙당에서 직접 파견 배치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군 정치간부를 당중앙 조직지도부가 관장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로써 인민군 내에는 노동당 조직이 중첩돼 군통제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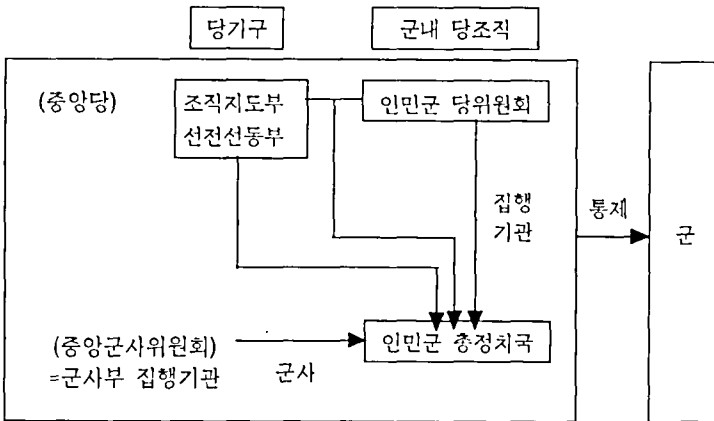
56) 극동문제연구소, 『인민군 당 제4기 제4차 전원회의시의 김일성 결론 연설, 『북괴군사전략자료집』 (1974: 극동문제연구소), 329-331쪽

57) 김정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선집』1 (1992: 조선로동당출판사), 416-417쪽

됐다. 예를 들어 사단의 경우 사단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치위원, 정치부장 등이 있는 셈이다. 당의 군통제가 2중 3중의 형태로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특히 군대 내의 모든 교육계획, 명령서는 군사간부에 이어 정치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군 장교들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사전에 봉쇄하는 조치였다. 이 조치는 북한에서 소장장교들의 군부쿠테타를 어렵게 만든 근본요인의 하나였다. 만일 소련유학과 군영관급 장교들의 사소한 군사적 움직임이라도 있다고 하면 즉각 당의 개입이 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도표1> 당의 군 통제



그 결과 1970년 5차 당대회의 당 규약에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 군사정책 집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군수산업과 인민군대와 모든 무력의 강화를 위한 사업을 조직하며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지도한다”는 규정(3장 27조)이 삽입돼, ‘직업군인에 의

한' 군사활동의 결정을 실제로 배제하는 후속조치가 취해졌다. 모든 군사문제에 대한 사항은 당대표격인 정치위원과 군지휘관 양자의 합의 결정식으로 전환, 군지휘관의 단독지휘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

김일성은 그 뒤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발표하면서 군 최고지휘조직으로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를 신설했다.

북한에서 1974년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김일성에 의해 3대 혁명소조운동이 1973년에 전개되기 시작했으며, 1974년 들어 이 운동은 계속혁명론과 혁명의 '계승론'의 맥락에서 실천됨으로써 사실상 혁명의 '세대교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갔다. 군대 검열지도에 대한 신경완의 증언.

"74년 하반기 김정일은 군내의 당조직에 대한 일제 검열지도를 개시함으로써 군대에도 손을 뻗었다. 김정일 예하의 조직지도부 검열성원들이 인민군 당위원회, 총정치국, 각 군종(軍種)·병종(兵種) 사령부 당위원회, 군단·사단·연대·대대 당위원회와 심지어 중대 세포단위까지 파견됐다. 한마디로 저인망식 싹쓸이를 한 셈이다. 검열기준은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지도체제를 군에서 잘 따르는가, 김정일이 제시한 방침·구호가 제대로 접수되고 있는가'였다. 즉 얼마나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병(私兵) 노릇에 충실한가가 기준이었다.

이를 통해 김정일은 군대 내부에도 자신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 게다가 김정일은 군 '정치위원회'를 강화하면서, 정치위원의 임명권을 장악했다. 각 단위부대에 파견되어 군에 대한 당의 통제창구 역할을 하는 정치위원의 인사권을 장악함으로써 김정일은 중간부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게 됐다."58)

1974년 11월 7일 김정일은 “중대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자”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정일은 1974~75년간에 당사업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1975년 11월에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발기하였으며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 구호를 제시, 3대혁명을 주도해 나가기도 했다. 바로 이 기간에 인민군 내부에서도 혁명의 계승과 관련, ‘세대교체’의 바람이 강타했다.

중대장은 중전 30~40세에서 32세 미만으로, 대대장은 40~50세에서 32~35세로, 연대장은 50~60세에서 35~40세로 연령을 낮추면서 연대장급 이하 지휘관의 상당 부분과 일부 사단장급 지휘관을 교체했다. 군 원로의 상당부분이 군에서 은퇴해 다른 부문으로 옮겨가거나 은퇴했다.

이 시기에 김정일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 2세대 군부 지도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표주자로는 오극렬, 김두남, 김강환, 최상욱 등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이 상당부분 포함됐다.

김정일이 군에 대해 지도력을 발휘한 창구는 당 조직지도부 등 당조직이었다. 군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인민군 총정치국은 당조직지도부와 당선전선동부의 직접 지휘 아래 놓여있었기 때문에 김정일은 총정치국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김정일은 북한군을 ‘후계자의 군대’로 만들어 나갔다.

이것은 1967년 이래 군내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고 1969년 군내의 당조직과 정치기관의 역할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 인민군내의 각급 당조직은 △전군의 주체사상교양 △당

58) 정창현, 앞의 책, 163-164쪽

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간부대열 강화와 간부 후비대 육성 및 당생활 지도 △공산주의 교양과 사회주의 애국교양 강화 및 당원·군인들의 혁명화, 노농계급화 △군내의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조직강화 지도 △군사사업에 대한 당위원회와 집단적 지도 강화 및 군내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과 붉은기 증대운동의 적극 전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노동당 규약 7장 48조).

이 같은 군내의 당조직 기능은 1970~80년대를 통해 지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인민군 내의 당생활총화 회의에서 군 지휘계통이나 계급과는 관계없이 '동지적 관계'에서 활발하게 토론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일은 1975년에 2개의 집단군을 폐지함으로써 중앙이 군단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군조직을 개편했다. 1975년부터는 모든 인민군대 병영과 사무실에 일제히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렸다. 김일성 초상화와 똑같은 크기로 같은 위치에 30cm 간격만 두도록 엄격한 지시가 내려졌다. 일반사회보다 군대에 김정일의 초상화가 먼저 걸리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김정일은 1975년부터 군대 안에 새로운 보고체계를 만들어 시행했다. 김정일은 이때부터 군대가 김일성에게 보고문건, 비준문건을 직접 못올리게 하고 반드시 자신을 통하도록 체계를 바꿨다. 1979년에는 이를 한단계 더 강화시켜 김일성에게 올라가던 모든 보고문건을 선별하기 시작했다. 전 북한군 상좌 최주환은 "중요한 것만 자신이 직접 김일성에게 보고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선에서 처리했다"고 증언했다.⁵⁹⁾

59) 최주환, 「실록 조선인민군(1)」 『월간 WIN』1996년 6월호, 164-165쪽

또한 김정일은 군대 내의 정치·군사간부들을 대상으로 회의와 강습을 실시해 유일지도체제 확립에 박차를 가했다. 신경완은 “군대 내 유일지도체제가 확립되면서 ‘못 한 개 옮기는 것도 지도 자동지의 결심이 없으면 못한다’는 기풍이 군대 내에 생겼다”고 증언했다.

김정일은 군내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한 이후에도 1979년 들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군의 주체사상 방침’ 관철 및 군에서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심화에 관한 과업을 제시했다. 12월에는 “모든 장병들이 항일혁명시기에 김일성에게 끝없이 충실했던 오중흙, 김혁동지(북한이 항일혁명시기 김일성에게 끝없이 충실했던 대표적 인물로 선전하는 인물)를 따라 배우는 운동을 전개하라”는 과업을 제시함으로써 군에 대한 ‘사업지도’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 운동은 최고사령관 김일성의 명령, 그리고 당중앙 김정일의 명령에 대한 절대성과 무조건성, 그리고 규율의 확립, 조직력 등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⁶⁰⁾ 신경완은 “김정일은 수시로 군 부대를 방문했는데, 공군의 말단 비행단은 물론 육군의 포병대대까지도 방문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듬해인 1980년 10월의 제6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일을 당정치국 상무위원 겸 비서의 자리에 올려놓았을 뿐 아니라 당중앙위 군사위원회회의 ‘군사위원’ 직위까지도 맡기기에 이르렀다. 군사위원장인 김일성을 제외하면 18명의 군사위원 중 유일한 ‘비군사지도자’가 김정일이었다. 위원 발표명단에서도 오진우에 이어 두번째였고 최현, 오백룡, 백학림, 김철만 같은 쟁쟁한 빨치산

60) 자세한 내용은 유영구, 1996 「북한의 정치,군사관계의 변천과 군내의 정치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제11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참조

세대는 물론 오극렬, 김강환 같은 혁명 2세대 군지도자들보다 앞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김일성의 '후계자', 미래의 '수령'으로서 김정일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최주환은 "1982년부터 김정일이 군 장악력을 더 높였다"면서 "군사사업 뿐만 아니라 정치사업·보위사업·군사외교사업까지 중요하고 원칙적인 문제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지시와 결론에 따라서만 처리하도록 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김정일은 1985년 9월 인민군지휘관 및 정치일군대회에 김일성과 함께 참가해 지도하고 1990년 4월 군창건 58주년을 맞이해 김일성과 함께 제837군부대를 방문, 지도했다.

김정일은 1980년대의 10년간 인민군에 대한 자신의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1990년대 들어 군사부문의 직위를 장악할 수 있었다.

1990년 5월의 국방위원회 조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역시 김정일이 제1부 위원장을 맡은 사실이다. 이로써 김정일은 실제 군사최고지도자들, 즉 오진우, 최현, 김철만, 이을설, 주도일 등 혁명1세대를 능가하는 자리를 차지했다. 더욱이 위원장 김일성, 부위원장 오진우, 최광이 연로한 상태여서 김정일이 사실상 국방위원회뿐만 아니라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등에 대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991년 12월 김정일은 마침내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됐다. 1991년 12월 25일 열린 중대 정치지도원 대회에서 김일성은 "내가 이제는 팔십고령이므로 최고사령관으로서 밤을 지새우며 전군을 지휘하고 통솔하기 곤란"하다면서 "이제부터 나는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고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권이양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한 것이다. 김일성은 "전

체 인민군 장병들이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나의 명령과 같이 여기고 그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며 최고사령관의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갈 것을 기대”한다는 당부도 빠뜨리지 않았다.⁶¹⁾

김정일은 1992년 4월 23일에 조선인민군 창건 60주년을 맞이해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6백22명에 달하는 군 장령(장군)급의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군사칭호를 수여했다. 또한 이틀 뒤인 25일의 군사퍼레이드에서는 김정일이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의 열병보고를 직접 받았다. 이로써 김정일은 명실상부한 군의 최고지도자로 인정받은 셈이다. 인민군이 '후계자의 군대'가 된지 1년만인 1993년 4월 김정일은 조선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돼 모든 무력통수권을 장악했다.

4) 정권기관의 개편

당, 군대를 장악한 김정일은 정무원을 비롯한 행정기관 개편에 나섰다. 1974년 6월 김정일은 '정무원위원회, 부 당조직의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란 내용을 갖고 담화를 했다. 정무원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한 직접적 계기였다. 김정일은 1975년 중반부터 그해 말까지 북한의 정권기관인 정무원 각 부(部)·위원회, 도 행정경제기관들을 장악해 들어갔다. 정무원 개편의 핵심은 정무원 내 당조직의 기능 및 역할 향상, 정무원 기구 개편, 정무원 당위원회 신설, 정무원 사무국 및 참사실 기구개편이었다. 정무원 개편에 대한 신경완의 증언은 대단히 구체적이다.

61) 유영구, 앞의 글, 95-96쪽

“75년 중반 이전까지 김정일은 정무원 업무에 개입하지 않았다. 정무원측에서 자발적으로 보고해 오면 보고 받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집중지도검열 △해당조직기구 개편 △강습조직 등을 통해 1975년 중반 정권기관을 직접 관장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정무원 내의 당조직으로 정무원 당위원회, 각위원회·부 당위원회가 병렬적으로 존재했다. 정무원 당위원회가 각위원회·부 당위원회를 통괄지도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이때는 정무원 당위원회의 비서를 정무원 사무국 부국장 또는 참사실장, 제1부 실장이 맡았다. 그러던 것을 김정일이 정무원 당위원회의 격을 높여 각위원회·부(部) 당위원회를 직접 지도할 수 있게 바꾸었다. 정무원 당위원회가 김일성의 교시와 정치국 결정 등을 구체적인 경제정책으로 작성해 집행하면서 생산활동을 지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지도위원회로 불리기도 했다. 정무원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한 조치였다.”⁶²⁾

정무원 당위원회에는 정무원 산하 각 부와 위원회 간부가 소속돼 있다. 정무원 당위원회의 책임비서는 지도력과 효율을 고려해 정무원 총리가 겸하도록 했고, ‘전임’ 제2비서를 따로 두게 했다.

다음으로 김정일은 정무원 사무국과 참사실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원 사무국은 총리실 직속기구로서 개편 이전에는 정무원의 각 부·위원회를 각각 2개 부서씩 담당하여 지도하는 12개 과로 나뉘어 있었다. 이것을 제1·2·3사무국으로 통합하고, 그 기능도 업무지도로부터 행정조정을 주요 임무로 하도록 바꾸었다. 특히 제1사무국 산하에 총리 비서실이 만들어졌다.

62) 정창현, 앞의 책, 169쪽

신설된 비서실은 부관과 서기로 구성돼 있었다. 부관은 대개 신변보조를 주업무로 하고 서기는 잡무처리를 담당했다. 기획업무나 업무조정은 참사실이나 사무국에서 다루게 됐다.

정무원 참사실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하는 조치가 뒤따랐다. 이를 통해 참사실은 정책을 입안하고, 하부 부서들의 사업 상황을 파악하며 새로운 집행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총리와 장관들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정책기관으로 변모했다.

정무원 참사실이나 사무국은 한국의 국무총리 직속 행정조정실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부 부서와는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행정부의 각 부 자체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독자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반면 북한은 정책입안과 집행이 구분돼 있다. 즉 당노선·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부서간에 업무조정을 하며 추진방법을 모색하여 이를 제시하는 일은 정무원 참사실과 사무국의 고유기능이다. 각 부·위원회는 결정된 정책과 추진방법을 단지 집행만 한다. 이런 점에서 참사실과 사무국이 정치·경제적 보좌를 담당한다면, 각 부·위원회는 기술조직사업을 담당함으로써 행정적 보좌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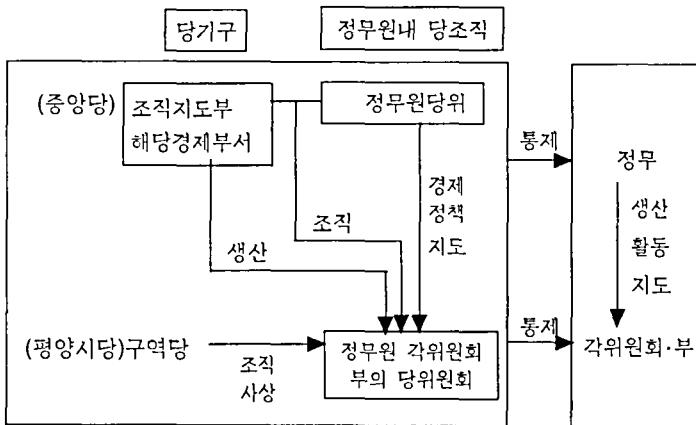
정무원 내 각부서들에 대한 당조직의 역할도 강화됐다. 이를 위해 정무원의 각 부·위원회 내에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계획과'가 신설됐다. 이 부서의 주요한 임무는 각 위원회 안의 당정책 집행상황을 파악해 당과 상부에 보고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조직개편과 정무원 당위원회가 강화되면서 '당의 영도' 관철통로가 다층적으로 비뀌었다. 예를 들어 정무원 산하의 특정 부서 당위원회는 이중통제를 받게 됐다. 즉 정무원 당위원회의 직접적 지도, 중앙당의 조직지도부 및 해당 경제부서의 지도가

그것이다. 특정부서 당위원회는 정책결정·집행을 임무로 하는 정무원 당위원회와는 달리 당생활지도를 통해 생산을 양양시키는 게 주임무였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정무원 산하의 특정부서 당위원회에 소속된 당원들은 자신의 당적이 있는 소속 행정단위의 구역당(평양시당 산하) 통제를 별도로 받게 됐다. 이때는 행정경제활동과 무관하게 당 조직사상생활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중앙당비서라도 당적은 평양시당 중구역당에 속해 있어 개별당원으로 당조직생활에 참가해야 했다.

정무원의 각 부처와 하부 공장기업소들이 '2중지도'를 받는 것이 똑같은 당적 지도를 2개의 당위원회로부터 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상·조직생활은 평양시 당위원회로부터 받되, 당노선 및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무원 당위원회로부터 받는다는 의미였다.

<도표2> 당의 정무원 통제



이상의 조치들이 시행된 결과 정무원은 행정적·당적으로 각 부·위원회에 대해 훨씬 강력한 지도력과 통제력을 보유하게 됐다. 아울러 노동당의 검열, 지도도 강화됐다.

김정일은 유일지도체제 확립에 저항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체제보위기구인 국가보위부를 신설했다. 사회안전부에서 하던 체제보위 및 진압업무부문을 분리, 기구를 확대했던 것이다.

국가보위부는 김정일체제를 옹호·보위하고 체제의 확립과 유지에 저해되는 모든 장애요소들을 사전에 적발·색출·제거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고 있다. 국가보위부는 도·시·군, 특급기업소, 1급·2급기업소까지 보위부를 두고 리(里)와 2급기업소 이하 공장 기업소 등에는 보위주재원을 배치했다.

군대에는 인민무력부 안전국을 정치보위국으로 개칭·개편하고 산하 군부대·구분대까지 보위부를, 중대에는 보위지도원을 두었다.

국가보위부는 김정일이 직접 장악, 직속시키고 중앙과 지방당 조직들과 간부들의 간섭을 금지시켰다. 종래에는 지방의 안전부는 해당 지방의 당조직들의 지도·통제를 받았다. 그러나 김정일은 자기 외에 국가보위부에 대한 간섭을 금지시키고 오히려 국가보위부로 하여금 지방당 간부들의 일거일동까지 감시하도록 했다. 지방의 보위부는 자기 직속상급 보위부의 지도·통제만 받고 중앙 보위부는 김정일이 직접 장악·통제하는 구조로 변화됐다.

국가보위부는 완전히 비밀비공개기구가 되어 공개적으로는 제 000부대식으로 인민군대의 군부대 위장 대호(代號)를 갖고 활동한다.

국가보위부원들은 암행어사 격으로 암약하면서 사람들의 일거

일등을 감시하고 김정일유일지도체제 확립에 대한 유언비어·불평불만·비방·중상 등 반체제요소들까지 사전에 색출·제거하기 위해서 눈을 밝히고 다녔다.

국가보위부 창설 초기에는 보위부원들에게 걸려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론가 사라졌다. 때문에 사람들은 아침인사로 '밤새 별고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일부에선 상례가 되었다. 사람들은 국가보위부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울던 아이들도 보위부원이 온다고 말하면 울음을 멈출 정도로 공포와 불안의 대상이 돼 버렸다.

4. 맺 음 말

당, 정, 군에 대한 개편이 완결된 후 소집된 1980년 제6차 당 대회는 김정일을 위한 당대회였다. 1970년대에 유일지도체제를 완결지은 김정일이 6차당대회를 통해 후계체계를 공식화한 것이다. 김정일은 6차당대회의 준비, 진행을 전적으로 주도했다. 이후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권한을 하나씩 이양받아 소위 '영도(領導)의 계승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다.

1980년대를 넘어서면 이미 모든 일은 김정일의 결심에 따라 진행됐고, 국가의 중대사조차 김정일의 발기로 진행되는 일이 잦았다. 김일성은 단지 김정일이 제출한 안건과 의제를 추인해 거기에 무게를 실어주는 일을 담당했다. 얼굴마담으로서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김일성이 아무런 권위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2인자의 등장으로 권력의 분할이라든가 도전세력의 등장과 같은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치

권력의 속성으로 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반 김정일은 사상부문에서 새로운 지도이론·당건설이론과 당정책을 수립 제시했다. 동시에 정책과 노선의 집행을 위한 집행방식에 관해 지도하는 과정을 거쳐 '정치적 수령'의 권한을 자연스럽게 승계했다.

후계체계 수립 때까지 김정일은 실무권한과 인사권을 행사했고, 김일성은 통치권한을 갖고 있었다. 후계체계가 구축되었으니, 이제는 영도권을 계승해 이를 실습해 보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김일성의 영도권을 계승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김일성은 노동당·군대·정권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을 하나씩 넘겨주었다. 주로 군대와 정권부문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이 넘어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반사업에 관한 노선·정책을 창안하는 실질권한이 김일성에게서 김정일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후계자 김정일의 방침·지령에 따라서 이뤄지게 되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1988년경까지 이뤄진 사업은 대부분 김정일의 '영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1984년 9월 제정된 합영법(合營法)의 제정을 비롯해 이른바 북한이 '통이 크고 판이 넓은' 사업으로 자랑하는 서해 갑문을 비롯한 여러 갑문 건설, 인민대학습당 건립 등이 그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먼저 사상·이론 측면에서 김정일은 1982년 3월 21일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보내 발표했다. 1986년 7월 15일에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담화하는 자리에서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했다.

당노선·정책분야와 관련해 김정일은 논문·연설·서한을 통해 끊임없이 정책과 노선을 제시했다. 이 시기에 김정일은 '인민생활

을 더욱 향상시킬 데 대하여'(84.2.16), '직업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84.5.3),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84.7.22),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등을 발표했다. 그밖에 군대 정치간부 및 지휘간부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해 새로운 군사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목할 점은 이 기간동안 김일성은 이러한 활동을 일체 중지한 것이다. 김일성은 신년사 발표나 현지교시를 계속했지만 정책과 노선을 천명하는 연설이나 문건들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인사권 문제도 김정일이 거의 전권을 행사했다. 김정일이 사전에 의견을 묻거나 인사결과를 빠짐없이 보고했지만 김일성은 인사문제에 점차 관여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치국 위원이나 정치국 후보위원 선정문제까지도 김정일이 단독으로 결정했다. 김정일이 결정하고 김일성의 동의를 받아 정치국 회의에서 토의, 결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정치국 회의 운영이나 당·정·군에 대한 실무·기술적 문제들 또한 김정일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됐다. 김일성의 적극적인 방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1984년 4월 11일 김일성은 당시 정치국 위원이었던 허담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혁명의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혁명의 세대가 바뀌어지는데 따라 간부대열도 갱신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간부대열을 김정일 조직비서에게 충실한 사람들로 꾸려야 합니다.”

“김정일 조직비서에 대한 충실성은 결국 나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사상도 같고 목표도 같으며 뜻도 같습니다. 김일성의 사상이자 김정일의 사상이며 김일성의 뜻이자 김정

일의 뜻입니다. 나와 김정일 조직비서는 모든 것이 다 같습니다. 사상도 같고 마음도 같으며 생각도 같습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로 끝내야 합니다....다른 나라 대표단들을 만나 담화를 하는 것은 김정일동지가 나에게 준 분공입니다. 그는 나에게 힘든 일은 자기가 다 맡아서 하겠으니 쉬엄쉬엄 다른 나라 대표단과의 사업을 하여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말을 당적 분공(맡겨진 임무)으로 생각하고 다른 나라 대표단들과의 사업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현시대는 김정일시대입니다. 총비서로부터 평당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원들이 김정일동지에게 충실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현시대의 요구입니다....특히 로혁명가들과 간부들이 김정일동지가 주는 과업을 제때에 철저히 집행하여야 하며 당원들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⁶³⁾

이처럼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전반적인 국가·당 사업은 김정일이 관장하고 외교와 ‘잘 안되는 분야’는 김일성이 챙기는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김정일은 1989년에 이르면 후계체계 구축, 지도이론·체제 확립, 영도의 계승체계 구축단계를 지나 실질적으로 ‘영도의 계승체계’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신호탄으로 해서 1991년 12월 인민군최고사령관, 1992년 4월 원수 칭호수여, 1993년 4월 국방위원장이란 직함이 김정일에게 부여됐다. 사실상 모든 계승체계가 완성된 셈이다.

예를 들어 김일성은 1992년 4월 15일 자기 생일잔치 때 외국

63) 허담, 앞의 책, 142-145쪽

손님들 앞에서 “80평생의 총화는 혁명의 유일한 후계자, 혁명의 계승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때부터 김일성은 김정일의 영도가 잘되어 당·군·나라가 잘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김정일비서가 직접 모든 사업을 관장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다. 심지어 자신이 쓴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도 “김정일 조직비서가 나의 사업을 많이 대신 해주어 어느 정도 짬을 얻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황장엽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그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도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다. 당신들도 다 김정일을 받들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역시 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숙한 방법이기도 했고요...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김정일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재간이 없었겠지요...죽을 때 어떻게 됐다는 추측은 다 믿지 못할 얘기입니다.”⁶⁴⁾

김일성은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히 일선에서 물러나지는 않았다. 김일성은 외교사절을 만나면서 경제분야 현지지도를 계속했다. 사망하기 이틀전인 1994년 7월 6일에도 경제지도협의회를 열고 당면한 식량난과 경제위기 타개책을 토의했다.

이와 같이 김정일은 1960년대 후반부터 김일성의 후계자로 부상하기 시작해, 1973년 공식후계자로 내정되었고, 그 이후 1970년대 말까지 후계체제의 완성을 향해 달려왔다. 북한은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대외적으로 후계체제 완성을 선포했다. 1980년 이후 김정일은 김일성의 영도체계를 계승하기 시작했고, 김일성

64) 황장엽, 앞의 책, 361쪽

이 사망하기 4~5년 전에 이미 모든 권한을 완전히 계승했다. 이로써 북한은 30여년에 걸친 후계자 승계과정을 완결지었다.

김일성은 사망했지만, 그의 아들 김정일은 오랜 기간 아버지의 그늘 하에서 모든 권한과 더불어 통치술을 전수받았으며 이제 전면에서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등장했다.

2. 김정일의 개인적 특성

박갑수(통일교육원 교수)

1. 신체적 특성
2. 정신적 특성
3. 행태적 특성
4. 접촉 유의사항

· 제 2 장 ·

김정일의 개인적 특성

1. 신체적 특성

김정일은 165cm의 작은 신장에 약 83-86Kg의 체중을 가져 본인 스스로 땅딸보라고 불렀을 만큼 왜소비대형의 체형을 갖고 있다. 두골은 크나 이마는 좁으며 둥글넓적한 얼굴에 미간사이는 약간 넓다. 목은 굵고 짧으며 어깨는 벌어진 상태로 스스로 운동을 한 골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약간 배가 나와 무게중심은 뒤로 쏠려 있는데 단구이기 때문에 척추에 큰 무리를 주지는 않는 편이다.

사상의학(동호 이제마)적 관점에서 보면 소양체질에 속하는데 위장과 비장이 강한 반면 방광과 심장이 허약하다. 솟구치는 화기를 통제하기 어려운 게 소양체질인데 김정일 역시 감정이 열화같고 과격한 점, 말이 빠른 점, 당뇨가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소양체질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명된다.

머리칼이 약간의 고수(곱슬)머리인 것은 김일성이 고수머리가 아니었던 사례와 대조해 볼 때 성장기에 많은 스트레스나 과로, 영양불균형을 겪은 과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양의학적 견지에서는 근골질보다는 영양질에 속하는 바, 정서의 지배를 받는 체질로 해석할 수 있다. 영양질은 근골질에 비해 엄격한 자기관리가 약하며 참더라도 감정을 원천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눌러 두는 성격이기 때문에 보복, 잔인함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김정일은 심한 근시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는 김정일이 유전적으로 근시일 뿐 아니라 유아 및 성장시 김일성 일동이 낮과 밤을 바꾸어 생활하는 등 시력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건강상태에 대하여서는 김일성 사망 후부터 수개월동안 언론의 궁금함을 자아내었으나 집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는 판단되지 않고 있다. 김정일의 공식 활동에 나타나는 그의 보행, 시선, 제스츄어 등에서 아직 별도의 이상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 지금까지 김정일에게 질환이 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들 중에는 심각한 내용도 없지 않으나 대략 5-6개의 건강 이상설이 있다.

첫번째는 심장병설이다. 1991년 3월 프랑스 리용대학의 심장전문가가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하여 심장박동기 수술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두번째는 낙마로 인한 뇌손상설이다. 1993년 9월 김정일이 승마중 떨어져 두뇌를 손상당하였다고 하는바 한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간질병이다. 19살때부터 앓아온 간질병 때문에 발작과 경련으로 고생을 적지 않게 하였다고 한다(김일성 속도 현양속 언급).

네번째는 당뇨병설이다. 몸은 비만하고 얼굴은 수척하며 손등이 부어 있는데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에서도 땀을 닦고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보아 대단히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다섯번째 신경과민증 및 순환성 기분장애설이다. 신경과민상태에서 한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보도(러시아 이타르타

스 통신사의 아시아 회보, 1993.6.22)되었을 뿐 아니라 불우한 어린 시절과 복잡한 가족관계 등으로 정서적으로 기복이 심해져 스트레스를 받으면 곧 이상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작은 키에 복부비만은 고혈압으로 이행될 확률이 정상인보다 5배나 높은 만큼 고혈압과 순환성 기분장애를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외에 김정일이 너무 술과 희락을 좋아한 결과 간암에 걸려있다고도 추론(일본 동북아문제연구)하고 있으나 확인 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각종 건강이상설을 종합하면, 심장기능이 약할 수 있고 낙마하여 적어도 두부타박상을 입었을 것이며 합병증이 우려되는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해 섭생을 조심하고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정일을 직접 면담한 바 있는 박보희씨와 김우중 회장 역시 건강상의 특별한 이상징후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바, 권력투쟁에서 이겨내기 위한 정도의 정보력과 최소한의 건강상태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김정일의 성격과 기호를 알아내는 데는 그의 소양체질 진단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소양체질은 눈으로 기운을 많이 쓰기 때문에 눈에 열기를 많이 느끼고 남보다 앞서려는 경쟁욕구도 무척 강하다.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많고 다른 체질에 비해 비뇨기 계통과 다리, 골반이 약하다. 또한 입안 또는 주위에 염증이 생기기 쉽고 치아나 잇몸도 약한 편이다. 따라서 체질로 보면 김정일은 골다공증, 당뇨병, 신장 부실 등으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된다.

또 항상 테러위협 또는 권력투쟁 등으로 방어본능의 긴장된 생

활을 하게 되면 더욱이나 신장의 기운이 위축되기 때문에 김정일은 신허화동(腎虛火動)의 생리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신장의 수기(水氣)가 심장의 화기(火氣)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김정일의 경우 자기통제, 수련, 호흡단련 등의 자율훈련 기회가 별반 없었기 때문에 양생법을 이용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화동(火動)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관된 사고의 흐름보다는 번뜩이는 생각, 아이디어 등 단기적 진단, 순간적 판단, 후각적인 감지력 등 두뇌는 명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정일의 육성 테이프를 참고하면 그의 언어습관은 상당히 강박성을 띠고 있으며 접두사를 반복한다든지 술어를 반복하면서 끊지 않고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역시 그의 조급성과 일방적인 자기도취를 보여준다.

최은희씨가 녹음한 김정일의 음성은 녹음방법관련 의문은 배제하고 일단 김정일의 논리체계와 서술 어순을 엿볼 수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김정일은 언어표현에서 운율이 맞지 않는다. 이것은 김정일이 어릴 때부터 표현훈련과 작문기초훈련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반영한다. 문장의 격과 국이 맞지 않는 용어의 니열은 논리 보다는 직관에 의존하는 성격을 보여 준다.

또한 그는 자문자답형 대화를 즐기고 있다. 이는 인격의 분열, 약간의 배리현상이 있음을 나타낸다.

“남조선에서 누구를 꼽느냐?” “신감독이다”

“10년안에 거꾸로 우리 신세가 되지 않겠는가?” “인제 그래서 인제 이제부터 여기다 돈을 넣겠다는 겁니다”

“조금 개방해 놓으니까 뭐부터 배우는가?” “기술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수염기르고 머리 기르고… 속에 들은 게 없어 그런게 아닌가”

또 김정일은 반복적으로 용어를 구사하고 있다. 이것은 스스로 재확인하는 것으로 남을 믿지 않고 의심이 많음을 나타낸다.

“하자, 합작하자, 합작하는 데까지는 …”

“자기네는 불가피하게 정권을 지탱하기 위해 그렇게 했는데 내 정불간섭, 내정불간섭 원칙이 있는데 내정간섭이 아니냐”

“그럼 그 사람을 함께 데려와야겠는데, 그 사람 데려 오는 걸, 남자를 데려 오는 건 무리다”

“공작조직에 이야기 써서 신감독을 좀 끌어라, 끌어 당기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끌어 당기는데 신감독을 어떻게 하면 여기에 오는 데 자유자재로 오면서도…”

“역시 그놈들도 망할 징조, 망하는데 이새끼들이 발악, 발악하니까…”

김정일의 대화에는 자신이 곧 절대적 강자, 초월적 존재임을 과시하는 어투도 적지 않다.

“요즘 나온 놈들, 젊은 놈들, 신인들이 나와서 연출하는 것을 보면…”

“그때 이번에 모스크바에 모스크바에 가서 유학했던 놈들 그 유학했던 놈들을 그 밑에 박아 여라”

“역시 국제무대에 나가 보면 그래도 서방세계 놈들은 자유자재

구… 그런데 사회주의 나라를 보십시오. 게라스모프 (소련대표)인
가 그거 저 그놈부터 시작해서 다 어딘지 굳어져 가지고 …역시
어딘지 촌티가 난다 그겁니다. 역시 사회주의 놈들은 달라요”

“저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정운희라는 년이 그게 벌써
120편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저 윤이상이가 또 왔어요”

이상의 어투 외에 김정일은 대화를 즐기기는 하나 말을 더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락에서 주어가 두 세번씩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고, 결론으
로 묶어진 후 새로 시작되어야 하는 표현에도 그대로 후접속되어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검토하면 김정일은 매우 강박경향이 있는 조급성
을 갖고 있으며 걸잡을 수 없을 정도의 지그재그식의 의식활동이
엿보인다.

김정일의 육성은 김일성과는 달리 음산하지는 않는 대신 다소
의 들뜬 듯한 경박성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음성자체가 차디찬
냉기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 인식 변화로 인격
을 고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그의 안광이다. 시력은 심한 근
시로 나타나 있으나 정사진과 동사진에 나타나는 그의 안광은 매
우 차가운 편이다. 김정일의 유아시절부터 청년기, 장년기에 이르
는 동안 변해가는 그의 눈빛은 개구쟁이처럼 해맑은 눈에서부터
장년에 들어 올수록 엄숙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이행됨을 느낄 수
있다.

이는 김정일이 천성은 장난기 있고 천진난만한 밑바탕이 있으

나 살아 갈수록 경쟁과 투쟁 속에서 연출, 연기력도 있고 냉혹한 일면도 있는 양면적 인격으로 변모하였음을 의미한다.

1) 정신발달적 환경

일 개인의 행동은 어느 누구도 「환경, 유전, 교육」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다소 영향을 크게, 적게 받을 수는 있어도 3개 요소에서 1개요소라도 완전 배제하기는 불가능하다.

국가의 행동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인적 물적 부존자원, 역사 및 문화, 지식과 정보라는 이상의 3대 요소가 국가의 장래를 결정한다.

개인이면서 국가의 정점에 있는 정치 지도자는 다른 사람에 비해 그 자신의 정신구조가 국가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비할 바 없이 크다. 지도자 개인의 자질이 흥망을 초래한 사례는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구조를 이루게 되는 정신의학, 행동과학, 심층심리학적 이론 배경을 해설한 후 정신구조 형성에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 성장배경, 행동 특성, 방어기제(defence mechanism), 정신역동(psychological dynamics)을 탐구하기로 한다.

가. 가족관계

김정일은 똑똑하나 냉혹한 김일성을 아버지로 무식하나 듬직하고 소박한 김정숙을 어머니로 1942년 2월 16일 소련 하바로프스크 브야츠크 야영장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형제로는 여동생 김경희와 김일성의 후처 김성애의 소생인 김평일, 김경일, 김경숙이 있고 그중에도 친동기인 김경희와 사이가

좋다.

자식으로는 처 김영숙 소생으로 김설송(딸)이 있고 전처 성혜림(배우) 소생인 김정남이 있는데 김정남은 김정일의 친구인 스위스 대사 이철에게 보내 스위스 학교에 유학한 일도 있다. 또 다른 후처인 고영희(북송교포 출신 배우)는 매혹적인 약간의 허스키 음성을 갖고 있으며 김정일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의 전·후처가 모두 영화배우 출신인 것은 김정일이 영화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1960-70년대에는 영화배우가 재능과 용모 등을 구비한 대중스타로서 선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유아시기 브야츠크의 황량한 야영장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그 당시 만성적인 물자결핍, 불편함 등은 물자에 대한 욕구, 화려함에 대한 선망 등으로 나타나고 강인한 여성상보다는 귀족적이고 우아한 여인상을 추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김정일은 이 당시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들로부터 귀여움을 많이 받았는데 유아시절은 냉혹한 생부의 직접적인 영향만 받았으면 인격적 결함으로 일찍 배제될 수도 있었을 것이나 김책, 최용건 등으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받은 것이 자아의 기초 형성과정에서 큰 힘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일성과 김정숙이 동만주에서 연해주로 도피하면서 주야를 바꾸어 생활하는 등 결핍과 불안 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출생전 경험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태교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선천적으로 안정적일 수는 없는 기질을 안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김정숙은 임신중에도 체조, 학습, 군사훈련, 사격, 화목작업들을 강행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었기에 김정일은 이러한 활동적인

모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그 결과 악조건에서의 투쟁, 군사 선호적인 발상 등에 익숙해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또 김정일은 산모의 모유부족으로 같은 시기 출산한 다른 부인들로부터 수유하였으며 업무가 바쁜 김일성과는 다른 숙소에서 생활하였다. 체취를 느낄 정도의 지근거리에 있으면 선악 불문하고 닭을 확율이 높아지는 영장류의 생태를 고려할 때 김정일로서는 김일성을 내세우면서도 그와 닭지 않았다는 것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원인의 하나로도 추정될 수 있다.

김정일이 1949년 9월 인민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모 김정숙이 출혈과다로 생명을 잃고, 그해 여름에는 동생 평일이 죽었다. 어린 나이에 생모와 동생의 죽음을 직시하게 된 것은 김정일로 하여금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외상(trauma)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김정일의 자아 형성과정을 볼 때 '아버지의 권위'는 인식할 계기가 있었으나 '어머니의 사랑'이 충분히 스며들어 있는가에 따라 김정일의 원초적 성품이 냉온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들이 인간적이었거나 때사로운 사람들이었는지, 어머니를 대신하였을 유치원 가정교사 전금선(오진우 처), 담임 김연실, 가정부 홍기연(홍명희 딸), 삼촌 김영주의 처 등이 그야말로 이모 이상으로 거리감을 좁힐 수 있었다면 일단 김정일의 내면세계에서 인간미와 인간애가 살아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권력세계에서 눈치를 보고 형식적으로 김정일을 돌보았다면 김정일로부터 '인간미'를 기대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정실인 김영숙 등 부인이라도 인격과 양식을 갖춘 상태라면 그래도 건전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성 토대와 '인간미'

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3단계에 걸쳐 뜨거운 인간애와 따사로운 인품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을 전혀 받은 경험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초기에 각인된 무의식적 투입요소는 평생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격양태를 고치기는 여간 어렵지 않다.

오리와 닭을 이용한 실험에서도 첫 인식의 지배기간이 평생을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미 닭 품에서 태어난 오리새끼는 오리들을 따르지 않고 닭만 쫓아 다닌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 교육 및 성장 환경

김정일은 개구쟁이였을 정도로 활동적이었으며 네 살까지 브야츠크 아영장의 탁아소 생활을 하였다. 다소 성격이 과격하여 곧잘 다른 아이를 물어 뜯곤 했다고 유모가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당시 김정일 사진을 보면 발랄한 악동일 따름이지 찌들리거나 불안, 적개심에 차있는 모습은 아니다.

8세때 부모간의 심한 갈등을 중간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생모를 잃고 이미 동생까지 익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과 좌절, 공포를 체험하게 된다. 생모의 사망원인과 고통이 김일성에게 있었던 것으로 김정일이 인식하고 있다면 김정일은 김일성에 대한 권위추정의 이면에 엄청난 적개심을 감추고 있을 것이며 관계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김일성과는 생부이면서 정치동반자적인 관계형성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자식으로서 김정일의 김일성에 대한 타인 이상의 과잉충성과 과도한 경호 등은 권력장악이란 목표와 함께 자신의 적개심을 억압하기 위한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949년 유치원 고급반 과정을 마치고 남산 인민학교에 들어갔고 6.25 전쟁 중에는 담임 여선생(김연실)과 함께 길림시 지역으로 피난하여 피신중인 당고위간부 자녀들의 임시교육기관이던 길림성학원에 다녔다.

1952년 11월 마찬가지로 소개(疏開)되어온 「만경대 혁명가 유자녀학원」(만경대혁명학원 전신) 3학년으로 편입되어 약 9개월정도 일반교육과 군사훈련을 받다가 휴전직후인 1953년 8월 평양으로 귀환하였다.

귀환후 평양 외곽의 삼석 인민학교로 전학하였다가 그 후 개교한 평양 제4인민학교 5학년으로 전학하였다. 뒤이어 평양 제1초급중학교를 거쳐 1960년 7월 남산고등중학교를 졸업하였고 1960년 9월 김일성종합대학 정경학부에 입학하여 1964년 8월에 졸업하였다.

굳이 유학을 하지 않았던 것은 김일성이 국내에 있기를 원한 점도 있지만 1959년 일시 모스크바로 유학 갔으나 적응하지 못해 중도에 귀환하였고, 또 1961년에도 공군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 동독항공학교로 보내졌으나 역시 중퇴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의 학창시절을 돌이켜 보면 고등중학교 당시의 학교성적은 중간 정도였으나 열정이 있어 무엇이든지 정열적으로 탐구코자 하였고, 대인관계에서 매우 친화력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에서 4.19혁명이 일어났을 때 운동장으로 나가 비상종을 울려 전교생의 반미시위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합시킨 후 대열을 지어 김일성광장으로 행진하게 하였고 물자가 귀해 졸업앨범을 만들기 어려움에도 외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여 제작 가능토록 하였다. 또 그는 급우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파티를 벌이거나 무용·연극 등 예술공연을 즐겨 관람하는 등 폭넓은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조건없이 친구들을 사귀었다. 반면 그는 상당히 게으른 면도 없지 않았고 학업을 소홀히 하고 독서를 별로 하지 않은 채 외제 자동차, 오토바이, 고급시계 등을 갖고 있는 등 질박하거나 검소하지는 않았다.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과에 다닐 때는 김일성의 권력이 확고한 상태여서 '특별학생'으로 보호받았고 정치, 경제, 역사, 철학 등 주요 과목별로 개인교사를 두어 수상의 아들로서 특별과외공부를 더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자동차 드라이브, 영화감상 등 스틸과 문예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술과 춤, 트럼프 등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3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인 이성교제도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입학과 동시에 노동당에 입당함으로써 대학 당위원회 조직세포로 당생활을 시작하였고 간부직을 맡지는 않았지만 당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리더역할을 하였다. 또 김일성을 따라 현지 지도 실습현장을 지켜 볼 수 있었으며 3-4학년부터는 정치위원회, 내각회의, 군사간부회의 등 국가전반의 주요회의에 참석하여 정치실무를 경험할 수 있었다.

김일성을 따라 외국여행을 갈 때에도 항상 '수상동지'로 호칭하는 등 부자관계보다는 통치자로서 예우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2. 정신적 특성

역대 정치지도자의 정신구조는 대개의 경우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많았다. 이것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인간형은 정상보다는 비정상이라야 가능성이 높다는 추리를 할 수 있다. 그 비정상됨

(abnormal)이 초정상(super-normal)과 연결될 때 역사적 위업을 현실에 기초하여 남기게 되나 비현실적으로 파괴적인 성향과 연결될 때는 인류의 재앙이 된다. 히틀러와 스탈린이 사회를 파괴적으로 이끌어 갔다면 시오니즘의 창시자인 헤르츨(Theodore Herzl)은 사회를 건설적으로 이끌어 간 인물이다.

여기에서 김정일이 북한은 물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의 정신구조는 매우 중요한 분석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정신분석 이론에 입각하여 김정일의 정신발달적 측면과 심리구조, 방어기제 등을 살펴 보고, 심신관계론 등에 비추어 정신역동을 분석, 진단하기로 한다.

1) 정신발달적 측면

유아들이 정신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을 성적으로 대개 4개의 기간으로 나눈다. 보통 출생시부터 1.5세까지를 구강기(oral stage), 1.5세에서 3세까지를 항문기(anal stage), 3-6세를 남근기(phallic stage), 7-12세를 잠복기(latency), 13세 이후를 성기기(genital stage)로 구분한다.

김정일의 경우, 구강기는 생모의 젖이 부족하여 유모로 대신하고 또 생모와 충분한 피부접촉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 고착되는 성격이 적지 않다. 지나친 자기애, 다연(입놀림), “이놈들이” 등 ‘놈’으로 나타나는 공격성의 잔재가 보여진다. 항상 심복을 두거나 확실한 의존처, 수단을 확보해야만 안심하는 것도 너무 일찍 생모의 품에서 떨어져야 했던 분리불안(separate anxiety)에서 기인한다.

항문기에도 원만한 시기를 보내지는 않았으나 브야츠크 야영장 생활이 안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구강기 만큼은 불안스럽지 않았

다고 보여진다.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들이 돌보아 주고 아껴주는 터에 충격이나 좌절을 겪은 것 같지는 않다.

생모도 투박하고 수수한 성품이어서 김정일의 인격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탁아소에서 선배 어린이들과 같이 지내야 하기에 단체나 규율, 인간관계에 대한 기초가 닦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근기에 김정일은 김일성의 우람함과 교활함, 총명함과 냉혹함 등 양면성 인격과 수동적인 김정숙 사이에서 상당한 콤플렉스를 가진 듯하다. 약자인 어머니를 동정하면서도 이중성격의 아버지를 숭앙하고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갈등에 놓이게 된다. 그 결과 김정일은 거세공포로 생부를 따르면서도 두려워 하고 내면적으로는 경쟁자로 깊이 증오하는 입장에 있었을 수도 있다. 또 남의 인정을 받으려 하면서 병적인 호기심과 야심을 갖기도 한다.

잠복기에 김정일은 생활공간이 고정되어 있지 못했다. 비록 소련군과 KGB가 앞장서서 정적을 처리해 주고 김일성을 권좌에 앉혔으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입장이 되지 않았다. 6.25전쟁으로 환상과 놀이를 통해 욕구를 발산할 여유와 환경이 되질 못했다. 이 기간 자그마치 6차례나 학교를 옮겼을 정도로 김정일은 적응애로에 부딪히고 있었다. 김정일의 성격에서 성숙보다는 조숙한 거라든지, 학구적이지는 않으면서 다양한 대인관계를 추구하는 습성 등은 이 시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13세 이후 성기기(性器期)에 그는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주체성(identity)을 찾기 위해 몸무림치기 시작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계모 김성애와 자주 마찰을 일으키고 김성애가 첫애를 낳고 부터는 더욱 가출적 성향도 보여 주었다.

어릴 때부터 친숙한 오진우, 친구 오극렬, 삼촌 김영주의 집으

로 기분이 나쁠 때 수시로 찾아가곤 하였다. 이복 동생인 김평일과 김경숙을 때리기도 하였으나 공식장소나 타인들이 있을 때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기 김정일에 대해 생모 김정숙을 대신할 정도의 푸근하고도 진정한 사랑과 애김을 준 생모상의 여인은 없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김경희가 동생이 아니고 누나였더라면 상당히 보완되었을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2) 심리구조적 측면

심리상태는 구조적으로 본능(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김정일은 원초적인 본능적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고 자아도 생존과 쾌락을 추구하는 강도에 따라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고 추정된다. 초자아도 교육과 인내과정을 통해 기본은 무난하게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내일에 대비하고 버릴 수 있다는 자체는 초자아가 형성되었음을 반영한다. 문제는 주변에 이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이타적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이기적이나 하는, 그 성숙도에 달려 있다. 성숙도는 현실환경에 대처하는 융통성으로 판별된다.

id가 지니는 본능적 욕구는 의존, 공격 또는 도피, 성(性)의 추구로 나눌 수 있고 superego는 양심과 도덕을 내면화하는 데서 형성되는데 무엇이 되겠다는 자아이상과 해서는 안된다는 자기금지로 나눌 수 있다.

김정일은 id와 superego 사이에서 조정과 타협을 하는 ego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욕구충족을 위해 엄청

난 일을 감행하면서도 대중앞에 나서기를 꺼려 하고 때에 따라 수줍어하는 일면이 있는 사실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성장기간 동안에 외계의 현실과 자기 마음과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는 묵상, 좌선, 호흡법 등의 수행이나, 자신을 되돌아 보는 극기훈련 등의 기회가 없었던 사실도 이 해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3) 주요 방어기제

사람은 살아가면서 좌절, 원만, 충동, 미움, 성적 충동, 욕구 등 현실에서 부딪히는 각종 갈등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심리적 갈등이 불안을 가져다 주고 불안은 고통을 주게 된다. 여기서 인간은 본격적으로 고통을 당하기 전에 갈등상태에 있는 심리적 충동들을 무의식적으로 타협 조정하여 내적 긴장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본능적 방어기제가 작동하게 되며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주변에 악영향을 준다든지 악영향을 파급시키는 전염성을 갖게 되면 정신적, 신경증으로 해석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나 병적인 요소가 없지 않으나 노력에 의해 정상적인 요소가 많아진다.

김정일이 현실 생존상의 필요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방어기제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이 거론할 수 있다.

첫째,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이다. 과도한 억압으로 그 반대의 욕구와 성향을 표출하게 된다. 실제 김정일은 김일성을 닮아 무척 비정하고 냉혹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를 표방하고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에게는 무척 호의적이다.

둘째, 동일시(identification)이다. 적대적 동일시와 병적인 동일시로 구분되는데 김일성의 분신으로서 거의 닮은 꼴과 같은 행보

와 복장, 태도를 보여주려고 한다.

셋째, 합일화(incorporation)이다.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절대자(김일성)가 사라져도 심상(心像)이 현실에 남아 있는 것처럼 동화하고 마치 현실에 생존해 있는 듯 처신한다. 강토나 군대 역시 자신의 외연으로 인식한다.

넷째, 대상(代償)이다.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다른 장기로 보충한다. 또한 장점은 너무 과도하게 발전시키는 수도 있다. 그는 키가 작기 때문에 흰출하게 키가 큰 부하나 외국인과 대화할 때는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촬영토록 한다. 대형 기념물, 동상, 영생탑 등 대형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도 자신의 단소 콤플렉스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대체형성(代替形成)이다. 원래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긴장감을 목적과 비슷한 것을 성취함으로써 만족함을 의미한다. 특수부대 훈련 참관, 사열 등을 통해 군출신이 아닌 데서 오는 긴장감과 열등감을 대리 해소한다. 자신이 우수한 학업성적을 얻지 못한 만큼 특수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여섯째, 투사(projection)이다. 무의식에서 품고 있는 공격적 계획과 충동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미제와 남조선은 항시 북침기회를 노리고 있다며 자신이 만든 허구에 놀라고 있다. 경제난도 자기체제의 구조적 모순보다는 한·미 축의 공격계획에 있다고 책임을 전환시킨다. 총살현장에 들르는 일도 자신의 정책오류와 실정을 사형수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일곱번째, 승화(sublimation)이다. 참기 어려운 충동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바꾸어 출로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문화와 예술을 무척 강조하는 것도 성적 충동이나 적개심의 에너지를 변형하여 창출하는 데서 특질이 살아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의 외모나 교양에 미루어 볼 때 보다 더 기품이 있는 양반 가문, 존경받는 인사가 되고 싶어하는 무의식적 역동이 그를 예술 분야로 치달게 하였을 것이다.

여덟번째, 분단(splitting)이다. 전적으로 좋은 것과 전적으로 나쁜 것으로 양분하여 이에 대한 상반된 정서를 갖는다. 동지라면 크나큰 배려와 혜택을 주고 적으로 해석되면 무자비한 처벌을 가한다. 중용이나 중도적 입장을 갖지 않는다. 접촉자들을 적아로 구분하여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김정일은 생존과 투쟁과정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 과민할 정도로 측근과 접촉인사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상대가 경쟁그룹과 연결되어 있다면 패배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적아는 사회적 선악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과 자신의 생존에 이익이 되면 선이고 불리하면 악으로 해석되는 2분법을 사용한다.

이상의 방어기제는 일괄적으로 모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봉착되는 상황과 시기, 현장분위기에 따라 적절한 기제가 자신도 모르게 행동화되는 것이다.

4) 정신억동체계

김정일의 성격이나 정신반응은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비정상이라면 정상인들이 지도자로 용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변의 정상인 스스로 생존과 즐거운 인생을 위해 제거 내지 무력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순수한 정상적 성격만으로 갖추어지기는 어렵다. 부분적 또는 상당부분이 비정상적 성격이 가미된 프리즘적 형태를 띠게 된다. 김정일도 사고 작용이나 의식구조 상으로는 정상적 합리적인 판정을 받겠지

만 출생과 성장 환경, 교육에 따라 비정상적 요소가 스며 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정일의 정신역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상심리학(abnormal psychology)와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의 성격장애 유형에 비추어 보는 것이지 선입견이나 주관적으로 성격장애자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히틀러가 집권 초기 10년간은 독일 역사상 최대 최상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전란으로 휘말리면서 병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듯 김정일도 그 무엇이 계기가 되어 병적인 상태로 될지 모르나 아직은 정상적인 면이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처한 환경과 스트레스, 부담 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자못 궁금한 것이다. 만약 김정일이 지도자로서 정신적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유형에 가까울 것인가? 이에 대해 기존의 정신의학적 이론을 원용하며 살펴 보기로 한다.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고안한 「진단 및 통계 편람」(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III)은 각종 성격장애(character disorder)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DSM 기준에 따르면 김정일은 편집장애(paranoid disorders) 성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약간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는 비현실적인 망상(delusion)이 있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직접 위협을 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반드시 있는 것으로 또는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과잉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성격장애에 있어서도 지극히 병적인 분열성 성격장애(Schizoid personality disorders)는 결코 아닐 것이며 다만 자애적 성격(narcissistic personality)의 소유자로 자신은 대단히 큰 사람이며 크게 성공해야 하고 끊임없이 남들이 관심을 가져주어

야 하며 남들은 나의 목적에 따라 이용해도 좋다는 속칭 '왕자병적' 사고 경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나 불안이 가중되거나 충격을 받으면 경계선 인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로 이행될 가능성도 있다.

사람은 출생후에도 태내에 있듯이 최소한 6개월이상 산모와 접촉유지가 되어야 세상과의 안정속에 적응할 수 있는데 김정일은 출생후 1개월부터 산모로부터 분리되어 탁아소 생활을 하였고 6-7세 유년기에는 생모와 동생의 죽음으로 모성결핍속에 죽음의 공포가 깊이 각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약간이라도 자신에게 위협적이면 죽음의 공포로 연계될 수 있기에 사전에 가차 없이 차단하게 된다.

모성결핍은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여성편력으로 나타나고 연상의 여인으로부터 마음의 안정을 얻기 때문에 연상의 여인을 선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50세가 넘는 여인들은 모성을 연상시키기보다는 할머니와 같은 연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는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의 정신역동을 분석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관련 정보를 입력시킨 후 나타난 다면인성 검사(MMPI : Minnesota Multiple Personality Inventory) 결과를 참고하면 역시 그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이 발견된다. 본인을 직접 검사할 길이 없고 심리, 건강, 성격 등을 망라해 입력한 것이어서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객관성이 결여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 검사(박갑수 제안 이영범·조영환 박사 채점)에 의하면 김정일은 어느정도 건강에 신경을 쓰는 건강염려증이 있고 다소 높은 우울적 성향과 사회내향성 히스테리성 성격, 상당히 높은 반사회적 성격, 편집성, 경조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갖고 있는 불

안감, 죄책감, 적개심 3자의 배합형태가 프로파일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면 김정일은 공격적 충동이 높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 검사법의 결과는 김정일은 조심해야 할 인물로 특징지워진다. 그러나 이 결과는 기존 정신분석 이론에 비추어 본 김정일의 정신구조와 그의 언행, 행동 패턴을 충분히 분석한 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행태적 특성

1) 행동 및 태도

한 인간의 행태(behaviour)는 개인의 의식과 환경과 생존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여 Kurt Lewin은 $B=f(P,E)$ 라는 공식을 제기하였다. 즉 Behaviour는 Person과 Environment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성장환경을 거치며 교육적 요소가 입력된 행동에서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김정일은 주로 오전에 취침하고 한밤과 새벽(23:00-05:00)에 업무를 처리한다. 이러한 야행성은 김일성과 거의 같은 습관으로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온 것이다. 행사시 사진기자들에게 일체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는 경호상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것일 수도 있으나 김정일이 심한 당뇨로 안근육이 부실하여 시신경이 강렬한 빛으로 자극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누구에게나 선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일반주민들에게 환갑, 팔갑상 등을 하사하는가 하면 고급장성들에게는 독일제 벤츠 승용차를 기념선물로 보낸다.

마음에 들면 즉각 로렉스시계나 귀한 달러를 아낌없이 지불한다. 그의 이 기본과적인 행동은 자기과시 욕구와 잘보여야 살아남는다는, 자신의 운명이 남의 지지와 신뢰에 달려있음을 느끼고 있는 의존욕구의 결합일 가능성이 높다.

또 그는 생부 김일성과 빨치산 활동을 같이 하였던 대원들에게도 반말과 삿대질을 예사로 한다. 그 앞에서 부동산자세로 서 있고 하명만 기다리는 노인들을 보고 즐거워한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김일성과 병적인 동일시(pathological identification) 현상으로 묶여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신도들이 무의식적으로 교주의 습관, 걸음걸이, 제스처어를 닮아 가고 있는 것과 같다.

김정일의 오락생활에서 나타나는 기쁨조, 희락회 등을 두고 일부 분석가는 황음방탕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은 김정일이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부하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흐트러진 모습에서도 충성심의 변화여부를 체크하자는 것이지 본인이 앞장서서 타락과 유흥에 탐닉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생존과 투쟁의 명수에 속할 그가 부하들 앞에서 자신의 취약점을 공개할 리가 없을 뿐 아니라 기쁨조 등 '어린 것'들은 김정일을 편하게 할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질탕한 파티에 측근과 부하들을 끌어 들여 '권력과 충성'의 맛을 들이려 한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이 될 것이다.

한때 파티석상에서 김정일은 복장을 바꾸어 가며 무대에 나온 적이 있는데 김정일의 성격이 느긋하지 않고 감정에 연루된다고 볼 수도 있는 반면 김정일이 어릴 때부터 제대로 '노는 것' 즉 차원있는 풍류를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영화촬영 현지에 가서 직접 감독하고 지시도 내리는 일이 많았는데 선전선동의 핵심 수단인 '영화'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

로 연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확실하게 자신이 있으면 전면에 나서는 게 그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경제난으로 김정일은 군관련 행사장과 부대를 중점적으로 방문하다가 금년여야 경제·건설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대폭 증가한바, 이 점도 한국을 위시하여 미·중과 국제사회에서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김정일이 가는 곳에는 전기도, 석유도, 원자재도 어느 정도 들어 가게 되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 방문하기 전이나 후에 차이가 없다면 그는 방문하지 않을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의 태도에서 김일성보다 우려되는 점은 그가 매우 즉흥적인 발상을 잘하고 모험심과 스틸을 즐긴다는 점이다. 사격과 맹속드라이브, 경비행기 조종, 승마 등을 무척 좋아한다. 이러한 취미는 역시 그가 느긋한 점액질 체질이 아닌 휘발성의 기질이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사격을 즐기고 총살현장을 가끔 찾는 행위는 김정일의 적개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인이나 남북관계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취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깊숙한 적개심을 해소하는 방법을 택하는 데 있어 파괴적 비인간적인 방향으로 출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유사시 그의 적개심에너지가 충만할 때 매우 불건전한 방법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례로 자기를 배신하고 비방하는 처조카 이한영을 자신의 생일에 맞추어 테러를 지시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의 이해하기 용이하지 않다. 정서가 안정된 사람으로서는 말을 함부로 못하게 혼을 내주거나 죽음을 경고, 위협하는 수도 있으나 처형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도외시하고 사살한다는 것은 비정상적 심리상태에서나 가능하다.

이외 김정일은 검은테 안경, 선글라스를 즐겨 착용하는데 전술

한 바와 같이 시신경보호 외에 자신을 신비스럽게 감추려는 보호 본능도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 지질 및 성격

이상에서는 프로이드, CG.Tung 등이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정신 분석학적 틀과 도구를 활용하여 김정일의 정신역동체계를 규명코자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여타 정보부서 및 김정일과 접촉한 인사들의 평가, 측근 인물들의 증언 등을 이용하여 지질과 성격을 추론하고자 한다.

미 정보기관에서 진단한 김정일의 행태와 성격은 다음과 같다.

- ① 타인들의 주목과 찬사를 받기 좋아한다.
- ② 자기를 제외한 타인이 인기를 누리거나 각광받는 것을 불허한다.
- ③ 사람과 사물을 흑백논리와 선악의 개념으로 인식한다.
- ④ 정상상태와 분노상태 사이를 왕복한다.
- ⑤ 모욕감을 잘 느끼고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⑥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한가지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
- ⑦ 사물을 균형있게 보지 않고 자기위주로 인식하며 양심이 없다.
- ⑧ 편협하고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으로 “혁명의 필요성과 남한의 해방”을 반복 언급한다.
- ⑨ 동구권을 비롯한 외국실정에 어둡고 중국인들과 친교가 깊다.
- ⑩ 이상적인 이념에 의해 행동하지 않는 듯 하다.
- ⑪ 능력·전문성 보다는 김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인사의 기준이다.

- ⑫ 장기적인 경제계획은 있으나 장기적인 정치목표나 정책은 없는 것 같다.
- ⑬ 북한의 개방은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북한의 변화나 경제개혁은 중국을 본받는다.
- ⑭ 창조적 인물은 아니나 예술적 감각이 있어 작품의 장단점을 비판하거나 식별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⑮ 항상 피곤해 보이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다.

비록 시기가 약간 지난 자료이나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⑫번 처럼 북한은 장기적인 경제계획이나 정책목표가 있다고 보기 보다는 적화통일과 체제생존이라는 딜레마 가운데 국제사회에 적절한 연출을 하며 그럭저럭 넘기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측 자료에 비추어 보면 김정일은 자아미숙 상태에서 경계선(borderline) 인격장애와 기분파, 조울성향의 정동(情動) 장애, 심한 편집증이 있으며 항상 불안한 가운데 불안을 해소할 자기 수양없이 건전한 인생관, 생산적인 철학 등은 학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년 이상 실권자로서 권력을 유지해 오는 것은 김일성의 후광효과를 누리면서 사람을 굴복, 회유, 통제하는 테크닉을 터득하였기 때문이다.

김일성 사망후 조문차 평양에 들른 박보희씨는 3차례 김정일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김정일은 매우 정력적이었고 자신감을 갖고 있었으며 건강에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조총련 책임부위원장인 허종만은 1994년 2월 28일, 제1부위원장인

이진규는 동년 5월 6일에 김정일을 만났는데 예상외로 건강하고 소탈하고 낙천적이었다고 술회하였다. 앞선 1993년 7월 28일 조총련의 핵심인사, 문화인, 상공인들 합쳐 454명이 목란관 만찬회에 초대되어 장장 6시간 동안이나 같이 있었는데 그때 김정일은 일일이 1명씩의 노래를 평가하고 앵콜도 주문하였다.

일본 내각조사실과 외무성 등에서는 김정일이 매우 부끄러움을 잘타나 김평일에 대해서는 잠재적으로 열등감과 시샘이 함께 도사리고 있고 결단력은 있되 고집이 세며 도량이 있으면서도 난폭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련과학원 동방연구소 미하일 카피차 소장은 1980년대 초중반 김정일을 여러번 만난 사람으로 그는 김정일이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좋은 인상을 주며 인간관계를 잘 처리하고 소박하고 착하다고 극찬하고 나라 안에서 위신이 높는데 더욱 높아질 것으로 이야기 하였다. 이는 외국인으로서 김정일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준 경우이다. 그러나 같은 러시아인으로 평양주재 프라우다지 특파원을 지낸 사람은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자만심과 우월감이 지나치고 성미가 급하고 저돌적, 독선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폴란드인 Krzysztof Darewicz는 중국·북한 특파원 생활을 한 사람인데 그에 의하면 김정일은 약조건 속에서도 계속 통치하여 온 유능한 자로 충고를 잘듣는 편이며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3-4명의 원로 장성들과 숙고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체의 북한 군부가 김정일을 중심으로 일치단결된 것은 아니며 정권의 생존이 최대의 당면과제라고 지적하였다.

Alex Zhebin은 8년간 평양주재 타스통신 특파원으로 있었는데 그는 김정일이 대중앞에 나서기를 싫어하고 자신의 대중적 이미

지에 민감하며 성격적으로 균형된 사고를 하지 않고 예측하기 힘든 괴짜라고 평가하였다.

체육부 장관으로 1990년 10월 13일 방북하여 김정일을 만난 정동성 전장관은 김정일이 강경하고 대담하며 인자한 면은 없으며 미군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통일에 지장이 있다고 자신만만함을 과시하였다고 전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정일은 내면적으로는 자아가 미약하나 외형적으로는 배짱이 세고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근성을 갖고 있으며 매사에 끝장을 내어야 하며 일욕심이 무척 많은 편이다. 박력과 추진력이 있고 과감하게 실천한다. 두뇌가 명석한 반면 즉흥적인 결단이 빈번하고 자신보다 우월하게 느껴지면 집요하게 무력화시킬 정도로 시샘도 강하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의심이 많은 편이고 자기와 관련된 비밀이 누설될 시에는 연륜과 안면을 고려하지 않고 제거한다. 매서운 눈, 차거운 성품, 온화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그의 성벽은 측근과 아랫사람을 장악하는 데는 유리한 점도 있으나 자신의 결정적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제3국인들이 면담한 김정일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며 성격적으로 모난 면이 많으나 오랜 정치경험으로 난국을 그런대로 수습해 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4. 접촉 유의사항

지금까지 공개·비공개 자료와 학술적, 의학적 추정을 접목 활용하여 본 바, 김정일은 심리적으로 정상, 비정상의 양면을 갖춘 특이한 인격양태를 갖추고 있음으로 분석되었다.

그는 억제력은 약한 대신 상상력은 풍부하고 외적으로는 집착적이고 내적으로는 일관성이 결핍된 채, 업무는 목표 지향적으로 처리하고 마음은 상황지향적으로 결심하는 양면성이 드러나고 있다.

병적이고 망상에 가까운 정도로 「통이 크고 대담하게」 일을 벌여 나가는 데다 한번 결심하면 주·객관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 붙이는 성격이어서 김정일이 갖고 있는 특유의 공격-도피기제를 역으로 활용하려면 그에 부합되는 접근·접촉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김정일에 대해 자존심을 지켜 주어야 한다. 김정일은 자존심 덩어리라고 할 만큼 근 30년을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둘러 온 독재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 훼손은 용납하기 어렵다. 업적을 추켜주면서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가운데 본인이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예술적 분위기에서 대담을 진행시켜야 한다. 김정일의 공격성향을 문화예술적 분위기로 순화시켜 어린시절의 순수한 심성으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음악이 있는 장소나 좋은 화초, 그림 등이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최초 접촉시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더 많이 할애하고 결정적인 대담은 opening으로 분위기가 제법 무르익었을 때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면시에는 자상하면서도 엄숙해야 한다. 자상함으로 내면 깊숙히 감추어져 있는 차가움을 녹여 주면서도 엄숙한 태도를 보일 땐 보여야 보다 강력한 권위 - 김정일이 의존할 만한 - 가 엄존함을 인식시킬 수 있다. 폭력을 주무기로 활용하는 자나 무력을 숭상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예상외로 강하게 대처해야 자신의

본위로 해석해서 받아 들이게 된다.

넷째, 우리는 '파트너이지 적이 아니다'는 확실한 입장이 전달되어야 한다. 한국은 민족발전의 동지이자 더불어 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대화 중간 중간에 이러한 입장과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입력되어야 한다.

다섯째, 김일성의 어록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김일성이 선전 차원에서 교시한 것이라도 우리측이 인용하여 도움될 것이 있으면 분야별로 축적해 두면 효과적이다. 중동협상시 코란의 귀절이 유용하게 활용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김일성의 후광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김일성의 교시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가 없다.

여섯째, 우리측은 김정일에게 상처를 입히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조해서 결실을 나누어 가지려는 의도가 있음을 부지불식간에 느끼도록 해야 한다. 역사에서 차지한 김일성의 비중 만큼이나 민족생존과 발전에서 김정일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함을 주지시켜 우리측의 장기적 구상에 호응토록 한다. 이때는 반대적 입장이라도 수용하는 것이 실익임을 암시한다. 김정일은 두뇌가 명민하고 정서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모저모로 다 생각해서 결정하지 않는 만큼 안심시키면서 수궁할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일곱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약하거나 청탁성의 제의를 해서는 안된다. 희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연연해 하지 말고 강력하고 단호하게 오가야 대등한 협상을 할 수가 있다. 김정일과 그 측근들은 오랜 기간 공산주의적 협상, 토론 방식에 젖어 있어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공정성, 상호주의 등 균형감각을 보이나 조금이라도 관계치 않으면 끝까지 소(小)로써 대(大)를 이기려는 투쟁적인 전략, 전술에 의존코자 한다. 결코 협박과 공갈에 물러서

지 말고 물리력이 아닌 기세(氣勢)를 바탕으로 하는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

여덟째, 인간미를 유지시켜야 한다. 김정일 본인 역시 권력의 정상에서 외롭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자칫 잘못하면 군부의 폭두각시로 전락할 수도 있고 위기관리 실패시에는 가문 전체가 몰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남북관계 개선으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임을 수용하도록 교육적, 암시적 대화기법을 준비한다.

김정일의 내면에는 유년시 체험하였던 죽음의 공포가 유달리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사, 인기, 손익 등이 관련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 하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김정일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거세불안(去勢不安)과 함께 긍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에서는 김정일을 대면할 때의 심리적 유의 사항을 열거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측에게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일은 이미 30여년간 정치 실무 등 제왕 수업을 받아 온 자인데 그와 대면할 남측의 인사로서 뛰어난 개인지도를 수학하고, 권모술수, 정보처리, 선전선동, 연출능력 등을 익힌 자가 결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미리부터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연구와 simulation을 시작하여 생산적인 협상을 성취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김정일의 통치력

고 유 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1. 통치스타일과 통치력 강화수단
2. 김정일의 통치방식과 정책성향
3. 김정일시대 개막과 체제정비 및 발전전략

· 제 3 장 ·

김정일의 통치력

1. 통치스타일과 통치력 강화 수단

김정일은 배일에 가려진 인물로 그의 성격과 통치스타일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망명한 측근 인물들과 기타 여러 분석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정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급적 추론은 배제하고 기존에 나온 김정일 관련 출판물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을 밝혀 보고자 한다.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은 은둔정치와 인덕정치·광폭정치이다. 통치방법은 속도전과 선군정치이다. 그리고 통치력의 강화수단으로 유신통치와 선전선동정치를 활용하고 있다.

1) 은둔통치: 개릴리형 지도자

김정일은 대학을 졸업한 직후인 1964년 노동당에서 정치생활을 시작하면서 조직부(조직지도부) 생리를 몸에 체득하였다. 김정일의 정치권력이나 지도력의 근원은 개인적 카리스마나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사회를 움켜쥔 노동당의 최고 핵심부서인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를 총괄해온 '조직·선전 장악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1973년 9월 당비서로 선출됨으로써 자신의 운명에 결정적인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바로 이때 노동당 사상 처음으로 조직·선전 양대 부문을 관장하게 된다. 이로써 김정일은 당을 자기 중심의 당으로 개편하기 시작했으나 당시 외부에는 전혀 노출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정치경력은 그의 통치 스타일의 가장 큰 측면이 조직장악과 선전선동술이라는 것을 말해준다.¹⁾

김정일이 북한의 2인자로 있을 때 아버지의 후광과 함께 조직장악이나 선전선동술로 권력관리를 해온 것이 습성화되어 공식 승계 이후에도 '대중 지도자'로 변신하지 못하고 '은둔통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예술부문에 조예가 깊고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대중연설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현지도 때에도 검은색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김정일은 대중 앞에 드러나지 않고 은둔통치를 함으로써 북한의 인민대중들로부터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려 한다.

김정일이 TV나 대중집회에 나타나 연설하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로 알려지고 있다.²⁾

첫째는 김정일의 성격 탓으로 보는 견해이다.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내심 두려워 한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그는 대학 졸업논문 발표장에서 심히 더듬거리고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지 못했다고 한다.

둘째, 김정일은 자신을 '베일에 가려진 인물'로 연출하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사람들을 의식한 '대내용'이 아니라 남한과 미국 등을 의식한 '대외용'이다. 그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듯이 적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자주 말해왔다. 자신을 신비스럽게 '포장'해 놓는 것이 적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다.

1)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서울: 중앙일보사, 1994), pp. 47-48.

2) 김현식 손광주, 『다큐멘터리 김정일』(서울: 천지미디어, 1997), pp. 291-293.

김정일이 제왕학을 20여년 동안 교육받은 탓인지 “김일성보다 더 간교하고 복선적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미국과의 핵협상 때 김정일의 이같은 ‘베일에 싸인’ 정치력이 돋보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김정일은 ‘자기 연출력’이 뛰어난 인물이다. 북한의 최대 명절인 자기 생일날에도 공식석상에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 김정일은 일을 하거나 파티 때문에 밤을 새는 일이 잦으며 새벽 3-4시에도 건설현장이나 행사준비장에 갑자기 나타나거나 간부에게 전화를 거는 등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일한다는 것을 과시한다.³⁾

김정일은 정치학적으로 볼 때 권력은폐의 원칙을 활용하여 그의 권력을 유지·확대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권력욕은 매우 강렬한 것이므로 권력자는 일단 장악한 권력을 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유지·확대·강화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특히 권력자의 비합리적 요소 때문에 정치권력의 유지 그 자체가 자기목적화되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일반적으로 권력에는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을까 하는 ‘정치적 효과의 원칙’이며, 다른 하나는 권력의 잠재성을 과연 어떻게 확보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권력은폐의 원칙’이 있다.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러한 두 원칙이 서로 결부되어 권력의 강화에 이바지한다. 권력의 비합리적인 요소를 될수록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폐해 두는 것은 비판자와 민중으로부터의 반항을 최소한도로 머무르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또한 권력의 정치적

3) 위의 책, p. 293.

4) ‘정치권력의 유지·확대의 법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권력 그 자체 속에 내재하는 고유한 논리이며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권력이 될수록 은폐되어 있는 편이 유리하다. 이 두 원칙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권력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⁵⁾

김정일은 권력은폐의 원칙을 활용하여 권력의 잠재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은둔통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정일이 공개석상에 나타나 연설하고 대중에게 견해를 밝히는 것이 득될 것이 없다는 고도의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대사관의 북한전문가 래리 로빈슨의 보고서에 의하면, 김정일은 ‘부적절한 지도자’이지만 북한이 당면한 문제를 잘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

“김정일은 전세계 국가 지도자 가운데 최대의 수수께끼적 인물이다. ‘마치 오즈의 마법사’처럼 그는 장막 뒤에 숨어 주요 결정을 마이크로 전한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갖추고 있던 어떤 특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김일성은 신체적으로 건장하고 뛰어난 대중연설가였으며 카리스마가 있었고 비록 가장된 것이긴 하지만 독립전선의 선봉장이었다.”

“김정일은 대부분의 업무를 전화와 팩시밀리로 집행하고 있으며 고위 당 간부회의에 모습을 나타내는 일조차 드물다.”

5) 이극찬, 『정치학』 제6전정판(서울: 법문사, 1999), pp. 221-222.

6) 비밀문서 “미국대사관이 본 김정일의 장래”, 주한 미국대사관 북한전문가(래리 로빈슨)가 작성한 「김정일과 북한 권력층에 관한 최종보고서(1998. 8)」, 『월간조선』 1999년 11월호, pp. 204-215.

“그의 은둔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북한이 당면한 문제를 잘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한 학자는 “김정일이 지향하는 정치스타일은 철저한 사상선전(프로파간다) 공작과 연출을 통한 리모트 컨트롤(遠隔操作)에 의한 통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2) 인덕정치·광폭정치: 공식적인 김정일의 통치방식

김정일이 ‘통이 크고 대담한’ 인물이란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북한당국이 내세운 정치 모토는 ‘인덕정치’와 ‘광폭정치’이다. 북한당국은 김정일이 ‘통이 큰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⁸⁾

북한이 밝히고 있는 인덕정치는 김정일이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정치를 실시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인덕정치를 광폭정치라고도 부르는데, 한 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양개조하여 옳은 길로 이끌어 주고 보살펴주기 때문에 당(김정일)의 인덕정치를 광폭정치라고 주장한다.⁹⁾

그러나 정적(政敵)에 대해서는 인덕정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일성은 물론이지만 김정일도 정적에게는 무자비할 정도로 용서를 모른다. “문제가 되는 떡잎은 잘라내 버려야 된다”는 것이 김정일의 주장이다.¹⁰⁾

7) 鈴木典幸, “金正日體制の發足と展望”, 小此木 政夫 編, 『金正日時代の北朝鮮』(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99), p. 46.

8) 신경원, “발굴비록·결에서 본 김정일 하: 김정일체제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인민항거”, 『월간 중앙』 1991년 7월호, p. 459.

9)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1994. 11. 1; 『로동신문』, 1994. 11. 4.

김정일의 용인술에서 '상'과 '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러나 김정일은 고위간부들을 대상으로 '벌'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는 아예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는 간부들을 '출당'시켜 정치적으로 매장시켜 버린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혁명화 교육'을 시키면서 재평가 기회를 갖는다.

김정일은 간부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농장이나 광산, 공장 등에 보내 고된 중노동을 시키든지 또는 하루아침에 지방의 말단 미직으로 보내 정신개조 기회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들의 동태를 자세히 관찰하고 평가한다. 평가기준은 충성심에 있다. 최악의 여건하에서도 자신에게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주는 간부들은 원래 자리로 '원위치'시킨다. 20여년 동안 '혁명화 교육'을 받고 원위치로 돌아온 인물이 1997년 2월 인민무력부장으로 사망한 최광이다. 최광은 1969년 1월 빨치산파 김창봉 사건에 연루되어 숙청되었다가 1988년 2월 오극렬의 뒤를 이어 총참모장으로 임명되었다. 무려 20년만에 군으로 컴백한 것이다. 그러나 충성심이 없다고 인정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버린다.¹¹⁾

3) 속도전: 군사활동방식의 경제건설

김정일은 북한체제의 정통성의 근거를 항일무장투쟁(유격대) 전통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그의 통치방식은 '유격대식(군사활동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군사활동방식으로 독특한 속도전의 전법을 창출하고 그것을 구현하고 있다”¹²⁾는 것이 북한당국의 공식 주장이다.

10) 1992년 'KGB 간첩사건' 음모를 적발해내고 김정일은 무려 600여명을 처형·숙청했다. 그리고 김정일은 남일과 김병하 등을 숙청한 바 있다. 김현식·손광주, 앞의 책, pp. 275-277.

11) 김현식 손광주, 앞의 책, pp. 278-280.

북한 당국은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할 때 축지법의 전설을 낳았듯이 김정일이 축지법의 전설을 낳았다고 선전한다. 김정일이 시간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속도전은 천리마운동과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천리마운동을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게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그래서 속도전의 구호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달리자는 것이다.”¹³⁾

1974년 말 북한은 그해 경제계획완수를 위한 <<70일전투>>를 김정일의 지도 밑에서 진행하였는데 그때 생산이 1.7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북한학계에서 한때 사회주의하에서의 속도와 균형의 상호관계, 속도가 중요한가 균형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김정일은 천리마속도 창조의 역사적 경험을 내세우면서 속도와 균형 가운데서 일차적으로 중시해야 할 문제는 속도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은 우선 속도를 혁명의 요구에 맞게 높이 설정하고 그것을 안받침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⁴⁾

북한당국은 “천리마운동, 그것은 창공을 헤가르며 순식간에 천리를 달린다는 전설 속의 날개 달린 준마의 속도로 혁명과 건설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며 속도전식 경제건설방식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서 100년, 200년이 걸린 공업화의 과업을 불과 14년에 완수하고 강유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키돋움하였다”고 자랑하고 있다.

12) 한재만, 『김정일: 인간·사상·령도』(평양: 평양출판사, 1994), p. 335.

13) 위의 책, p. 327.

14) 위의 책, p. 326.

김정일은 자체의 힘으로 통일을 실현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야망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쳐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 새로운 속도, 천리마를 능가하는 속도를 찾아낸 것이 속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은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 전투형식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 나간다는 것은 일을 전광석화(電光石火)의 속도로 해제끼는 것이다.

김정일은 군사활동방식으로 독특한 속도전의 전법을 창출하고 ‘전격전, 총력전, 섬멸전, 공격전, 추격전, 다회전(多回戰), 립체전’을 펼치면서 경제건설을 추진하고 있다.¹⁵⁾ 그러나 혁명과 경제건설의 기본단위를 민족국가단위로 한 자력갱생식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이 한계에 다달아 의식주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1999년부터 표방하고 있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도 결국은 속도전식 군사활동방식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선군정치: 선군혁명영도

공식승계 이후 김정일은 믿을 곳이란 군대밖에 없다는 듯이 선군정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선군정치 방식은 바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나가는 령도방식이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군대

15) 위의 책, pp. 334-340.

의 강화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위를 보장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정치방식이다.”¹⁶⁾

김정일은 선군정치에 대해서 “선군정치는 나의 기본정치방식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만능의 보검입니다”라고 밝혀 앞으로 상당기간 군사우선의 위기관리체제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곧 우리 당이고 우리 국가, 우리 군대이며 우리 인민이다”¹⁷⁾라는 주장과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군대이자 당이고 인민이며 국가라는 혁명철학에 기초하고 있다”¹⁸⁾는 북한당국의 주장에 비취 볼 때 선군정치는 북한의 ‘군사국가화’의 이론적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군정치, 군민일치, 군에 의한 대민통제 강화 등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에서의 ‘군사국가화’ 경향은 심화되고 있다.¹⁹⁾

미국대사관도 “조선인민군이 북한 국가기구 가운데 가장 힘있고 아마도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남게 됐다. 1994년 이후 김정일은 사회기반시설공사나 농업정책 등 통상의 민간부문을 군사조직을 통해 다스려 왔다. 최근에는 군과 국민, 국가, 당을 동등시하는 공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인민군은 김정일 지배의

16)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1999. 6. 16.

17) 1999년 1월 1일 공동사설.

18)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1999. 6. 16.

19) “우리의 사회주의 강국은 주체적인 군중시의 정치가 빛나게 구현된 무적필승의 나라이다. 혁명의 총대위에 조국의 강성부흥이 있고 사회주의 승리가 있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 군사강국의 제일 기둥이며 수령옹위의 제일결사대이다.” “군민일치는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다. 혁명적 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확고히 보장하며 옹근 애민의 전통적 미풍을 활짝 꽃피워야 한다.”(1999년 1월 1일 공동사설)

요새가 됐다”²⁰⁾라고 분석하고 있다.

5) 유혼통치: 김일성=김정일 이미지 연결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지도부는 절대적 카리스마를 지녔던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인민대중들의 심리적 아노미(anomie) 상태를 막고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헌법개정을 통한 유혼의 법제화, 주체원년, 태양절 제정 등을 통한 김일성 영생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유혼통치’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수령은 곧 우리 당이고 우리 당은 곧 김정일동지”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조선로동당을 동일시하는 이미지 연결작업, 신화조작 및 전설조작 등을 꾀하면서 김정일의 지도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정일이 죽은 수령(‘선대 수령’)의 권위를 빌어 유혼통치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부자승계에 따른 후계체제(‘후계 수령’)의 정당성이 부족하고 식량난 등의 체제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김일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높은 숭배심을 김정일에게 연결시키기 위해 ‘김일성 영생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으로 추대하고, 김정일을 영원한 수령의 화신인 ‘위대한 영도자’로 묘사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수령님은 장군님의 모습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며 장군님은 수령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주장을 펴면서 ‘김정일은 곧 김일성’이라는 이미지 연결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20) 비밀문서 “미국대사관이 본 김정일의 장래”, 주한 미국대사관 북한전문가(래리 로빈슨)가 작성한 「김정일과 북한 권력층에 관한 최종보고서(1998. 8)」, 『월간 조선』 1999년 11월호, pp. 210-211.

북한당국은 김정일과 김일성을 동일시함으로써 김정일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북한당국은 김정일의 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김정일권력에 도전하는 것은 곧 김일성을 불신하고 배반하는 것과 같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김일성 영생화 작업과 함께 '김정일은 곧 김일성'이라는 정치적 상징조작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은 경제난 속에서도 김일성의 시신을 안치한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김일성의 영정을 '태양상'으로 만들었으며, 시신을 '영생의 모습'으로 보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을 새긴 92미터 높이의 '영생탑'을 건립하였다.

북한 당국은 1997년 7월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고 김일성이 출생한 1912년을 원년으로 하여 '주체연호'를 제정하고,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함으로써 김일성 영생화 작업을 본격화했다.²¹⁾ 김일성 영생화 작업의 논리적 기초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혁명선배 존대론'²²⁾에서 찾을 수 있다.

2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원 결정서(1997년 7월 8일), 『로동신문』, 1997년 7월 10일.

22) 김정일은 1995년 12월 25일 『로동신문』에 발표한 담화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선배의 최고 대표자인 수령을 어떤 자세와 입장, 어떤 도덕의리로 받들어야 하는가를 밝히면서, 앞선 세대의 혁명가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장했다. 김정일은 "혁명선렬들이 추켜든 혁명의 붉은 기를 대를 이어 높이 들고 나아갈 때에만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이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 중심의 북한지도부가 김일성 영생화론을 들고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은 곧 김일성이다'라는 이미지 연결작업을 통한 후계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북한당국은 김일성 사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를 제시하고 '김정일은 곧 김일성이다'라는 이미지 연결 작업을 통해서 후계체제의 정당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일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숭배심을 활용하여 김일성의 업적을 과대 평가하고, 이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으로 연결시키고자 한다.

둘째, 총체적 위기에 대한 책임 회피의 성격이 강하다. 북한의 식량난 등의 심각한 경제위기는 상당부분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의 사상·정치논리 우선주의가 빚어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처한 체제위기는 상당부분 김정일의 실정에 기인한다고 할 때 북한주민들은 김정일의 지도자적 자질과 통치능력에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정일은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죽은 수령의 유혼교시 관철이란 명분을 내걸고 김일성 영생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중심의 북한지도부가 지난 수년간 난국의 원인을 자연재해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 봉쇄에서 찾으면서 새로운 발전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유혼통치를 지속한 것은 개혁조치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지도부는 인민들의 대부분이 김일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좋은 감정을 가지고 숭배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김일성 유혼교시 관철과 영생화 작업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효율성의 위기에 직면한 김정일정권은 김일성의 영생을 강조함으로써 후계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셋째, 후계체제의 태생적 한계를 노출한 것이다. 북한당국이 김일성 영생론을 펴는 것은 김정일정권이 갖는 태생적 한계를 자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지도자는 전임지도자에 대한 재평가 또는 격하작업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발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김정일정권은 부자승계에 따른 태생적 한계로 전임지도자에 대한 격하는커녕 과대평가와 신격화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정권은 획기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가진 정권이다.

김일성 영생화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김일성 사후 한동안 강조해온 ‘붉은기 사상’이 침잠하고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가 다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김일성 사후 북한당국은 고난의 행군정신, 혁명적 군인정신 등을 강조하면서 수령에 대한 결사옹위정신을 강조하며, 수령에 대한 결사옹위를 위해서 당과 인민대중은 인민군대를 따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군사증시정책을 펴고 있다. 김정일이 믿을 곳이라고는 군대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6) 선진선동정치: 구호정치와 대중운동발기

김정일은 혁명가의 첫째가는 실력은 대중을 알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는 능력이라고 한 김일성의 교시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²³⁾

김정일이 제시한 구호들로는 1970년대 중엽의 “사상도 기술도

23) 한재만, 앞의 책, p. 277.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와 1978년의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등이 있으며, 최근에도 북한당국은 1996-97년에는 ‘고난의 행군’, 1998년에는 ‘사회주의 강행군’, ‘강성대국건설’, 1999년에는 ‘제2의 천리마 대진군’ 등의 구호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당국은 국가와 당의 주요기념일(몇 십주년 기념일 등 꺾어지는 해)에 수많은 구호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은 대중운동의 조직과 운영의 ‘명수’로 알려져 있다. 1975년 말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김정일이 발기한 대표적인 대중운동이다.

그밖에 1979년 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 최근의 ‘정성옥 따라배우기 운동’ 등을 발기하여 사회주의건설과 혁명에 있어 인민대중들의 노력동원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7) 신화조작과 전설조작: 지도자의 신비화

북한당국은 부자승계에 따른 정통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항일혁명운동의 근거지였던 백두산을 성지화하고 김정일의 출생지로 조작함으로써 김정일의 권력승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김일성에 비해 카리스마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김정일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김정일에 관한 다수의 전설을 당대에 만들어냄으로써 지도자로서의 부족한 카리스마를 보충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한다.

김정일을 ‘위대한 영도자’로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화조작, 전설조작은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김정일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준다.

김정일의 전지전능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신화조작, 전설조작 등은 수해, 가뭄, 냉해 등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 지도자의 덕성과 연결됨으로써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김정일정권이 체제개혁 등 합리적 정책선택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기보다는 비정상적인 정치술수와 상징조작에 의존하여 난국에서 벗어나고자 함으로써 체제위기는 심화되고, 주민들의 고통은 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장래는 매우 어둡다고 할 수 있다.

2. 김정일의 통치방식과 정책성향

1) 김일성과의 차이: 대중선동가형과 개릴리형

북한은 1970년대 중반에 당·정·군의 지도체제를 유일지도체제로 개편하면서 수령인 김일성의 후계자인 김정일에게 권력이 집중되도록 했는데 그 중 가장 치밀하게 진행된 것이 정보보고 및 명령전달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점이다.²⁴⁾

김정일은 당 정치국 회의를 소집하고 정치국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통치스타일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김정일이 공식적인 정책결정기구를 무시하는 이유는 그가 소수의 측근들을 통한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측근을 통한 정치는 '대중형'이 되기보다는 '엘리트형'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소수의 엘리트 그룹에 의존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밀실정치'를 선호하는 것이다.²⁵⁾

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로 공인된 후 '사람관리'에 심혈을 기울

24) 당시 김정일은 3선·3일 통보체계와 직보체계,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했다.

25) 김현식 손광주, 앞의 책, p. 283.

였다. 김일성의 인사원칙은 인물 위주였다. 김일성은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을 강조했다. 반면에 김정일은 ‘당성 우위’다.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선 당성, 즉 충성심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궁지에 빠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계획적으로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은 다음 구출하는 방법으로 자기 사람을 만든다. 김정일은 자기 사람을 만드는 도구로 ‘여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김정일은 측근들과 비밀파티를 즐기는데 중앙당의 부장급보다는 부부장급이 주류를 이룬다. 김정일은 부부장급들을 측근으로 삼아 부장과 부부장을 ‘분리 통치’하고 있다.

김정일의 통치스타일 중 흥미로운 사실은 선전선동에 뛰어나면서도 대중연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해방 후 다른 공산주의자들이 이론에 집착하는 동안 설득력있는 화술로 대중에게 접근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김일성의 통치스타일은 현장지도가 큰 특징이었다.

반면 김정일은 연설형이라기보다는 지시형이다. 간부회의시에도 자기가 말을 많이하고 참석자들이 자기 말에 찬성하도록 유도한다. 김일성은 정책결정시 간부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으나 김정일은 독단으로 결정하며 자기 정책이나 노선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면 가차없이 처벌한다고 알려져 있다.²⁶⁾

2) 김정일의 통치방식 성향

김정일의 유일지도체제와 세습통치체제의 확립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통치 성향과 통치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취약점은 통치방식의 성향과 정책적 성향의 두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

26) 김현식 손광주, 앞의 책, pp. 290-291.

다.²⁷⁾

통치방식에서 첫번째 성향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통이 크게 한판을 넓게 치고 대담한 작전, 속도전, 사상전, 운동전으로 능숙하게 지휘하고 무비의 담력으로 추진시키는 큰 정치 힘있는 정치”를 통치방식의 철학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즉, 김정일 통치방식의 철학으로 공식화되고 있는 ‘통이 큰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라는 것이다.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 ‘00년대 속도창조운동’을 비롯한 각종 속도창조운동, ‘숨은영웅따라배우기 운동’, 서해갑문과 여러 개소의 갑문건설, 평양산원, 인민대학습당 등 이러한 현상들은 김일성·김영주 통치시기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김정일 통치방식에서 두번째 성향은 통치에서 강압과 회유와 환심책을 능란하게 구사하고 있는 점이다. 김정일 통치에서 가장 두드러진 측면이 중앙집권적인 일사불란한 유일지도체제의 확립과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강한 내부 조직규율의 보장과 정연하고 신속한 통보체계 및 제도와 함께 반체제 요소에 대한 가차없는 제재와 색출제거, 반체제 외의 직무상·사무상·도덕상의 과오와 과실에 대해선 처벌없이 일정 기간 육체노동생활을 통해 사상 단련을 시키는 방법의 관대성, 선물명목으로 된 물질적인 선심책, 공장과 농촌에서의 인명사고에 대한 집중적인 배려 등으로 사람들의 감명과 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자신의 덕성을 과시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위로부터 당권이 내려먹히는 중앙집권적 관권, 유일사상체계, 유일지도체제 확립과 그

27) 신경완, 앞의 글, pp. 458-468.

를 보장하는 10대원칙을 휘두르며 국가보위부의 관권을 주축으로 하는 노동당의 통치체제를 구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통치수법에서 세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모든 면에서 도전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혁명과 건설이란 언제나 새것을 창조하는 것이며 이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기 위한 자연과 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새것의 창조는 도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과 혁명과 건설은 자연과 사회에서 총을 쏘며 피를 흘리는 싸움인 전쟁과 총을 쏘지 않으나 힘과 지혜로써 땀을 흘리는 싸움이라면서 모든 것을 전쟁에 비유해서 도전하는 속도전·사상전·투지전·운동전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것, 제일 큰 것, 미래적인 것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도전적인 성향이 특징이다.

승리에는 언제나 일정한 모험과 도전이 뒤따르게 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언제나 무자비해야 하고 천백배로 복수할 줄 알아야 하며 원수들의 도전과 도발에는 백배 천배의 도전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적 경향성은 군사력의 대대적 증강과 군사적 현대화를 부단히 강행하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 역시 김정일의 도전적인 성향과 관련이 있다.

넷째, 모든 일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성을 높이는 정치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을 철칙과 기본원칙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체의 방법론의 기본이 되는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와 방법,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사업 선행방법, 모든 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에 대한 1차적 중시, 사람들의 사상의식성 제고를 위한 정치사상 교양, 선전선동이 되는 정치선행이라

는 원칙을 고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²⁸⁾

3) 김정일의 정책성향

신경완이 전하는 김정일의 정책성향은 다음과 같다.²⁹⁾

첫째, 모든 것을 '주체사상화' '김일성주의화'에 집중시키고 있다. 모든 것을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요구로 일색화하는 것을 당과 국가의 최종목표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①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당의 유일사상체계, 즉 주체의 사상체계 김일성주의 사상체계확립과 유일지도체제, 즉 김정일의 유일지도체제 확립인 것이다. ②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신격화·사람의 정예화, 사회의 조직화·사물화를 실현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③ 사람들에게 대한 주체화 즉 그들을 정예화한다는 것이다. 모든 간부들을 정예화·주체화하고 당원을 정예화·주체화해서 당을 주체화하고 군대를 정예화·주체화하고 전국민을 주체화·정예화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을 주체형으로 인간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체적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원칙과 기본노선을 더 확고하게 철저히 견지하고 추진시키고 있는 점이다. 주체적인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노선으로는 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노선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추진시키는 것이다. ② 사상혁명·기술혁명·문화혁명의 3대혁명노선 추진과 함께 사람개조·사회개조·자연개조의 3대개조혁명을 추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적 요새와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여 주체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시킨다는 것이다. ③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인 토대를

28) 신경완, 앞의 글, pp. 458-462.

29) 신경완, 앞의 글, pp. 462-467.

현대화·과학화에 기초하여 부단히 축성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는 것이다.

셋째, 김정일의 정책성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김일성·김영주보다 서방 세계에 눈을 돌리고 개발과 교류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이 현 시대에서 서방세계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은 권좌에 오르기 전부터 갖고 있던 그의 견해였다. 김정일은 자기 이론에 따라 서방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의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되 사상적으로 오염되지 말고 영어를 배우되 자본주의사상과 생활양식에 물들지 말고 자본주의사상과 생활양식의 침습을 적극 반대 배격하면서 선진과학기술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도입하자면 영어든 외국어든 알아야 한다면서 영어학습을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당간부를 비롯한 간부, 가정과 직장 등 전국민적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³⁰⁾

넷째, 대남전략전술면에서 더 도전적이고 지능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김정일은 대남전략전술정책의 기본조처로서 “한국에 대한 집중포위 작전을 펼쳐 통일과 혁명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통일과 혁명의 전제여건을 성숙시켜 통일과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이론을 펴고 있다.³¹⁾

4) 김정일 통지력의 강점과 약점

황장엽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북한체제의 성격은 “민족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며 철저한 개인독재국가란 점에서 봉건전제주의의 현대판”이라는 것이다. 황장엽은 군국주의와 개인독재가 북한

30) 김정일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1977년께부터 북한에서는 영어공부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4년에는 ‘합영법’까지 만들어 선포하고 서방나라들의 과학기술은 물론 자본까지 도입해보자는 데까지 나오게 되었다.

31) 신경완, 앞의 글, pp. 462-467.

의 기본특징이라고 하면서 “극단한 개인독재와 쇄국정책, 군국주의를 고무하여 주는 것은 북측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약점을 더욱 강화하여 그 체제를 빨리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장엽이 전하는 김정일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³²⁾

“북측은 철저한 개인독재체제이기 때문에 집권자의 성격과 능력이 지배체제운영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북측 집권자는 왕성한 정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리익을 옹호하려는 견결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감각과 예술적 감각이 예민하며 머리가 빨리 돈다.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처음부터 떠받들려왔기 때문에 고생을 모르다 보니 참을성이 없으며 과격한 성격인데다가 매우 변덕스럽고 질투심이 강하다.”

“그는 일찍이 독일의 히틀러를 숭배하고 그와 같은 독재자가 될 것을 희망하였으며, 히틀러의 본을 떠서 전격전이라는 말을 쓰기 좋아하였다. 그는 국가와 군대, 당과 인민을 자기의 개인소유물로 간주하면서 절대복종과 절대충성을 요구한다. 그가 봉건전제주의의 신봉자라는 것은 정권을 세습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며 ‘광명성’으로 탄생할 때부터 결정된 것처럼 선전하는 것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는 자기를 위대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정치가, 천재적 군사전략가, 위대한 예술가로 내세우는 것을 서슴지 않으며 오직 자기 한 사람만을 절대적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한다. 자기외의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존

32) 황장엽이 귀순전인 1996년 8월 23일 작성한 비밀논문 “조선문제”(『조선일보』 1997년 4월 22일).

경하면 그 직위여하를 불문하고 존경한 사람이나 존경받은 사람이나 다 되게 문제가 선다.”

“그의 질투심은 병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 부하에 대해서도 질투를 하며 력사적 인물에 대해서도 깎아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다른 나라 지도자들을 비방하는 것을 좋아한다. 중국은 자기의 경쟁대상으로도 될 수 없는데 중국지도자들을 질투하며 중국에서 경제가 발전되는 것을 배가 아파한다. 그는 누구와도 협의하는 법이 없으며 아무리 높은 사람도 직접 전화할 수 없다.”

“그는 당과 군대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경제는 돌보지 않고 정무원이 책임지게 하여 놓았지만 당의 경리, 기타 특수기관의 경리에 대하여서는 정무원이 아무런 권한도 못가진다. 그런데 경제가 파산된 것은 다 정무원이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집권자는 그 성격으로 보나 또 그가 오래동안 력사의 흐름을 역행하여 축적하여 놓은 행적으로 보나 되돌아설 가능성에 대하여 기대를 걸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에게는 우리 민족을 파멸시킬 수 있는 무력이 있다. 이 최후의 수단을 쓰면 자기도 물론 망하게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지금 자기 수중에 있는 무력을 동원하여 우리 민족력사상 최대의 비극을 연출하고 천추에 악명을 남길 것인가 굴복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서 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거진 매일과 같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으나 북측집권자로부터 자기를 부정하는 반성을 기대하는 것은 허황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한편, 신경완은 “김정일 세습체제가 걸으로는 유일지도체제 확립이니 유일사상체제 확립이니 온 사회의 주체화니 수령과 당, 인민대중과의 일심단결이니 철통 같은 통일단결이니 하면서 화려한 미사여구로 장식되고 있으나 그것은 어쩌면 한갓 구호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는 잠재된 내부적인 갈등과 대립, 침체와 답보, 실패와 반항의 본질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김정일 세습체제의 취약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³³⁾

첫째, 통치체제의 구성에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신들이 일족들을 핵심으로 하고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맹종맹동하는 자들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능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 자기의 창의적 주견을 말하는 쫓대있는 사람들을 배제시킴으로써 체제 자체의 보수성과 비능률성과 갈등이라는 본질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중앙집권적이고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관료적 유일지도체제와 유일사상체제 확립에 의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내포하고 있는 모순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본질적인 취약점이다. 소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체형의 인간화’는 사람들의 본능과도 같은 개인마다의 개성적인 욕망과 창의적인 측면을 빼앗고 목살하고 유일사상체제·유일지도체제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기형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사회발전을 위한 사람들의 창의적 지혜와 능력과 욕구를 배제시키고 있다.

셋째, 통치방식의 본질적인 취약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사상

33) 신경완, 앞의 글, pp. 467-468.

의식을 기본으로 한 '통이 큰 과감한 작전'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를 펼친다는 것과 도전적인 성향을 가진 통치방식은 본질적으로 사회와 자연과 개개의 사물들이 가진 합법칙성과 정치·경제가 가진 고유한 객관적인 합법칙성에 기초한 통치방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의 주관적인 사상의식을 본바탕으로 한 주관적 욕망과 욕구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통이 큰 대담한 작전' '힘있는 정치'란 모험과 오판과 시행착오만을 초래하고 그 결과 실패와 파탄만을 반복하는 현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김정일정권의 본질적 취약점으로 인하여 북한경제는 경제와 과학기술, 국민생활에서의 침체와 답보 및 낙후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체제에 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취약점으로 인하여 국민들 속에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재적·잠재적인 불평불만, 갈등과 대립, 항거심이 증폭되어 언젠가 주객관적 여건이 조성되면 폭발하여 세습통치체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대사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김정일의 취약점은 다음과 같다.

“김정일의 분석이 날카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는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는 드물다. 신상옥과의 대화에서도 그는 물질적 보상제도 도입을 통해 북한 영화진흥을 꾀하기보다는 더 많은 남한 예술인들을 납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1996년 연설(김일성대학연설)의 처방전에서도 그와 똑같은 패턴, 즉 이미 실패한 정책을 강화하자는 식의 인식을 보여준다. 현실인식과 처방 사이의 이같은 괴리가 그의 상상력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력 부족 때문인지, 아버지가 남긴 전통에 도전하기 위한 정통성 부족을 인식한 때문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의 집합 때문인지 알 수 없다.

황장엽이 제공하고 다른 소스에 의해 확인된 김정일에 관한 충격적인 모습은 그가 각각 개별적으로 자신에게 올라오는 보고를 결재하면서 하나의 결정이 다른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전혀 또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결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농업과 경공업, 수출에 정책 최우선 순위가 두어져 있으며 광공업과 중공업에도 최우선 순위가 주어졌다. 결국은 최우선 과제가 끊임없이 이 문제에서 저 문제로 옮겨져 어떤 정책도 지속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김정일이 개혁적 사고를 갖고 있는 지식인들에게 적절한 시점이 되면 중국식 개혁 개방을 약속했다는 전언(傳言)을 들었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이후 공식적인 발표는 그가 장례식 직후 했던 말 즉 '나로부터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는 것에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북한의 개혁 드라이브를 무산시킨 두 가지 상충되는 사건을 설명해주는 단초를 제공한다. 즉 나진·선봉 지역 개방을 위한 포럼이 끝나자마자 잠수함을 침투시켰다든지 정주영씨 방북 직후의 간첩침투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3. 김정일시대 개막과 체제정비 및 발전전략

1) 주식제의 폐지와 국방위원장 체제

1972년 12월 채택한 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은 '혁명적 수령론'을 헌법적으로 제도화한 주석제의 규정이다. 1972년 헌법에 의하면 공화국 주석직은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직책으로 국가활동에 대한 주석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석이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며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하며 북한의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는 직위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된 주석제를 국가기관체계에서 특별히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주석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로동계급의 수령이 차지하는 위치와 력사발전에서 수령이 노는 역할로부터 흘러나오는 합법칙적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철저히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국가정치지도체계이다.”³⁴⁾

주석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중앙인민위원회 역시 1972년 헌법 채택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주석을 수위로 하는 중앙인민위원회는 '당-정-군 복합체'의 성격을 가진 북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었다.

1972년 헌법에 규정된 중앙인민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와 권한은 국가의 대내외정책을 세우며 정무원과 지방주권기관, 사법검찰기관들과 국방 및 정치보위 사업을 지도하며 국가기관들에 대한 주권감독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중앙인민위원회의 권한과 임무에 대한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34) 『조선전사』 제32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126.

북한당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히 관철하며 주석의 유일적 영도 밑에 모든 국가기관들이 한몸과 같이 움직이도록 그들의 전투적 기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³⁵⁾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1972년 사회주의헌법의 권력구조의 핵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지배)를 헌법적으로 보장한 주석제의 채택이다. 서방식 대통령제에 대응한 주석제의 채택으로 북한의 권력은 “당에서 국가로 이전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권한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내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서 사업을 한다고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북한의 1972년 헌법은 종전의 최고인민회의, 내각, 일부 사법 기능을 통합 재조정하여 행정부에 모든 국가 임무를 집중시켰다. 행정부는 다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와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으로 분리하여 행정권을 지도기능과 집행기능으로 이원화하였다. 이와 같이 1972년 헌법상의 국가권력구조는 주석-중앙인민위원회-정무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중앙행정 체계를 이루고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최고주권기관으로서의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상이나마 보유하던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다. 더욱이 사법기관인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조차도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들어가게 되었다.

주석제 채택 당시 김일성은 당의 영도적 역할을 유지하면서 국가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35) 위의 책, p. 127.

러나 김정일이 당권을 장악하면서 권력이 국가로부터 당으로 다시 이동하고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점차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위대한 수령은 곧 국가주석'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태상왕'의 위치에서 '군림(reigning)'할뿐이었고, 실질적인 '통치(ruling)'는 당권을 장악한 김정일이 중앙인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실권을 행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대학을 졸업한 직후인 1964년 6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지도원이 되면서부터 당활동을 시작하여 1973년 9월 17일 당중앙위원회 비서, 1974년 2월 13일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당내에서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되었다. 1980년 10월 14일 제6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됨으로써 후계자로서의 위치를 공식화했다. 그리고 1991년 12월 2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 1992년 4월 20일 원수 칭호 부여, 1993년 4월 9일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 등을 통해서 김일성 생전에 이미 군사부문에 있어 제도적인 권력승계를 완료하였다.

1992년 4월 9일 제7차 개정헌법 제11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석이 가지고 있던 군사권 일체를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1993년 4월 9일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주석의 지위는 헌법적으로도 실권이 없는 주로 외교권을 행사하는 '의식상의 국가원수'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구축과 함께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유명무실한 국가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회주의국가에서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고 할만큼 군사권은 매우 중요한 실권이다. 군사권이 없는 주석과 김정일의 공식 정치기구를 통하지 않는 측근 중심의 정책결정 등으로 주석제는 더 이상 존재의의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

김정일이 1998년 개정 헌법에서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통해서 북한의 실질적인 국가 수반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되었을 것이다.³⁶⁾

첫째, 식량난·에너지난·외화난·생필품난 등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주석 취임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김일성 사후 4년여 동안 김정일은 죽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충성³⁷⁾과 효성을 강조하면서 전통과 관습에도 없는 만3년상을 치르면서 명분상으로는 '유혼통치'를 지속했지만, 실질상으로는 김정일이 주석을 취임할 경우에 따를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여 정상국가 체제로의 환원을 미루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주체사상에 의하면 국가는 '호주(戶主)'로서 인민들의 의식주를 책임진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김정일이 국가 주석에 취임할 경우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체제위기 상황하에서의 주석 취임은 부담이

36) 고유환, "북한의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개편 분석," 『통일경제』 1998년 9월호, pp. 6-8.

37) 북한은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를 축하하는 각계의 '반향'을 보도하면서 김정일이 주석직에 취임하지 않은 이유를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려는 김정일의 효성과 겸손함 때문"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1998년 9월 8일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반향,'"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 399호(1998. 9. 5-9. 11), p.13.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고 주석제를 아예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1996년 12월 7일에 행한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의 연설문"에 의하면, 김정일은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해, 경제사업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변명하면서 경제사업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지금처럼 정세가 복잡한 때에 내가 경제실무 사업까지 맡아보면서 걸린 문제들을 다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혼자서 당과 군대를 비롯한 중요 부문을 틀어쥐어야지 경제실무 사업까지 맡아보면 혁명과 건설에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생전에 나에게 절대로 경제사업에 맡려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경제사업에 맡려들면 당사업도 못하고 군대사업도 할 수 없다고 여러 번 당부하시었습니다. 오늘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는 군대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자주 인민군 군부대를 현지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사업은 다른 일꾼들과 행정경제일꾼들이 책임지고 하여야 합니다."³⁸⁾

둘째, 주석제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주석제를 폐지하고 내각제로 환원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도 생전에 주석제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김일성은 1990년 4월 4일 경제학자들과 가진 담화에서 "우리 나라에

38) 김정일,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월간 조선』, 1997년 4월호, p. 309. 이 인용문은 이번 권력개편의 서막을 알리는 전조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서 경제관리가 바로 되지 않기 시작한 것은 주식제를 내오고 정무원이 경제사업을 맡아 지도하게된 다음부터”라고 주장했다. 김일성의 주장에 의하면 주식제를 내온 다음부터 그는 주로 국가사업 전반을 보고 당사업은 김정일이 맡아 하였으며 경제사업은 정무원 총리가 맡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³⁹⁾ 김일성은 정무원이 경제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였으나 정무원이 제구실을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주식으로서 정무원 총리의 대리 역할을 많이 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주식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김일성의 지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혁명적 수령론의 법적 제도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주식제 헌법의 권력구조는 유일체제 구축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경제문제 해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1972년에 채택한 구헌법의 주식-중앙인민위원회-정무원의 3단계 중앙행정체계가 경제문제 해결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권력구조의 전반적 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채택 당시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가 당-정-군 복합체로서 집단적 지도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주식제와 함께 폐지된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으로 보인다.

39) 『김일성저작집』 제42권, pp. 277-278. 김일성은 1988년 1월 당 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꾼협의회에서 한 연설을 통해서도 “주식제가 나온 다음부터 나는 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겸 국가주석으로 당 사업과 국가 사업을 주로 보면서 경제정책을 제시하는 일과 그 밖의 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경제 사업은 총리가 전적으로 맡아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하여 경제위기의 책임이 정무원에 있다고 변명한 바 있다. 『김일성저작집』 제41권, pp. 15-16; 서동만, “김정일의 ‘경제 지도’에 관한 연구”, 『통일경제』, 1997년 9월호, pp. 38-43 참조 재인용.

셋째, 김정일은 공식적 직함(‘관직’⁴⁰)과 관계없이 북한의 후계 수령으로서 실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주석 취임을 ‘형식’의 문제로 인식하고 주석제를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통치체계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수령제)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초월하는 수령이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지도자이다. 김정일은 ‘위대한 령도자(후계 수령)’로서 김일성의 사망과 동시에 수령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당-국가체제(당우위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997년 10월 8일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추대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최고권력에 대한 제도적인 권력승계도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국가 주석직을 굳이 차지하지 않더라도 북한을 통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주석직을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유일체제 구축과정에서 당과 정부의 공식 기구를 통한 정책결정보다 측근 실세들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정책결정을 선호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도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法治)보다는 법과 제도를 초월한 자의적 지배(人治)를 하기 위해서는 주석제를 폐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란 판단을 했을지도 모른다.

넷째, 김정일의 ‘막후통치’ 또는 ‘은둔통치’ 스타일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는 공식 활동이 많은 주석 취임을 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김정일의 통치행태에 비추어 볼 때, 김정일은 ‘음지’에서 활동하기를 좋아하며 대중 앞에 드러나기를 꺼리는 통치스타일을 구사해 왔다. 또한 김정일은 변칙적인 통치스타일을 보이는 ‘계릴라형’ 지도자로서 막후통치를 통해서 신비감을 불러일으

40) 북한 당국은 주석제를 폐지하기 직전인 1998년 8월 22일 『로동신문』 ‘정론’ “강성대국”에서 “김정일장군을 공화국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있다고 밝히면서 김정일이 “관직이 어떠한 혁명만 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했다고 하여 주석제의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키는 통치술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식 활동이 많은 주석직을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주석제는 후계체제 구축에 이용되어 후계체제의 완성과 함께 그 생명을 다하였다. 김정일이 죽은 수령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고 주석제를 폐지하였다는 것은 형식상 수령제(수령-당-국가체제)⁴¹⁾를 다소 완화하고 '당-국가체제'를 복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상으로는 당대회가 18년동안 열리지 않고 있으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5년여 동안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당분간 인민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을 중심으로 북한을 통치하는 군사우위의 준전시적 위기관리체제인 '군-당-국가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김정일정권의 체제개혁의 한계

김정일정권의 체제개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문헌은 1997년 6월 19일 김정일이 발표한 '노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이다.⁴²⁾ 김정일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

41) 스즈키 마사유키의 주장에 의하면, 수령제는 소련형의 당국가 시스템 위에 수령을 올려놓은 것으로, 당 및 국가는 모두 수령의 영도를 달성하기 위한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즈키 마사유키는 "수령제의 확립은 김정일을 후계자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 김일성은 수령으로 비인격화되지 않으면 안됐으며, 동시에 그것은 김일성의 성격화와 가까워지기를 포함한 성격화의 시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스즈키 마사유키 저, 유영구 역,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서울: 중앙일보사, 1994), pp. 71-82.

42) 김정일 당총비서 공식승계 이후 김정일정권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문헌은 1997년 6월 19일,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로동신문』, 1997년 6월 21일; 1997년 8월 4일,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찰하자." 『로동신문』, 1997년 8월 20일; 『로동신문』 1997년 10월 10일,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최고에

들의 지배주의적 책동을 짓부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위업을 힘있게 진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나라와 민족을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기본단위로 삼아 인민대중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사상과 영도의 결실이 ‘주체의 사회주의’⁴³⁾라고 하면서 “우리 인민의 의사와 민족적 특성에 맞게 우리 인민 자신이 건설한 우리의 주체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며 주체성이 강하고 민족성이 높게 발양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애국주의 사회주의라는데 그 본질적 특성과 우월성이 있다”⁴⁴⁾고 주장한다.

김정일은 “민족 자주주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기 식으로 하는 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 나가기 위한 기본요구”라고 하면서 “남의 식을 좋아하고 그것을 본따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주인다운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김정일의 이러한 사회주의건설관에 비추어 볼 때 김정일정권하에서의 근본적인 체제개혁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정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일원주의와 다원주의에 대한 상호 모순적이고 배타적인 ‘2중사회관(dualism)’은 체제개혁을 어렵게 하는 이데올로

모신 조선로동당은 필승불패이다” 등이 있다.

43) 주체의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백철, “주체의 사회주의의 사상, 이론, 방법론적 기초.” 주체사회주의연구 제1권,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평양: 평양출판사, 1992), pp. 7-52 참조.

44)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로동신문』, 1997년 6월 21일.

기적 족쇄와 같은 것이다. 김정일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적인 서구방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⁴⁵⁾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데서 언제나 자기 식의 방법과 방도를 찾고 그에 의거해야 한다. 남의 것 가운데서 좋은 것, 앞선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거나 기본으로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과 인민은 국가사회제도를 관리하고 사회생활을 조직하는데서 자본주의적인 <<서방식>>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이고 민족적인 자기 식을 구현하여야 한다.”

김정일은 “사회경제적 난관이나 민족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병집을 더욱 악화시키는 제국주의자들의 처방을 배격하고 자기 식의 처방으로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그동안 ‘우리식대로’⁴⁶⁾로 모든 문제를 풀어온 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식대로’ 살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⁴⁷⁾

45) 김정일, 위의 글.

46) ‘우리식 대로 살아나가지!’라는 말은 김정일이 1978년 12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 협의회에서 한 연설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에서 처음으로 밝혔다. 이 연설에서 김정일은 “우리식대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정신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며 모든 것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이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주장하여, 모든 문제를 ‘조선식’, ‘주체식’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당의 혁명적 방침으로 제시하였다.

김정일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인 미국, 일본 등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도 반제투쟁의 지속을 주장하면서 탈냉전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의 일체화 흐름' 즉 '세계주의', '글로벌리즘(Globalism)'시대의 노동의 세계적 분업화, 자본의 초국적화, 탈민족화, 초국가화 등의 현상을 "민족의 주체성을 억제하고 민족성을 말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정책"의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다.

김정일은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의 일체화 흐름이라는 것을 꾸며낸 것은 전세계를 서방식 자유세계로 만들며 모든 민족을 저들에게 예속시키고 동화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김정일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에서 밝힌 북한식 발전노선은 1960년대 중반 이후 1970년대까지 제3세계권에서 폄하되었던 종속이론의 발전전략과 유사하다. 김정일은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통한 경제발전을 거부하고 나라와 민족을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기본단위'로 설정하고 혁명과 건설에 있어 자주성과 민족성을 강조하면서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 및 '집단지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김정일의 이러한 발전관은 종속론자들의 주장과 거의 유사하다. 김정일은 초기 극단적인 종속론자의 주장과 같이 중심국가와 주변국가의 지배-종속관계에 기초한 빈부격차와 종속문제를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의한 피할 수 없는 기계론적 양극화(polarization)의

47) "우리는 남의 의사와 처방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주견과 자기 식의 혁명방식을 확고히 견지하였기 때문에 위력한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빛내어 올 수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식대로 살고 혁명을 해 나가므로써 우리의 사회주의를 확고히 고수하고 전진시키며 나라와 민족의 끊임없는 부강변영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김정일, 위의 글.

현상, 즉 중심부 국가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주변부 국가들의 주체성 상실과 종속 심화로 보고, 주변부 국가들의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정치·경제·문화적 종속의 심화와 민족성·자주성 상실의 원인으로 본다. 따라서 김정일은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종속적 발전'의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서방식'이 아닌 '자기 식'의 발전노선을 고집하고 있다.

김정일의 이러한 발전관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이중사회관'에 기초한 것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결정적인 '걸림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등소평은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앞서 '사상해방' '실사구시'를 통해서 개인숭배와 교조주의의 정신적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건설단계를 하향 조정하여 '사회주의 초급단계론'⁴⁸⁾을 제시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을 채택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신사고(new thinking)'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를 통해서 '발전된 사회주의(developed socialism)⁴⁹⁾를 '발전도상의 사회주의(developing socialism)'로 발전단계를 수정하고 경제발전의 '가속화(acceleration)'를 추진했다. 이와 같이 두 지도자는 '사상해방' 또는 '신사고'를 통해서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이념에 대

48) 중국이 생산력이 낙후하고 상품경제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경제사정이 열악하다는 판단아래 완전한 사회주의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자체진단에서 나온 용어이다. 등소평(鄧小平)의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된 이후인 1979년 11차 당대회 3차 중앙위 전체회의(11기 3중전)때부터 중국의 역사적 단계를 이같이 규정했다.

49) '발전된 사회주의' 이론은 브레즈네프시대에 나온 이론으로 당시 소련 사회주의는 충분히 성숙되었으며 사회주의 기초가 완전히 확립되었다는 과대 평가 하에서 나온 것이다. '발전된 사회주의'는 1967년 11월 볼셰비키혁명 50주년 집회에서 브레즈네프의 보고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1971년 소련공산당 제24차 당대회에서 정식화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977년 10월에 채택된 신헌법 전문에서 소련 사회주의사회의 성격을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재평가와 재해석 그리고 사회주의 발전단계의 수정 등을 통해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던 것이다.⁵⁰⁾

그러나 김정일은 소·동구의 생산력 발전에 치중한 개혁의 실패와 이에 따른 사회주의 붕괴를 지적하면서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패성'을 강조하면서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체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식대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장담한다.

북한은 중국의 경제개혁이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자 1984년 '합작회사운영법(합영법)' 제정과 '독립채산제' 확대 실시 등 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다가 소련에서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공산당의 영도적 역할을 포기하는 등의 급진적인 개혁이 추진되자 제한적인 '개혁'은 후퇴하고 기존체제의 유지·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사회주의의 조기 완수를 위한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⁵¹⁾

김일성이 제기한 '사회주의 완전승리' 단계는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소련이 개혁에 앞서 사회주의의 발전단계를 하향 조정하여 개혁을 모색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의 위기를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와 자연재해에 따른 '일시적 난국'이라는 인식 하에서 그동안 북한식

50) 중국과 소련의 사회주의에 대한 재평가는 Yan Sun, "The Chinese and Soviet Reassessment of Socialism: The Theoretical Bases of Reform and Revolution in Communist Regime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7, No. 1(March 1994); 고유환, "사회주의의 위기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통일문제연구』, 제7권 1호(1995년 상반기호), pp. 20-35 등을 참조.

51) 김일성은 1996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의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것을 북한의 당면한 문제로 제기했다.

사회주의를 잘 건설해왔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단계의 하향 조정이 필요 없으며 개혁도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요컨대, 김정일은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수령과 당의 오류가 없는 투쟁의 결과에서 찾고 북한식 사회주의의 고수를 주장함으로써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의 재해석이나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김정일시대의 공식개막과 ‘강성대국’론

북한에서의 실질적인 권력승계는 수령의 승계이고, 제도적인 권력승계는 당총비서의 승계이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북한에서 김정일시대가 열렸다. 선대 수령의 사망과 동시에 후계 수령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1997년 10월 8일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추대되고, 1998년 9월 5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김정일시대가 공식화되었다.

김일성 사후 4년여 동안 김정일 중심의 북한지도부는 새로운 지도 이념이나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죽은 수령의 권위에 의존하여 ‘김정일은 곧 김일성’이라는 등식 하에 ‘김일성식대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제10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헌법을 개정하여 김일성의 유훈을 법제화하고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한 북한 당국은 김정일시대의 국정지표로 ‘강성대국건설’을 제시하였다.

북한 당국은 김정일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를 앞둔 1998년 8월 22일자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서 김정일시대의 통치구호로 ‘강성대국건설’을 제시하였다. 북한 당국이 밝힌 강성대국건설론의 주요 내용은 주체의 사회주의나라 건설, 수령 중심의 강성대국 건설, 사상강국 건설, 선군(先軍)정치, 일심단결, 자력갱생 등 기존의

'주체노선'을 유지·고수하는 것이다. 김정일의 강성대국건설 방식은 '선(先) 사상·군사 후(後) 경제건설' 방식이다. 김정일의 '주체적인 강성대국건설 방식'은 사상(주체사상, 우리식 사회주의, 붉은기정신·붉은기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혁명의 기둥으로서의 군대를 튼튼히 세우고(선군정치, 총대철학, 혁명적 군인정신, 군사중시, 국방력 강화), 그 위력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건설(자력갱생, 자립적 민족경제)을 추진하는 것이다.⁵²⁾

북한당국은 김정일이 세운 목표는 명백하며 같길은 불변이라고 하면서 김정일이 견지한 신조와 철칙은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모든 사업을 위대한 수령님식대로!”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상과 군대를 틀어쥐면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에서 근본을 틀어쥔 것으로 된다”라든가 “이제 우리 장군님께서 이 땅위에 어떤 경이적인 현실을 펼쳐놓으실 것인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적들은 상상도 못한다”라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로부터 최근 북한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주식제 폐지, 인공위성 발사(또는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이 김정일의 통치방식과 무관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당과 국가기관의 기능이 정상화되지 못한 이유도 김정일의 사상·군대사업 우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북한당국은 “나라는 작아도 사상과 총대가 강하면 세계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이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⁵³⁾ 그리고

52)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주체적인 강성대국건설방식이다.” 『로동신문』 1998년 8월 22일자 ‘정론’ “강성대국”.

53) 『로동신문』 1998년 9월 8일.

“나라의 강대성은 사상의 힘, 정치의 위력에 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정치를 높이 받들어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⁵⁴⁾라고 주장했다. 북한당국은 주체의 강성대국건설 노선을 당이 내세운 ‘위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우리 나라의 국력을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기 위한 거창한 애국애족의 위업이다”⁵⁵⁾라고 선전하고 있다.

4) 지력갱생과 중공업우선주의 발전전략

일부 분석가들은 김정일의 공식승계 완료로 계기로 새로운 경제발전 노선이 제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개정 헌법의 경제관련 조항의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확대 해석하면서 개혁·개방 등 경제관리방식에서의 의미있는 변화를 기대하였다.⁵⁶⁾ 그러나 북한 당국은 기존노선의 고수를 내외에 천명하고 중공업우선주의 등 1950년대식 발전전략을 표방하는 등 ‘북한식 보수주의’로 회귀하였다.

54)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 『로동신문』 1998년 9월 9일자 사설.

55) 『로동신문』 1998년 9월 9일자 사설.

56) 1998년 9월 5일 개정 헌법에서는 사회단체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대외무역에 있어서도 사회단체, 협동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무역을 담당할 수 있는 법적근거(제36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특수경제지대에 각종 기업의 창설 운영을 장려한다는 조문(제37조)을 추가하여 외국자본 유치에 필요한 법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의 북한은 사상·이론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실제로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정권은 대내적으로는 시장을 통한 거래를 일부 묵인하고, 거주 여행의 자유를 허용(헌법 제 75조) 하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세계금융기구로부터의 외자도입과 서방 국가들과의 무역을 촉진하려는 조치들을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공화국 창건 50주년 기념 『로동신문』 1998년 9월 9일자 사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에서 사상과 정치강국, 군사강국을 건설하여 존엄을 떨치고 있는데 경제건설은 이를 따르지 못한다고 자인하고, 앞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면 우리 조국은 모든 면에서 강대한 나라로 빛을 뿌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에 인공지구위성을 100% 자체의 기술과 힘으로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은 우리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불패의 위력의 과시로 된다”⁵⁷⁾고 하면서 자력갱생 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북한당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지도사상, 지도리념으로 틀어쥐고 나가며 조국번영을 위한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식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김일성이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를 북한정권이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투적 기치이며 혁명과 건설의 귀중한 교과서이다”라고 주장했다.⁵⁸⁾

이와 같이 북한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철두철미 우리식, 주체의 식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북한은 헌법개정과 김정일정권의 공식출범 이후 경제정책의 기본노선을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는 제목으로 1998년 9월 17일 『로동신문』과 『근로자』의 공동논설이라는

57) 『로동신문』 1998년 9월 9일자 사설.

58) 『로동신문』 1998년 9월 9일자 사설.

이례적인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 논설에서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중공업 우선주의의 경제발전 노선을 밝히면서 외세의존경제 및 세계경제의 일체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9. 17 공동논설'에서 북한 당국이 표방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은 과거 김정일이 표방했던 입장보다 더 보수적이고 폐쇄적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982년 3월 31일 발표한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는,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아매고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립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제적인 경제 협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⁵⁹⁾라고 했다. 그리고 1989년 12월 28일 행한 김정일의 연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에서는 "자력갱생한다는 것은 남의 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이라도 선진적인 것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⁶⁰⁾라고 밝혀 국제협력과 선진적인 것의 적극 수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9. 17 공동논설'에서는 "자립적 민족경제는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이다. 이것은 자립적 민족경제가 자체의 잠재력과 온갖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 나갈 수 있는 우월한 경제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라고 하여 국제적인 경제협조와 선진적인 것의 적극 수용을 거부하고 내부 자원의 동원을 통한

59)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50.

60) 김정일(1992). 위의 책, p. 272.

중공업우선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다음과 같이 표방하였다.

“우리는 특수한 경제구조를 허무는 것을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 인민생활을 높인다고 하면서 대외무역에만 치중하는 것은 옳은 해결방도로 될 수 없다. 물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공업도 발전시키고 대외무역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은 자립적인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기초위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앞으로도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우리식 경제구조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제국주의의 세계경제일체화 책동의 본질은 모든 나라의 경제를 서방화, 미국화하여 세계경제를 통째로 저들의 지배권안에 넣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염불처럼 외우는 개혁·개방타령은 사탕발린 독약과 같은 것이다.”

“원래 서방식, 미국식이라는 것은 약육강식의 원리를 가장 철저히 구현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방침의 전형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몰아오는 개혁·개방바람을 물리치는 위력한 방도는 경제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나라마다 역사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며 도달한 생산력 발전수준도 다르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든지 자기 실정에 맞는 자기식의 처방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더 개혁할 것도 없고 개방할 것도 없다.”

북한은 ‘일체화’⁶¹⁾된 세계란 결국 제국주의자들(‘두뇌국가’)이 주인행세를 하고 다른 나라(‘몸체국가’)들은 몸종노릇을 하는 세계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중속론에서 말하는 중심-주변의 양극화(polarization) 문제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혁·개방을 통한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거부하고 중공업우선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 소련의 국가사회주의를 충실히 수용하여 경제발전모델로서 스탈린주의 경제모델의 4대원칙 즉, ① 소비재 공업과 농업을 희생한 중공업 우선, ② 모든 경제부문의 지령형 계획화, ③ 의사결정의 엄격한 중앙집권화, ④ 경제운영에서 행정적 수단의 중시 등의 정책⁶²⁾을 수용하여 실시했다.

북한은 195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 김일성의 보고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농업과 경공업의 동시적 발전’을 당의 경제정책의 기본 테제로 제시하였다. 당시 김일성은 중공업을 우선적

61) ‘지구화(globalization)’를 북한당국은 ‘일체화’로 인식 표현하고 있으며, 남한당국은 ‘세계화’란 표현을 쓰고 있다.

62) Silviu Brucan, *World Socialism at the Crossroads: An Insider's View*(New York: Praeger, 1987); 이선희 역, 『기रो에 선 사회주의』(서울: 푸른산, 1990), pp. 78-79.

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전후복구건설의 모든 문제를 푸는 중심고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⁶³⁾

북한은 1958년 '원시적 사회주의 축적'과 사회주의적 농업개조를 위해 전면적인 농업집단화를 완료하였다. 1962년 10월 쿠바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방침을 결정하고 군사강경노선을 추진하였다. 북한은 1965년 주체사상을 공식화하고 사상·정치분야에서의 주체확립과 경제분야에서의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내외에 천명하였다.⁶⁴⁾ 따라서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소비에트 발전 모델을 변형한 자립적 발전 모델을 북한식 발전 모델로 표방하게 되었다.⁶⁵⁾

북한은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함께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정

63) "우리는 전후경제건설에서 중공업의 선차적 복구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할 수 있고 인민생활을 빨리 개선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8권, p.18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p. 320-327.

64) 1965년 4월 14일 김일성은 인도네시아의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강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에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이것이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주체사상이라고 공식 표명하였다.

65) 과거 사회주의에는 네 가지 기본적인 발전 변형(variants)이 있었다. 첫째는 소비에트 모델로서 국가가 강제한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의 희생을 통하여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발생하였다. 둘째는 노동자의 자주관리라는 유고 모델이다. 유고 모델에서 생산단위는 국가통제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다. 세번째는 인민공사에서 농민의 조직화를 통한 농촌의 발전을 강조하는 중국 모델이다. 넷째 모델은 자립적 발전인 북한 모델이다. Keith Griffin, *Alternative Strategies for Economic Development*(Basingstoke and London: Macmillan in association with the OECD Development Centre, 1989), p. 29; 사크 에흐(Jacques Hersh), "북한: 이념적 변형?" 황의각 외,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대응』(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5), p. 51.

치·사상사업 우선, 자력갱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 속도전을 비롯한 대중동원, 농업집단화와 집단적 소유(협동적 소유, 전인민적 소유) 등을 추진함으로써 경제발전의 동력을 상실하고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다.

특히 북한은 '발전된 사회주의(developed socialism)'를 자처했던 소련의 수직적 국제분업 압력과 중·소의 내정 간섭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의 편입 압력 등을 거부하고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추진함으로써 대외의 존과 증속은 피할 수 있었으나 세계적 노동분업구조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술혁신과 정보와 지식의 유입이 차단되어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게 되었다.⁶⁶⁾

소련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 입각한 중공업우선주의정책의 추진은 잉여자본과 노동력을 동원하는 외연적 성장(extensive growth)단계에서는 대단히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생산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생산과정의 지속적인 혁신과 노동자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요청되는 내포적 성장(intensive growth)단계에 와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다. 또한 자립경제의 기반구축과 군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공업우선정책의 추진은 의식주문제와 관련된 경공업의 낙후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만성적인 소비물자와 생필품의 부족과 조악한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고조 등으로 노동의욕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3차 7개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

66) 고유환,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김정일정권의 진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2호(1996 여름호), p. 234.

자 1994년부터 중공업우선주의를 완화하면서 대외무역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1993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1987-1993)계획에 대한 총화를 통해 경제건설의 실패를 자인하고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 등 3대 제일주의를 발표했다.

북한이 '새로운 무역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11월부터이다. 김일성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서 "변화된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 자본주의시장에 대담하게 진출하며 대외무역에서 전환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⁶⁷⁾라고 밝히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려면 무역사업체계를 고쳐야"한다고 하면서 무역부가 가지고 있는 일부 무역회사들을 정무원 위원회와 각 부들에 넘겨주어 위원회, 부들이 자체로 무역을 하여 살아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⁶⁸⁾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의 결정으로 라진-선봉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 정비를 서둘렀다. 당면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1992년 4월에 개정된 헌법 제16조와 제37조에서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보장, 외국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합영과 합작을 장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외 경제개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⁶⁹⁾

67) 『김일성저작집』 제4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31.

68) "자본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은 개별적인 자본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 부들이 제각기 무역회사를 가지고 무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43권, p.235- 236)라는 김일성의 주장에 비춰볼 때 1998년 9월 5일 내각 개편에서 대외경제위원회를 폐지한 것은 이 위원회의 기능을 각 내각 부서로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69) 1992년 헌법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김일성은 1992년 12월 14일 중앙인위원회와 정무원 연합회의에서 한 연설 “현시기 정무원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에서도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⁷⁰⁾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다른 나라들과 무역도 하고 경제협작과 합영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일꾼들이 경제를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운영할 생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경제분야에서 자본주의적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합영과 협작을 하려고 하는 기본목적은 다른 나라의 기술과 자금을 리용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와의 합영, 협작은 다른 나라에서 기술과 자금을 대게 하고 기업관리는 우리가 하는 방향에서 하여야 하며 될수록 많은 리용을 얻도록 하는 원칙에서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기에는 사회주의시장을 기본대상으로 하여 무역을 발전시켜왔는데 이제는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거기에 자본주의가 복귀되었으며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도 붕괴되어 자본주의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시장을 기본대상으로 하던 무역정책을 자본주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시장에 대담하게 진출하여 무역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자면 자본주의나라들과 능란하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준비된 무역일꾼이 많아야 합니다.”

김일성은 사망 직전인 1994년 7월 6일 경제부문 책임일꾼협의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협영과 협작을 장려한다.
70) 『김일성저작집』 제4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15-16.

회에서 한 결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에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등 3대제일주의를 ‘새로운 혁명적 경제전략’이라고 칭하고,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은 나라의 자립적 민족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매우 정당한 경제건설방식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김일성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주의체제는 유지하되 사회주의시장의 붕괴라는 정세변화를 반영하여 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중국이 개혁 초기에 제시한 바 있는 사회주의 ‘체(體 substance)’와 자본주의 ‘용(用 function)’이라는 것과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자력갱생의 한계를 인식하고 발전전략의 수정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은 개별적인 자본가들을 대상하여 하기 때문에 위원회, 부들이 제각기 무역회사를 가지고 무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⁷¹⁾라는 김일성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사회주의의 관료체제(당관료 및 정부관료)가 ‘붉은 자본가’로서 자본주의의 자본가들을 상대하여 무역을 하는 일종의 ‘아파라치키 자본주의(Apparatchik Capitalism)’⁷²⁾ 또는 ‘국가 자본주의’의 ‘중상주의적 추격발전 전략’⁷³⁾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71) 『김일성저작집』 제43권, p.235- 236.

72) ‘아파라치키 자본주의(Apparatchik Capitalism)’란 표현은 놀랜드로부터 빌려온 개념이다. Marcus Noland, “Why North Korea Will Muddle Through,” *Foreign Affairs*, Vol. 76 No.4(July/August 1997), p. 105.

73) 러스틴은 ‘현실 사회주의체제의 발전전략을, 경쟁하는 국가를 “능가(surpassing)”하고 “따라잡기(catching up)” 위한 ‘맑스주의 옷을 입은 중상주의 발전전략(Marxist clothing a mercantilist strategy)’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계체제론적 시각⁷⁴⁾에서 보면 김일성이 1991년 11월부터 1994년 7월 사망직전까지 추진했던 이러한 정책변화 추구는 자력갱생식 상향이동 발전전략(정치·사상우선의 혁명적 중상주의 또는 국가사회주의 발전전략)의 실패를 자인하고, 유치를 통한 개발촉진전략(대외 투자유치를 통한 수출주도형 중상주의 발전전략)으로의 수정⁷⁵⁾ 또는 외연적 성장 전략으로부터 내포적 성장 전략으로의 이행을 위한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수반하지 않은 외자유치 및 대외무역 확대 노력은 성공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었다. 샤크 에흐(Jacques

Immanuel Wallerstein, *The Politics of the World-Economy*(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 89 ; 월러스틴의 주장에 의하면, 자본주의 세계경제 내에서 국가소유제를 확립하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인민들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고전적 중상주의의 한 변종(variant)에 불과한 것이다. Immanuel Wallerstein, *The Capitalist World-Economy*(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 90 ; 이렇게 볼 때 "사회주의가 사회 전체적으로 규정적인 곳에서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적 맹아상태 속에서 대개 성공적인 추격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열악한 국내적, 국제적 조건들 하에서 가속화된 '추격발전'을 이루는 기반과 동력이 있다"는 디이터 쟁아스의 주장처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자립경제 노선도 실질은 경쟁하는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한 '추격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디이터 쟁아스, 한상진·유팔무 역,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서울: 나남, 1990), p. 211.

74) 세계체제론자들은 '현실' 사회주의국가들이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으로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자본주의국가들과의 무역을 통해서 생존하고 있다는 점에 착목하여 사회주의 세계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75) 월러스틴은 상향이동의 3가지 발전전략으로, (1) 기회포착(seizing the chance) 전략 : 세계경제의 수축기의 수입대체산업화전략, (2) 유치를 통한 개발촉진(promotion by invitation) 전략 : 경제특구설치 및 수출지향적 발전전략으로 외국자본이나 다국적기업 등을 국내생산활동에 끌어들이는 발전전략, (3) 자력갱생(self-reliance) 전략 : 국내적인 자급자족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발전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Immanuel Wallerstein(1979), pp. 66-94.

Hersh)의 주장처럼 “국제무역을 통해 선진 자본주의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기대되는 확산효과에 의존하여 ‘내포적 성장’으로 이행하려는 시도는 북한에게 현실적 선택은 아니었다.”⁷⁶⁾ 북한은 남한과의 체제경쟁, 후계체제의 안정성 확보, 김정일정권의 태생적 한계 등의 이유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또한 북한은 자신의 정체성(identity)과 정당성(legitimacy)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전적으로 타협할 수 없다.

북한의 이러한 한계는 김정일정권으로 하여금 ‘정치·사상우선의 혁명적 중상주의’ 또는 ‘국가사회주의 발전전략’⁷⁷⁾으로 회귀하게 만들었다.

지난 4년여 동안 3대 제일주의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공장가동률이 20-30%에 이르는 등 중공업의 기반마저 무너지자, 북한당국은 1997년 10월 8일 김정일의 총비서 승계를 전후하여 1950년대의 자력갱생과 중공업우선주의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당총비서 승계 직전인 1997년 6월 19일 ‘노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였다.⁷⁸⁾ 김정일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지배주의적 책동을 짓

76) 사크 에흐(Jacques Hersh), 앞의 글, p. 55.

77) 국가사회주의는 사회변혁과정에서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국가사회주의, 국가자본주의, 진정한 사회주의 등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Ken Post · Phil Wright 공저, 김의곤 · 권경희 공역,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인찬: 인하대 출판부, 1998), pp. 13-58을 참조 바람.

78) 김정일 당총비서 공식승계 이후 김정일정권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문헌은 1997년 6월 19일,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로동신문』, 1997년 6월 21일; 1997년 8월 4일,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로동신문』, 1997년 8월 20일; 『로동신문』, 1997년 10월 10일,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최고에 모신 조선로동당은 필승불패이다” 등이 있다.

부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진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나라와 민족을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기본단위로 삼아 인민대중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일은 "민족 자주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기 식으로 하는 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 나가기 위한 기본요구"라고 하면서 "남의 식을 좋아하고 그것을 본따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주인다운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김정일의 이러한 사회주의건설관에 비추어 볼 때 김정일정권하에서의 근본적인 체제개혁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일원주의와 다원주의에 대한 김정일의 상호 모순적이고 배타적인 '2중사회관(dualism)'은 체제개혁을 어렵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족쇄와 같은 것이다. 김정일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적인 서방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⁷⁹⁾

"혁명과 건설을 진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데서 언제나 자기 식의 방법과 방도를 찾고 그에 의거해야 한다. 남의 것 가운데서 좋은 것, 앞선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거나 기본으로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과 인민은 국가사회제도를 관리하고 사회생활을 조직하는데서 자본주의적인 <<서방식>>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이고 민족적인 자기

79) 김정일, 위의 글.

식을 구현하여야 한다.”

김정일은 “사회경제적 난관이나 민족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병집을 더욱 악화시키는 제국주의자들의 처방을 배격하고 자기 식의 처방으로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그동안 ‘우리식대로’⁸⁰⁾ 모든 문제를 풀어온 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식대로’ 살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⁸¹⁾

1998년에 들어오면서 북한당국은 ‘고난의 행군정신’ 대신에 ‘사회주의강행군’이라는 구호를 제출하고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통해서 중공업우선주의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군수공장·발전소 등이 몰려 있는 자강도를 방문한 데 이어 3월 중순에는 함북 김책시의 성진제강소를 찾아가 현지 지도를 하는 등 중공업우선주의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북한은 경공업정책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뒷받침 없이 시행돼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무역정책도 ‘부패사건’, ‘간첩사건’을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유희 중공업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고, 중소형 발전소를

80) ‘우리식 대로 살아나가자’라는 말은 김정일이 1978년 12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 협의회에서 한 연설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에서 처음으로 밝혔다. 이 연설에서 김정일은 “우리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정신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며 모든 것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주장하여, 모든 문제를 ‘조선식’, ‘주체식’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당의 혁명적 방침으로 제시하였다.

81) “우리는 남의 의사와 처방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주견과 자기 식의 혁명방식을 확고히 견지하였기 때문에 위력한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빛내어 올 수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식대로 살고 혁명을 해 나가므로써 우리의 사회주의를 확고히 고수하고 전진시키며 나라와 민족의 끊임없는 부강번영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김정일, 위의 글.

많이 건설하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판단하에 중공업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자강도 현지지도를 통해서 “조성된 정세는 우리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간고분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를 걸어서는 안되며 오직 자기 힘으로 혁명을 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1950년대의 천리마 대고조의 앞장에 섰던 강선노동계급처럼 1990년대 사회주의강행군을 통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돌파구를 열자고 주장했다.⁸²⁾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인 연형묵이 “주체확립, 자력갱생, 이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번 자강도 현지지도의 진수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대로 김정일은 지금의 북한 상황을 해방직후와 전후복구건설시기와 같은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자력갱생, 자립경제 건설노선을 제시하였다.

김정일시대의 기본 노선은 북한 정권창건 50돌에 즈음하여 1998년 4월 20에 발표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에 잘 나타나 있다. 북한당국은 지난 몇 년간 계속되던 ‘고난의 행군’을 1998년부터 ‘사회주의 강행군’으로 바꾸고 강행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50년대의 그 정신’과 ‘혁명적 군인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구호문에서는 “다시한번 천리마를 타고 세계를 주름잡아 달리자”, “성강의 봉화따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천리마 대고조를 일으키자”, “우리 당의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노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자”란 구호와 함께 사회주의 경제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요소는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82) 『로동신문』 1998년 2월 12일.

이러한 과정을 거쳐 김정일시대의 경제정책의 기본노선을 명확히 한 것은 1998년 9월 17일 『로동신문』과 『근로자』의 공동논설이라는 이례적인 형식으로 발표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이다.

공식승계 이후 김정일정권은 표면적으로는 자력갱생식 ‘강성대국건설’을 고집하고 있지만, 내심은 중국식(경제특구)+쿠바식(관광개방)+박정희식(개발독재)의 장점을 절충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한 김정일정권은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김정일정권의 안정성, 대외관계, 남북관계 등이 상호연계되어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중국이 20여년간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한 결과 오늘과 같은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김정일정권이 본격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지체(time-lag)를 고려해보면 체제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권력기반

김영수(서강대 교수)

1. 공식적인 권력기반
2. 인맥 및 지지그룹
3. 권력기반의 사회환경

· 제 4 장 ·

김정일의 권력기반

1. 공식적인 권력기반

1) 법적·제도적 위상 ✓

김정일은 몇 년 전부터 보유해 온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당비서국 비서, 당중앙위 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장, 군최고사령관직과 함께 1997년의 당총비서에 이어 1998년 9월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북한의 최고 지도자임을 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지난 해 재추대된 국방위원장 직책이 '정치, 군사, 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의 최고 직책'이라고 밝혀 김정일이 실질적인 국가수반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김정일의 공식적인 권력기반이 되고 있는 직책 중 가장 중요한 국방위원장, 당총비서, 최고사령관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것과 관련하여 양형섭 대의원은 국방위원장의 직책이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며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영도하는 국가의 최고 직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요컨대 사실상의 국가원수라

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위원장의 권한이 지난 헌법 수정을 통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기존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임을 명기하고 국방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일은 1992년 4월 김일성으로부터 국방위원장직을 이양받음으로써 헌법상 군통수권을 장악해 왔다. 지금까지의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보면 ①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지도 ② 중요 군사간부 임명 또는 해임 ③ 군사칭호 제정 및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 수여 ④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낼 수 있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당총비서

북한의 모든 국가권력은 노동당에 원천을 두고 있다. 북한 헌법 제11조는 "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가권력이 노동당의 통제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당총비서는 이러한 노동당을 실질적으로 총괄지휘하는 최고수위를 말한다. 당규약 3장 24조에 따르면 총비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되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선출된다. 전원회의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개최되는 '집체적 지도기관'으로 당중앙위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총비서의 임기 및 권한에 대해 북한은 구체적으로 헌법과 당규약에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나 ① 로동당의 사상적 지도자 ② 정책의 수립 및 결

정자 ③ 정책집행의 감독자 ④ 대중운동의 선동자 및 조직자로서 초헌법적인 무한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다. 군최고사령관

북한의 1972년 헌법에서는 국가주석이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며 국방위원장직을 당연직으로 맡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2년 헌법 개정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여 1992년 4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이 되는 길을 열었다. 헌법개정에 앞서 1991년 12월 김정일은 김일성이 보유하고 있던 최고사령관직을 넘겨받았는데, 최고사령관이란 타이틀에 대해서는 헌법은 물론이고 노동당 규약에도 설치 규정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권능을 가지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전시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중대 사태시 김일성이 최고사령관으로서 명령을 내린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도 김일성 사후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전 주민과 군에 대해 주요 명령을 내림으로써 최고 지도자임을 과시해 왔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김정일은 김일성 생존시에 이미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을 넘겨 받았고, 권한이 대폭 강화된 국방위원장에 추대됨으로써 실질적인 국가최고지도자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공식권력기반의 안정성 여부

그동안 당과 국가의 공백상태를 놓고 밖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비정상적인 위기관리체제', 또는 '비상체제'라는 용어로 그 상황을 설명해 왔다. 또한 준비된 후계자가 최고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데는 분명히 어떤 내부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속에서 그 사정을 짚어보는 데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 과정에서 권력공백을 설명하는 다양한 시각들이 제기되었는데(전현준 1994), 대표적인 것이 '내부갈등설'과 '유혼통치설'이다. 둘 다 모두 김정일의 정치적 기반이 불안하고 취약하다는 데서 출발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강경 보수파 군부와 개방파 기술관료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김정일의 정치적 기반이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권력공백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바로 '내부갈등설'의 출발점이다. 이 견해는 김정일은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쪽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했으며, 군부실세들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으로 그 설득력을 더해 가기도 했다.

한편 권력의 공백 현상을 '유혼통치설'로 설명하는 시각은 후계자인 김정일이 김일성 주석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유혼형식으로 빌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후계자로서의 권위와 영도력이 취약하다는 가정에서 논의를 시작해 왔다. 즉 김정일의 통치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동안 김일성 주석의 유혼을 배경으로 과도기적 통치를 해올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다.

'내부갈등설'과 같은 견해는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으나, 당총비서의 자리에 김정일이 오른 이후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그 설득력을 잃고 있다. 내부갈등 속에서 어떻게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설명도 없을 뿐 아니라 내부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결국 내부갈등에 입각해서 북한현상을 보려던 시각은 그 적실성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김정일의 권

력으로의 행진을 유념하고, 북한 정치체제가 지금까지 작동해 온 메카니즘을 이해한다면 '내부갈등설'은 쉽게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북한은 이미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를 거치면서 유일지도체계를 확립했으며, 그 결과 북한에서는 수령의 '교시'나 후계자의 '말씀'에 어긋나는 어떤 이질적인 주장이나 견해도 생겨날 수 없는 체계작동원리를 기동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유일지도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정일이었다.

유일지도체계는 1967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죄행을 폭로비판하고 주동자들을 당 대렬에서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이어서 1969년 1월 6일 인민군 당위원회 제4기 제4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와 각급 부대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집행을 태공하였을 뿐 아니라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령도를 거부"한 이른바 '군벌관료주의자들'을 비판·철직시킨 사건과 더불어 추진되었는데, 이 두 사건 모두 김정일에 의해 주도되었다(김정일 1992, 230; 김일성 1983b, 471-472).

이는 김정일이 나중에 이 두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와 인민군 당위원회 제4기 제4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하여 김일성주의 세계관을 더욱 튼튼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고 밝히고,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할 데 대한 구호를 내세워야 하겠다는 것도 그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고 말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김정일 1995, 41).

아무튼 이 두 사건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한 뒤로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장악 주도하는 유일지도체제로 개편되었으며, 이 체계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유일지도체계 안에서 강경 보수노선이니 온건 개방노선이니 하는 노선의 차이와 이에 따른 정책의 차이가 표면적 갈등으로 발전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물론 특정 상황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제기될 수 있지만, 이런 견해의 차이를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 분파나 집단간 알력을 표면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북한 정치체제가 그동안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해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북한정치체계를 중국과 같은 상층엘리트간 흥전 갈등구도 속에서 보려고 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김일성은 집권기간 동안 모택동식의 크게 부수고 크게 다시 세우는 '대파 대립'의 료를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으며, 정치체계의 이런 작동원리는 김정일 시대에도 그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이런 특성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리라고 본다.

요컨대, "우리 당의 력사는 종파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온 력사이며, 형형색색의 종파분자들을 반대하는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되었다"는 언급과 "전당과 전체 인민을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하나의 사상으로 숨쉬고 움직이게 해야 하며,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하나의 사상으로 관통되어야 하며, 여기에서는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그 어떤 자그마한 이색적인 요소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김정일의 '말씀'은 북한 정치가 추구해 온 핵심을 의미한다고 하겠다(김정일 1996a, 37; 김정일 1996b, 325).

한편 '유혼통치설'은 김정일이 당총비서로 추대된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가정이 지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10월 8일의 '특별보도'에서는 김정일 총비서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지금까지 전당, 전군, 전민을 이끌어 왔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이 '특별보도'의 내용 가운데 그가 조선로동당의 '공인된 총비서'로 추대되었음을 선포한다고 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인된 총비서'라는 표현 속에는 추대 이전 시기에 아직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총비서의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추대'란 전당적인 공인 또는 공식화 절차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아직 공인되지 않은 총비서로서 당을 이끌어 왔다면 이른바 '3년 3개월의 비정상'은 쉽게 풀릴 수 있다. 즉 3년 3개월은 결코 비정상의 공백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총비서에 오르는 과정과 양상을 놓고 또 한 번 김정일의 위상에 대해 엇갈린 견해가 도출되었다. 즉 밝힐 수 없는 내부사정을 고려하여 비정상적인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한동안 지배적이었다. 특히 문제는 총비서 추대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선거'한다고 규정한 조선로동당 규약 제24조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조선로동당은 "그 어떤 실무적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당적인 일대 정치적 사업으로 당의 최고 령도자를 추대한 것은 로동계급의 당 건설력사에 일찍이 없었던 사변"이라고 하면서 "우리 식의 당 조직건설의 최고정화"라고 설명했다.¹⁾ 이것은 후계자가 비록 법률상(de jure)의 총비서는 아니었지만, 이미 사실상(de facto)의 총비서로 지위와 역할을 지니고 있었기

1) 『로동신문』 1997년 10월 10일, 사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최고수위에 모신 조선로동당은 필승불패이다.」.

때문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선출이라는 규약상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공인된 총비서'로 추대하는 정치적 절차만을 밟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선로동당은 각급 당조직들의 대표회를 1997년 9월 하순부터 줄이어 개최하고, 그 대표회에서 선출한 것이 아니라 후계자를 총비서로 추대하는 문제를 토의하고 "모든 대표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찬동 속에 총비서로 추대할데 대한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1997년 10월 8일 "전당의 의사에 따라" 김정일이 "당의 공인된 총비서로 높히 추대되시였음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발표하였던 것이다.²⁾

여기서 '추대'라는 개념과 '취임'이라는 개념은 얼핏 보아서는 큰 차이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의 대통령은 반드시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 취임해야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 북한의 경우, 총비서 추대는 후계자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식 선출하는 절차를 밟고 나서 피선된 총비서가 당대표들과 인민들 앞에서 취임식을 거행하는 방식으로는 진행될 수 없다.

북한의 논리에 따르면 수령에게는 임기가 없으므로 수령의 공식지위인 당 총비서와 국가 주석에게는 퇴임이나 취임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선거에서 취임식으로 이어지는 지도자 선출방식은 자유민주주의 정치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선거 및 취임방식으로 수령을 선출하는 것은 북한의 정치문화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북한의 경우 총비서로 추대되었음을 1997년 10월 8일의 '특별보도'를 통해 선포한 것이 전부였고, 실제로 총비서 취임식은 없었으며 오로지 총비

2) 『로동신문』 1997년 10월 9일.

서 추대를 축하하는 대중적인 경축행사만이 북한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김정일 비서가 1991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1993년에는 국방위원장에 취임할 때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추대되는 절차를 밟은 반면, 이번 총비서 추대과정에서는 그런 공식절차가 없이 군, 도, 시 등의 당 대표회에서 추대한 것만 가지고 전당의 의사로 추대된 것으로 간주했음을 지적하면서 당 중앙위원회도 열지 못할 사정이 당 내부에 발생한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을 제기했는데, 이는 김정일의 지위와 위상이 권력승계 과정에서 불안정하다는 전제에서 도출된 해석이었다.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1997년 10월 8일의 '특별보도'를 통해 총비서 추대사실을 선포한 주체일 뿐, 추대주체는 북한 전역에 있는 당 조직들의 대표회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보도'는 추대 주체가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대표회, 도(직할시)대표회, 성, 중앙 및 도당 기능을 수행하는 당조직들의 대표회들"이라고 명기하였다. 여기서 당 중앙위원회가 추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총비서 추대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한국 언론은 주로 '취임'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미국의 언론들은 '선출'(election), '임명'(appointment), '지명'(name)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데,³⁾ 이런 표현들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부정확한 것이다. '추대'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의미에 제일 정확한 표현이다.

한편, 1997년 10월 8일의 '특별보도'를 발표한 주체가 당 중앙

3) 1997년 10월 8일의 미 국무부 대변인 제임스 루빈(James Rubin)의 공식 논평에서는 '임명'과 '선출'이라는 두 가지 표현이 사용되었다.

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김정일 총비서 추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를 제기했는데, 그 중 가장 큰 쟁점은 조선로동당이 총비서 추대를 선포할 때 왜 당 중앙위원회 단독으로 선포하지 않고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공동으로 선포했는가였다. 요컨대, 1970년 11월에 열렸던 당 제5차 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면서 당 중앙위원회 안에 한 기관으로 설치한 군사위원회가 어떤 이유로 '특별보도'의 주체가 되었는가였다.

이런 의문은 “군부에 의거한 위기관리체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 또는 “김정일이 당 총비서에 취임함으로써 통치가 정상화되어 종래의 당 우위체제가 회복된다기보다는 군 우위가 당정 양면에 걸쳐 관철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체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당 군사위원회”라는 추정 속에서 “군부중심의 위기관리체제”, “군부정치”라는 평가로 이어졌다.⁴⁾

그러나 총비서의 유고로 인해 당 총비서가 주재해야 할 당규약에 명시된 공식회의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회의'는 가동해 왔다는 점, 그리고 최고인민회의는 열리지 않았어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통해 국정운영의 의안들을 처리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 기관과 국가기관의 주요 기능이 정지된 이른바 '군부 정치'가 가동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빈번하게 포착되는 김정일의 군부대 현지도 및 다양한 군사중시 행동은 이미 조선로동당이 오랜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는 군사중시정책을 국가위기 상황에서 좀 더 비중있게 운영한 결과라고 본다면, 그리고 인민군대 안에서 당 정치사업을 철저히 실행하고 당의 군사노선을 제대로 관철하기 위해 1960년대 말,

4) 『한겨레』 1997년 10월 9일.

1970년대 초부터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각급 지방군사위원회를 설치한 후 이른바 '군사중시정책'을 강조해 온 것을 고려한다면, 군부대 방문 횟수에 비중을 두어 이를 군부가 당과 국가의 권력을 장악·지도하고 있다는 논리로 연결시키는 데는 적지 않은 무리가 있다.

“당이 군대를 장악하지 못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으며 혁명을 령도해 나갈 수 없습니다. 군대를 틀어쥔 당만이 불패의 위력을 지니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혁명을 령도하는 당은 군대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는 당권이자 군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당과 군대를 틀어쥐고 혁명을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당과 군대는 인민의 운명이며 생명입니다”(김정일 1997d, 24).

이와 같이 당과 군의 관계문제에 대한 김정일의 '말씀'에 주목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북한체제 작동 차원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직시한다면, 국가의 중차대한 “력사적 사변”에 즈음하여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포함시킨 이유를 크게 문제삼을 필요가 없어진다. 아울러 김일성 수령의 후계자인 김정일 비서가 1980년대부터 이미 당 사업을 장악·지도해 왔고, 특히 지난 권력 공백기 동안 사실상의 총비서로 일해 왔다는 엄연한 사실에 착목한다면, 그동안 제기되어 온 김정일의 리더십 및 위상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정연한' 역측에 대해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북한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특유한 위상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김정일의 정치적 위상을 놓고 권력승계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해석을 충분히 가라앉힐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의 수령은 당과 국가를 이끌어가는 최고 지휘관의 지위와 역할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령을 단순히 최고 지휘관으로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수령과 전사 사이의 관계를 단순히 지휘하는 사람과 지휘받는 사람의 관계로만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한 부르조아 민주주의에서는 지휘하는 사람과 지휘받는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봅니다. 부르조아 민주주의적 견지에서는 혁명적 수령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령은 어디까지나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이라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김정일 1997a, 51-52)라는 김정일의 ‘혁명적 수령관’의 관점에서 보자면 수령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고 취임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없다(최성 1997, 194-200).

따라서 수령의 공식 지위인 당 총비서도 선출될 수 없는 지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당규약의 명문 규정과는 다르게 북한의 당 총비서란 지위는 수령의 지위라는 점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추대’하는 모양새가 북한식 사고방식에서는 하나도 이상하거나 비합법적인 행동이 아닌 것이다. 김정일의 말대로 그야말로 ‘부르조아 민주주의적 견지’에서 이를 매우 비정상적이며 분명 그럴만한 내부 사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일 뿐이다.

그동안 북한 ‘밖’에서는 현재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붕괴’하거나,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방정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난관을 겪은 것이 결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일성이 지적했다시피

1957년에서 1959년에 이르는 기간은 “혈벗은 사람도 적지 않았으며 쌀은 다른 나라에서 사다 먹었고 집도 모자라 많은 사람들이 토굴에서 살고 있었을 정도로 궁핍했으며, 그런데다가 대국주의자들은 우리 당이 자기들을 추종하지 않는다하여 우리에게 압력을 가해 왔을 뿐 아니라, 당 안에서는 사대주의에 물젖은 종파분자들이 자기의 상전을 등에 업고 당의 토선을 반대하여 머리를 쳐들었으며,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당국은 ‘북진’소동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면서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을 사촉하여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침해하고 우리 인민의 건설사업을 파괴하려고 날뛰었”던 시기였다(김일성 1983a, 259-269).

이런 총체적 난국을 벗어나기 위해 북한은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이른바 ‘천리마작업반 운동’을 벌였으며, 김일성은 이 운동의 성과와 경험을 통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라는 이른바 ‘3대혁명’을 제창하기에 이르렀다. ‘천리마작업반 운동’은 1975년에 와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전환되었는데, 지금 김정일 체제는 경제난을 극복해 가는 단계에서 또다시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을 내세우고 있다. 즉 ‘붉은기 정신’을 앞세우면서 ‘고난의 행군’을 헤치고 ‘강성대국’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연속성에서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보면, 북한의 국가경영 방식과 체제작동 원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겉모양만 조금씩 바뀌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은 195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앞세우는 매우 특이한 방식의 국가관리체제를 가동시켜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인맥 및 지지그룹

1) 김정일의 사람들

평양의 권부는 대부분 김정일과 '그의 사람들'이다. 김일성 사망 때는 김정일의 권력승계 전망을 놓고 부정적인 전망 제기된 바도 있었다. 그동안 김정일은 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지도부에는 이종옥·박성철 최고인민회의 명예부위원장 등 김일성 시대부터 있던 원로를 중용했고, 경제쪽에는 실무 중심의 기술관료인 '테크노크라트' 들로 채웠다. 김정일의 최측근 테크노크라트였던 홍성남과 연형묵은 각각 내각총리와 자강도당책임비서 자리를 차지했다.

한편 김정일은 북한의 '군심'을 잡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군 부대를 방문하고 있다. 일제때 김일성과 항일운동을 한 '빨치산' 세대인 이을설 원수를 상징적으로 호위사령관에 앉히고, 실무진으로 조명록 총정치국장, 김영춘 총참모장, 김일철 인민무력상을 기용했다. 최근에는 원응희 군보위국장, 박재경 선전부국장, 장성우 5군단장, 김명국 동해군단사령관 등이 핵심측근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권력서열에서 사라진 인물도 있다. 오진우, 최광 전인민무력부장이 사망했고, 서관희 농업담당비서,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 최용해 청년동맹제1비서 등이 비리 등에 연루돼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2) 김정일 인맥의 충원기관

북한은 정권유지의 초석이 되는 노동당 간부대열을 확충하기 위해 8·15 광복후 북한땅에 진주한 소련군의 지원으로 제일 먼저

군시간부 양성기지인 「평양학원」 창설과 함께 당간부 양성기지인 「중앙당학교」와 각 도의 「도당학교」를 설립하여 당간부 양성에 힘을 집중했다.

북한이 당간부 양성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은 노동당 규약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당규약 제33조 각급 당조직의 기능 조항에는 『간부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후비대를 육성하며 그들을 조직적으로 훈련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김일성도 70년대초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명제를 내놓고 간부양성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간부 교육체계는 당간부 양성과정과 현직 당간부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에는 당간부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김일성대학 등 각 대학을 졸업한 성분이 우수하고 당성이 높은 엘리트들을 당간부로 선발한 다음 각급 당학교들에 입학시켜 핵심 당간부로 양성하고 있다.

각급 당학교들의 학생선발은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간부부 양성과를 비롯하여 양성급수별로 도, 시(구역)·군 당위원회 조직부 양성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당간부 양성기관들로는 당간부 양성의 최고 기지로서 중앙에 김일성고급당학교가 있고, 각 도에 공산대학, 각 시(구역)·군에 당 학교들이 있다. 그리고 당규약에 따라 당조직들이 정치기관으로 조직된 부문들에는 따로 정치간부 양성기지를 두고 있다.

즉 인민군 정치일꾼들을 양성하는 김일성정치대학, 김책정치군관학교를 비롯하여 사회안전성정치대학, 국가안전보위부정치대학, 철도공산대학 등이 그것이다. 그밖에 당민방위 간부들을 양성하는 민방위대학이 있다.

김일성고급당학교는 1946년 6월 「중앙당학교」로 설립되었으며

1972년 4월 김일성의 60회 생일을 맞아 김일성고급당학교로 개칭되었다. 이 학교는 당간부 양성의 최고 전당으로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다. 평양시 동대원구역 대동강가에 자리잡고 있는 김일성고급당학교는 원칙적으로 도당 과장급 이상, 중앙당 지도원급 이상의 고급 당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직 당간부들의 재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김일성고급당학교는 학생들의 합숙생활을 원칙으로 하며 엄격한 규율속에서 모든 일과생활이 군대와 같이 절도있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중앙의 고위 간부들에 한해서는 통학을 허용한다. 수업 연한은 정규반과 재교육반 등으로 나누어 여러 단계가 있는데 본교 정규반은 3년, 현직 당간부들의 재교육반은 1년, 6개월, 3개월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도당 부장 이상 각 시(구역)·군당 책임비서 이상, 중앙당 지도원 이상의 재직 간부들에 대한 1개월 강습(연수형식)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 주체사상, 당정책, 철학 등이 기본이며 기타 지리, 군사, 사회주의 경영지식 등을 가르친다. 현재 김일성고급당학교의 학생수는 약 1,200명 정도이며 강사진은 대부분 중앙당의 고급간부, 그리고 주체과학원이나 기타 김일성대학 등의 교수들이 초빙되고 있다.

각 도 공산대학은 광복후 「중앙당학교」와 함께 설립되었던 「도당학교」들을 60년에 개편하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공산대학의 본교는 각 도 소재지에 설치돼 있고 각 도당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다. 또 중요 산업중심지들에는 본교가 설치돼 있고 특수하게 통신반이 설치되어 주간에 등교하지 않고 주 2회 야간에 등교하여 수업받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공산대학의 수업연한은 본교 정규반 3년, 현직 당간부들의 재

교육을 위한 재직간부반 1년, 6개월, 3개월 등이 있다. 공산대학은 각 도당위원회 지도원이상, 시, 군당위원회 과장이상의 당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각 도당위원회의 지도원 이상, 시(구역)·군당 비서 이상, 1급기업소당비서 이상의 간부들을 위한 1개월 강습(연수형식)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 주체사상, 당정책, 당 조직, 선전사업 방법론 등이 기본이며 기타 공업, 농업, 경영지식, 군사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 공산대학의 명칭은 해당 도의 명칭을 따르지 않고 소재지의 명칭에 따라 평양공산대학, 신의주공산대학, 사리원공산대학 등으로 부른다. 공산대학의 학생수는 약 1,500~2,000명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공산대학의 특징은 그것이 당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이면서도 매우 광범한 의미에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이라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인민군의 경보병이나 저격병들은 사병 복무기간이 10~12년인데 만기 제대후에는 공산대학 졸업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각 시(구역)·군 당학교는 각 시(구역)·군당위원회 지도원급 당간부들과 관할구역내의 당간부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관할구역내 현직 당간부들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할구역내 간부들의 1개월 강습을 실시하며 기타 초급당비서, 부문당비서, 세포비서들을 위한 단기강습도 실시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정규반 1년, 현직 당간부들의 재교육을 위한 재직간부반 6개월, 3개월 등으로 구성되며 초급당비서, 부문당비서, 세포비서들을 위한 1개월 단기 강습반이 있다. 교육내용 역시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 주체사상, 당정책 등이 기본이며 기타 선전·선동요령, 군중과의 사업 요령들을 가르치고 있다. 시(구역)·

군당학교의 학생수는 대략 200~500명 내외이며 단기강습 과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각급 정치기관의 당학교중 대표적 기관으로 김일성정치대학을 꼽을 수 있다. 인민군대내의 고급 정치장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고급 군사지휘관 양성 기지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함께 군고급장교 양성의 최고 기지로 꼽힌다. 인민군 총정치국에서 직접 관장하고 소좌(소령) 이상의 고급 정치장교들을 양성하고 있다. 동시에 현직 정치장교들의 재교육도 실시하는데 교육과정은 정규반 4년, 현직간부들의 재교육을 위한 재직간부반 2년, 1년 등이 있다.

교육내용은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 주체사상, 주체건군이론, 당정책 등이 기본이고 기타 주체전법, 전쟁사, 군사학 등을 가르치며 교육 전기간동안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정규반 입학 대상자들은 주로 중대 정치지도원(상위) 이상 정치장교들이며, 4년 졸업 후 소좌의 계급을 부여받고 있다.

재직간부반에는 연대급 이상의 고급 정치장교들을 입학시켜 단기교육과정을 거쳐 현직에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김일성정치대학 정규반 졸업생들에게는 졸업기념 휘장이 수여되며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졸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군복에 패용토록 하여 긍지와 영예를 높여주고 있다. 김일성정치대학의 학생수는 약 1,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김책정치군관학교는 인민군대내의 중대정치지도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초급 정치장교 양성기관으로 강건종합군관학교와 함께 권위있는 군장교 양성기지로 꼽히고 있다. 인민군 총정치국에서 관장하며 학생선발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여 1~3년 사병생활을 한 사람 중에서 성분이 우수하고 당성이 강한 자

를 선발하여 입학시키고 있다. 선발된 자는 재학기간 중에도 당원으로 입당시키며, 졸업성적에 따라 중위, 상위계급(중위와 대위사이 계급)을 부여하여 중대정치지도원으로 배치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 주체사상, 주체전법 등이 기본이며 기타 군사학 강의와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군사훈련은 전술, 사격, 체육, 행군, 독도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안전성정치대학 및 국가안전보위부정치대학은 사회안전성과 국가안전보위부의 정치장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교육기간과 교육내용은 인민군과 비슷하다. 다만 기관의 특수성에 맞게 전문교육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들 대학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안전성정치대학은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에, 국가안전보위부정치대학은 남포시 강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철도 공산대학은 철도부문의 당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정규반 3년, 재직간부반 1년 6개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재지는 평양이며 철도부문 고급간부들의 1개월 강습도 여기서 실시하고 있다. 학생수는 약 2,000명 정도로 비교적 큰 편이며 교육내용은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 주체사상, 당정책 등이 기본이고 기타 철도경영기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정규반에서는 철도부문 초급당 간부들을 양성하며 재직간부반은 고급 당간부들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철도부정치국에서 대학의 운영과 교육전과정을 관장하고 있다.

민방위대학은 본래 당 민방위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각 도 공산대학과 시(구역)·군 당학교 내에 기초반(통상명칭은 군사반)이라는 것이 설치돼 있던 것을 중앙당에서 당 적위대부를 개편하여 민방위부를 설치함과 동시에 각급 당학교에서 이들을 분리하여

1990년대 초에 설립했다. 공장·기업소 유급 노동적위대장으로부터 각급 당위원회 민방위부의 간부들에 이르기까지 노동적위대 간부 양성기지로서 당 민방위부가 권장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정규반 3년, 단기강습 6개월, 1개월반으로 구성되며 정규반에서는 각급 노동적위대장들과 당 민방위부의 초급간부를 양성한다. 단기 강습반에서는 현직 노동적위대장으로부터 고급 민방위 간부들에 이르기까지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 주체사상, 군사학 등을 가르치며 교육 전기간에 걸쳐 군대와 같은 규율 밑에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군사훈련은 보병전술, 지형학, 반항공전술, 행군, 체육, 사격 등에 중점을 두며 군대와 똑같은 일과 밑에 병영생활을 하고 있다. 민방위대학 학생들은 노동적위대 제복에 군관 혁띠를 지급, 착용시키며 왼팔에 당마크가 찍혀 있는 붉은 별의 표지를 달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양성된 북한의 당간부들은 기층 사회조직 속에 파고 들어가 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북한의 전주민을 당의 주위에 묶어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 북한 사회내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당간부 양성기관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도 김정일체제 지지세력인 당간부 양성기관의 기능은 별 문제 없이 작동하고 있다.

3) 당 인맥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사회다. 그 가운데서도 정치국과 비서국이 핵심이다. 정치국이 당의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절대기구라면, 비서국은 당 중앙위원회의 각 부서를 일상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당의 지도와 통제를 수행한다.

우선 정치국은 김정일을 후견하는 원로들과 '직계인맥'이라 할 수 있는 당비서국 비서들, 그리고 군 대표가 망리된 김정일 인맥을 대표하는 집합체다. 원로그룹은 국가부주석을 겸하고 있던 박성철·김영주 등이 대표적이며, 당비서로는 전병호(군수)·한성룡(경제)·최태복(과학·교육) 등이 정치국 위원·후보위원을 겸하고 있다. 이밖에 국가기관에서 홍성남, 김영남, 양형섭 등이 이들을 받쳐주고 있다.

이런 구성은 그동안의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김정일을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했던 원로들을 예우하고 김정일과의 강한 연대감을 갖고 있는 혁명 2세대와 비서국·정무원 등의 실무 테크노크라트들을 배치한 결과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국은 김정일 체제를 지탱해 주는 골격이라고 할 수 있다.

당 비서국은 인사·조직 등 일상적 지휘감독을 맡는 등 당의 지도를 정권기관에 관철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에 걸맞게 당 비서들은 김정일 체제의 핵심 직계세력이면서 혁명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테크노크라트 집단의 성격을 갖는다.

노동당은 김정일 중심의 안정된 권력구조와 인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 초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김정일당'으로의 전환이 큰 무리 없이 진행돼 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들의 건강과 노령화다. 혁명 1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권력층내 고위인물들의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울 만큼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위원·후보위원 가운데 김정일만이 50대이고 대부분은 70~80대다. 비서국도 김용순을 제외하면 60대 후반에서 70대로 노령화돼 있긴 마찬가지다. 잇따른 현지도로 중병설은 사라졌지만 김정일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의문 또한 여전히 남아 있다.

사실 김정일 체제로의 이행은 노령화에 따른 자연스런 세대교체이든 정책변화를 위한 권력개편이든 혁명 1세대이자 빨치산세대인 노년층으로부터 전후세대·전문관료 출신의 장년층으로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당 인맥은 세대교체 중인 과도기적인 성격이 강하다.

4) 군 인맥

김정일은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군사분야의 장악을 시도해 왔다. 물론 초기에는 사상분야 등 제한된 분야에서 부분적 지도를 해 온 데 반해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6차대회에서 후계자로 외부에 공개되고 당 군사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군사분야에 개입해 왔다.

김정일은 김일성과 같은 유격대 경험도, 군복무 경험도 없지만 그가 군 최고통수권자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군부는 어느 집단보다도 먼저 김정일에 대해 충성을 맹세해 왔으며, 일찍이 김정일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으로 선임된 직후인 1974년 4월 25일의 이른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을 맞아 「로동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 중앙의 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질 것을 강조하며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나타냈다. 이후에는 강력한 김정일의 후원자인 오진우를 정점으로 군은 끊임없이 수령과 당 중앙인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동시에 강조해 왔다.

북한의 군대는 당의 군대로 규정되어 기본적으로 당의 통제 아래 있지만 김정일은 군 장악에 특별히 신경을 써왔다. 김일성 주석도 생존시인 1991년 12월에 1950년 7월 이래 자신이 맡아온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자리를 김정일에게 넘겨주었으며 1993년

4월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넘겨주어 급작스러운 자신의 유고에도 김정일이 군을 장악할 수 있도록 대비해 왔다. 게다가 1969년 군부 숙청사건의 실무주역이며 교통사고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김정일의 극진한 배려로 살아났다는 일화까지 갖고 있는 오진우(당서열 3위)가 1976년 5월 이래 인민무력부장을 맡으면서 김정일의 군 장악을 보좌해 왔다. 그리고 김정일은 1992년 4월 대대적인 군 고위급 인물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통수권자로서 그의 권위를 이미 실험해 보았다.

현재 김정일 체제를 받치고 있는 북한의 군 수뇌부는 크게 세 부류의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항일유격대 출신들이다. 혁명원로그룹인 이들은 대부분 차수급 이상이며 최소한 대장 이상에 포진되어 있다. 현재 국방위원회나 당 군사위원회에 포진해 있는 김철만, 리을설, 백학림, 리두익 등이 바로 그들이다. 국방위원인 차수 김봉률의 경우 항일유격대 출신은 아니지만 유격대가 소련 영내에서 '동북항일연군교도려'를 만들어 활동하던 1942년 7월 이후에 소련군으로서 이 부대에 합류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부류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군의 원수, 차수급은 거의 대부분이 항일유격대 출신의 혁명 1세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중 리을설, 리두익, 백학림은 김일성유격대의 소년중대원 혹은 아동단원 출신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항일무장투쟁 과정을 김일성과 함께 지냈으며 해방 이후에도 김일성의 특별한 관심 아래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김일성에 대해서 최대의 충성심을 갖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군부내 김정일의 최대 지원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일혁명 1세대는 그들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정일의 직접적인 받침대 역할에서 후원역할로 변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을 받치고 있는 또다른 군부인맥으로는 만경대학원 출신 혁명 2세대를 들 수 있다. 김일성 주석에 대해 남다른 충성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이들 중 상당수가 군의 요직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실한 숫자나 명단은 파악이 어려우나 현재 당 군사위원으로 있는 김두남·리봉원·오용방 등과 당 작전부장 오극렬,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의 아들로써 군단장급인 강창수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당시의 유자녀 출신 그룹이 있다. 아직 이들의 나이가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고위장성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현재 군부 고급장교 집단의 주축을 이룰 것으로 추정된다. 출신성분상 김정일에게 상대적으로 강한 충성심을 보인 이 그룹은 앞으로 김정일 체제 아래서 군의 중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북한군의 상층 수뇌부는 인적 연대라는 차원에서 김정일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김정일의 후계체제 확립의 물리적 담보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현단계에서 북한군의 동요와 김정일에 대한 도전 가능성을 점치는 일부 시각은 북한군 수뇌부와 김정일의 인적·사상적 연대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단견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의 후원자인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지금, 이제 장기적인 군부의 동향은 새로운 김정일의 지도력 발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마 김정일이 지금처럼 정상적인 지도력만 발휘한다면 북한의 군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김정일 체제의 물리적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이 권력서열 3위 자

리를 굳히는 등 군 지도자들의 서열이 대폭 올라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국방위원들은 1994년 김일성 전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서열이 상승하기 시작, 1998년 9월 개정헌법에서 국방위원회 권한이 강화된 뒤에는 당 정치국원급의 위치를 차지하게 됐는데, 대표적인 군부 지도자들인 호위사령관 이을설 원수, 총참모장 김영춘 차수, 인민무력상 김일철 차수, 국방위 부위원장 이용무 차수 등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밖에 서열 2-4위를 유지해오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 이종옥(1983.9월 23일 사망)·박성철·김영주 등 원로들은 1999년 6월을 전후해 권력 일선에서 완전히 퇴진해 사실상 세대교체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 성원들을 새로 구성, 제1부위원장에 총정치국장인 조명록, 부위원장에 인민무력부 1부부장 김일철과 교통위원장 이용무, 위원에는 김영춘 연형묵 이을설 백학림 전병호 김철만을 선출한 바 있다. 그리고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명령으로 종전의 인민무력부를 인민무력성으로 개칭하고 인민무력부 1부부장이던 차수 김일철을 인민무력상으로 임명·발표했으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무와 만경대혁명학원 원장 김룡연에게 차수계급장을 수여했다. 최고인민회의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군인사는 이것이 전부이지만 국방위원회를 새로 구성한 이후에도 인사발표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 후속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단행된 인사변화를 살펴보면 일정한 변화의 흐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그동안 부장이 공석으로 있던 인민무력부

를 인민무력성으로 개칭하고 인민무력상을 임명하는 등 일련의 군부핵심 인사는 분명히 국방위원회의 강화된 기능과 역할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즉 인민무력부를 인민무력성으로 개칭한 것은 내각의 성기관과 동급으로 볼 수는 없지만 거의 같은 등급으로서 종전의 인민무력부의 지위와 기능을 격하시키고 그 기능을 국방위원회가 총괄하도록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방위원회는 군사정책·노선과 관련한 결정과 지도를 담당하고 인민무력성은 그것을 집행하는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무력부장으로 예상되던 총정치국장 조명록이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무력상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일철이 맡은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조명록이 이을설, 백학림 등 명색뿐인 군부원로들과 달리 김정일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측근이라는 점에서 결국 그가 가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위치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김정일의 대리인 역할을 담당할 막강한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명록은 현재까지도 총정치국장의 이름으로 행사들에 참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총정치국장이 무력상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군부인사체계로 볼 때 이례적인 것이다.

인민무력상에 김일철이 임명된 것은 군부의 세대교체를 뚜렷이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인민무력부장에는 오진우, 최광을 비롯한 빨치산 출신의 혁명1세대들이 임명됐었다는 연장선상에서 그 후임자로 역시 이을설 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예상을 깨고 김정일의 측근이며 2세대에 속하는 김일철이 임명된 것이다.

김일철은 만경대혁명학원과 소련 해군대학을 졸업한 정통 해군 전문가로서 1970년대 동해함대 사령관과 1980년대 해군사령관을 역임했고 이 과정에 김정일의 각별한 신임을 얻어 1997년 4월에는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승진했다. 김일철의 등용은 군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무력상 만큼은 종전과 같이 상징성을 고려한 혁명1세대 원로들이 아니라 측근 인물들을 앉히려는 김정일의 세대교체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군인사 변화에서 또한 주목되는 인물은 이용무이다. 최근 김정일의 공식행사 수행이 빈번해지면서 부상이 예상되긴 했지만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차수계급장을 수여받은 것은 예상밖의 고속 승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차수급 2명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서 김일철이 무력상으로 임명된 것으로 볼 때, 또다른 부위원장인 이용무는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기용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러한 예측은 이용무의 가정배경과 화려한 경력, 최근 동향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해방후 군간부 양성기지였던 평양학원 출신인 이용무는 연대장, 사단장, 군단 정치위원, 북경주재 북한대사관 무관 등으로 활동했으며 김일성의 사촌매부라는 가정배경에 힘입어 1970년대에 인민군 총정치국장(상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또 총정치국장을 하는 동안에 군에서 김정일의 유일지도체제를 수립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그는 당시 무력부장이던 오진우와의 힘겨루기, 직권을 남용한 비리 등으로 10여년 동안 양강도 임산 사업소 지배인으로 좌천되기도 했으나 이후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국가검열위원회 위원장, 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부터 김정일의 공장 및 군부대 시찰시 거의 함께 회동하고 있는 사실, 특히 국방위원회 구성에서

무력상인 김일철과 함께 나란히 부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차수칭호를 수여받은 것은 그의 총정치국장 복귀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국방위원회에 막강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고 무력부를 무력성으로 바꾸고 몇몇 핵심직책의 부분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 외에는 군인사에서 큰 변동이 없다. 이미 김정일은 군부에 자기 지지기반을 확고히 조성했고 핵심위치에 인민군총참모장 김영춘, 작전국장 김하규, 총정치국 조직부총국장 현철해, 선전부총국장 박재경, 보위사령관 원응희 등 측근들로 완전히 포진시켰기 때문이다.

김영춘은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으로 1960년대에 지방당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나 1980년대부터 작전국장, 군수동원총국장, 인민군 6군단장 등 군의 주요 직책들을 거치며 1995년 10월 총참모장으로 승진했다.

작전국장 김하규는 김철주포병종합군사학교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연구원을 졸업하고 군 4·25훈련소 참모장, 포병사령관을 거친 전형적인 군사지휘관이다. 5명의 아들을 모두 군에 내보내 근무여건이 가장 열악한 부대에서 근무토록 한 것을 계기로 신임을 받게 되어 결국 김정일이 군부에서 가장 중시하는 요직 중의 요직인 작전국장으로서까지 발탁된 인물이다.

조직부총국장 현철해는 만경대혁명학원과 루마니아유학 등 정통 엘리트코스를 거쳐 이미 1960년대말에 총정치국 조직부총국장을 지내면서 김정일과 인연을 맺었으며 무력부 후방군관학교장, 후방총국장으로 있으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다시 조직부총국장에 발탁된 인물이다.

선전부총국장 박재경은 총정치국 선전부에서 지도원, 과장, 부

부장, 부장을 거친 이 분야의 베테랑으로 김정일을 신격화하는 각종 선전과 문예작품 창작에서 남다른 기발한 착상을 해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

보위사령관 원응히는 군사보안업무를 다루는 보위사업으로 잔뼈를 키운 인물로 1992년과 1994년 2차에 걸쳐 소련 프룬제군사대학 출신들을 중심으로 조직됐던 반김일성·김정일체제 세력들을 색출한 공로로 중장에서 곧바로 대장으로 고속승진한, 김정일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처럼 군부핵심을 이루고 있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김정일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측근들로서 김정일의 군사정권을 충실히 받들고 있다. 1998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석제가 폐지되고 대신 김정일이 정치·군사·경제 등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국방위원장으로서 추대됨으로써 군부의 위상과 영향력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

북한군부의 최근 서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일(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에 이어 조명록(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총정치국장, 차수), 이을설(국방위원, 호위사령관, 원수), 김영춘(국방위원, 총참모장, 차수) 등의 순이며, 인민무력상인 김일철(국방위 부위원장, 차수)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어 이용무(국방위 부위원장, 차수), 전재선(1군단장, 차수), 박기서(당군사위원, 평양방어사령관, 차수), 오용방(당군사위원, 인민무력성 부상, 대장), 이병욱(인민무력성 부상, 대장), 김두남(당군사위원, 금수산기념궁전 관장, 대장), 정창렬(인민무력성 부상, 대장), 현철해(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대장), 박재경(총정치국 선전부국장, 대장), 김정각(인민무력성 부상, 상장), 려춘석(상장), 이명수(총참

모국 작전국장, 상장), 정호균(상장)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 수년간 공식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신상변화 의혹이 제기됐던 김두남의 활동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차수 가운데 최인덕(김일성 군사종합대학장), 백학림(국방위원, 사회안전상), 리두익(군사위원), 이종산(군수동원총국장), 김용연(만경대혁명학원장) 등의 활동이 종종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교령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 대장 중에는 김정일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명국(군사위원, 108기계화 군단장), 장성우(3군단장), 김하규(포병사령관) 등과 김격식(2군단장), 주상성(4군단장), 김성규(5군단장) 등을 꼽을 수 있다.

5) 외교 인맥

현재 북한의 외교부문에 당이나 군 등과 마찬가지로 이미 오래전부터 '김정일 사람들'이 포진해 북한 외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에서 외교정책을 주무르는 3대 조직으로는 내각의 외무성과 노동당의 국제부, 개편(1998. 9. 5)되기 이전의 최고인민회의의 외교위원회가 있다. 이들 외교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 김영남과 김용순, 강석주 등이다. 북한외교의 '삼총사'로 불리는 이들은 김정일의 신임을 받으며 김정일 외교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인물들로 꼽히고 있다.

지난 1960년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을 맡은 이래 지금까지 북한 외교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해 오고 있는 김영남은 현재 북한 외교의 간판이다. 김영남은 그동안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국가 및 비동맹국가들과의 외교 전반을 책임져 왔다.

당비서이며 국제부장을 지낸 김용순은 지난 1991년초 북-일

수교회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은 김정일의 외척인 데다 일본 등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김정일 시대의 외교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김용순은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에서 북한쪽 단장으로 나온 바 있는데, 정주영-김정일 면담에서 남쪽을 방문할 예정임이 밝혀져 최근 부쩍 주목을 받고 있다.

북-미 3단계회담의 북한쪽 대표로 나온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 역시 북한 외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최고인민회의 외교 위 부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는 강석주는 김정일의 신임이 두터운 새세대 외교 간판으로 꼽힌다. 강석주는 지난 1991년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해 유엔가입 수락연설을 하는 등 세련된 외교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미회담뿐 아니라 앞으로 유엔 외교와 대미외교에서 상당한 역할이 기대되는 인물이다.

6) 신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김정일 지지 세력으로 빼놓을 수 없는 지도엘리트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다. 1998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선거에서 전체 대의원의 58.22%에 해당하는 400명이 새로이 선출됐는데, 이들 가운데서 주목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신진 군부세력의 상승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인민군 총정치국의 양대핵심인 조직·선전담당 부총국장 들인 현철해 대장과 박재경 대장,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 겸 당중앙위 제1부부장인 이용철이 대의원에 입성했다. 인민무력부 부부장들인 정창렬 대장과 김정각 상장,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이명수 상장, 경보교도지도국장 이태철 상장, 공병국장 김양점 중장, 통신국장 김형룡 중장, 부총참모장 이봉죽 중장 등도 대의원직에

선출되었다. 안변청년발전소(금강산발전소) 건설에 공로가 컸던 안피득 상장과 황정훈 소장, 그 밖에 상장 최성수, 중장 최상려, 한배년, 백상호, 이병삼, 소장 김양근 등과 사회안전부 소속 상장 김치덕, 소장 강영호 등 군출신 초선 대의원들도 김정일 체제를 떠받드는 군부실세들로 부상했다.

특히 군관인 이종만은 김정일이 최고인민회의 선거일인 1998년 7월 26일 투표를 실시한 제662호 선거구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됐다는 점에서 향후 그의 입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 농업관련부문 대의원들의 대거 입성도 눈에 띈다. 우선 농업과학연구원장 계영삼과 농업과학연구원 생산담당 부원장 김삼룡, 원산농업대학 학장 김정훈 등이 새로 대의원에 선출됐다.

그리고 1997년을 기점으로 교체된 각 도(직할시)의 농촌경리위원장 혹은 제1부위원장들인 한창렬(평양), 문응조(남포), 김창환(개성), 박영훈(평남), 최후용(평북), 최용선(황북), 김홍수(강원), 심상후(양강), 남송록(함북) 등도 예외없이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이 됐다.

또한 제9기 대의원 선거 때 조총련 출신으로 대의원에 당선됐던 인물(총 7명) 가운데 한덕수와 서만술, 남시우, 안상택 등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모두 새로운 인물이 자리를 메웠다. 새 인물들은 책임부의장 허종만(함남 함흥시 성천강구역 남문선거구), 재일본여성동맹 위원장 김일순(자강도 위원군 양강선거구), 재일본조선인상공연합회장 양수정(황남 옹진군 만진선거구) 등이다.

이외에 고령 혹은 외병 등의 사유로 직책을 행사하지 못하던 위원장이나 부장들이 탈락하고 '대리' 직책으로 활동해온 부위원

장·부부장들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정무원 국가건설위원장(김응상) 대리 배달준(현 제1부위원장), 전력공업부장(이지찬) 대리 한국승(현 제1부부장), 석탄공업부장(김리룡) 대리 황세병(현 부부장), 대외문화협력위원장(정준기) 대리 문재철(현 부위원장), 노동신문 책임주필(김철명) 대리 최칠남(현 제1부주필)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 새로이 대의원으로 선출된 인물들 중에는 나름대로의 특징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관심을 끄는 부분인데,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97년 9월 김정일의 당총비서 추대 자강도당 대표회에서 희천시 당조직대표로 토론한 자강도당 비서 이수길은 비서 재직시 그 업적을 인정받아 양강도당책 겸 인민위원장으로 승진하면서 처음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자강도 강계시 당책 이득남도 처음 10기 대의원이 됐는데, 그는 1998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한 아들을 북천2호발전소 건설장으로 내보내는 등 김정일 체제에 충성을 다한 모범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희정은 지난 1993년 평안남도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시 김일성과 김정일이 직접 투표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인물로, 이때 김정일이 최희정의 손을 잡으며 『인민의 행복이 꼭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던 사람이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중앙위원장 승상섭은 황남 신천군 당책시절 군민들이 '우리 책임비서'라고 부를 정도로 친근하며 군의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간 모범 케이스로 선전되고 있다.

비교적 고령인 인물 중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된 전구강과 태선희도 상당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다. 전구강은 올해

69세로, 6·25전쟁에 '군의근무중위'로 활동하면서 '공훈의사' 칭호를 받았으며 1992년 4월 인민군 소장으로 진급, 북한 군대사에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장성이 된 대표적 인물이다. 그녀는 극영화 「나의 행복」 주인공역의 모델이기도 했다.

올해 70세인 태선희는 6·25전쟁 당시 공군비행사로 참전, 북한 최초의 여성비행사로 기록됐으며 1987년 현직에서 완전히 은퇴한 뒤 조국해방전쟁사적관 관장에 취임하면서 올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올랐다. 여원구는 1996년 9월에 사망한 여연구(몽양 여운형의 차녀)의 친동생으로, 언니가 생전에 역임했던 조국전선 중앙위 공동의장직과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직을 그대로 물려받으며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처음 선출됐다.

7) 김정일 시대의 주요 인물 분석

조명록

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차수)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조명록의 국방위 제1부위원장 기용은 국방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이전보다도 훨씬 강화됐다는 측면과 함께 위원장인 김정일을 떠받치는 최고 핵심세력이라는 점에서 군부 실세로서의 그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입증한 계기가 됐다.

1924년 중국 연길에서 태어난 그는 사병출신에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거쳐 국방위 제1부위원장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조명록은 1930년대 말부터 김일성을 따라다니며 호위병·전령으로 군생활을 시작해 풍부한 전투경험을 쌓았으며 뒤늦게 소

련유학을 통해 체계적 군사과학 이론을 익혔다.

만경대혁명학원을 졸업한 그는 특히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1978년에 중장의 계급으로 공군사령관에 올라 17년간 줄곧 이 직책을 맡아왔다. 1980년 10월에는 당중앙위원회과 중앙군사위원회에 임명됐으며 1985년 상장, 1992년 4월 대장, 1995년 10월 차수로 진급하며 인민무력부장 오진우가 겸직하고 있던 총정치국장에 기용됐다.

조명록은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이후 김정일의 잦은 군부대 시찰에 빠짐없이 동행했고, 사실상 실권이 없는 인민군 원수 이을설을 제외한 군부랭킹 1위로서의 면모를 대내외에 과시했으며, 군내에 김정일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한 공로로 국방위 제1부위원장으로서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조명록은 이외에도 김일성장의위원(1994.7), 오진우장의위원(1995.2), 최광장의위원(1997.2) 명단에도 단골로 등장했으며 1982년에는 「김일성훈장」을, 1995년에는 「김정일표창」을 수상하는 등 각종 상훈도 받았다.

김국태

김국태 노동당중앙위 비서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비서 모두의 각별한 신임을 받아온 실세중의 한 사람이다. 1924년 함경북도에서 출생한 그는 남다른 출신배경으로 일찍부터 출세가도를 달려왔다. 부친 김책은 해방전 김일성과 러시아 원동지방에서 함께 활동했고 해방후에는 평양학원 초대원장, 북조선인민위 부위원장 겸 민족보위국장, 내각부수상 겸 산업상, 6.25전쟁 시기에는 전선사령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치다 사망(1951년 1월31일)한 김주석의 최대 측근이었다.

일제시기 거리를 방황하던 김국태가 해방후 부친과 함께 김 주석을 처음 찾아갔을 때 신발을 벗어두고 집무실로 들어갔다는 일화는 영화 출판물 등에 소개돼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정배경으로 그는 만경대혁명학원과 소련 군사아카데미를 졸업하고 1956년 당 부부장이라는 높은 직책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962년 10월 당간부양성기관인 중앙당학교(현 김일성고급당학교) 부교장, 1963년 8월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중장), 1967년 7월 사회안전성 정치국장으로 고속승진했다.

또 1968년 5월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1976년 6월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장, 1977년 10월 에티오피아주재 대사, 1983년 12월 노동당 과학교육부장으로 임명되는 등 요직을 거쳤다. 1984년 10월부터 행정간부 인사와 해외출장 인사를 일체 전담하는 노동당 간부부장으로 활동하던 그는 1988년 김정민씨의 귀순을 계기로 간부부 인사사업에 대한 당조직지도부의 전면 감사를 받고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장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국태는 2년뒤인 1992년 12월 간부부장으로 재기용됨과 동시에 노동당 간부담당 비서로 승진했고 현재까지 김정일 총비서의 현지시찰 등에 거의 빠짐없이 동행하는 등 실세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김국태는 해방후 김 주석을 지도자로 내세우는데 공헌한 김책의 장남이며 수십 년 동안 특별한 과오없이 충실히 일해 온 점만으로도 김 총비서의 측근이 되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김 총비서의 입장에서는 김책의 아들인 그를 자신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측근으로 만드는 것은 본인의 권력장악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김국태가 당선선전동부장을 맡고 있던 1960년대에 김 주석의 후계자로 되기 위해 노력하던 김 총비서를 부부장으로 거느

리면서 인연을 맺었던 것도 측근으로 부상한 원인이 됐다.

김국태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말수가 적고 간간하나 실무능력이 다소 부족하며 개혁·개방에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보수적 성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족관계는 부인과의 사이에 1남1녀가 있다. 아들 김광일(39세)은 김일성 종합대학 영어과를 졸업, 주체과학원 연구사를 거쳐 육해운성에서 당일꾼으로 일하고 있다. 딸 김문경(51세정도)은 제네바 유학후 외무성과 프랑스공관에서 근무했고 당 국제부 과장, 부부장을 거쳐 현재 김 총비서 서기실 부부장으로 있다. 시위 이홍식은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이다.

그의 유일한 동생인 김정태는 1960년대에 민족보위성 부총참모장과 경찰국장(중장) 등으로 활약하다 1969년 김창봉, 허봉학 등 군고위간부들이 군벌주의분자로 숙청될 때 은룡광산으로 추방됐다. 1980년 중반에 명예회복돼 금성트락트르종합공장 지배인, 대흥관리국 부국장으로 승진했으나 1989년 병으로 사망했다.

김용순

김용순은 북한의 기득권세력 중에서도 가장 힘있는 실세중의 실세라고 할 수 있다. 김용순이 오늘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에는 김정일의 유일한 혈육인 김경희와의 각별한 인연이 근원이 되었다.

그는 1934년 7월 5일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태어나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모스크바에서 유학했다. 유학후 귀국하여 노동당 국제부 지도원으로 있다가 김경희가 1960년대 모스크바에서 유학생활동을 할 때 그의 뒷바라지를 맡아했다. 귀국후 김경희와 함께 노동당 국제부 과장으로 임명되어, 대외업무를 다루는 당료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1970년 8월 주이집트대사로,

1973년 3월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잠시 자리를 옮겼다가 1974년 9월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되면서 다시 당에 들어와 김경희와의 끈끈한 인연을 유지했다. 당시 김경희는 국제부 과장직을 맡아 그의 직속부하로 있었던 것이다. 김용순은 그후 1980년 10월 당국제부장, 1984년 1월 당국제담당비서로 승진하면서 당중앙위 후보위원(1979.6)으로, 중앙위 위원(1980.10)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김경희와의 인연에 힘입어 승승장구를 거듭하던 그도 잠시 추락한 때가 있었다. 1984년 5월 김일성의 동유럽 방문시 대표단 일원이었던 그는 귀국길 열차안에서 국제부직원들을 비롯한 수행원들과 술을 마시고 디스코춤을 추는 등 문란한 행동을 한 것이다. 이 사실이 김일성에게 알려지면서 큰 분노를 사게 됐고 결국 여기에 연루됐던 많은 간부들이 사상투쟁회의 끝에 철직추방 등 처벌을 받았던 것이다. 이때 김용순도 당비서직에서 해임되어 탄광에 내려가 막장일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김정일·김경희의 특별배려로 예외적으로 가족을 평양에 두고 내려갔고, 약 1년간의 혁명화기간을 거친후 국제부 1부부장으로 복귀했다. 1988년 12월에는 당국제부장으로, 1990년 5월 국제담당 비서로 다시 승진했다. 또 89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1992년 4월 위원장에 올랐다.

이처럼 수십년간 외교분야에서만 전전하던 그는 허정숙 사망후 대남담당분야로 자리를 옮겨 1992년 12월 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으로 임명됐고 아울러 당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됐다.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1993년 8월 조평통 부위원장, 1994년 7월 아·태평화위원장을 겸임함으로써 대남업무를 총지휘하는 명실상부한 위치에 올라서게 됐다.

김정일은 김용순의 가족에게도 상당한 배려를 기울여 부인을 자주 비밀파티에 초청하고 맏아들의 결혼식날 신혼부부를 파티에 부르다가 하면 평양외국어대학을 갓 졸업한 딸을 외교관 신분으로 프랑스에 유학보내기도 했다. 김용순은 주위에서 한량기가 농후하고 아침기가 많다는 평가와 함께 심성이 착하다는 얘기도 듣고 있다. 가족은 부인과의 사이에 2남1녀가 있다. 부인은 고위간부 부인들 속에서 예술적 재능과 패션감각이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소문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외문학부를 졸업한 장남은 현재 대외문화연락위원회에서, 2남은 군장교로 복무하고 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회의 이전까지 부총리 겸 외교부장으로 15년간 일해온 김영남은 한마디로 북한외교의 산증인이다. 28년 2월에 태어나 김일성종합대학을 마친 후 1949년 소련 모스크바 종합대학에 유학, 1954년 귀국직후 당국제부 지도원으로서 외교 부문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그후 1960년 8월 대외문화연락위원장을 거쳐 1963년 당국제부 부부장, 72년 12월 당국제부장을 역임했으며 1974년에는 중앙인민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위원을 거쳤다. 이후 83년 12월 제7차 내각부터 최근 임기가 끝난 제9차 내각까지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을 지냈다.

그는 당에서도 정치국 위원으로 확고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당국제부 제1부부장 시절인 1970년에 일찌감치 당중앙위원으로 올라섰고 1975년에 정치위원회 후보위원, 1978년 정치위원으로 선출돼 지금까지 정치국 정위원으로 남아 있다.

러시아어, 영어를 구사하는 외교통 김영남은 1956년 연안파를

제거한 당중앙위 8월 전원회의, 67년 5월 박금철·이효순 사건, 1976년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에 반기를 들었던 국가부주석 김동규 숙청에 각각 개입하면서 김일성의 신임을 얻었고 김정일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의 당·국가외교를 총괄하는 자리를 유지해왔다.

「비동맹외교의 1인자」로 꼽혔던 김영남은 최고인민회의의 10기 1차회의에서 폐지된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의의 역할을 상당 부분 흡수해 신설된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됨으로써 대외활동에서 북한의 '얼굴마담역'을 수행하게 됐다.

홍성남

전임 정무원 총리 강성산이 외병으로 1997년 2월부터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춤에 따라 이때부터 총리 대리 직책을 맡아온 홍성남이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내각 총리에 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24년 강원도 원산에서 태어나 올해 74세가 되는 홍성남은 김일성종합대학을 거쳐 체코의 프라하공대에 유학을 다녀온 전문 경제기술관료이며 특히 중공업 분야의 전문관료로 성장해 왔다. 홍성남은 1954년 노동당 중공업부 지도원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1964년 중공업부 부부장을 거쳐 1971년에는 중공업부장으로 중용됐다. 이후 1973년 9월부터는 정무원으로 자리를 옮겨 부총리와 국가계획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1975년 9월, 77년 9월 이들 직위에서 각각 물러났다.

1957년 이후 공작기계 1만대 생산이라는 과제를 제기한 김일성의 교시를 충실히 수행해 김일성의 신임을 받으며 경제부문에 지속적으로 기용됐다. 그는 1980년 초 잠시 평남 경제지도위원

장(1981.9), 평남도당 책임비서(1982.11)로 지방에 나가 있다가, 84년 다시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정무원에 복귀,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1986.4)에 이어 1986년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회의에서는 제1부총리에 올라 총리 이근모-제1부총리 홍성남체제를 구축했다.

노동당 내에서 그는 76년 당중앙위 후보위원에 올랐으며, 80년 당중앙위 위원, 82년 당정치국 후보위원(1984년 탈락), 그리고 1986년에는 당정치국 위원까지 올랐다가 1990년 당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다시 내려앉아 현재도 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홍성남은 권력기관의 자리변동이 극심했던 1970년대와 1980년대 부총리와 국가계획위원장을 번갈아 맡을 정도로 업무추진에 있어 빈틈이 없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김영춘

김영춘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1998.9.5)에서 그 위상과 권한이 한층 강화되어 실질적인 통치기구로 군림하게 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그가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기용된 것은 인민군 차수이며 총참모장이라는 직책에 걸맞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인민무력부장이던 최광의 사망(1997.2)후 유력한 후임자가 될 것이라는 주위의 추측과 달리 여전히 총참모장의 자리를 지키면서 김정일의 군부대 시찰 등에 동행하고 있다.

특히 총참모장이며 국방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인민무력상이며 국방위 부위원장인 김일철보다도 서열이 앞서는 것을 보면 그가 김정일 다음의 사실상 군부의 지휘수장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그의 경력을 살펴보면 한때 평남도당 조직비서(1961년경)

로 근무하는 등 당에서 잠시 활동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통 군사 작전 지휘관임을 짐작할 수 있다.

김영춘은 1932년 강원도에서 출생했고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거쳐 1970년경에는 제1군단 정치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의 행적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인데, 김영춘은 중장계급을 달고 인민무력부 작전국장 등 주요 지휘관으로 활동하면서 1980년 10월 당중앙위 제6기 1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위 후보위원으로, 1986년 12월 중앙위 위원으로 선출됐으며 당시 군부를 완전장악키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던 김정일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게 됐다.

그리하여 1988년 작전국장 재임시, 오진우와 오극렬의 갈등과 대립 끝에 오극렬이 군복을 벗고 그에 추종하던 군간부들이 대거 제대·철직될 때에도 대좌로 강등되어 여단 상급참모로 강직했을 뿐 가장 빨리 재기할 수 있었다. 또 복귀후 곧바로 군수동원총국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았고 김정일이 군최고사령관직을 차지하면서 처음 실시한 계급장 수여에서 대장칭호(1992.4)를 받았다.

1994년 3월경 잠시 인민군 6군단장으로 활동하던 그는 1995년 10월 군부의 수뇌부인 총참모장직책을 맡는 것과 동시에 차수 칭호를 받았다. 이때부터 김정일의 군부대 및 군수공장 시찰은 물론이고 사적인 회합 등에도 거의 빠짐없이 동행하는 등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1986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 때부터 줄곧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일성훈장」, 「노력영웅」(1992.10) 등 북한 최고의 상훈도 모두 차지했다. 건강이 좋지 못한 그를 위해 김정일이 직접 의료팀을 붙여줄 정도로 막강한 신

임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작전과 전술 등 능력보다는 김정일
대한 충성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1994년 10월경 군부내의 반김정일 비난음모를 적발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실도 김정일의 신임을 받는 데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는 부인과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김기남

노동당 선전담당비서 김기남은 김정일 총비서에 대한 우상화
선전에서 제일 앞장선 인물이며 김총비서의 깊은 신임을 받는 실
세 중의 한 사람이다.

1926년 8월 28일 강원도 원산에서 출생한 김기남은 해방후 김
일성종합대학과 소련 모스크바대학에서 공부했다. 그는 6·25전
쟁이 한창이던 때 귀국, 1952년 6월 외무성 참사로 임명됐고 이
어 1953년 6월 주중 대리대사로, 1957년 12월 외무성 의례국장
으로 기용됐다. 1961년 8월에는 외무성에서 노동당 중앙위 과학
교육부로 자리를 옮기고 1960년대 전반에 걸쳐 이 부서의 과장
및 부부장으로 활동했다.

김기남은 1972년 당이론잡지 <근로자>를 발간하는 근로자사
부주필로 발탁됐고 1973년 9월 동사의 책임주필로 임명됐으며
1976년 6월에는 당기관지 <노동신문> 책임주필로 승진했다. 이때
부터 그는 노동신문 발간에 관심을 갖고 일일이 챙기던 김 총비
서와 인연을 맺게 되며 그의 신임을 받게 됐다.

한편 그는 노동신문 책임주필이 겸하게 돼있는 기자동맹 위원
장직도 맡게 됐다. 또 1976년 11월 당중앙위 후보위원, 1980년
10월 당중앙위 위원으로 등용됐고 1977년 11월 처음 최고인민회
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10기까지 계속 재선됐다. 10여년 동안

노동신문 책임주필로 있으면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선전에 앞장서 온 그는 1987년 9월 조직지도부와 함께 노동당내의 가장 핵심부서이며 당시 김정일 총비서가 비서 겸 부장으로 있었던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김정일 총비서가 당 선전선동부장 및 선전비서직을 측근들에게 넘겨줌에 따라 1989년 4월 부장으로, 1992년 12월 비서로 승진했으며 현재까지 부장 겸 비서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그는 김정일 총비서의 측근들만 참가하는 주말 비밀파티에도 십여년 동안 단골로 참가하고 있다. 김기남이 이처럼 김정일 총비서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은 김정일 우상화 선전에서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한 공로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구호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등은 모두 김기남의 창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기남이 김정일의 남다른 신임을 받는 또다른 이유는 그의 고지식하고 착한 심성 때문이기도 하다. 평소 학자적인 품성이나 날카롭고 모난 성격을 좋아하지 않는 김정일 총비서는 이런 간부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중요 직책에 임명할지언정 측근으로 곁에 두려고 하지 않았고, 따라서 김기남과 같이 업무에 성실하며 마음이 여리고 심성이 착한 간부들은 오랫동안 절대적인 신임을 받을 수 있었다.

그의 인성은 고위간부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특히 사리사욕이 없는 점을 높이 사고 있다. 많은 간부들이 직권을 남용해 자녀들을 대외부문에 진출시키거나 대외종사자들과 결혼시키는 풍토에서도 그는 슬하의 2남2녀를 모두 대학교원 및 대학간부, 기자 등 일반분야에 진출시키고 있다.

전병호

국방위원회 위원 전병호는 권력에 발을 들여놓은 때로부터 굴곡없이 출세가도를 달려온 정통 당료이다. 1926년 3월 20일 함북 무산에서 출생한 그는 부친이 일제시기 공산주의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인해 해방후 만경대혁명학원을 다녔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소련 쓰워르드롭스크종합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전병호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던 1950년대말은 북한당국이 소련 및 동유럽 해외유학생들을 당·정·군의 요직에 대거 등용하던 때다. 유학생인 그도 곧바로 당에 들어가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임명됐고 1960년에 책임지도원을, 이후 부과장 과장을 거쳐 1968년에 부부장으로 고속승진했다.

1970년 11월 당중앙위 위원으로 선출된 그는 1971년 10월 노동당 상업재정(1970년 신설됨)부장으로 있다가 1972년 이 부서가 없어지면서 군수공업 담당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금속기계공학을 전공한 학력이 고려된 것이다. 이때부터 군수산업과 인연을 맺은 그는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1982년 3월 군수공업의 행정총책인 제2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1986년 12월 연형묵의 후임으로 2경제위원회를 지도통제하는 노동당 군수공업담당 비서로 발탁됐다. 1년후 연형묵이 다시 담당비서로 오면서 민수공업을 담당하는 중공업 비서로 물러났다. 그리고 1990년 연형묵이 정무원총리로 기용됨에 따라 다시 군수공업을 담당하게 됐다. 항상 연형묵의 후임자로만 맴돌던 그는 이후 줄곧 당군수공업의 총책으로, 수장으로 활약해 왔다. 그리고 1990년 5월에는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기용됐고 지난 최고인민회의의 10기 1차회의에서도 재선되었다.

이와 같은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전병호는 연형묵과 함께 명실공히 북한 군수공업의 핵심 일원으로,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도맡아 해오고 있다. 그는 직책에 걸맞게 1983년 8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등용되었으며, 1988년 11월에는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 임명됐다. 또 최고인민회의 제7기부터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전병호는 김정일의 잦은 군수공장 시찰 등에 빠짐없이 동행하고, 1991년 3월 사절단장으로 북한이 후원해준 에티오피아 포탄공장 준공식에 직접 참가하는 등 각종 대내외 활동도 적극 벌이고 있다. 그는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깐깐하며 전문지식을 갖춘 데다가 능력도 출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현실에 안주하는 형이기도 한 그는 1960년대~70년대 김정일의 권력투쟁에 휩쓸리지 않고 자리보존을 함으로써 대부분의 고위간부들과 달리 우여곡절 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업무상으로는 김정일의 막강한 신임을 받는 데 비해 개인적으로는 그리 친밀한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측근들만 참석하는 김정일의 비밀파티에 김일성·김정일 생일 등 큰 명절외에는 거의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관계는 부인과 전인숙 등 딸 4명이 있다.

연형묵

자강도당 책임비서 연형묵은 지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1998.9.5)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자강도당 책임비서의 직책을 가지고 국방위원회 구성원이 된 것은 정권 수립 이래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여기에는 국방위원회 위상과 역할이 더욱 강화된 점, 연형묵이

군수공장들이 밀집돼 있는 자강도의 수장이라는 점, 또 그가 김정일의 오랜 측근이었다는 점들이 작용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연형목은 정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군수공업부문에서만 일해온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1931년 11월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출생한 그는 부친이 김일성의 빨치산부대에서 싸우다 전사한 관계로 1947년부터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했으며 6·25전쟁 발발과 함께 최고사령부 정부호위총국 군관으로 입대, 핵심유자녀들로 구성된 김일성의 「친위중대」에서 근무했다. 이어 최영림, 강성산, 김시학 등 유자녀들과 함께 1951년~57년까지 체코 프라하공업대학 기계공학과에서 유학했으며 머리가 명석하고 학과실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형목은 귀국후 김일성으로부터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 가운데서 제일 똑똑하고 과학기술에도 밝으며 배짱이 있어 군수공업을 맡기면 잘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곧바로 군수공업을 전담하는 노동당 중공업부에 배치되어 1962년까지 지도원, 과장으로 일했다. 1962년부터 1967년경 사이에는 918호공장(고사포공장) 초급당비서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 공장에서의 근무는 군수공업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1967년경 다시 노동당 중공업부로 복귀, 부부장·부장으로 기용된 그는 1970년 11월 노동당의 군수공업총책인 중공업담당 비서로 승진했으며 1985년 10월~86년 11월 1년 동안 잠시 정무원 제1부총리 겸 금속 및 기계공업위원장으로 있던 것을 제외하고는 1990년 4월까지 줄곧 이 자리를 지켰다.

한편 이 기간은 연형목이 당내 반종파투쟁을 통해 김정일과 인연을 맺게 되고 그의 막강한 신임을 얻어 본인은 물론, 부인도 때때로 김정일의 비밀파티에 참석하는 등 측근으로 부상하는 기회

가 됐다. 이에 따라 1970년대 김정일이 당권을 장악하면서 유자녀들의 새로운 세력화를 우려하여 만경대혁명학원출신 간부들을 각개격파, 대거 좌천시킬 때에도 여전히 직책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90년 5월 그는 정무원 총리를 맡으면서 이해 9월·12월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장으로 서울을 방문했다. 이처럼 당과 정부의 중요 직책에서 활약했던 연형묵은 1992년 12월 정무원 총리에 기용된지 2년 6개월만에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해임, 자강도당 책임비서로 좌천됐다. 비록 좌천이기는 하지만 자강도당 책임비서로 임명된 것은 군수공업분야에서 잔뼈를 키운 그의 능력이 고려된 것이다.

잠시 김정일의 시야에서 비껴갔던 그는 김일성 사후 군과 군수공업에 대한 김정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자강도 군수공장들에 대한 현지시찰이 잦아지면서 다시 김정일의 신임을 받게 됐고 1998년 1월에는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다.

그는 막중한 직책에 걸맞게 1974년 12월~92년 12월까지 근 20년동안 노동당 정치국 위원으로, 1992년부터 현재까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1962.11) 때부터 이번 10기까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그는 활달하고 개방적이며 대인관계가 좋고 만경대혁명학원 및 유학시절 보스기질이 있어 학급간부도 맡고 주위에 친구가 많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가족관계는 체코유학생활동을 함께 했던 부인 신오순과 슬하에 2남 1녀가 있다.

한성룡

한성룡 노동당중앙위 비서는 대부분의 고위 간부들과 달리 아

무런 가정적 배경도, 특별한 인맥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노동자에서 현재의 지위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1926년경 함경북도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공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입학해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일부에서는 그가 유명한 빨치산 한흥권의 아들이며 체코 프라하 공대를 졸업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그를 잘 아는 고위간부 출신의 한 귀순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책공대 졸업후 기계공장 현장기사로 평범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기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 성실성 등을 인정받아 서서히 승진코스를 밟아갔다. 1963년 기계공업성 국장으로, 1966년 기계공업성 부상으로, 1970년 9월에는 2기계공업성 부상으로 기용됐고 1971년 5월에는 2기계공업상으로, 1972년 12월에는 정무원 선박기계공업부장으로 승진했다.

1977년 선박기계공업부의 해체와 함께 부장직에서 해임된 그는 군수공장들이 밀집돼있는 자강도로 자리를 옮겨 도행정경제지도위 부위원장으로 근무했고 1981년 9월 위원장으로 승진했다. 이 기간 그는 군수공업에 대한 지도능력을 인정받아 87년부터 군수산업을 전담하는 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맡았다. 그러나 1년뒤인 1988년 12월 민수분야로 돌아온후 당내에서 민수공업을 총괄하는 중공업 담당비서로 고속승진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랫동안 주요 직책에서 일해온 그는 최고인민회의 제5기(1972년 12월) 때부터 10기(1998년 9월)까지 계속해서 대의원으로 선출됐으며 1980년 10월 당중앙위 후보위원으로, 1986년 12월 당중앙위 위원으로, 1988년 11월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한후 1990년 5월부터는 정치국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성룡은 정치국 위원이며 당비서라는 높은 직책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총비서로부터 크게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력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장기간 민수공업분야에서 행정간부로 일해왔기 때문에 김 총비서와 개인적인 인연을 맺을 기회가 없었다. 지금도 당비서이기는 하지만 김 총비서의 관심 밖에 있는 민수공업을 담당한 데 불과하며 측근들이 참석하는 파티에도 주요 명절외에는 끼지 못하고 있다. 그는 순전히 기계분야에 대한 뛰어난 지식과, 요령을 부리지 않고 당에서 시키는대로 성실하게 일해온 성품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는 고위직에 있다는 티를 조금도 내지 않고 성격도 소탈하고 시원시원해 주위사람들로부터 “노동자 출신이 다르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가족관계는 부인과의 사이에 2남 1녀가 있다. 장남 영호는 김 총비서의 배다른 동생인 김평일과 남산고등중학교·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동창생이며 현재 제2경제위원회 대외경제총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차남 영철은 평양외국어대학 영어과 졸업후 교원생활을 하다가 대외문화연락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1998.9.5)에서 노동당 교육담당 비서였던 최태복이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최태복이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자리를 옮긴 데에는 역대 의장들이었던 손성필, 황장엽, 양형섭 등과 마찬가지로 그의 학자로서의 경력과 이미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1929년 함경북도 길주에서 태어난 최태복은 김일성종합대학 재학중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동독 라이프치히 화학공업대학에서 공부했으며, 유학후 다시 소련에서 연구원과정을 거쳤다. 귀국후

1961년부터 함흥화학공업대학 교수로, 1965년 과학원 함흥분원 산하 연구소 소장으로, 이어 김책공업종합대학 학부장을 거쳐 1973년부터 1981년까지 9년 여에 걸쳐 동대학 학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주물공학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최태복이 과학기술교육의 전당으로 일컫는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장으로 발탁된 데는 동독유학시기 뛰어난 실력으로 이름을 날렸던 사실이 북한에 기술협조를 왔던 동독대학 동기생들인 독일 기술자들에 의해 김일성에게 알려진 것이 한 원인이었다는 설도 있다. 이와 같이 정통 학자코스를 밟아오던 최태복이 정계에 진출한 것은 1981년 5월 정무원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면서 부터였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승진하면서 당중앙위 후보위원이 됐고, 1982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1986년 12월에는 노동당 과학교육부장 겸 교육담당비서로, 당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고속승진했다. 김일성·김정일과의 특별한 인연도 없이 순수한 학자에 불과한 그가 일약 당비서로 승진하자 주위에서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바로 전형적인 학자이며 교육자라는 경력이 교육담당비서로 승진케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태복은 1993년 4월부터 8개월동안 당중앙위 국제담당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으로 옮겼다가 1993년 12월에 다시 교육담당비서로 복귀해 지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줄곧 이 자리를 지켰다.

그는 직위에 걸맞게 7기부터 10기까지 계속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 기간 대외활동도 매우 활발했는데, 1984년 한해 동안 교육대표단 단장으로 동구 및 소련, 방글라데

시, 아프카니스탄, 인도, 네팔을, 1991년 당대표단 단장으로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들을 방문했다.

최태복은 과학자답게 성격도 매우 조용하고 온건하며 매사 세심하고 꼼꼼한 것으로 소문나 있다. 타고난 과학자인 그는 정무원과 당에서 승승장구하는 과정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으며 특히 독서와 외국어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태복은 이처럼 곧고 바른 학자적인 성품으로 인해 당비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측근들만 참가하는 비공식연회들에는 거의 참석하지 못했으며, 결국 본격적인 김정일시대를 맞으면서 상징적인 입법기관 수장이라는 의장직에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는 1984년경 본부인이 유선암으로 사망한 후 인민대학습당 사서로 일하는 여성과 재혼했고 슬하에 출가한 본부인의 딸 2명이 있다.

백남순

백남순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1998.9.5)에서 새로 개편된 내각의 외무상으로 임명됐는데, 그의 또다른 이름은 백남준이다. 2개의 이름을 사용해온 탓에 그의 실체를 두고 논의가 분분하기도 했으나 이는 북한의 대남분야 간부들이 흔히 써오는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문화부장 강관주(강주일)가 그랬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혁(이평)이 그러하며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던 최익규도 일본방문시 최상근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백남순도 대남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간에는 백남준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오다가 외무상으로 되면서 다시 본이름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대남전문 관료로 널리 알려진 백남순이 외무상으로 등용된 것은 다소 의외인 듯 보이나 사실 이것은 북한이 외교정책의 중심을 주변 4강과의 외교 및 그와 밀접히 연관돼 있는 대남사업에 두고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백남순은 대남분야 뿐만 아니라 노동당 국제부·선전부에서, 그리고 외교관으로 두루 활약해온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김정일의 특별한 신임을 받기도 했다.

1929년 함경북도 길주에서 출생한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1960년대에 노동당의 여러 부서들에서 지도원, 과장으로 활동했으며 1968년경 국제부 부부장으로 승진하여 1974년까지 일했다. 1972년 8월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자문위원을 겸직하여 남북적십자회담 북측 자문위원으로 7차례의 회담에 모두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이 기간 권력장악을 위해 세력확장에 몰두해있던 김정일과 인연을 맺기도 했다.

백남순은 1974년부터 79년 2월까지 주폴란드대사로 임명받아 공식적인 외교관생활을 했으며 귀국후 김정일과의 인연이 크게 작용하여 곧바로 노동당 선전부 부부장으로 임명됐다. 이 시기 그는 김정일로부터 더욱 각별한 신임을 받았는데 측근들만 참석하는 비밀파티에 단골손님으로 참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김정일이 직접 그의 맏아들 결혼식에 참가할 정도였다.

그러나 1983년 8월 김정일의 질책을 받고 외국문종합출판사 사장 겸 기자동맹 중앙위 부위원장장으로 잠시 좌천되기도 했다. 약 1년간의 '혁명화'를 마친 그는 다시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으로 복귀했으며 이때부터 줄곧 대남분야에서 자리를 지켰다.

통일전선부 부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는 1984년 9월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상임위원, 1991년 1월 조국평

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겸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1993년 최고 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회 위원, 1994년 6월 정무원 책임참사, 1996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서기국장의 직함을 가지고 활동했다. 또 1984년 9월 한국에서 수재가 발생했을 때 적십자회 북측 대표로 수재물자 인도 차 판문점 대성동마을을 방문했고, 1989년 2월 남북고위당국자 예비회담 1~8차 북측대표로서 1, 3, 5, 7차 때에는 서울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남분야의 정통관료이자 외교관이기도 한 백남순이 외무상으로 임명된 것은 김정일시대의 북한외교정책의 무게중심이 한국과 미·일 등에 두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그의 슬하에는 장남 백락천을 비롯하여 4남 1녀가 있다.

김일철

1997년 2월 최광의 사망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던 인민무력상에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직을 맡고 있던 김일철이 임명됐다. 1933년 평양에서 태어난 김일철은 인민군 수뇌부에서는 드물게 해군출신으로 만경대혁명학원을 졸업한후 소련의 해군대학에서 유학한 해군전문가이다.

1970년대에는 동해함대사령관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1980년대 해군사령관직을 맡으면서 대표단을 인솔해 소련, 중국, 인도네시아 등지를 방문, 군사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1997년 4월 인민군 차수로 승진함과 동시에 최광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인민무력부 부장자리를 제외하고 인민무력부 최고위 직책인 제1부부장에 임명돼 그의 위상을 공고히 마련했으며, 당시까지 갖고 있던 해군사령관 직책은 서해함대사령관이던 상장 김윤심에게 물려주었다.

김일철은 북한에서 해군현대화의 주역으로 통한다. 현대적인 해군함정 및 대형 잠수함(2천톤급) 건조에 힘을 쏟는 동시에 수중지하갱도 해군기지 건설에 노력해 김일성으로부터 신임을 얻었다고 한다. 1980년대 이후에는 정치적 입지도 탄탄하게 굳혀 나갔는데, 1980년 당중앙위원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올랐으며 1990년 4월과 1998년 7월에 각각 제9기와 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김일철은 82년 북한최고의 상훈인 「김일성훈장」을, 1995년 「공화국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제1급을 수상했다. 그가 김정일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동시에 국방위원회 명령으로 인민무력상에 기용됨으로써 그동안 육군과 공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해군의 위상이 상승하게 됐다.

이용무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1998.9.5)에서 진행된 권력기구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사증의 하나는 이용무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기용이다. 또 그는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바로 3일후에 차수계급까지 수여받았다. 어찌보면 파격적인 고속승진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정배경과 화려한 경력 등으로 볼 때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특히 그가 최근 김정일의 공식행사에 동행하는 횟수가 빈번해지면서 부상이 예상됐다.

이용무의 출생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으나 해방직후 북한의 첫 군간부 양성기지였던 「평양학원」에 입학하여 일찌감치 입신의 코스를 밟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원 졸업후에는 군복무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의 사촌누이동생과 결혼함으로써 장차 고위간부로 발전하기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

게 됐다. 그리하여 1960년대까지 연대장, 사단장, 군단정치위원 등을 거치며 체계적으로 고속승진했으며 북경주재 북한대사관 무관으로도 활동했다. 또 1970년 6월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중장)으로 기용되면서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1972년12월)에서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1973년 10월에는 군의 당사업을 총책임진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임명됐고 1974년 4월 상장계급장을 수여받았다. 군서열상으로는 비록 2인자이지만 사실상 군의 사상사업 및 인사권을 거머쥔 막강한 권한과 김일성의 가까운 친인척이라는 가정배경에 힘입은 이용무는 직속상관인 인민무력부장을 제치고 실제적인 1인자로 군림키 위해 활약하기 시작했다. 특히 당시 김일성의 후계자로 갖 등장하여 권력장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던 김정일과 끈끈한 관계를 맺는 한편 유일지도체제를 수립하는 데 크게 일조함으로써 군부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혔다. 이 와중에 당시 인민무력부장이었으며 빨치산 세대로서 김일성·김정일의 신임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고 무시할 수도 없는 오진우와 힘 겨루기를 하게 됐고 이것은 급기야 군부 수장들간의 심각한 갈등과 나아가 군부 전반에 커다란 무질서를 야기시켰다.

1977년 9월 이용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정치국장에서 해임됐으며, 군부내 정치군인과 지휘관간의 알력과 대립에 충격을 받은 북한당국은 그후 오진우가 사망할 때(1995.2)까지 인민무력부장이 총정치국장을 겸하도록 조치했다. 그의 좌천에는 성급하고 저돌적인 성격과 가정배경만 믿고 월권을 일삼았다는점, 직권을 남용하여 각종 비리를 저지른 점도 작용했다. 이용무의 이런 행동은 전례로 볼 때 중파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했지만 김정일과의 남다른 인연은 그를 완전히 매장시키지 못했다.

결국 그는 30여년 동안 입어왔던 군복을 벗기는 했지만 양강도 인삼사업소 지배인으로 내려가 1984년까지 일했고 같은해 4월 양강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기했다. 보통 간부들의 2~3년 혁명화 기간에 비해 10년 넘게 지나간 단련 및 검열과정을 거친 그는 1988년 11월 당 중앙위 후보위원 겸 사회안전부 정치국장으로서 임명됨으로써 중앙 정치무대에 복귀했고 1989년 6월 국가검열위원장의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됐다.

1991년 12월에는 교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최근 김정일의 군부대 및 군수공장 시찰에 동행하면서 측근으로 다가섰고 지난 최고인민회의의 10기 1차회의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통치기구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처럼 이용무의 승진에는 김부자의 친인척이라는 배경과 함께 김정일과의 각별한 인연, 저돌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성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철만

김철만 국방위원회 위원은 항일빨치산 출신으로서 군과 군수공업분야에서만 일해온 정통 관료이다.

1918년 평안남도에서 출생한 그는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에서 활동한 공로로 해방후부터 군사지휘관으로 승승장구했다. 1948년 인민군 10사단 25연대 참모장, 1955년 4월부터 37사단장으로 활약했다. 1964년에는 민족보위성 작전국장으로서, 1965년 1월에는 제2군단장(중장)으로 승진했다. 또 1968년 2월 부총참모장으로 기용되면서 상장계급을 달았고 1970년 7월에는 제1부총참모장으로 활동했다.

김철만은 1988년 인민무력부 군수동원 총국장으로 잠시 일하

다가 1989년 12월 군수공업을 전담하는 제2경제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십년간 몸담았던 군을 떠나게 되었다. 그는 비록 군복을 벗었으나 10여년동안 군수공업을 담당한 2경제위원장으로 서 군관련 분야에서는 여전히 실세로 군림해왔다.

김철만은 군 및 군수분야의 고위급답게 각종 요직들에도 이름을 걸어놓고 있다. 1962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제3기 때부터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10기(1998.9.5)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1970년 11월 당중앙위 위원, 1980년 10월 당정치국 후보위원 및 당중앙군사위원, 1990년 5월에는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고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회의에서도 재선되었다.

물론 김철만이 주요 직책들을 겸임하고 있다고 해서 실세라고 할 수는 없다. 김정일의 측근들이 당과 군의 주요 직책들에 대거 포진하고 있고 극소수의 항일빨치산들이 「원로예우」 차원에서 「얼굴마담」 노릇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라고 예외는 아닌 것이다. 하지만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몇 안되는 빨치산출신이라고 할 때 그는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여기에는 군인이면서도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소유한 그의 처세술이 한몫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세히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는 김정일이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에 취임(1973.9)하자 산하 조직들에 김정일의 초상화를 걸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가 하면 1980년대초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김정일의 초상화를 내리는 조치가 취해졌을 때에도 이를 거부해 충성심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그는 김일성의 사람들이 대거 몰락하는 지금도 김정일이 가장 중시하는 군수공업을 담당한 행정책임자로서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가족관계는 첫 부인이 병으로 사망한 후

재혼했으며, 막내딸 김정화가 조총련의장 한덕수의 장남 한우철(43세)과 결혼, 한덕수와는 사돈관계에 있다.

백학림

백학림은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1998.9.5)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에 선출됨과 동시에 사회안전상으로 재등용됐다. 항일빨치산 출신들이 권력 전면에서 물러나 명예직으로 나왔고 있는 상황에서 자리보존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 치안기관인 사회안전성의 수장직을 맡고 있는 사실은 그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실감케 하고 있다.

그만큼 백학림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막강한 신임을 모두 받고 있는 인물이다. 1918년 중국의 남만주에서 출생한 그는 일찍이 김일성의 항일빨치산에 입대하여 그의 곁에서 전령병으로 활동했다. 특히 백학림은 최근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 따라배울 것을 호소하고 있는 '고난의 행군'(김일성의 항일유격부대가 1938년 12월말부터 1939년 3월말까지 100여일간 일제의 수십만 대군의 포위공격,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식량난 등을 뚫고 중국 동북의 동강현 남패자에서 압록강 연안 국경일대로 행군한 것을 일컬음)에 실제로 참가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그가 당시의 '고난의 행군'을 회상하여 쓴 회상실기 <한흡의 미숫가루>는 북한주민들의 사상학습서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더욱이 김일성의 전령병으로 활동한 관계로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과도 매우 가까웠으며 소련의 하바롭스크에서 김정일이 출생했을 때 안아보았던 빨치산 원로중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런 인연으로 인해 백학림은 김일성의 후처인 김성애의 부상을 달가워 하지 않았으며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적극 지지했다. 또 같은

이유로 그는 김정일의 권력장악 후에도 여전히 실세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김일성과 김정일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았던 관계로 그의 경력 역시 화려했다. 백학림은 해방 직후에도 김일성의 호위부대원으로 있다가 맑스-레닌주의학원과 중앙당정치학교를 수료했다. 그리고 6·25전쟁 발발과 함께 1950년 6월 인민군 47연대장으로 임명됐고 1951년 4월 8사단 81연대장으로, 1952년 민족보위성 정치안전국장으로서 발탁되었다. 1958년 5월 소장계급을 달고 다시 인민군 제3사단장, 1960년 5월부터 1961년 1월까지 군사정전위원회 위원, 1961년 10월 내각 호위처장으로 활약하던 그는 1962년 5월 민족보위성 정치안전국장으로서 재등용됐다.

그는 1967년 3월부터 78년까지 10년 넘게 사회안전부 부부장으로 일하다가 1978년 8월 인민무력부 부부장으로 전보됐으며 이 기간 중장(1970년)과 상장(1981년)계급을 받았다. 1985년 4월에는 대장계급장을 달고 그해 10월 사회안전부장으로 승진했으며 1992년 4월에는 인민군 차수칭호를 수여받았다.

백학림은 또 직위에 걸맞게 각종 요직을 겸임해 오고 있다. 1961년 9월(4차당대회) 당중앙위 후보위원으로, 1970년 11월(5차당대회)부터 당중앙위 위원으로 등용됐으며 1980년 10월(6차당대회)에는 노동당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또 최고인민회의 제4기(1967.11) 때부터 대의원으로 선출돼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1980년 10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등용됐다. 가족관계는 부인과의 사이에 1남(백영일) 4녀(백은희, 백은숙, 백혜영, 백혜숙)가 있다.

이을설

인민군 원수이며 호위사령관인 이을설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1차회의(1998.9.5)에서 국가기구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출됐다. 비록 실세는 아니지만 항일빨치산 출신들 대부분이 권력 전면에서 물러나고 있는 세대교체의 와중에서도 그가 여전히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충성심」을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1920년 함경북도에서 출생하여 김일성의 항일빨치산에서 전령병으로 활동한 이을설은 해방직후부터 오늘까지 인민무력성과 호위사령부 등 오직 군에서만 활약해온 전형적인 군인이다. 그는 1948년 8월 인민군 연대장으로 출발하여 6·25전쟁시기에는 제4사단 참모장(1950.7)과 제15사 3연대장(1951.4)으로 활동했다.

본격적인 출세는 1962년 10월 제5군단장으로 승진하면서부터였다. 그는 중장계급을 받음과 동시에 최고인민회의 제3기 대의원으로 선출됐고 이번 10기까지 줄곧 재선됐다. 또 1968년에는 제5집단군 사령관으로 임명됐고 1970년 당중앙위 위원으로, 1980년 10월 당중앙군사위 위원으로 등용되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을설은 1982년 10월 인민무력부에서 김일성·김정일의 경호를 전담하는 호위사령부로 전보되어 부사령관을 맡았다. 김일성의 전령병 경력이 크게 고려됐던 것이다. 1983년 평양방어사령관을 맡아 잠시 이곳을 떠났던 그는 1984년 호위총국장으로 승진, 복귀했다.

이을설의 탄탄대로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1985년 4월 대장계급을 수여받고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으며 1992년 4월에는 인민군 차수, 1995년 10월에는 인민군 원수칭호를

받았다. 경력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북한의 고위층이라면 거의 다 한두 번쯤은 겪는 「혁명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또 많은 고위간부들이 김정일의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 별 볼 일 없는 뒷전으로 밀려나가거나 아예 철직되는 가운데에서도 이을설은 단순히 예우차원만이 아닌 호위사령관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지키고 있다.

그것은 이을설의 정치적 감각이나 처세술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암투가 극심했던 1970년대에 일선 군단에서 활동한 것에 기인한다. 또 김일성에 대한 우직한 충성심이 그 어떤 굴곡 없이 그대로 김정일에게 이어진 것도 그의 오늘을 있게 한 요인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그가 동료인 전문섭과 같이 정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어찌 보면 아들이 없었던 「덕」이 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신 그는 슬하의 딸 4명을 모두 한다 하는 외교관이나 대외무역 일꾼들과 결혼시켜 해외에서 장기주재하게 하는 등 자녀들의 장래보장에 유달리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용철

이용철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군사부문을 담당하는 당내 실세층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북한 사회전반에 대한 김정일 총비서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함에 있어 김 총비서의 오른팔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이며 권력의 총본산이다.

김 총비서가 조직비서와 조직지도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부서의 막강한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이용철은 이러한 조직지도부 내에서도 김 총비서가 제일 중시하는 군사부문의 1부부장직을 맡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실세층의 실세다.

그는 인민무력성이 김 총비서의 지시대로 일하는가를 당적으로 지도, 감시, 통제하며 김 총비서가 직접 임명하는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인민무력상, 총정치국 조직부총국장 등 주요 핵심직을 제외한 모든 군관련 인사를 직접 관장하고 있다. 현재 60세 후반 가량으로 보이는 그의 존재는 1980년대까지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다가 1990년대 들어 김정일 총비서의 군부대 시찰에 거의 빠짐없이 동행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그 이전에는 인민무력성과 노동당내 대남부서 등을 드나들며 대남 및 군 관련 분야에서 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군 상좌출신 한 귀순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1980년대 인민무력성에서 작전국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이용철은 1986년 경부터 1990년대 초까지 노동당 대남사업부서인 대외정보조사부장(현 35호실)을 지냈다. 그후 사업상 과오로 약 2년간 대외정보조사부 산하기관 실장으로 좌천됐다가 '혁명화과정'을 거친후 권력으로 돌아왔다.

이용철은 1993년부터 인민무력성을 담당한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등용되었고 이어 이해 12월 조직지도부 1부부장으로 승진했다. 또 1997년 4월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1998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회의에서는 대의원으로서 선출되었다.

그는 평소 말이 적은 실무형의 인물로, 치밀한 작전통으로 이름나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무뚝뚝한 편이고 술 담배도 즐기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족관계는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고 다만 장남 이경식이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와 김일성고급당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시 만경대구역에서 당간부로 일하고 있다.

여춘석

북한은 최근 인민무력성 부상에 여춘석 전 7군단장을 추가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방송은 북한 정권수립 51주년(1999.9.9)을 맞아 무하마드 압둘라 평양 주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사가 9월 8일 저녁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전하면서 연회에 참석한 여춘석 상장을 인민무력성 부상으로 호칭, 그가 최근 인민무력성 부상에 보임됐음을 확인했다.

인민무력성은 우리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국가기구로 김정일 총비서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편제돼 있으며 김일철 인민무력상(차수) 아래에는 4~5명의 부상이 있다. 북한군내 몇 안되는 작전통으로 알려진 여춘석 부상은 일찍이 군에 투신해 1975년 5군단 참모장에 임명됐으며 1980년 9군단이 신설되자 초대 군단장에 발탁됐을 정도로 실무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1984년 12월 중장으로 승진해 4군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1992년 4월 상장으로 진급하면서 7군단장으로 전보됐다. 1997년 7월 중순에는 인민군 친선참관단을 이끌고 중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염기순

염기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북한 권력의 총본산인 당 조직지도부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이곳 터줏대감이다. 그는 1927년께 함경북도에서 출생해 고등중학교 교사와 사료청(현 청년동맹) 초급간부 등으로 일하다가 1960년대 초반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발탁됐다.

염기순은 조직지도부에서 보조지도원 지도원 부과장 과장의 체계적인 승진코스를 밟아 1972년께부터 이 부서의 부부장으로 일

했다. 이후 그는 1977년 12월~1981년초 사이 강원도당 책임비서를, 1988년 10월~1991년 11월 양강도당 책임비서를 지낸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내내 김정일 총비서가 부장으로 있는 조직지도부의 부부장과 제1부부장(1987.1~1988.10, 1994~현재)직을 맡아오고 있다. 결국 1960년대부터 지방당에 나가있던 6년여간을 제외하고는 약 35년동안을 조직지도부에서, 그것도 부부장과 1부부장 직에서 20여년을 근무한, 자타가 공인하는 실세층의 실세로 군림해온 것이다.

그가 이처럼 오랫동안 조직지도부에서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분야의 업무에 정통하고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1960~70년대 당시 권력장악을 위해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국제부 등 당내 중요 부서 간부들을 골라 측근으로 끌어당기던 김 총비서는 조직지도부 실무에 능하고 일삼씨가 꼼꼼한 그를 매우 신임했다. 때문에 1977년경 강원도당 책임비서로 있을 때 1년이 지나도록 지방당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 김일성 주석의 엄한 추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 총비서는 그를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복귀시켰다. 1988년에도 조직지도부 사업총화시 김 총비서로부터 별의별 비판을 다 받고도 몇 년후 재기했다.

그가 김 총비서의 높은 신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조직지도부 업무에 그만큼 정통한 인물이 없다는 점과 함께 탁월한 처세술에 힘입은 바 크다. 교사출신의 자수성가형인 그는 지나치게 강한 면을 보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아부도 삼가는 등 적정한 처신으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가족관계는 고등중학교 교사출신인 부인과의 사이에 4남 2녀가 있다. 장남 상철(1954년생)은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와 김일성고급당학교를 졸업하고 육해운성 당간부로 일하고 있으며 차남

진철(1957년생)은 군복무후 김일성대 철학부 졸업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관장하던 주체과학원 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다. 삼남 승철(1963년생)과 사남 성철(1965년생)도 군 복무후 김일성대를 졸업하고 중앙기관에서 당간부로 일하고 있다. 장녀 경옥(1960년생)과 경희(1968년생) 역시 김일성대를 졸업했다. 장녀와 결혼한 만사위 김재건(1956년생)은 6.25전쟁후 평양시 복구설계와 '평양대극장' 설계를 전담했던 유명한 건축가 김정희의 장남이다. 재건은 1988년께 러시아 연수시 '부르주아 생활방식' 등 일련의 문제로 국가안전보위부 관리소에서 1년간 '혁명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김 총비서는 염기순의 사위에 관한 자료보고를 받고 "가정혁명화를 잘하시오"라는 지시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노명근

노명근 노동당 중앙위 재정경리부장은 수십 년동안 노동당의 자금 및 재산 관리를 전담하는 재정경리부에서 일해온 이곳 터줏대감이다.

1913년 평안남도에서 출생, 해방전 어느 학교에서 토목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는 8.15 해방 직후 우연한 기회에 김일성 주석의 저택에서 목수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무려 20여 년 동안이나 목수일을 했는데 성실한 근무로 김주석의 각별한 신임을 받았으며 결국 1960년대 말에는 김 주석의 특별지시로 노동당 재정경리부 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몇 년뒤인 1972년에는 부부장으로 등용됐고 그해 12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그때만 해도 당 재경경리부 부부장 직책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되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었다. 원래 당 재정경리부는 당

내의 주요 부서에 속하지 못하다가 김정일 총비서가 당을 장악하면서 서서히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선전부 국제부와 맞먹는 주요 부서로 부상했기 때문에 당시 그의 대의원 선출은 파격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명근은 이후에도 계속 출세가도를 달려 1980년 10월 당중앙위 위원으로, 1982년 최고인민회의 제7기 1차회의에서 다시 대원으로 선출됐으며 1983년에는 당 재정을 총괄하는 부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취임한지 2년여만에 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고 부장직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었다. 1985년께 그는 김정일 총비서의 비밀파티에 참석한 후 귀가중 당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들이던 김치구, 이화영 등 3명과 함께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대형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이 사고로 다른 3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노명근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나 중상을 당했다.

이후 몇 년동안 그는 김 총비서의 특별배려로 스위스, 독일 등 외국의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했으며 재정경리부 산하 창광총국 고문자격으로 휴식기간을 보냈다. 노명근이 완치되자 김 총비서는 지난 1991년 6월 그를 다시 당 재정경리부 부장으로 불러들였다. 그가 이처럼 김 총비서의 각별한 신임을 받은 것은 우직하고 맹목적인 충성심 때문이었다.

노명근은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어 아들을 입양해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자는 현재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문성술

문성술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김일성 주석의 남다른

신임을 받았으며 현제도 김정일 총비서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측근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1922년경 평남도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정배경이나 학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된 것이 없다. 다만 평범한 농촌 하급간부에 불과하던 그가 김 주석과 남다른 인연으로 출세가도를 달리게 됐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58년경 평안남도당 부장으로 잠시 일했던 문성술은 1960년경 김 주석이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을 창조한 것으로 유명한 평남 강서군(현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 무렵 이 농장에 15일 정도 머물면서 현지지도하던 김 주석은 관리위원장인 그를 매우 신임했으며 이에 힘입어 얼마후인 1962년 5월 그는 강서군 당 책임비서로 발탁됐다.

또 1964년에는 함경북도 농촌경리위원장으로, 1967년에는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로, 1973년 8월에는 평남도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승승장구했다. 당시 김 주석의 남다른 신임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권력장악에 안간힘을 쓰던 김 총비서의 포섭대상이 됐다. 특히 김 총비서는 예술인들이 농촌동원을 나가던 청산협동농장을 자주 찾으면서 만났던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 창조의 산증인이자 평남도 행정위원장이던 그를 지체 없이 노동당 선전선동부로 끌어올렸다.

이후부터 문성술은 당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를 오가면서 실세중의 실세인 부부장으로 활약했다. 1981년 10월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1984년 10월 조직지도부 1부부장으로 활동하던 그는 1987년 사업상 과오로 김 총비서의 질책을 받고 당 농업부장으로 좌천됐고 1988년 2월 다시 북한 최대의 쌀산지인 황해남도당 책임비서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1990년 11월 다시 조직지도부 1부부장으로 복귀해 현재까지 이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그는 중앙당 성원들의 조직생활을 통제하는 본부당 책임비서이기도 하다. 문성술은 김 총비서의 비밀파티에도 단골로 거의 빠짐없이 참가하고 있다. 그가 이처럼 김 총비서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것은 업무보다는 농촌출신답게 꾸밈이나 가식이 없는 데다 맹목적으로 김 총비서에게 충성하는 기질 때문이다.

가족관계는 부인과의 사이에 1남1녀가 있다. 아들 영복(1957년생)은 군 복무후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와 김일성고급당학교를 졸업하고 중앙기관에서 당간부로 일하고 있다. 현재 외무성에서 근무하는 사위 정운교(1947년생)는 김일성대 철학부 졸업후 노동신문사 기자로 일했고 1980년대 외무성으로 자리를 옮겨 인도네시아·덴마크 주재 서기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하일

이하일 북한 노동당 군사부장은 군사지휘관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으로 김정일 총비서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군부 인물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1935년 양강도에서 출생하여 만경대혁명학원과 소련군사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일반에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군 고위간부 출신의 한 귀순자는 이하일이 강건종합군관학교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다녔다고 전하고 있다.

이하일은 대학졸업후 체계적 코스를 거쳐 일선 군부대 지휘관으로 활동하다가 1975년 인민무력부(현 인민무력성) 작전국장으로 승진했다. 또 1979년에는 8군단장으로 임명됐으며 1980년 10월 당중앙위원으로 발돋움했다. 이하일은 1982년 3월 홍안의 20

대부터 근무해왔던 군을 나와 노동당내에서 군사분야를 총괄하는 군사부장으로 등용됐다. 물론 군에서 당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해서 지위가 격하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노동당의 지휘·통제하에 움직이는 북한의 특성상 오히려 고속 승진한 것이다.

그는 당내 군 수장이 되면서 당 중앙군사위원직을 함께 거머쥐었고 1990년 5월에는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또 1992년 4월에는 대장계급을, 1995년 10월에는 차수계급을 받았다. 그는 최고인민회의의 9~10기 대의원이기도 하다. 이하일은 당 군사부장으로 등용된 지 17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이는 군사통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525군부대 사령관(작전국장)으로 근무할 때 경비병 전부대와 저격여단 보강대책을 김 총비서에게 건의하는 등 군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해 김 총비서의 총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비서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것은 그가 지난해까지 김 총비서의 군부대 시찰에 거의 빠짐없이 동행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하일은 인성측면에서도 상당히 대가 바르고 부하들과도 잘 어울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군단장시절 병사들과 같이 합숙도 하고 행군도 하는 등 함께 생활하면서 군단의 전투력을 높이는 등 위아랫 사람 모두에게서 인기가 높았다. 그렇다고 해서 부하들에게 마냥 원칙없이 좋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높은 요구를 제기하곤 하여 간부들 사이에서 품성이 좋으면서도 대가 바르다는 좋은 평판을 들었다. 가족관계는 부인과의 사이에 1남 1녀가 있다.

김양건

김양건 노동당 중앙위 국제부장은 당내 외교분야의 외길만을 걸어온 정통 당료이다.

1938년 4월 24일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대학 졸업후 곧 바로 당 국제부에 배치된 후 지금까지 줄곧 이 부서를 떠나지 않고 있다. 김양건은 당 국제부에서 보조지도원, 지도원, 부과장, 과장 등 체계적인 승진코스를 밟아 1986년에는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또 1991년 2월 조선외교협회 부회장을 겸임한 후 같은해 7월 조-일우호촉진 친선협회 회장으로 임명됐으며 1990년 4월과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9, 10기 대의원에 선출됐다.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그는 당대표단 단장으로 1988년 12월 인도를, 1994년 1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1995년 8월 태국과 방글라데시를 순방하는 등 여러 아시아 나라를 방문하면서 당 외교전문가로서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였다.

이에 대한 공로로 그는 1995년 10월 노동당 창립 50돌을 맞아 북한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받았다. 김양건은 1997년 2월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의 한국망명으로 당시 국제부장이었던 현준극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질되자 후임으로 부장에 임명됐다. 그가 당 국제부장으로 승진했다고 해서 당내 실세로 보기는 어렵다.

북-미, 북-일 간의 각종 협상이 외무성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북한은 당 국제부의 업무를 종전의 외무성 지도·통제에서 외국 정당과의 활동으로 범위를 축소시켰다. 당 국제부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된 만큼 당 국제부장의 위상도 이전과 같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부장으로 승진한 것은 김정일 총비서의 특별한

신임을 받았다기보다는 장기간 국제부에서 활동한 경력이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김양건은 당 국제부에서만 활동하다 부부장으로 승진한 후에야 비로소 외부에 알려져 그에 대한 신상이나 가족사항도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다.

양형섭

83년부터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상설회의 의장으로 있다가 지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1998.9)에서 신설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된 양형섭은 당과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1925년 함경남도 함주군에서 출생하여 함흥영생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해방직후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소련 모스크바종합대학에서 공부했다. 또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와 인민경제대학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1950년대 중반 양형섭은 모스크바 유학시절부터 끈질긴 구애를 해온 김일성의 사촌 여동생 김신숙과 결혼했으며 이로 인해 일찍부터 출세가도를 달리게 됐다. 그는 1961년 10월 노동당 간부양성기관인 중앙당학교(현재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장을, 1967년 12월에는 고등교육상을 역임했고 1970년 7월에는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 및 교육담당 비서로 고속승진했다. 또 1962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10기까지 줄곧 유지해왔으며 1977년 4월 중앙인민위 법제위원장으로 기용되기도 했다.

승승장구하던 양형섭이 요직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것은 1980

년대부터였다. 1980년 1월 노동당 정치국 위원과 비서직에서 해임된 그는 아무런 실권도 없는 사회과학원 원장으로 좌천됐다. 해임이유가 겉으로는 교육부문에 대한 당의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이었지만 실제로 김정일의 눈 밖에 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양형섭은 전형적인 학자풍을 지닌 탓으로 손아래 동서인 허담과 달리 처세술이 없었고 약삭빠르지 못했으며 대세판단에도 눈이 어두웠다는 평을 주위에서 듣는다. 이 때문에 김정일이 권력장악을 위해 김성애·김평일 등과 암투를 벌이고 있을 때에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했고 오히려 김성애가 김일성의 부인이라는 점에 더 무게를 두었다. 결국 동서인 허담(노동당 대남담당비서)이 김정일에게 줄을 서 그의 오른팔로 승승장구할 때 반대로 그는 권력중심에서 밀려나고 말았던 것이다.

이후 김정일이 거의 배척하다시피 했던 친인척들을 감싸안으면서 양형섭은 198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으로 기용됐고 1993년 12월에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했다. 양형섭의 승진에는 김일성의 친인척이라는 가정배경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는 했지만 경력에서 나타나듯이 학자로서의 학식과 이미지도 한몫 했다. 정통 학자출신 관료들이 등용되곤 하는 최고인민회의 의장직을 다년간 유지했던 점이라든가,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것도 이와 연계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때문에 북한의 어느 관료들보다 대외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68년부터 현재까지 동·서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주 등 거의 방문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이다. 1997년 2월 귀순한 황장엽 노동당비서의 후임으로 그해 12월에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으로 임명됐고, 1998년 4월

인도에서 열린주체사상 국제연구소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직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여전히 권력의 중심보다는 주변을 맴돌며 상징적인 자리에 머물고 있다. 양형섭은 온화하고 세심하며 김신숙과의 결혼생활기간 다림질, 바느질까지도 스스로 할 정도로 꼼꼼하고 소탈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부인 김신숙의 사망(1986.7)후 김정일의 지시로 1988년경 평양미술대학 교수로 있던 여성과 재혼했다. 본부인과의 사이에 1남 2녀가 있는데, 장남은 평양방어사령부 청년동맹 비서로 있고 딸은 강원도당 책임비서 임형구의 딸(외교부 근무)과 결혼했다.

장 철

백인준의 뒤를 이어 최근 문예총(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장에 오른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장철은 재일 조총련을 포함, 해외 동포 출신으로는 현재 북한에서 최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1998.9.5) 전까지는 부주석 겸 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이었던 김병식이 조총련 출신으로는 가장 높은 직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가 사회민주당 고문으로 밀려나면서 장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다.

1926년 경상북도에서 태어나 10살 때 일본 땅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장철은 일본 메이지 대학을 졸업, 한동안 조총련에서 재일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위원(1953.12), 중앙교육문화부 부부장(1957.5), 교육부장(1961.5)으로 활동했다. 1965년 10월 제129차 북송선으로 입북한 후 이듬해 8

월에 내각 문화성 부상으로 전격 발탁되면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970년대들어 제5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 후보위원으로 피선됐으며 1972년 내각이 정무원으로 개편되면서 문화예술부 부부장으로 재임명됐고 문화대표단장 자격으로 잦은 해외순방 길에도 올랐다.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도 당중앙위 후보위원직을 유지한 장철은 김일성 생일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기획·추진하고 북한당국이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해 치중했던 1989년 제13차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 행사를 진두지휘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일성과 김정일로부터 확고한 신임을 얻었다.

장철에 대한 김정일의 신임은 1986년 장철이 문화예술부장으로 발탁될 때 김정일이 그를 직접 불러 「오늘부터 문화예술부장이며, 내 동무를 믿소」라고 격려했다는 일화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김정일의 총애에 보답하기라도 하듯 재일동포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평양시 중구역에 1988년 4월 평양국제문화회관을 건립, 그의 대내외적 입지를 과시하기도 했다.

장철은 1986년 문화예술분야의 최고책임자 자리인 문화예술부장직에 오르면서 1988년 3월 당 제6기13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으로 보선됐으며 현재까지 이 직책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그는 최고인민회의 제8기부터 10기까지 잇달아 대의원으로 뽑혔으며 이번 제10기 1차 회의에서는 여원구와 함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에 오르기도 했다.

장철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선거가 실시될 즈음 이미 문예총 중앙위원장으로 발탁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의 공식

직함이 확인되지 않다가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산업미술에 관한 주체적 문예사상 연구토론회」에 문예총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함으로써 기용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외에도 장철은 현재 조선공연협회 회장, 조선문화협회 회장, 조선김정일화연맹 위원장 등 문화분야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철폐 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대남 사업관련 직함도 갖고 있다. 슬하에 2남 2녀가 있는데 거의가 아버지를 따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평양연극영화대학을 졸업한 장남 장원준과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를 졸업한 장녀 장유선은 각각 평양연극영화대학 연구사와 영화문학창작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중린

김중린 노동당 중앙위 비서는 현재 맡고 있는 근로단체분야보다는 오랫동안 대남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로 남북한 모두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1924년 평안북도에서 출생한 그는 '맑스-레닌주의 학원'(김일성 고급당 학교전신)을 졸업하고 6·25전쟁 시기 소련 공산당 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1980년대말 김정일 총비서의 특별지시로 2년 동안 김일성고급당학교에서 공부했다. 학력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전문교육을 받지 않고 1~2년간 단기적으로 당학교에서만 공부했다.

김중린은 비록 학벌은 없지만 수재형의 머리와 예리한 정치적 판단력, 뛰어난 문필력, 영어·일어 등에 능통한 외국어실력, 업무능력 등으로 김일성 주석의 눈에 들어 일찍부터 대남분야에서 출세가도를 달렸다. 1948년 잠시 함북도당 부장으로 있었던 그

는 1954년 3월 중앙당에 입성하여 곧바로 대남부서 부부장으로 근무했고 1956년 8월 적십자 중앙위 상무위원으로, 1961년 5월에는 조평통 위원으로 일했다.

이어 1962년 10월 대남간첩 업무를 전담하는 당 문화부(현 대외연락부) 부장으로 승진한 그는 1969년 4월에는 대남업무를 총괄하는 당중앙위 비서로 등용됐고 직위에 걸맞게 한달 후인 5월에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다음해 1970년 11월에는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됐다. 그는 업무능력 뿐만 아니라 주변정세와 대남정보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김 주석에게 신속히 보고해 각별한 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1974년 8월 문세광사건과 이어 터진 1975년 10월 남침용 땅굴발견 등을 계기로 김 총비서의 특별내사를 받게 되어 모든 공직을 박탈당하고 하루아침에 노동자로 전락했다. 김 중린은 1년 후 1976년 9월 노동당 남조선문제연구소 소장을 거쳐 1977년 11월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로 복귀했으며 1980년 10월에는 당 정치국 위원직도 다시 차지했다. 하지만 1983년 12월 아웅산 사건으로 대남공작 실패의 책임을 또 다시 면할 수 없게 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한급 내려앉았다. 그리고 1984년 9월 예상을 뒤엎고 남한이 북한의 대남수재물자 제의를 전격 수락하자 대남사업 실패의 책임을 지고 1985년 2월 당비서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또 다시 해임됐다.

1986년 8월 중앙통신사 사장(공보위원장 겸임)으로 물러났었던 그는 1988년 11월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대남분야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근로단체담당 비서로 자리를 옮긴 후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한편 그는 정치적 부침을 거듭하는 와중에서도 최고인민회의

3기(1962년 10월)부터 10기(1998년 9월)까지 대의원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1960년대 초부터 당중앙위 위원을 겸하여왔다. 지난 수십년 동안 남한을 대상으로 일해온 그는 주위 사람들과 공작원들 사이에서 '남조선 공작의 살아있는 백과사전'으로 불리고 있다.

김중린은 말이 적고 내성적이며 또 비교적 차고 신경질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가족관계는 부인과의 사이에 2남 2녀가 있다. 장남 영신과 차남 명신은 모두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재러임업대표부와 외국문중합출판사에서 각각 일하고 있다. 장녀 명희는 동대학 철학부를 졸업했고, 차녀 명옥은 역사학부를 졸업했다. 차녀는 1970년대말 오진우 전인민 무력부장과 허담 전당비서의 딸들과 함께 오스트리아에서 유학하다가 공부를 포기하고 1980년경 김일성대에 편입했다. 동생 김덕현은 한 때 노동당 부부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외국문중합출판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 강석주

미-북한 고위급회담의 북한쪽 수석대표인 강석주(1939년생) 외교부 제1부부장은 외교부의 제2인자로서 김영남 외교부장, 최태복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와 함께 북한 외교를 주도하는 핵심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지난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당시 북한을 대표해 가입 수락연설을 했으며, 거의 매년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의 대표적 대서방, 대유엔 외교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그를 김정일 후계체제를 받쳐주는 실용적 전문관료로 분류하고 있으며, 외교부에서 그의 위상이 강화되는

과정이 김정일 체제의 구축과정과 일치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김정일 당 비서가 후계자로 공식화 된 1980년의 6차 당대회 직전에 당 중앙위 국제부 과장으로 선임된 뒤 외교정책의 중심이 외교부로 이동되는 시점인 1984년 3월 외교부로 옮겨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합영법 채택 등 부분적 개방정책이 추진되던 1987년 4월 외교부 제1부부장이 됐으며, 당 중앙위원(1991년)이자 최고인민회의 산하 외교위원회 부위 원장(1990년)을 겸임하고 있다. 평남 출생으로 평양 국제관계대학 프랑스어과를 졸업해 영어 이외에 프랑스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계응태

계응태 노동당중앙위 비서는 평범한 노동자 출신으로 권력의 정상권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1925년 평남도 평원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특별한 가정배경 없이 노동자로 일하다가 김일성의 눈에 들어 소련유학생으로 발탁됐으며 귀국 후 무역성 지도원, 과장으로 일했다. 1960년 2월부터는 무역성 부상으로, 1967년 12월에는 무역상으로 고속승진했다. 그는 능력을 인정받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순수 노동자 출신에서 북한의 대외무역을 관장하는 무역성의 수장으로 성장했다는 의미에서 김일성 주석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다. 김 주석은 '천대받던 노동자'인 계응태가 자신에 의해 무역상으로까지 성장한 것에 대해 자랑으로 여겼다.

계응태는 이후 1976년까지 무려 10여년 동안 정무원 무역부장(1972년 내각이 정무원으로 개편)으로 일하다가 이해 12월 무역담당 정무원 부총리로 승진했다. 1983년 8월에는 부총리에서 물

러나 평남도당 책임비서로 자리를 옮기는데 이것은 수십년 동안 행정일꾼으로만 일해온 그가 처음 당기관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다.

2년 뒤 1985년 11월 그는 일약 노동당 비서로 승진, 김정일 총비서가 가장 중시하는 사회안전성 국가안전보위부 사법·검찰 기관 등 공안분야와 노동당내 담당 비서가 없는 부서들을 모두 담당해 최근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는 높은 직위에 걸맞게 각종 요직도 겸직해 왔다. 1961년 12월~67년사이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위원장, 1963년 10월 당중앙위 후보위원, 1970년 11월 당중앙위 위원으로 선출됐다. 80년 10월에는 당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다가 1년 뒤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강등됐으나 1988년 다시 정치국 위원으로 재진입했다. 또 1967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4기 때부터 10기(1998년 9월)까지 대의원으로 선출됐으며 제8기(1986년 11월)·9기(1990년4월)에는 최고인민회의 법안심의회(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1990년 2월 제6기 대의원 선거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계응태는 1997년까지 김정일 총비서의 현지시찰에 거의 빠짐 없이 동행했으며 특히 김 총비서로부터 “제2의 허담이 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높은 신임을 받았다. 이처럼 김일성 주석에 이어 김정일 총비서의 높은 신임을 받게 된 것은 우직하고 고지식하며 원칙적인 면 때문이었다는 것이 주변사람들의 평가다. 그가 얼마나 고지식한가 하는 것은 네 명의 자녀중 유독 말썽을 피우는 막내아들을 교양하기 위해 함경남도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노동자로 내려보냈던 사실 하나만으로도 잘 알 수 있다. 김 총비서도 그의 이런 행동에 대해 “가정혁명화는 계응태처럼 하라”고 높이 치하했다. 일부에서는 그의 이런 행동을 두고 ‘속보이는 짓’이라고 말하

기도 했지만 단 1~2년이라도 자식을 험한 곳에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업무에서는 고지식하고 비리가 없이 깨끗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녀문제에서만은 그렇지 못해 주위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부인과의 사이에 2남 2녀를 두고 있는데 거의 다 대외부문 특히 해외파견근무를 시켰기 때문이다. 장녀 영숙(1957년생)과 차녀 영화(1959년생)는 김일성종합대학 졸업후 외교관·무역일꾼과 결혼해 해외에서 근무했으며 장남 학권(1961년생)도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를 거쳐 인민경제대학 무역반(현재 국제관계대학 소속)을 졸업하고 대외무역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차남 학선(1965년생)은 검덕광산에서 혁명화 과정을 거친후 현재평양시당 조직부 간부(인사)과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차남을 제외한 그의 자녀들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아주 잘했으며 성실한 품성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3. 권력기반의 사회환경

1) 사회정책의 한계

지금까지 북한의 사회정책은 '형식적 평등'의 확산이라는 긍정적 기능과 더불어 '실질적 불평등'의 확산이라는 부정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형식적 평등'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배제됨으로써 소득과 부의 평준화가 원칙적으로는 이루어졌으며, 남성과 여성간의 차별 축소, 노동자·농민·인테리간 소득분배의 상대적 평준화, 교육·보건 및 공공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개방되어 왔다는 것

을 의미한다.

반면, '실질적 불평등'은 이러한 형식적 평등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당원과 비당원, 특권계층과 비특권계층간의 불평등을 비롯한 여타의 불평등이 동시에 강화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오늘날 북한은 이러한 실질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계급없는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자본주의가 주장하는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서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평등'이라는 적극적인 평등의 수준으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에게나 교육, 보건 및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개방되어 있으나, 노동자와 농민은 그러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당간부를 비롯한 특권계층에 비하여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 불평등'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이고 피라미드적인 사회구조와 이러한 사회구조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는 관료층 및 특권층의 존재이다.⁵⁾ 이것은 북한의 사회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평등의 발생원인은 무엇이고 북한의 사회정책의 한계는 무엇인가를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 경험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국가가 정치적 기준에 따라 재화와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평등이

5) 이와 관련해서는, 김용기, "계급의 불평등구조와 계급정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 경남대학교출판부, 1987), pp. 187-218; 이성봉,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 분석", 서진영 편, 『현대중국과 북한 40년 III』(서울: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91) 참조.

경제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행정적 배분에 기초한 '정치적 계층화'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⁶⁾

이처럼 사회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은 기본적으로 재분배기구에 의해 창출되고 구조화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시장으로부터 생겨나고 재분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통해 그러한 불평등이 재구조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는 자본주의 체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시장에 대한 일정 정도의 개입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행정적 배분을 담당하는 주체가 바로 국가 자신이기 때문에 '정치적 계층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둘째, 정부와 당 및 국가의 관료들이 임금의 분배는 물론이고 사회정책의 실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주의하의 사회정책은 노동현장에서 전개되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회정책이 지니고 있는 이중성에서 비롯된다.

즉 사회정책은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사회를 통합하고 계급연대를 공고화하기 위한 수단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정책은 노동의 기여도가 상이한 사람들의 소득을 평준화해서는 안된다는, 즉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6) 북한에서 '정치적 계층화'로 인하여 사회적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정인, "북한사회의 평등성,"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pp.350-364; 길태근, "북한의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구조에 대한 이론적 모델 구성", 『북한연구』 통권16호(1994년 여름), pp. 144-164 참조.

언명 아래서 소득불평등을 강화하고 심지어는 이를 확대시키는 기능을 해 왔다.

북한의 경우도 1992년 사회주의헌법의 제70조인 '국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그리고 1978년의 사회주의 노동법 제11조인 '국가는 노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한다'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사회정책은 '형식적 평등'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실질적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셋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형식적 평등주의와 같은 사회정책의 긍정적 측면들이 저발전 상태의 비효율적인 경제와 나란히 공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경제적 효율성과 분배적 정의의 충돌로 인해 '저발전의 평등주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관료적 국가집단주의에 기반한 사회정책은 인민들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 아래로부터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지의 수혜자들은 복지의 객체에 불과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요구하는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시장이나 선거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직접적인 소비자로서의 개입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특권층 이외에는 상상하기 어렵다.⁷⁾

현재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권 및 소련으로부터의 원조 및 기술도입의 중단으로

7) Bob Deacon, "East European Welfare: Past, Present and Future in Comparative Context", Bob Deacon ed, *The New East European: Social Policy Past, Present and Future*(London: Sage Publications, 1992), pp. 6-7.

인해,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계획경제가 갖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일성이 “사회주의 사회가 높은 단계로 발전할수록 인민들의 생활상의 요구는 더욱 높아지며 인민들에게 보다 넉넉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하면서, 인민으로부터 지지를 끌어내는 데 있어 물질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주체사상이라는 공식 이데올로기가 내세우고 있는 ‘평등’과 경험적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평등’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첫째, 북한이 사회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강화라는 국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평등’의 확산을 통하여 ‘실질적 불평등’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그들로부터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은 국내적으로는 계획경제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사회주의의 붕괴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함으로써 사회정책의 확대를 통한 ‘형식적 평등’의 확산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둘째, 현재의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평등을 내세운 체제의 호소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획경제에 대한 일정한 수정을 통해 효율성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개방을 통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효율성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정책은 국내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개방을 통한 외국의 기술과 자본의 도입은 국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민들의 인식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렵다.

이런 단계가 지속되면, 사회정책이 표방하고 있는 평등의 원리와 경제정책이 추구해야 할 효율성의 원리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며, 결국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즉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등의 원리를 포기할 수 없는 반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등의 원리로부터 어느 정도 후퇴하여 효율성의 원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던 1970년대 초반까지는 사회정책과 경제성장이 갈등관계라기보다는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경제성장의 둔화로 양자간의 관계는 갈등관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경제성장 없이 사회정책을 확대할 수밖에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경제성장 없이 사회정책의 확대를 약속할 가능성이 큰 이유로는, 그동안 북한의 사회정책이 국내적 차원에서 '형식적 평등'의 확산을 통하여 '실질적 불평등'의 강화에 따른 인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소련과 동구를 사례로 한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평등의 이상과 현실간의 거리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평등과 효율성간의 거리도 더욱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서 이른바 '평등 이데올로기'가 갖던 호소력은 급격히 감소될 것이며, 인민들

은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사회정책은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불평등'의 충돌 속에서 '저발전의 평등주의'와 '국가구성원의 자율성 억압'이라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여기에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사회의 급성장⁸⁾ 속에서 체제가 보다 급격하고 신속하게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북한은 사회정책의 이중적 기능으로 인해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정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현재 체제유지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평등이라는 이상과 불평등이라는 현실간의 괴리는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해체 위기에 내몰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 사회정책의 기초가 바뀔 조짐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당분간 사회정책의 기본 방향은 김일성 시대와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에 입각한 수령론을 중심으로 전인민을 주체화하는 데 두어질 것이며, 수령론에 입각하여 수령·당·대중을 유일지도체계에 연결시키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혁명적 수령관을 구현하는 데 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김정일은 김정일 시대에 맞는 주민생활향상을 추진할 것이지만, 경제침체 및 만성적인 식량난 등 북한 체제의 근본적 취약점으로 인해 단기간에 '실질적인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 이와 관련하여, 웨이글과 버터필드(M. Weigle and Jim Butterfield)는 소련과 동구에서 시민사회의 성장을 ① 방어단계 ② 형성단계, ③ 동원단계 및 ④ 제도화단계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Marcid Weigle and Jim Butterfield, "Civil Society in Reforming Communist Regimes," *Comparative Politics*, Vol. 25, No. 1 (October 1992), pp.1-23.

2) 사회환경의 인정성 판단

그동안 '북한분석'을 하면서 북한체제의 내재적 특성과 역사적 관성을 소홀히한 채 다분히 우리 시각으로 기계적이고 분절적인 평가를 내리는 예가 적지 않았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까지 결부시켜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분석이나 대응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이런 분석이나 대응방안들이 비판적인 반론 없이 지배적인 주장이나 담론으로 전파되고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에는 '실제의 북한'을 규명할 수 있는 기회는 설 자리를 잃고 '추악한 북한'과 '미화된 북한'이 북한 이해 및 분석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다.

한편, 우리 사회에는 김정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그에 대한 편견은 굳어져 있다. 특히 김정일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난무하면서 '추악한 김정일'밖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테러 분자이며 호색꾼이고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평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그 결과 사인(私人)으로서의 인간 김정일과 공인(公人)으로서의 김정일 총비서를 구분할 여지 없이 김정일은 비정상적이고 오래 못갈 인물로 여기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인식에서 김정일은 김일성만큼 카리스마를 지니지 못하고 권력의 근간이었던 김일성의 사망으로 그 후광을 잃게 되어 후계체제가 조기에 와해할 것이라는 조기붕괴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 지금까지 김정일의 통치행적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의 통치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김정일을 평가하면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의 시각으로 볼 때 김정일은 김일성의 통치유산 아래서 오랫동안 통치수업을 받아 온 결과 여우와 사자의 양면성을 적절히 갖춘 지도자임을 부인하

기 어렵다. 특히 김정일은 자신을 감추고 신비화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더욱 과시하는 고도의 정치력을 가지고 있다(조영환 1996, 32, 94).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내부에는 예상과는 달리 별다른 동요나 불안한 사태가 없었다. 따라서 김정일은 김일성 없는 북한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고,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북한의 정권안정 및 체제안정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거의 모든 공산국가 및 독재체제에서 최고지도자가 죽은 후에 반드시 권력투쟁을 둘러싼 혼란이 있었다. 특히 권력승계 성공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런 김정일의 통치능력과 생존능력은 두말할 나위 없이 김일성의 치밀한 권력승계와 권위이양 시나리오의 결과이며, 김정일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에 기인한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기독교 수호 노력에 있다. 즉 기독교 세력들은 김정일 외에 포스트 김일성체제를 이끌어 갈 만한 대체인물을 찾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김정일을 중심으로 뭉쳐야 북한 체제가 생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한편 북한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그동안 북한사회 내부에도 시민사회와 같은 성격의 비공식적인 제2사회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어 왔을 뿐 아니라, 김일성과는 달리 김정일에게는 외양적이거나 형식적인 존경심만 표현할 뿐 내심 불평과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밑으로부터의 변화도 조만간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도출된 바 있다(서재진 1995).

물론 북한의 '공식문화' 확산의 이면에는 '비공식문화'가 공존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공식적인 정치문화가 동유럽과 같이 국가로부터 사회의 상대적 자율성

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가이다.

동구권의 경우 피지배자가 억압적인 사회 통제 메카니즘에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조명해 주는 이론적 개념으로 '약자의 무기'(weapons of the weak)라고 부른 '일상생활형의 저항'(everyday forms of resistance)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들에게서 관찰한 '약자의 권력'(power of the powerless)이라는 유용한 개념이 있다. 이는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 속에서 인간이 외부적 힘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생존과 자율성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떻게 행위하는지를 잘 개념화할 수 있는 분석개념이다(James Scott 1985; Vaclav Havel et al. 1985).

여러 가지로 표출되는 정치현상을 볼 때, 북한의 경우 공식문화가 요구하는 정치문화가 철저히 내면화되어 개인의 일상생활 또는 비공식적인 세계까지를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북한사회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 지배이데올로기가 더욱 발달한 사회이지만, 북한사회 현상을 볼 때 북한 주민들은 이중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금지하기 때문에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인 개인주의는 감추어져 있고 정치적으로 허용된 행위와 태도인 '공적 선호'(public preference)만 겉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의 억압이 약화되면 언제든지 사적 선호(private preference)가 현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Timir Kuran 1991, 16-25). 즉 북한의 신민형 정치문화가 북한 주민들에게 완전히 내면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그 결과 공식적 지배이데올로기의 이면에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선호가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성은 비록 조직된 저항으

로는 발전되지 못해도 일상생활형의 저항으로 표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이러한 이중적 성향은 물적 토대가 침체해 가고 있는 최근에 와서 점차 빠른 속도로 성장해 표면화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김일성 이후 김정일체제에 접어들면서 북한사회의 공적 선전과 북한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험하는 현실 간에 간격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북한체제를 위기상황으로 내몰거나 변화시킬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주민들이 여전히 공식적인 정치문화 속에서 엄격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 계급적 처지와 토대는 참고로 하고 본인의 사상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사회주의 위업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것을 기본으로 당 대렬을 꾸린다”라는 말에서 보듯이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정치적 성향에 대한 감시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저항하면 즉각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물론 일단 낙인이 찍히면 직장선택 및 대학진학을 포함한 일체의 사회적 출세 등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는 결정적인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경제행위와는 다르게 정치행위에서는 국가의 공식적 요구에 더 근접해 있으며 정치적으로 순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는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례적 연기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적 영역에서의 변화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미약한 편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동유럽 및 소련에 비해서 훨씬 미약한 편이다. 소련 및 동유럽의 경우에는 반체제 지식인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존재하였고 반체제 운동을 지도하는 사상과 이론이 있었으나, 북한에서는 그러한 현상은 전혀 없다. 이는 북한이 역사적, 문

화적, 정치적 측면에서 다른 사회주의 사회와 다른 사회이기 때문이다.

스탈린 사후 반소·반사회주의 저항 운동을 전개한 동유럽과는 달리 북한은 6·25전쟁 동안 미국과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한 역사적 경험을 가졌으며, 동유럽 및 소련에서 수정주의가 풍미할 때 북한은 오히려 차단과 단절의 전략으로서 주체사상을 발전시킨 점 등의 측면에서 북한은 체제 전환을 경험한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구별된다. 즉 북한은 동유럽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경험과는 반대되는 경험을 하거나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역으로 대응하여 변화를 억제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의 '비공식문화'는 한마디로 '인지적 부조화 이론'에 입각하여 작동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L. Festinger 1957). 즉 본인의 개인적 불만이나 요구를 계속적으로 고집하게 될 경우에 받게 될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본인의 태도와는 다른 태도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의 '비공식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행위자들은 태도와 행위간의 불일치현상을 부담 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요컨대, 아직까지 북한의 '비공식문화'는 '악자의 무기'가 되기에는 너무나 신민형 정치문화적 특성을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국 전통의 영역을 기준으로 할 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즉, 파괴와 건설은 사회주의적이었으나 작동원리는 아직도 전통적인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공산주의가 토착화될수록 전통적인 문화인자는 점점 더 현재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 김정일은 김일성 이후의 북한체제를 이끌고 있다. 그 결과 한반도에는 그동안 예상했

던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만약 김일성 이후를 김정일이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라면 한반도에는 견잡을 수 없는 다양한 양상이 벌어졌을 것이며, 그 결과 경제위기 국면에 처한 한국사회는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컸다. 아이러니컬하지만 김정일의 치적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아울러 김일성의 최고 공적은 김정일을 선택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부터라도 김정일은 북한을 통치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에서 '김정일 시대의 북한'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추악한 김정일'에서 벗어난 냉정한 판단이 북한 및 남북문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한반도 통일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수요건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욱이 김정일의 국가운영관 및 대남관이 김일성 시대의 북한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결국 당분간은 적대적인 북한과 장기간 공존을 지속해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악한 김정일'의 연장선에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을 평가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고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김정일을 토대로 북한체제 및 남북관계의 미래를 전망하는 새로운 작업을 실행할 필요가 더욱 커진다.

참 고 문 헌

- 김병로, 1993. 『김정일저작 해제』,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3-15
- 김영수, 1998. “김정일 정권의 대남정책,” 이상우 편저, 『21세기 동아시아와 한국 I: 부상하는 새 지역질서』, 서울: 오름.
- 김영수 외, 1997. 『김정일 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김일성, 1983a.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 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1968년 5월 11일 제2차 전국 천리마작업반 운동 선구자대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 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83b. 「당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1969년 3월 3일 당 중앙위원회 부장, 도당 책임비서들 앞에서 한 연설, 『김일성 저작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85. 「당, 정권기관,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대건설을 더 잘하여 혁명적 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하자」, 1975년 2월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김일성 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2.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1967년 6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 김정일, 1995. 「당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1975년 1월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김정일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6a. 「당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1981년 3월 8일 전국 당 선정일군회의에서 한 결론,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6b.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양을 위하여», 1986년 1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김정일 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7a.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1987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7b. 「당사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전화를 일으켜 1990년대를 빛내이자», 1990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및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 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7c.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다», 1990년 12월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김정일 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7d.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1991년 1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김정일 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7e.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리론으로 튼튼히 무장

하자], 1991년 7월 1일 창립 45돐을 맞는 인민경제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김정일 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학준, 1995. 『북한 50년사』, 서울: 동아출판사.

박규식, 1992. 『김정일 평전』, 서울: 양문각.

서동만, 1997. “속도전에서 개혁개방까지, 김정일식 경제지도의 양면성,” 『월간 말』, 1997년 11월호.

서재진, 1995.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

스즈키 마사유키, 1994.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유영구 역, 서울:중앙일보사.

이상우, 1997. 『북한정치입문: 김정일 정권의 특성과 작동원리』, 서울:나남출판.

이종석, 1995a.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이종석, 1995b. 『현대 북한의 이해: 사상, 체제, 지도자』, 서울: 역사비평사.

전현준, 1992. “김정일의 권력승계기반과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통일연구 논총』 창간호(1992. 6), 1-24.

전현준, 1994. 『김정일 리더십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4-07.

조영환, 1996. 『매우 특별한 인물, 김정일』, 서울: 지식공작소.

최 성, 1997. 『북한정치사: 김정일과 북한의 권력엘리트』, 서울: 풀빛.

통일원, 1996. 『김정일 주요 문헌집』, 서울: 통일원.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Illinois.

Havel, Vaclav et al.. 1985. *The Power fo the Powerless: Citizens -Against the State in Central-Eastern Europe*, London:Hutchinson.

Kuran, Timir. 1991. "Now Out of Never: The Element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of 1989," *World Politics*, 44(October).

Scott, James. 1985.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Resista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김정일 정권의 정치구조와 정책

류길재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1. 김정일 정권의 형성과정
2. 김정일 정권의 정치구조
3. 김정일 정권과 개혁·개방
4. 김정일 정권과 남북한관계
5. 김정일 정권과 대외관계
6. 김정일 정권의 정책과 북한의 정치체제 전망

· 제 5 장 ·

김정일 정권의 정치구조와 정책

최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1974년부터 85년까지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이었고, 1985년부터 94년까지는 '김정일-김일성 공동정권'이었다고 증언하여 주목을 끈 바 있다.¹⁾ 정권의 의미를 '권력담당자'(power holder)로 이해한다면 이 말은 곧 1974년부터 김정일이 권력의 한 축이었으며, 1985년 이후에는 주요한 권력담당자로서 통치행위의 전면에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필자는 1990년대 초에 이미 1980년대를 김정일 정권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²⁾ 그리고 이러한 지적은 고영환, 최주환, 황장엽 등 탈북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³⁾

이러한 증언과 지적에 따르면 김정일 정권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것과는 달리 최소한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공식적인 후계자로 선포되던 시기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1980년대 이후 북한은 '사실상의'(de facto) 김정일 정권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김정일 정권 하 북한의 정치구조와 정책방향을 규명하는 작업이 1990년대, 특히

1) 『새천년 emerge』 (1999. 10), p.92.

2) 류길재, "김정일 권력승계와 80년대 북한 당·국가체제의 변화 고찰," 『북한·통일연구 논문집: (II)정책변화 분야』 (서울: 통일원, 1990); "국가-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본 북한체제의 변화," 『북한·통일연구논문집(III) -북한의 체제변화 분야-』 (서울: 통일원, 1991); "북한 대외정책의 결정구조와 과정," 『통일문제연구』 제3권 4호 (1991년 겨울)을 참조할 것.

3) 고영환은 김정일이 외교업무를 관장하기 시작한 것이 1985년이라고 한다. 최주환은 김정일이 1975년부터 군업무를 관장하여 자신을 통한 보고체계를 세웠다고 한다. 최주환, "김정일 30년 노력 끝에 군부 완전 장악," 『WIN』 (1996. 6).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에 한정해서 이뤄지는 것은 초점을 상실하는 것일 수 있다. 오히려 1980년대 이후 진행된 북한 정치체제의 구조 개편과 정책 수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향후 김정일 정권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는 준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 김정일은 김일성의 권위에 '기대어'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는 동시에 정책을 결정·집행해 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정치적 도전이나 정책 실패에 따르는 책임문제를 회피할 수 있었으며, 정치적인 위험부담 없이 권력을 구축하고 정책을 결정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김정일의 통치방식은 '위대한 수령'의 뒤에서 '베리아(Beria)'식으로 통치함으로써 비밀스러운 충성집단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정책결정과정의 사인화(私人化)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긴 권력승계 과정의 결과 김정일 정권 하 북한의 정치체제는 지도자와 하부가 인격적인(personal) 관계로 연결되었으며, 전통적인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에서 볼 수 있는 정책결정 메커니즘이 변질되었다. 따라서 정책결정의 주요 기구들의 역할이 왜소화되었고, 이는 거꾸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들의 역할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을 통치하는 최대 정치기구인 조선노동당의 경우 당중앙위원회나 정치국과 같은 비상설 정책결정기구들은 거의 형식적인 존재로 변화되었고, 반대로 당 비서국이나 전문부서들의 권한이 강화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또한 김정일 정권은 이데올로기를 자신의 체제 정당화와 정책 수립의 이념적 근거로 삼기 위해 마음대로 재단하여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이론과 규범을 형해화시키고 동시에 필요한 담론을 수용하는 실용주의적 사상체제로 전환시키기에 이르렀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나 ‘조선민족 제일주의’ 등과 같은 담론이 그 좋은 본보기이다. 이데올로기가 내적 일관성과 체계성을 상실하게 되면 이데올로기와 체제간의 논리적 상관관계는 상당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이 김정일 정권에 와서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고착되었다. 요컨대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통치담론 또는 통치자의 언술을 담는 그릇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위상 변화는 군대라는 물리적 억압기구에 대한 강화와 맞물려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당-국가체제를 견지했던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군대는 당에 의해 통제되는 기구인데 반해, 북한에서는 군대가 최고지도자의 사적 통제에만 귀속되며 당적 통제는 웅변적으로만 강조되는 형편이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김정일 정권이 김일성 정권과 다른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와 같이 어떠한 정치세력 또는 기구든 간에 김정일이라는 최고지도자와의 사적 연계를 통해서만이 그 세력 또는 기구의 위상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베버(Max Weber)가 말하는 법적·합리적 권위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전통적 권위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의 전형에 속한다. 그리해서 세습통치체제(patrimonialism) 또는 종교군주제적 정치체제(Sultanism)라는 정치체제의 성격이 고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군대는 당이나 국가기구와 병렬해서 존재할 수 있는 준국가조직(para-state organization)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군대의 위상 변화가 곧 군의 당 및 국가에 대한 우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군대 역시 최고지도자에 복무하는 충성집단일 뿐이지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유산이 강하게 잔존해 있는 현재로서 군대가 당을 대체하고 있다거나 당을 지배·장악하고 있다는 관찰은 적절하지 않다.

김정일 정권의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기나긴 권력승계 과정의 관성에 의해서 제기된 권력공고화와 권력유지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최대 요인이다. 둘째, 국제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다. 셋째, 악화된 북한의 경제난을 들 수 있다. 경제난은 그 자체로서보다 그것이 정권의 정통성과 권력기반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첫 번째 요인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세 번째 요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들은 김정일 정권의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 각 요인들이 어떤 비중을 갖고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며, 궁극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정치구조와 정책 방향을 분석·전망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1. 김정일 정권의 형성과정

1) 김정일 권력승계의 배경(1967-1972) : 1960년대 안보, 경제, 정치의 딜레마

가. 안보적 측면 : 중·소 분쟁과 자주노선

1960년대는 북한의 외교·안보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 시기였다. 특히 중·소분쟁은 북한이 의존했던 사회주의 진영의 갈등을 넘어서 북한의 경제적·군사적 배후지를 상실케 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중·소분쟁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56년 2월에 개최된 제20차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세계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스탈린의 업적

과 중공업중심의 발전전략을 부정하는 것이며, 중국으로서는 스탈린주의 경제정책의 채택으로 급속한 공업화와 집단농장화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르시초프의 발언을 수용할 수 없었다. 특히 모택동으로서는 스탈린 격하문제가 자신에게도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였다.

중·소분쟁은 1960년 6월 부크레슈티에서 개최된 세계공산당 및 노동당대회에서 중국대표인 팡진(彭眞)이 후르시초프의 평화공존원칙을 논박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되었다. 1964년 후르시초프 실각 이후 양국관계가 일시적으로 다소 개선된 적도 있었으나, 중·소의 갈등은 적어도 1980년대 고르바초프 등장시까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소분쟁이 북한에 미친 영향은 다음의 세 가지 정도로 설명될 수 있다.⁴⁾

첫째, 두 사회주의 강대국들간의 분쟁은 북한의 대외적 행동을 위축시켰다. 북한이 어느 한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취한다는 것은 곧 다른 국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제한된 행동공간 내에서 북한은 양국에 대해 균형적인 입장을 견지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입장은 1961년 7월 북한이 소련과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중국과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은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 두 조약은 불과 5일 간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북한이 소련과 중국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실제로 북한은 조·소조약을 “역사적 의의를 갖는 거대한 사변”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조·중조약에 즈음하여 “피로 맺어진 전투적 우호와 유대”라

4) 김성철 외, 『북한 이해의 길잡이-전환기의 북한 사회』 (서울: 박영사, 1999), pp. 38-40.

고 칭하면서 양국 모두에 대해 우호적인 연사를 구사하였다.

둘째, 중·소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북한은 점차 새로운 국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독자적인 노력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 북한 특유의 이념인 '주체사상'이 체계화되었고, 특히 자주성의 네 가지 원칙이 공식화되었다. 자주성의 원칙이란 1950년대 후반에 제시된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와 1962년과 66년에 각각 주장된 국방에서의 자위와 대외관계에서의 자주를 말하며, 이 원칙의 제창으로 주체사상은 대내외 정책을 뒷받침하는 공식이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⁵⁾

셋째, 중·소분쟁은 북한에게 안보적 위기 의식을 부추김으로써 국방에 대한 강화에 의존하는 무력지향적인 노선을 취하도록 하였다. 중·소분쟁으로 행동공간이 협소해진 북한은 1961년 남한에서의 군사정부 등장을 한반도 전체의 위기상황으로 파악하였다. 한국전쟁을 통해 심화된 반미의식을 지닌 북한지도부는 미국이 남한 내 군사정부 등장을 용인한 사실을 곧 미국이 남한에서 모든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한국전쟁시와는 달리 중·소의 갈등상황에서 구소련과 중국 모두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북한은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기치 아래 1962년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국방 병진 노선을 채택하는 동시에 4대 군사노선을 천명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특히 군수산업과 관련된 중공업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다.

나. 경제적 측면 : 공업화와 자립경제의 한계

1960년대는 북한경제가 사회주의 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

5) 김갑철·고성준,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 (서울: 문우사, 1988), p. 86.

던 반면에 다른 부문의 생산성을 등한시함으로써 경제적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시기이다. 우선 북한경제의 수행능력은 이 기간 동안 추진된 제1차 7개년 경제계획의 성과를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은 고도의 공업발전을 이룩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소득과 양곡수확고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던 것은 이 부문의 생산량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로 중공업분야의 발전에 힘입어 공업총생산이 증가했던 반면, 경공업과 농업생산은 목표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산업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1960년대 이러한 불균형적 산업발전은 자력갱생원칙 하에서 중공업중심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강행한 결과였던 것이다.⁶⁾

제1차 7개년 경제계획기간동안 산업의 부문간 불균형은 경제 전반의 발전둔화현상을 초래하였다. 1960년대 북한의 국민총생산 성장률은 1950년대 후반(예를 들어, 1956년은 31.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연평균 10.12%를 기록하였다.⁷⁾ 이 정도의 성장률마저도 1960년대 초기의 높은 성장률에 힘입은 것이었으며, 경제·국방 병진노선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어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던 1967~69년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5.8%에 불과하였다. 1960년대의 발전둔화가 결코 발전의 중단이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현상은 지표 상으로 북한의 암담한 장래를 예측하게 하는 징조였음에 틀림없다.⁸⁾

이와 같이 산업의 불균형 성장과 낮은 경제성장률은 외교안보

6) 김성철 외, 앞의 책 (1999), p. 47.

7) 김갑철·고성준, 앞의 책 (1988), p. 142.

8) 정상훈, "경제계획과 성장," 『북한의 오늘과 내일』 (서울: 법문사, 1985), pp. 154-157.

적 위기에 의해 조성·촉진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경제적·군사적 지원의 급감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력갱생 전략에 의존하도록 강요했으며, 국방에서의 자위노선을 부추겼다. 국방비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다시 경제적 압박요인이 되었고, 경제와 국방의 병진노선은 경제와 국방의 악순환 고리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다. 정치적 측면 : 주체사상의 정식화 및 김일성 개인숭배의 전면화

1960년대의 복잡한 대내외 환경에 대응해 나가면서 북한은 점차 주체사상을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사실 1950년대 중반 김일성이 당 사상사업에서의 주체 확립을 주창할 때 이미 이 사상은 태동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주체사상이란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1962년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체사상은 1964년에 이르러 보다 명료화되고, 이어서 1965년 4월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최초의 정식화가 이루어졌다. 당시 반동회의 10주년을 기념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이던 김일성은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연설에서 주체확립과 관련하여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이것이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립장”이라고 설명하였다.⁹⁾ 오늘날 주체사상체계의 지도적 원칙 부분에 해당하는 이 규정은 주체사상에 대해서 내려진 최초의 정식화라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의 체계화는 김일성 가계에 대한 우상화와 이른바 유일지도체계의 정식화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사회적 분위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로동신문』 1965년 4월 17일자.

기의 변전은 정치적 숙청으로 이어졌다. 1967년 5월 4~8일에 열렸던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상문화 분야의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숙청이 벌어졌다. 여기서는 이른바 '갑산파' 출신 대부분이 해당되었는데, 당내 최고위직에 있었던 정치위원회 상무위원이자 비서인 박금철과 당 과학교육부장 허석선 등 조국광복회 관련인사들과 구소련 유학파인 당비서 김도만, 내각 부수상 고혁 등 사상·문화 담당간부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상무위원 겸 비서인 대남공작 총책 이효순 등에 대한 분야별 비판이 있었다.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명분으로 한 대대적인 숙청이 전개되는 가운데 1967년 5월부터 북한사회에 개인숭배의 물결이 폭발적으로 밀어닥쳤다. 그 계기는 5·1절 기념행사였다. 김일성 지도부는 5·1절을 맞이하여 외국 손님들에게 북한의 발전현황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주체노선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김일성의 지도력을 과시하기 위해 중국·알바니아(교조주의), 유고슬라비아(수정주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와 제3세계 국가들에서 80개의 대표단을 초청하였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평양 시내 및 근교의 공장, 문화기관, 협동농장들과 함께 김일성 생가가 있는 만경대를 관람케 하였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나온 북한의 발전상에 대한 경탄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력과 연결시켜 대대적인 선전 캠페인을 벌였다. 북한의 언론들은 외국 대표단이 북한에 머무르는 약 보름 동안 북한사회의 발전과 김일성의 영도를 연결시키는 유례없이 대대적인 선전작업에 동원되었다. 이때부터 북한사회에서 모든 의식은 김일성 수령에 대한 찬양으로부터 시작하였고 대중학습은 김일성의 혁명활동 암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언론은 김일성의 '위대성'을 증명하는 것을 자신의 제1의

무로 삼게 되었다.

한편 개인승배 드라이브는 스스로 영역을 넓혀 김일성 개인의 '탁월성' 강조를 넘어서 김일성 가계를 혁명화시키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갔다. 김일성 가계의 혁명화는 1967년 9월 여성동맹에서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 여사의 모범을 따라 배울 데 대하여' 토론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이어서 1968년 2월에는 김일성 일가를 그린 기록영화 《만경대》와 《우리의 어머니 강반석 녀사》가 대중에게 소개되었으며, 3월에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을 추모하는 대대적인 행사와 함께 그가 일제 때 활동했다는 평남 강동군 봉화리와 압록강 유역의 증강이 성역화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가계의 혁명화는 1968년 9월 7일 북한정권 20주년을 맞이하여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급기야 김일성의 조부모와 부모의 묘에 화환을 바치는 데까지 이르렀다.¹⁰⁾

2) 권력장악과정(1973-1991)

가. 당 장악(1973-1974)¹¹⁾

김정일의 본격적인 정치경력은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배속되는 1964년부터 시작된다. 그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처음에는 김일성의 호위를 담당하는 호위과 지도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조선전사년표 2』는 그가 1964~1966년의 3년간 김일성의 현지도에 장기출장 15회를 포함하여 모두 31회나 동행하며 후계자 수업을 쌓았음을 기

10) 『로동신문』 1968년 9월 8일자.

1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서울: 역사비평사, 1995), pp. 288-297 참조.

록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혁명전통에 관한 논문과 수정주의,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약 24편의 저작을 발표했다고 『김정일선집』은 전하고 있다.¹²⁾

조선로동당 내에서 김정일의 위상은 그의 나이 25세이던 1967년 5월에 열렸던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 회의에서 당내 선전, 문화를 담당하던 간부들이 유일사상을 위배하는 정책을 전개해왔다고 비판받고 숙청되었는데 김정일은 바로 이 회의에서의 숙청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의에서 비판된 사람들의 '죄상'을 미리 조사해서 회의석상에서 발표하였다. 당시 전원회의 내용을 녹음으로 청취한 한 증언자에 따르면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회의 집중지도 결과를 놓고 직접 비판대상자인 박금철, 이효순 등에 대해서 질책을 가했다고 한다.¹³⁾

당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 내에서 김정일의 위치를 부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 회의 뒤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당내 사상투쟁을 벌여 나아갔으며 김일성 개인숭배 캠페인을 주도하였다. 전원회의 이후 당내에서 그의 영향력은 급속히 증대했으며, 그는 곧 문화예술부 부부장에 임명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선전선동의 중요 수단인 문학예술 부문과 출판보도 부문에 대해서 직접 지도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말부터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주체사상의 유일사상화 과정에서 김정일이 관련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는 주체사상의 유일사상화와 체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12) 최성, 『북한정치사-김정일과 북한의 권력엘리트』 (서울: 풀빛, 1997), p. 214.

13) 김진계, 『조국』 하 (서울: 현장문학사, 1990), p. 78-90.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정일의 당내 활동의 폭은 점차 넓어지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그의 빠른 부상에도 불구하고 1970년 11월에 열린 제5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후계문제가 당 내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전이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해서 그의 부상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제5차 당대회는 뒤에 김정일의 권력강화에 도움이 될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렸다. 그것은 다름 아닌 1966년 10월에 신설된 중앙위원회 비서국의 위상을 강화시킨 것이다. 과서 비서국은 정책 집행기능밖에 없었으나 새로운 비서국은 “간부문제, 대내문제 및 그 밖의 당면문제를 정치적으로 토의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¹⁴⁾ 물론 이러한 변화가 김정일 후계체제를 대비한 포석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김정일이 1973년 9월이래 비서국을 통해서 당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970년대 접어들면서 김정일의 당내 활동의 폭은 점차 넓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제5차 당대회를 앞두고 문학예술부장이 되었다. 그리고 1972년에는 선전선동부장에 취임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당시 조직지도부장이었던 삼촌 김영주를 대신해서 당조직에도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내에서 후계자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즈음이었다. 1973년 2월에 김일성이 발기한 3대 혁명소조운동으로 사회전반에서 혁명의 새로운 세대가 혁명의 주체로 부상하는 것과 때를 같이해서 북한 권력구조 내부에서도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

14) 개정된 당규약의 전문은 통일원, 『조선로동당 연구자료집: 1945-1978』 (1978), pp. 1114-1248.

은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비서국 조직, 선전담당 비서로 선임되었다. 곧이어 1974년 2월에 열린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당내 핵심 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 겸 당·정·군 담당비서로 선출되면서 후계자로 공인되었다.¹⁵⁾ 이때부터 언론은 그를 '당중앙'으로 호칭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당 정치위원에 취임하자마자 곧 명실상부하게 당내 실권을 장악해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김정일의 정치위원 취임은 당내 권력구조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김정일의 부상은 혁명 1세대들의 퇴진을 재촉하고 지도부 내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켰다. 반면에 이후로 혁명 2세대나 실무형 지도자들의 발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배속된 지 10년도 채 안 돼서 당내 최고 권력기구인 당 정치위원회 정치위원과 비서국 비서의 자리에 올랐다. 불과 3년 전의 제5차 당대회 때 그의 공식적인 위치와 비교해 본다면 그의 서기, 정치위원의 취임은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조치는 후계체제에 대한 김일성의 구상과 떼어놓고는 설명되기 어렵다.

나. 군 장악(1975-1991)

1960년대~1970년대 기간동안 김정일은 군사와 관련한 어떠한 직책에도 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1970년 이전에 이미 군에 대한 당적 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도활동을 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⁶⁾ 김일성은 이미 1960년대

15)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473; 『로동신문』 1991년 12월 24일.

부터 인민군대를 방문할 때 김정일을 언제나 데리고 다녔다. 김일성이 김정일을 대동하고 인민군대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1963년 2월이었다. 개성 대덕산에 있는 최전선 부대인 제2군단 14사단의 한 보병대대를 방문했을 때 김정일은 ‘일당백’(一當百)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으며, 이 부대 방문을 두고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군 영도자로서 첫 발자국을 내디딘 뜻깊은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김일성은 인민군 간부들을 만나거나 인민군 부대들을 방문할 때마다 김정일을 동반하고 다녔다. 군에 김정일의 존재를 과시하고 또 그에게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담력을 키워주기 위한 의도였다.¹⁶⁾

김정일을 동행한 군부대 방문 현지도가 일정한 궤도에 오르자 김일성은 김정일이 군을 장악하는 데 장애가 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인민군대에서 모두 제거했다. 그 계기는 1968년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조선인민군당위원회 제4기 제4차 전원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군벌·관료주의자’ 또는 ‘반당 반혁명분자’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토록 하여 당시 민족보위상 김창봉 대장,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허봉학 대장, 해군사령관 김양춘 상장 등을 숙청했다. 이와 아울러 김일성은 김정일의 군부장악을 보다 손쉽게 하려는 의도로 인민군대를 당 영도대상에서 떼어내려고 했다. 이를 위해 김일성은 1970년 초 그의 총직한 추종자이자 김정일 권력세습을 은밀히 주장하던 오진우를 인민무력부장 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임명함으로써 김정일의 군부장악에

16) 정영태, “김정일의 군사권력기반”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4-09, 1994, 10), p. 23-37.

17) 최주환, “김정일 30년 노력 끝에 군부 완전장악,” 『WIN』 1996년 6월호, p. 162 참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김정일은 김일성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군부대를 방문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항상 오진우가 동행하였다. 이 때부터 김정일의 본격적인 군 현지지도가 시작된 것이다.¹⁸⁾ 그러나 김정일이 당의 통제 및 당의 장악활동을 본격화해 나감과 동시에 군사부문에 대하여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당 조직 및 선전 담당비서로 취임하면서부터였다.

조직적 차원에서 김정일은 인민군대내 당 지도기구인 정치부계통을 중심으로 그의 군사지도권을 확보해 나아갔다. 1969년 이후 당 및 정치기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인민무력부에서부터 말단 중대까지 정치부 계통의 요원이 파견되었다. 군부 장악을 위한 김정일의 오랜 시도 중 가장 획기적인 일은 1975년부터 본격 시행한 새로운 보고체계였다. 김정일은 이때부터 인민군대가 김일성에게 보고문건, 비준문건을 직접 올리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자신을 통하도록 체계를 바꿨다. 그것은 김정일이 인민군대의 정보 통로를 틀어쥐는 획기적 사건이었다.¹⁹⁾

1980년 당 6차대회를 통해 김정일은 당중앙군사위원회 군사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김정일은 당 조직비서로서 군의 당정치기관을 통해 주로 군사지도권을 행사해 오다가 군사행정 지휘계통 관련 지도권을 추가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김정일은 그의 군사부문 지도권 공고화 노력차원에서 1982년부터 군부 내에 그의 친위대·후비대인 3대혁명소조원을 파견, 군부의 사상동향 감시 및 군 내부의 김정일 지지기반 구축을 조직적으로 도모했다.²⁰⁾ 또한 1980년대 이후 김정일은 군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18) 최주환, 위의 글, pp. 162-163 참조.

19) 최주환, 위의 글, pp. 164-165.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전군을 유일사상체계 하에 혁명 전략화 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군내에서의 그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1990년대 들어와 김정일은 군사고유의 지도권을 단계적으로 이양받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북한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할 수 있는 지위를 굳히게 되었다. 1990년 5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는 국가지도기관 선거를 통해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에 있던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격의 기관으로 확대·개편하였다.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독립, 확대·개편된 국방위원회에서 김정일은 제2인자에 해당하는 제1부위원장-위원장은 김일성-으로 임명됨으로써 군사 고유의 지도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1991년 12월 24일에는 최고사령관직을 이양 받았으며 이어서 1992년 4월 20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 받게 되었다. 1993년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김정일은 마침내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받기에 이르렀고,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하여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재추대되었다.

다. 국가기구 장악(1980-1990)

김정일이 실질적으로 당권을 장악한 것은 1974년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 이후였지만, 김정일이 후계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공개한 것은 1980년 10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였다. 당대회 때 중앙조직의 개편을 통해 김정일은 김일

20) 안찬일, "북한 인민군의 조직관리방식과 실전능력 평가연구" (통일원 신진학자 학술용역 보고서, 1991), p. 53.

성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정치국, 비서국, 군사위원회라는 당 내 3대 권력기구에 모두 선출되었다.²¹⁾ 1981년 6월부터는 언론이 '영광스러운 당중앙'이라는 호칭 대신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²²⁾ 1982년부터는 그를 찬양하는 전기들이 출판되었으며 그의 성장과정과 관련이 있는 지역들이 혁명 사적지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제6차 당대회 이후 김일성의 현지 지도 빈도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대신에 김정일의 실무지도와 시찰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초기 김정일의 실무지도나 시찰은 주로 문화, 보건, 체육 등에 치중되고 김일성의 현지지도나 시찰을 수행하는 보좌적인 성격이 강했으나 1983년부터는 경제, 군사 부문 등에까지 공개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그 성격도 '보좌'에서 독자적인 '지도'의 측면이 더 강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일성이 권력승계의 일환으로 경제사회 등 실무 분야에서 자신의 현지지도의 역할을 김정일에게 넘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1970년대와는 달리 공식적인 후계자로서 전체 사회를 지도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 김정일은 1980년대에 들어서서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1982년의 최고인민회의 제7기 대의원 선거 때는 황해북도 송림에서, 1986년 제8기 선거에서는 함경남도 함흥시 용성에서, 1990년 제9기 선거에서는 함경북도 무산에

21)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치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 당중앙 군사위원회 군사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정치국은 비상설 결정심의기구로서 상징적 기구에 불과하였지만 이는 권력승계를 위한 김정일의 당적 지위를 확정하고 실질적인 당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제고시켜 후계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2) 『내외통신』 1795호 (1981. 6. 6), p. 17.

서 주민들의 대대적인 후보 추대 행사를 거쳐서 대의원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그의 증대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지도력 행사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1980년대 내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제외하고는 국가기관에서는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았다. 그러나 권력승계가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면서 김정일은 국가기관에서도 직책을 맡기 시작하였다. 그는 1990년 5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확대 개편된 국방위원회의 제1부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조금 늦은 국가기관의 장악은 당이 국가기관을 지도하는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다른 당 내 주요 인사들이 중앙인민위원회를 포함한 정권기관의 주요 기구에 배치되어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대조적인 것이다.²³⁾

3) 김정일의 권위 창출 방식

가. 사상의 창조

김정일의 후계자 부상과정에서 그를 돋보이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화와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이었다. 김정일은 북한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절대화하는 데 결정적이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주체사상은 노동당의 지도사상으로 당뿐만 아니라 북한사회의 모든 기구의 실천적 운영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김정일은 1982년 4월 김일성 탄생 70주년을 기념해서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을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 원리, 지도적 원칙이라는 구성요소를

23)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 pp. 297-304.

지난 철학적 체계로 완성시켰다. 바로 이때 완성시킨 주체사상 내용이 오늘날 북한에서 사상·이론·방법의 전일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되는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즉 김일성주의의 진수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일의 이러한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화 과정은 다른 말로 주체사상이 북한이라는 공동체의 생존담론에서 김일성(그리고 나아가서 김정일)이라는 유일권력자의 지배수단으로 전락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김정일은 1960년대 초·중반에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라는 소박한 정식화 속에 등장한 주체사상을 김일성 개인의 사상으로 틀 지우고 이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한 새로운 사상이론으로까지 격상시키고 절대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주체사상은 본래 ‘북한사회주의의 발전전략’이라는 소박한 함의를 벗어나서 김일성 유일권력의 통치담론으로 전락한 것이다.

오늘날 주체사상은 이론적으로 볼 때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를 일컫는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으로 나뉜다.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이란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 원리, 지도적 원칙으로 구성된 본래 의미의 주체사상을 가리킨다. 이 주체사상은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체계화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주체사상은 이것보다 외연이 넓은 주체사상, 즉 김일성주의이다. 그런데 바로 이 김일성주의는 1973년부터 김정일의 주도 아래 유포되기 시작하여 북한식 사회주의의 모든 사상·이론·방법을 담은 개념으로써 확립되었다.

한편 김정일은 주체사상과는 별도로 1960년대 말부터 양형섭, 황장엽 등 당 이론가들을 동원하여 왜 유일지도자로서 ‘수령’이 필요한지를 밝힌 ‘혁명적 수령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에는 자신의 후계체제의 이론적 뒷받침을 위하여 '왜 후계자가 필요하고 그 후계자의 덕목은 무엇이며 그 지위와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를 그 자신을 모델로 해서 밝힌 '후계자론'을 만들어냈다. 뿐만 아니라 1986년에는 수령·당·대중이 수령을 뇌수로 하는 하나의 유기체적 통일이며, 이들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새로운 논리적 틀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체계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오직 '수령'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고 생활화하는 유일사상체계 확립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그는 1974년에 주체사상과 개인숭배, 절대권력체제를 결합시켜 교의화한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만들었다.

이처럼 김정일은 후계자로서 등장하는 과정에서 수령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인 이론의 창출능력과 해석능력 및 전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으면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북한사회를 주체사상의 나라로 변모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유일한 해석자이자 새로운 이론의 창시자이며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오늘날에도 김정일은 계속해서 김일성에 의해 건설되어 왔던 북한사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이론틀로서 '우리식 사회주의'²⁴⁾를 제시해 주었는데 이는 김일성 사후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고 있다.²⁵⁾

24)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분석은 정현수, "김정일체제의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7권 2호 (1995 하반기): 곽승지, "북한의 '우리식사회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통일문제연구』 제9권 2호 (1997 하반기): 곽승지, "북한의 '우리식사회주의' 논리에 대한 고찰," 『북한연구학회보』 제2권 1호 (1998) 등을 참조.

25)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 pp. 297-304.

나. 극단적 민족주의 담론

1973년 북한에서 발행된 『정치사전』은 “민족주의는 계급적 리익을 전민족적 리익으로 가장하고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우면서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증오하며 민족들 사이의 불화와 적대를 일삼는 부르조아 사상,” “민족주의는 언제나 부르조아적 성격을 띤다”고 서술하고 있다.²⁶⁾ 그러나 북한의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은 1980년대에 들어서서 점차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 10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대남책임자인 김중린은 당시 김일성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토론에서 “민족이 있고서야 혁명과 건설도 있을 수 있고 사상과 리념도 있을 수 있으며 민족을 떠나서는 그것이 다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²⁷⁾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북한 지도부의 민족주의 인식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것은 1986년 7월에 후계자 김정일이 ‘조선민족 제일주의’(또는 ‘우리 민족 제일주의,’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를 제창하면서부터였다.²⁸⁾ 뒤에 김정일이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여 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그 정신을 설명한²⁹⁾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은 북한 지도부의 민족주의적 정향을 거리낌 없이 전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6)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430.

27) 통일원,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1988), p. 322.

28)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56.

29) 김정일,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49.

북한에서 '조선민족 제일주의'는 '민족 자주의식의 높은 표현'³⁰⁾이며,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금지와 자부심"³¹⁾이라고 한다. 특히 여기서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금지 가운데서도 가장 큰 금지는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을 확고히 실현한 것"³²⁾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우리식의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이 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가지게 하는 사회적 기초이며 그것을 더욱 빛내여 나가자는 것이 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발양시키는 목적"³³⁾으로 규정된다.

김정일은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민족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빛내는 데서 김일성이 개척한 '주체혁명 위업'이 획기적 전환이 되었다고 평가한다.³⁴⁾ 즉, 김일성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 건설'이 바로 '조선민족 제일주의'의 현대적 근거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발양시켜 나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우리민족의 위대성은 곧 우리 수령, 우리 당의 위대성"인 것이다.³⁵⁾

김정일은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목적을 "단순히 우

30) 김일순,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의 본질," 『철학연구』 제4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p. 15.

31) 김정일,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pp. 256-257.

32) 김정일, 위의 글, p. 265.

33) 김정일, 위의 글, p. 263.

34) 김정일, 위의 글, p. 253.

35) 김정일, 위의 글, p. 259.

리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자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더 잘하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높이 떨치도록 하자는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³⁶⁾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설명에는 빠져 있으나 당시 동구사회주의체제 몰락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 지도부가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와 북한을 차별화 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운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즉, ‘조선민족 제일주의’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라는 기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⁷⁾

다. 실무(현지)지도³⁸⁾

김정일의 공식 실무지도는 1963년 10월 5일 평양소재 영화필림복사공장, 중앙 제2백화점을 시찰한 것이 처음이다. 이러한 현지지도가 1970년대 들어 개인우상화의 한 주요수단으로 변질되는데 있어서도 김정일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우선 초창기 실무지도를 할 때는 김일성과는 달리 자신이 당에서 맡은 선전선동부의 직책과 관련한 문학, 예술분야에 집중적으로 실무지도를 펼치다가 1970년대에 ‘당중앙’으로 일컬어지면서 북한의 최고권력 핵심에 자리하게 된 이후에는 주로 김일성의 현지지도에 앞서 제반상황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또는 사후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재점검하고 김일성의 현지교시의 관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김정일은 자신의 권

36) 김정일, 위의 글, p. 257.

37)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 pp. 297-304.

3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황재준, “북한의 ‘현지지도’ 연구-특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 105-111 참조.

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치·경제·군사 거의 전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장악해 나아가기 시작한다.

김정일은 경제부문에 대한 지도부터 시작하였는데, 그 계기는 1974년 2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부터이다. 김정일은 1979년부터 경제부문 이외에도 군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잦은 군부대 방문을 계기로 1979년 2월에는 전군의 주체사상화 관철방침을, 5월에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심화과제를 내놓았고, 12월에는 모든 장병들에게 '오중흡·김혁 동지에게 따라 배우는 운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했다. 이처럼 당권 장악과 군부의 장악을 통해 자신의 권력기반을 구축하는데 김정일은 실무지도를 적절히 활용하였던 것이다.

1980년대 이후의 김정일의 실무지도는 점차 김일성의 현지도의 특성을 답습해 가면서 김일성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됐고, 김일성의 현지도를 이상화의 수단으로 보다 강화시켰다. 예컨대, 이미 197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된 김일성의 현지도 사적지를 확대하고 김일성이 현지도를 했던 곳을 기념하는 기념보고회를 통해 김일성의 현지교시를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자신이 행한 현장시찰 등을 현지도가 아닌 실무지도로 낮춰 부름으로써 김일성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김정일의 실무지도는 비록 그 명칭에서는 김일성의 현지도와 차별성을 두었지만 실질적인 역할에서는 거의 김일성과 동일하게 되면서 생산단위의 전국적 모범화를 이끌어 내거나 '숨은 영웅들의 모범 따라 배우기 운동' 등을 주도해 나갔다. 『조선중앙년감』을 보면, 김일성의 현지도에 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시작한 것은 1978년도 판부터이며, 김정일의 실무지도에 관해 함께 언급

하기 시작한 것은 1982년도 판부터이다. 그리고 1991년도 판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지도”로 바뀌었다. 김정일이 행한 실무지도가 현지도라는 명칭으로 바뀐 것은 1994년도 판부터이다. 이때부터 “현지에서 지도” 또는 “돌아보시었다”라는 완곡한 표현을 쓰지 않고 김일성과 동일하게 현지도라는 용어로서 김정일의 실무지도의 위상을 한층 격상시켰다.³⁹⁾

김정일이 관련된 현지도에 대한 선전선동은 다분히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화하는 데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수령의 절대적 권위를 강화하면서 자신을 수령의 아들이 아닌 위대한 수령의 영도력을 계승할 수 있는 인물로 윤색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일 자신의 입지가 보다 강화되고 후계구도가 공식적으로 굳혀지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현지도에 대해서 철저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 이후부터는 김정일이 당사업과 각종 대형 건설사업 및 사적지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김일성은 경제부문에만 한정하여 현지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김정일도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현지도를 나갈 때는 반드시 당 조직지도부의 검열성원이 먼저 현지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사전검열을 진행한다. 이러한 사전검열은 현지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당 단위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검열을 통해 당 및 정부기관 관료들을 통제 및 제어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는데도 활용되었다.

39) 이것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도 유리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른바 ‘후광(後光)효과’를 의도한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이다.

라. 코포라티스트적 흥정

커밍스(Bruce Cumings)는 북한사회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정치문화의 총체적 특성을 밝혀 내고자 코포라티즘적 사회주의의 특징을 다른 코포라티즘과 비교하면서 분석하고 있다.⁴⁰⁾ 이 모델에서는 유기체적인 유대, 비유와 모델로서의 가족,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거대한 사슬, 아버지와 같은 역할의 지도자, 가족-공동체-국가 속으로의 개인의 흡수, 정치에서의 자유주의에 대한 적대, 문화의 현대성, 계급조직의 원리 등 조합주의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모델이 이러한 독특함을 지니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조선이 은둔의 왕국이었기 때문이며, 과거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⁴¹⁾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아버지 수령’, ‘민족의 최고의 두뇌’, ‘마음’, ‘우리 아버지’, ‘조국’, ‘위대한 마음’ 등의 유기체적 비유를 사용하여 부르는데 이는 종교적 요소가 결합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조합주의적 성격은 ‘모든 것은 사상의식 의해 결정된다’는 북한의 강조와 같이 주체사상의 숭배 등으로 표출되었다. 이밖에도 북한의 조합주의적 성격은 헌법에서도 나타나는데 북한의 헌법은 가족을 사회의 핵심단위로 정의하고 있다.⁴²⁾

40) Bruce Cumings,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Hagen Koo, 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p. 197-230.

41) 이를 세분하면, 첫째, 지도자에 관한 문제로 모든 사람들은 민족의 가장 훌륭한 이상을 지도자에게 투영시키기를 원하며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기를 원한다. 둘째,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핵심(nucleus)으로 표현되지만 때때로 골간(connotation of marrow)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중심(core)으로 그 자신을 둘러싼다. 셋째, 핵심그룹은 지도자의 가족이다. 넷째, 핵심그룹은 모든 유효한 정치권력을 갖는다. 다섯째, 지도자는 사랑과 유교의 고전적인 미덕인 자애를 베풀고 추종자들은 충성과 헌신, 찬양으로 보답한다.

42)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마. 신비화된 지도자의 이미지

카리스마적 지배를 해온 절대권력자일수록 자신의 사후에 대해서 걱정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개의 경우 후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김일성은 자신의 아들 김정일로의 권력이양이라는 세습적 방식을 택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바로 이 세습을 위해서 그는 일찍이 1960년대 후반부터 자신의 가계를 절대화하고 혁명화시켰다.

이러한 가계의 신화화의 기저에는 김정일의 권력부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배려가 깔려 있었다고 보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당시 김일성 가계의 혁명화는 주로 김일성의 부모인 김형직과 강반석이 위대한 공산주의자였으며 애국자였다는 신화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결론적인 메시지는 김일성이 혁명적인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바로 여기서 이 혁명적 가문에서 태어난 선천성에 대한 강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논리라면 혁명적인 조부모를 두고 항일유격대 지도자 김일성과 항일여전사 김정숙 사이에 태어난 김정일이야말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래 최적의 수령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령'의 후광만으로 김정일이 대중에게 미래의 수령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김정일 후계체제가 대외적으로 공개된 1980년대부터 북한 지도부는 김정일의 카리스마 구축작업에 나섰다. 이 작업은 이론적으로는 김정일을 모델로 한 후계자론의 완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천에서는 정통성과 카리스마를 가공한 그에 대한 개인숭배 캠페인으로 나타났다. 이 개인숭배 캠페인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1998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78조.

페인은 1982년 그에 대한 최초의 전기가 출판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 북한의 이데올로그들은 인민적 정통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먼저 그의 생애적 정통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항일유격대 대장 김일성과 유격대 전사 김정숙을 부모로 둔 이른바 '혁명적 가문'과 자신의 '비범한 천재성'을 부각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김정일 카리스마 구축을 위한 작업은 항일의 역사와 백두산의 이미지를 오버랩시킨 위에 김정일 출현에 대한 예언설적 믿음을 확산시키는 쪽으로 나아갔다. 이 시기부터 북한의 이데올로그들은 김일성 항일유격대의 소련 이동으로 1952년 2월 16일 소련 영내에서 태어난 김정일의 출생지를 백두산 산록의 밀영으로 조작하였다. 재일동포들이 쓴 김정일 전기에서 처음 나타난 '백두산 밀영 탄생설'은 김정일과 항일혁명 그리고 백두산의 이미지를 오버랩시키면서 오늘날은 체제 신화로까지 격상되어 있다.

'백두산 밀영 탄생'을 공식화하면서 북한의 이데올로그들은 1987년부터 구호나무 학습이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학습의 목표는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일이 미래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을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항일 선열들이 이미 예언했다는 담화를 주입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김정일이 후계자로 당·정·군을 장악하면서 체계화시킨 '혁명적 수령관'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은 일반 주민들에게 '수령'을 신비화하고 절대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⁴³⁾

43)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 pp. 238-242.

2. 김정일 정권의 정치구조

1) 遺産 : 김일성 시대 정치구조

가. 연합정권

김일성은 해방 직후 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과벌들을 권력구조 속에 용해시켜야 하는 과제에 봉착하였다. 국내 공산주의자들, 연안 독립동맹계열, 소련출신 한인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만주에서 김일성과 함께 항일투쟁을 했던 공산주의자들 등 다양한 세력들이 해방 공간에서 각축을 벌였다. 게다가 1946년 겨울에는 남한에서 활동하던 박헌영 등의 남로당 세력까지도 입북함으로써, 더욱 더 복잡한 경쟁구도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김일성의 대응은 이들을 끌고루 참여시킴으로써 통일을 위한 전역(戰役)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1946년 8월 북조선로동당을 창립한 후 1949년 6월에는 남조선로동당과 합당하여 '조선로동당'을 결성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구성에 이들을 끌고루 중용하였다.

당시 조선로동당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김일성이 선임되었고 박헌영과 허가이는 부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신설된 당비서에는 허가이, 이승엽, 김삼룡이 임명되었으며 정치위원회 위원에는 김일성, 박헌영, 김책, 박일우, 허가이, 이승엽, 김삼룡, 김두봉, 허헌이 선출되었다.⁴⁴⁾ 한편, 내각은 김일성을 수상으로 부수상겸 외무상에 박헌영, 부수상겸 산업상에 김책, 부수상에 홍명희가 선출되었

44) Dae-Sook Suh, *Korean Communism 1945~1980 - A Reference Guide to the Political System* (Honolulu: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82), pp. 321-322 참조.

고, 민족보위상에 최용건, 내무상 박일우, 농림상 박문규, 상업상 장시우, 교통상 주영하, 재정상 최창익, 교육상 백남운, 체신상 김정주, 사법상 이승엽, 문화선전상 허정숙, 국가검열상 김원봉, 국가계획위원장 정준택 등이 선출되었다.⁴⁵⁾

이 지도부의 인선은 내각을 맡고 있는 김일성과 내각 부수상과 외무상 및 대남혁명을 책임지고 있던 박헌영과 역할분담 차원에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허가이가 당무를 전담하는 제1비서를 맡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김일성은 이미 북한사회에서 유일지도자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당의 이데올로그들과 문학가들은 그에 대한 찬양에 열을 올렸으며 이 영향 속에서 김일성은 기층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민족의 영웅이자 유일지도자로 부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의 실제 권력도 어느 정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김일성의 절대적인 지지기반인 항일유격대 출신 중당 활동이나 인민정권의 중요 지도자로 나설만한 능력을 갖춘 인물은 기껏해야 김책, 최용건, 안길, 강건, 김일 정도로 그의 권력을 재생산해 내고 공고화시킬 수 있는 측근인력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인재부족으로 김일성은 노련한 국내 고참 공산주의자들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소련계 한인들을 대거 등용하였으며, 아울러 해외 항일무장투쟁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연안계의 지원을 받았다.

결국 김일성은 소련계 한인과 독립동맹 출신의 연안계 대부분의 지지 속에서 급속하게 유일지도자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소련계 한인이나 연안계의 김일성 지지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만주파, 소련계, 연안계의 연합에 의한 새로운 권력 중심의 형성의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관계의 일치에 의한 권력연합적인 성격이 컸다. 즉, 초기 북한정권은 '연합정권'의 성격이 강했던

45) 내각명단은 『조선중앙년감 1949』, p. 13.

것이다. 결국 김일성은 대중적 명망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이 관장하는 내각과 그의 항일유격대 동료들이 중핵을 이루고 있는 군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헤게모니를 관철시킬 수 있었으나 정작 당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연합정권'적인 성격은 한국전쟁 후 김일성이 경쟁자들을 축출하고 자신의 헤게모니를 강화시킴으로써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최소한 1968년까지 권력을 균점하려는 의도와 생각을 갖고 있었다. 비록 그러한 생각이 점차 약화되었지만 전통적인 공산주의 지도자인 김일성에게 권력의 일인 독점은 비공산주의적이라는 잠재적인 의식이 있었던 것이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의 제정은, 그러나 김일성의 유일권력구조에 대한 의지로 해석되며, 이 시기를 분기점으로 김일성의 연합권력구도에 대한 사소한 정도의 집착도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었다.

나. 당에 대한 의존 : 민주집중제

레닌에 의하면 공산당의 기본적 특징은 “사상의 권위가 권력의 권위로 전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의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⁴⁶⁾고 하여 ‘중앙집권제’를 강조하였다. 이때 중앙집권제란 당이 “단일한 규약, 단일한 당규율, 당대회 및 대회와 대회간에는 당중앙위원회를 선두로 한 단일한 지도기관을 가지며,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며 개개의 조직이 중앙기관에 복종하며 하부조직이 상부조직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⁴⁷⁾

46) 『레닌전집』 제6권, p. 291; 박동운, 『북한통치기구론』 (서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p. 114 재인용.

47) 박동운, 위의 책, p. 114.

조선로동당은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 당규약을 개정하고 레닌이 주장한 '중앙집권제'에 '민주주의'라는 접두어를 붙여 이를 당의 조직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 때 '민주주의'란 "당원 대중이 당의 건설문제를 결정하는 자유, 당원 대중의 적극성의 향상, 당원 대중을 당 지도에 참가시키는 것, 당원 대중 속에서 자기들이 당의 주인이라는 감정을 발달시키는 것"⁴⁸⁾으로서 김일성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민주주의 중앙집권제'(Democratic Centralism, '민주집중제')를 "광범한 대중들의 의사를 모아,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당지도부를 선거하며 그 지도부가 세워진 노선과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유일적으로 지도하는 것"⁴⁹⁾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칙'은 당규약 제11조에 "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의해 조직하며,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한다"고 한 규정과 당규약 제13조의 "각급 당조직은 지역 또는 생산 및 노동 단위에 따라 조직한다"는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48) 극동문제연구소 편, 『원전 공산주의 대계』 (1984), p. 980.

49) 극동문제연구소 편, 위의 책, p. 985.

당의 조직원칙 변화⁵⁰⁾

	주요 내용	비고
제2차 당대회	1) 당지도기관은 하층부터 상층까지 선거 2) 선거받은 당기관은 자기사업을 자기의 당 단체에 정기적으로 결산보고 3) 소수가 다수에 복종함 4) 각급 당 단체와 매개당원은 당중앙위원회 결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당 상급기관의 지시는 하급기관의 엄격한 지도가 됨 5) 당 상급기관은 일상적으로 하급기관의 사업을 지도검열함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 규정 없음
제3차 당대회	*위의 1)-5)항 유지 1) 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거하여 조직한다(추가) 2) 매개 당 단체는 자기의 지역적인 문제를 자립적으로 토의 결정(추가) 3) 각급 지도기관은 당적 지도의 최고원칙인 집체적 지도에 대한 레닌적 원칙에 엄격히 입각하여 자기의 활동을 전개한다(추가) 4) 당 지도기관 선거시 입후보자를 찬성 또는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당원들의 무제한적 권리 인정(추가)	당내 민주주의 강조
제4차 당대회	*제3차 당대회시 추가된 당내 민주주의 조항 일부 삭제	중앙집권 강조
제5차 당대회	* 제4차 대의 내용 유지 1) 당 당체는 당의 정책과 노선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수정) 2) 당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계통적 지도검열.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활동보고를 해야 한다(수정)	중앙집권 일층 강조
제6차 당대회	위와 동일	

50) 이종석, 『조선노동당연구-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p. 345.

이처럼 북한은 당 운영에 있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통해 당원의 '자주적 창발성'과 조직운영의 '중앙집권적 통일성'이라는 상호 배타적 요소를 통합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는 현실적으로는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민주주의적 방식이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적 방식보다 상급조직의 우위성을 설정한 규정에 근본적 이유가 있다. 즉, 당규약 제11조는 당의 '민주주의 원칙'을 천명함과 아울러,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는 조직우위의 원칙,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는 다수 지배의 원칙,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에 복종하는 상급당 우위의 원칙, 전체 당조직은 중앙위원회에 복종하는 중앙 지배의 원칙⁵¹⁾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보다 중앙집권적 성격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당규약 제20조는 당중앙위원회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및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당조직의 구성, 당조직의 활동방법과 기타 당 건설의 제반 문제와 다르게 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당중앙위원회의 절대적 권한을 설정해 놓고 있다. 또한 제13조에 "각급 당조직은 해당 지역 또는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립적으로 토의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곧이어 "이 결정들은 당의 노선과 정책에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결국 당의 조직원칙은 당은 모든 조직과 성원들을 중앙위원회의 지도 아래 두도록 하는 '중앙집권제'에 두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당은 수령의 영도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 당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실현하는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것이다.⁵²⁾

51) 강구진,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과 권력구조," 양호민 외, 『북한사회의 재인식』 (서울: 한울, 1987), p. 202.

다. 이데올로기의 엄밀성 강조 : 사이비 마르크스-레닌주의자
 잘 알려져 있듯이 북한을 움직이는 이데올로기는 인간중심의 철학임을 표방하고 있는 주체사상이다. 1998년 9월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만
 으로 보면 주체사상은 북한이라는 사회를 지도(guiding)하는 정교한 이데올로기처럼 보이며,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린쯔(Juan Lintz)와 스테판(Alferd Stephan)이 말하는 전체주의 체제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⁵³⁾ 그러나 북한의 주체사상은 외관상 정교한 이데올로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발전경험, 정치적 사건,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승계 및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등을 반영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의사(擬似)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주체’라는 담론은 애초에 북한이라는 현실 속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방책으로 제기되었다. 1955년에 발표된 김일성의 연설 ‘당사상사업에 있어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는 주체사상의 형성기점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설은 사상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업에 있어서 구소련과 중국을 무조건적으로 모방하는 풍조를 비판하는 것이었다. 즉 당간부들의 활동방식에 대한 교정을 목적으로 한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오늘날 체계화·정식화되어 나타난 ‘인간중심의 테제’도 없고,

52) 이항동, 『북한의 정치와 발전전략』 (서울: 대영문화사, 1994), p. 172-174.

53) Juan Lintz & Alfred Steph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북한혁명에 대한 이론적 규명도 없다. 다만 북한혁명은 북한의 실정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실천적 고민만이 있을 뿐이다. 물론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국가건설을 했고, 한국전쟁을 겪은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주체의 천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주체사상이 슈만(Franz Shurman)이 말하는 실천이데올로기로서 규정될 수 있다면 당시의 '주체'라는 아이디어는 이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었고, 바로 북한혁명의 실천적 고민이 주체라는 표현 속에 응집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실천적 맥락의 주체 담론은 1960년대 말까지 정치적·경제적 현실의 궤적과 함께 발전되었다. '정치에서의 자주,' '외교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구호는 1970년대 이후 주체사상을 체계화할 때처럼 한꺼번에 제시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하나씩 제기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1950년대부터 1960년대 말까지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상위의 이데올로기로 하면서 그것을 북한의 구체적 현실에 적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이다.⁵⁴⁾ 현실과 이념의 변증법적 관계가 주체사상의 초기형성에는 존재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발전된 주체사상의 철학이론화 작업은 그 이전에 주체사상이 견지하였던 정치이념, 혹은 정책노선으로서가 아니라, 과도한 이데올로기적 조작이고 체제유지 및 정책의 정당화를 위한 당위론적 도덕률을 집적시켜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령론' 및 '수령승계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은

54)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북한의 이데올로기, 즉 '김일성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최완규, "북한의 정치 이데올로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김일성주의," 앞의 책 (1996) 참조.

권력승계구도의 확립 및 '수령'의 권한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⁵⁵⁾ 따라서 주체사상이 김정일의 등장과 더불어 체계화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⁵⁶⁾ 그렇지만 주체사상의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수령'이 내린 결정은 정당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게 되고 자의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탈(脫)이데올로기화(de-ideologization)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⁵⁷⁾ 즉 이데올로기가 현실을 규정하고 현실이 이데올로기를 규정하는 변증법적 관계는 종언(終焉)을 고하고 이데올로기는 통치자의 자의적인 정책방향과 세계관, 그리고 멘털리티를 반영하고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라. 국가기구(인민정권)의 강조⁵⁸⁾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당과 국가의 관계는 일방적인 당의 지도에 국가는 종속되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당과 국가간의 구별이란 것이 거의 아무런 실질적인 의미도 갖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조선로동당은 의사국가(擬似國家, quasi-state) 또는 초국가(超國家, super-state)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양 기구의 핵심적

55)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황장엽의 증언이 도움이 된다.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또한 함택영, "주체사상과 북한의 국방정책: 자위노선의 업적 및 한계," 양재인 외, 『북한의 정치이념 주체사상』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pp. 157-159 참조.

56) 스즈키 마사유키,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유영구 옮김 (서울: 중앙일보사, 1994), 제3장.

57) 탈이데올로기화는 탈전체주의화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데올로기의 침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이 동유럽 체제변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사실에 대해서는 Andrezej Walicki, "From Stalinism to Post-Communist Pluralism: The Case of Poland," *New Left Review*, no. 185 (1991) 참조.

5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류길재, "조선로동당과 북한의 당-정관계," 『북한연구』 제2권 3호 (대륙연구소, 1991 겨울호), pp. 89-105 참조.

인물이 중복해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과 역할은 자연히 융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북한 당·국가체제에 있어서 국가기구⁵⁹⁾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었다. 제도적인 관점에서 1972년 신헌법을 통해 국가기구의 위상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지만 이후 1980년에 국가기구를 강조하는 경향은 정도와 차원을 달리한다. 1977년에 김일성은 ‘인민정권을 강화하자’하는 연설을 통해 인민정권이 해결할 중요한 과제로서 새로운 사회제도를 수립하고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인민정권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국가기관을 지칭하고 있는가에 대해 1978년에 행한 연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1978년 4월 20일에 행한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에서 김일성은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란 “도, 시, 군 인민위원장들과 행정위원장들,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 일군들”이라고 함으로써 인민정권이 보다 협소한 범주의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⁶⁰⁾

59) 북한에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민정권’과 ‘국가기구’라는 용어 사이에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구분이 명확하였다. ‘국가기구’는 “독재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국가기관들의 조직체계를 통틀어 말한다”고 함으로써 공산주의로의 과도기인 사회주의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행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기구는 “국가행정기관 및 사법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인민정권은 이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전체 인민의 통일되고 단결된 력량에 의거하고 있으며,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며, 그 특성은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인민자신이 자기 손으로 조직하였으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투쟁”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이 연설에서 그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에서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려면 반드시 사상교양과 함께 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아직 로동조건에서 차이가 있으며…사람들의 의식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 있으므로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로동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바로, 이러한 법적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⁶¹⁾ 즉 그는 북한에서 국가기관의 역할이 사회에 속하는 부문, 즉 각 개인들의 사적·공적 영역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이 연설에서는 인민정권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인민정권이 정치사상적인 측면의 활동보다는 주로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어느 정도 당과 기능분화를 전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1977년과 1978년의 연설을 통해 김일성은 1980년대 이후 국가에 대한 강조 경향에 시동을 걸어 비록 여전히 당에 대한 압도적인 강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욱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980년부터 1987년 사이에 김일성에 의해 행해진 주요연설은 대체로 인민정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시기 김정일의 연설이나 문헌은 당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⁶²⁾

60) 김일성,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선집』 제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37.

61) 김일성, 위의 글, p. 39.

62) 이 시기 사이의 문헌들은 모두 『조선중앙년감』과 『김일성 저작선집』 제9권에서 발췌하였으며, 김일성의 당·국가제도에 관한 연설은 5건, 김정일의 문헌은

여기에 나타난 인민정권의 역할을 보면, 첫째,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인 정치를 통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역할, 둘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를 대표하여 주는 역할, 셋째,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위하여 조직하는 역할, 넷째, 인민의 물질 문화생활을 책임지는 호주의 역할, 다섯째, 지속적인 계급투쟁을 통해 인민대중을 보호하는 역할 등으로 묘사된다.⁶³⁾ 이러한 역할 중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경제건설이다. 사회주의사회가 건설된 후에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공고화되어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다.⁶⁴⁾

이와 같이 '계속혁명론'의 입장에 입론하고 있는 북한의 과도기론의 맥락에서 볼 때,⁶⁵⁾ 인민정권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일성은 1982년 4월 14일 당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의 합동회의에서 한 연설을 통해, 국가는 사회주의로부

7건을 선택하였다. 김일성의 문건은 다음과 같다. "정무원의 사업방향에 대하여" (1982년 4월 6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1982년 4월 14일), "공화국정권은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며 인민대중의 통일 단결의 기치이다" (1983년 9월 9일), "조선로동당의 력사적경험" (1986년 5월 31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1986년 12월 30일). 김정일의 연설과 문헌은 다음과 같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1982년 3월 31일),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1982년 12월 15일),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트·드»의 진용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1982년 12월 15일),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1983년 5월 3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86년 7월 15일),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1987년 9월 25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1987년 10월 10일).

63) 김일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김일성 저작선집』 제9권.

64) 김일성, 위의 글.

65) 북한의 과도기론에 대해서는 양호민,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북한사회의 재인식』 (서울: 한울, 1987), pp. 121-142.

터 공산주의로의 과도기에 경제건설과 사회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⁶⁶⁾ 또한 김정일은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인민정권을 강화하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 규정하시었습니다"라고 하여 국가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구조

가. 엘리트의 연출 강조 : 사인화된 권력구조의 항구화

황장엽 전 조선로동당비서는 북한을 "민족주의 간판과 사회주의 간판도 걸지만 민족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며 철저한 개인독재라는 점에서 봉건전제주의의 현대판"이라고 규정하여 우리를 놀라게 한 바 있다.⁶⁷⁾ 물론 그러한 독재성이 국가와 인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망명을 택했겠지만, 오래 동안 북한체제와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했던 고위층 인사가 북한을 "봉건전제주의의 현대판"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북한의 혁명과 사회주의이행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북한의 철저한 개인독재가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제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전체주의 체제하에서 당과 국가의 운영원리는 제도화되어 있

66) 김일성,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김일성 저작선집』 제9권.

67) 황장엽 비밀논문, "조선문제."

다. 그러한 제도화는 사회의 지도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틀을 벗어나 있지 않다. 북한 역시 공산당의 지도적 원리라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1980년 채택된 당규약은 “조선로동당”이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부대이며 전체 근로대중 조직체 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이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당의 조직원리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당규약에는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면서도 동시에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당 운영원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원리와 김일성의 독특한 지도원리가 혼재되어 법제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제도적인 차원의 얘기이다. 실제적으로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당조직이나 국가기구가 개별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그러한 사적인 연계야말로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을 좌우하고 있다. 당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은 당중앙위원회나 정치국, 당대회의 역할과 권한이 감소하는 대신에 비서국이나 당중앙위원회 전문부서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법적인 측면을 넘어서 관행의 측면에서 노골화되고 있다. 만일 김정일이 대남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면 대남 담당비서와 중앙당 3호청사에 있는 대외연락부(구 사회문화부), 통일선전부, 조사부, 작전부 등과 함께 상의하고 처리하면 된다. 법제도상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당정치국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국가기구나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정

책결정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일과 해당 부서의 직접적인 연계에 의해서 결정되고 집행된다. 각종 정책결정기구나 회의는 김정일과 해당 부서가 결정한 내용을 추인하여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체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며, 1972년 사회주의헌법의 채택은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⁶⁸⁾

나. 정책집행의 강조 : 관료주의화⁶⁹⁾

북한의 정책결정을 좌우하는 제일의 요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김정일이다. 모든 결정은 그에 의해서 승인되어야 시행될 수 있다. 북한의 정책결정 메카니즘을 포괄하는 체제(regime)의 특징은 과거에도 공산주의적 전체주의체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1970년대를 지나 오면서 북한은 전체주의체제로부터 권위주의체제로 이행해 왔다고 보인다. 전체주의로부터 권위주의로 이행했다는 것은 정책결정 체계가 단순화되어 정책이 일인 또는 소수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며, 정책결정기구보다는 정책집행기구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⁷⁰⁾ 더욱이 제도적인 조직들보다는 사적으로 연

68) 이미 1950년대 전후복구기의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 이와 같이 최고지도자와 생산현장의 인민들이 직접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이른바 “수령의 직할관리체계”가 등장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북한적 정치현상의 경제적 토대를 분석한 이 연구는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70):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이다.

6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류길재, “김정일 정권하 북한의 개방정책과 안보정책,” 『전략논총』 제9집 (1998), pp. 91-94 및 “김정일 정권하의 북한체제와 체제변화 가능성 검토,” 『국가전략』 제3권 1호 (세종연구소, 1997), pp. 235-236 참조.

70) 류길재, “김정일 정권하의 북한체제와 체제변화 가능성 검토,” 『국가전략』 제3

결된 인물들에 의해 일종의 '측근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북한 정책결정의 특징이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의 당-국가엘리트들은 1970년대와는 달리 새로운 경향을 띠게 되었다. 우선 당관료와 국가관료간의 차별성이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고위 당-국가기구에서는 당관료가 국가관료를 겸직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관료들이 다루어야 할 업무가 복잡해지고 특히 경제문제와 대외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정치적 충성심과 사상을 기준으로 충원되는 최고위직과는 달리 고위 및 중·하위 관료들은 자신의 부서가 추진하는 업무의 효율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업무의 성과도 충성심을 입증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종의 기능분화와 업무의 세분화·다양화에 따르는 제도적 이익(institutional interests)의 증대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된 이후 김일성은 국가, 즉 북한식 용어로 말하자면 '인민정권'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또한 인민정권의 역할에 대해 당의 과도한 개입을 자제토록 하는 메시지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⁷¹⁾ 이것은 물론 국가의 역할과 권한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의 분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부문의 관료들간에 갈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쟁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료들간의 갈등도 크게 보면 당과 국가기구간의 차별성에서 연원하지만, 좁게 보면 당내에서도 권한이나 권력이 강력한 부

권 1호 (1997년 봄호) 참조.

71) 류길재, "조선노동당과 북한의 당·정관계" 참조.

서의 관료들과 그렇지 못한 부서들간의 관계나 국가기구 내에서도 업무의 중복관할로 인한 부서별 관료들간의 관계가 예전과 같이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⁷²⁾ 이것은 업무의 다기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⁷³⁾ 이것은 집단 정치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집단적 이익의 증가와 이를 정책결정과정에서 투입시키려는 이익표출(interest articulation)이나, 엘리슨(Graham Allison)이 말하는 관료정치모델의 초보적 형태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⁷⁴⁾ 비록 그러한 과정이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가능하면 최고지도자의 의사에 수렴하려는 거의 맹목적인 충성심의 경쟁과정이지만, 초보적인 형태의 이익정치가 북한에서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당규약과 이후 전개된 상황, 그리고 1998년 헌법개정을 고려하여 북한의 권력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정치국이나 당중앙위원회와 같은 사회주의적 집단정책결정기구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다

72) 몇 년 전에 귀순한 고영환 북한 외교부 과장은 이에 대해 재미있는 증언을 하고 있다. 예컨대, 외교부와 함께 외교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국가보위부로서 이 양부서간의 갈등은 참여한 외교업무에서 종종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해외 각지에 파견 나가 있는 외교관들은 역시 현지에서 파견된 국가보위부 인사들에 의해 감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시사토론』 (문화방송, 1991년 9월 27일 방영).

73)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을 각부서간의(또는 부서 내의)조직적 임무의 갈등, 에토스, 구조, 그리고 자원할당을 조정하는 협상과정(bargaining)으로 분석한 것으로는 Kenneth Lieberthal and Michel Oksenberg, *Policy Making in China: Leaders, Structures, and Process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참조.

74) H. Gordon Skilling, "Interest Groups and Communist Politics," *World Politics*, vol. 18, no. 3 (April 1996); Graham T. Allison,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Boston: Little Brown, 1971).

는 점이다. 새로운 당규약은 정치국 안에 상무위원회를 두어 당조직은 더욱 피라미드형태를 띠게 되었으며, 인적 구성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총원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 김정일 1인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어서 실질적인 내용은 권력독점의 경향을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더욱이 정치국 구성원들은 세대교체와 김정일의 등장을 반영하여 원로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인물들로 점차 교체되어 갔다. 당규약에는 1년에 두 번씩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전원회의가 1980년 이전만 해도 대체로 이러한 규정에 따라 거의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특히 후반에 들어와서는 회의 개최가 지연되어 6차 당대회 이후 1995년 말까지 16년 동안 총 21회가 개최되었을 뿐이다. 아마도 다른 회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기간 동안 적어도 30회 이상의 전원회의가 개최되어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김일성 사망 이후 지금까지 전원회의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김정일의 정책결정방식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둘째로, 반면에 비서국의 권한은 강화되었다. 이미 5차 당대회 시 채택된 당규약에 따라 비서국의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당중앙위원회의 전문부서를 일상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당의 중추기관으로서 정치 전반에 걸쳐 당의 지도·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8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구에서의 변화는 더욱 두드러진다. 권력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형식상이나마 '집단지도체'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정헌법에서 '국가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한 데다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에게 국가 대표의 지위를, 그리고 '내각' 총리에게 정부 대표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요약하자면 김정일이 등장한 1980년대 이후 제도의 변화는 첫째,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사회주의로부터 주체사상으로 강조점이 옮겨가면서 '수령'의 권위가 절대화되어 임의적 정책결정 권한이 증대하게 되었다. 둘째, 법규의 측면에서 이와 같은 수령의 권한 증대를 보좌할 수 있도록 권력구조가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당과 국가기구에서 집단적 의사결정을 상징하는 기구들의 위상이 법규상에서 또는 충원된 엘리트의 면모에서 하락의 경향을 보여 주었다. 군부와 관련해서도 국방위원회를 헌법개정 이전인 1990년에 설치하여 이를 통해 모든 "무장력"을 장악하고,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 셋째,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부서들의 권한이 증대하게 되었다. 이것은 정책결정기구의 약화와 더불어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상인 바, 당에서는 비서국, 국가에서는 내각, 군사부문에서는 국방위원회 등의 권한 강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요컨대 김정일 정권 하의 북한체제는 통치권자인 김정일을 정점으로 각 분야의 정책집행부서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과거 상층조직들이 인적 중복을 통해 상호 연계되던 것과는 달리 이들간에는 횡적인 연계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즉 김정일을 정점으로 그 아래 각 정책집행부서들은 상호구획화(compartmentalization)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기관본위주의'를 더욱 참여화시키도록 하는 조건이 되었다.

다. 강제의 강조 : 안보기구의 강화

김일성 사망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특히 사망 이후 김정일 정권의 권력구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군이다. 군은 1970년대

초에 등장한 '수령제' 정치체제 하에서는 배제되었던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⁷⁵⁾ 그 이유는 김일성 자신이 군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⁷⁶⁾ 1960년대 말 군내 일부 '파벌'에 의해 저질러진 도발적인 행동으로 군에 대해 일종의 불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은 사회주의 체제의 군 일반이 갖는 혁명투쟁을 위한 계급적 무장력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동시에 최고지도자에 대한 보위를 담당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후자의 역할은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1978년부터 북한이 김일성에 의해 1932년 만주 안도현에서 항일유격대가 창설될 날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기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김일성의 혁명적 항일투쟁을 오늘날의 북한 국가의 정통성을 담보하는 사건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김일성을 계승하는 김정일 역시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성을 견지하기 위한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한 군은 김정일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조직이어야 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1973년 당조직과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비서로 출발하여 74년에 당정치국 위원을 겸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당비서국을 총괄하여 지도하였다. 그가 1991년에 최고사령관직과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은 당의 범위를

75) '수령제' 정치체제란 개념은 북한체제의 특징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사용한 표현이다. '수령제'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스즈키 마사유키, 앞의 책과 류길재, “북한 '수령제' 권위주의체제의 등장에 관한 연구,” 『통일경제』, 1997년 6월호 참조.

76) 김일성은 해방 초기에도 자신을 정치인보다는 군인으로 규정하기를 즐겨 했으며, 그 배경에는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했던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김정일이 군사중시사상을 천명하고 항일유격대를 본받자는 구호를 끊임없이 교의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단순히 안보논리나 김정일이 자신의 취약한 군 경력을 만회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맥락은 항일무장투쟁이 남한에 대해 정통성의 우위를 내세울 수 있다는 데 있다.

넘어서 군과 국가기구의 최고직위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김정일의 군 장악과 함께 군을 당 이상으로 자신의 권력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6년 12월 김정일은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식에서 “오늘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 군대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자주 인민군 군부대를 현지지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가 그렇게 하려는 까닭은 김일성이 생전에 김정일에게 “절대로 경제사업에 맡겨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군대의 사업이 사회의 사업, 즉 당사업보다 잘 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하다.⁷⁷⁾ 요컨대 그는 동구사회주의체제가 몰락하고 북한의 식량난 등 경제위기가 가중되면서 군대야말로 북한 체제의 보루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북한의 군대는 김정일 정권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경제적·군사적·안보적 기반이다. 위의 연설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군대의 “정치일꾼들”이 “사회의 당일꾼들”보다 당사업을 더 잘한다는 것이 김정일의 인식이다. 또한 북한의 군대는 북한경제의 대규모 인프라 공사에 투입되는 노력(勞力)집단이며, 군수공업을 통해 무기를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제집단이다. 또한 국가보위부나 사회안전부를 통해 체제유지를 위한 체제안보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한다. 순수한 국가보위 역할은 북한 군대에 게 최소한의 역할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군대는 국가기구내의 핵심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⁷⁸⁾ 군대가 이와 같이

77)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78) 이와 유사하게 놀란드(Marcus Noland)는 북한의 군수경제가 중앙계획 밖에 위치해 있으므로 “아우타르키 내의 아우타르키”(autarky-within autarky)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 Noland, “Prospects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Dae-Sook Suh and Chae-Jin Lee,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오늘날 북한 사회의 동원이 군대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인민들은 군인처럼 행동하고 사고할 것을 요구받는다. 지도자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총폭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원방식은 과거 천리마운동이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특정한 집단인 군대가 수행하는 사업방식이 전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며 인민들이 배워야 할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⁷⁹⁾

3) 정치구조의 개편과 국가정체성의 변화

가. 1998년의 헌법을 통한 정치구조의 개편

정치체제는 명문화된 제도와 정치구조가 개편되면 함께 변화될 수 있다. 체제의 변화는 이미 1972년 헌법개정과 함께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벌써 그러한 과정이 지난 27년 동안 벌어졌다.⁸⁰⁾ 그 결과 두 차례의 후속 헌법의 개정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1998년 9월의 헌법개정에 나타난 정치부분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⁸¹⁾

북한은 1998년 9월 5일에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개편 및 인사개편을 마무리하고 명실상부한 '김정일시대'를 열었다. 김정일시대의 공식개막을 알리

(Boulder and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 1998), p. 34.

79) 이런 의미에서 군대를 중시하려는 김정일의 의도를 단순히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화하려는 수세적 공세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좁은 해석이다.

80)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류길재, "김정일 정권하의 북한체제와 체제변화 가능성 검토" 참조.

8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고유환,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과 김정일정권의 발전 전략," 『국제정치논총』 제38집 3호 (1998) 참조.

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북한은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고 김일성의 유훈을 법제화한 이른바 ‘김일성헌법’을 수정 헌법으로 채택 공포하였다. 그리고 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⁸²⁾ 정무원을 내각으로 바꾸는 등의 권력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를 통해서 북한은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그를 실질적인 국가 수반이라고 칭함으로써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마무리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이루어진 국가 권력구조 개편⁸³⁾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석제를 폐지하고 내각제를 부활하여 국가 통치권력의 기능적 업무분담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상·군대사업은 국방위원회 위원장(김정일)이, 대외·외교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김영남)이, 그리고 대내·행정경제사업은 내각 총리(홍성남)가 각각 책임을 지는 업무분담 형태를 취한 것이다. 과거 국가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가지고 있던 권한과 임무는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으로 기능적으로 분산되었다. 국가 수반의 권한과 임무는 국방위원회 위원에게로, 외교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국방을 제외한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및 책임은 내각으로

82) 김정일이 개정 헌법에서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통해서 북한의 실질적인 국가 수반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의도를 고찰한 것으로는 고유환, “북한의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개편 분석,” 『통일경제』 1998년 9월호, pp. 6-8.

83) 북한 당국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김정일의 사상과 정치를 실현해 나아갈 수 있는 ‘혁명적인 국가기구체계’를 정비하였다고 하면서 그들의 국가정치체제는 김일성이 개척한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아가기 위한 계승성 있는 정치체제이며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해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정체체제’라고 주장한다. 『로동신문』, 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1999년 1월 1일 공동사설,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각각 이관되었다.

개정 헌법에서 국가 수반에 해당하는 직위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상으로는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직책이지만(헌법 제102조), 실질상으로는 “나라의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는 국가 최고직책”⁸⁴⁾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식상·외교상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헌법 제111조).⁸⁵⁾ 그리고 내각 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헌법 제120조)고 함으로써 북한의 행정부를 이끌면서 행정경제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권력구조의 개편은 국가 권력의 분산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김정일의 정치적 필요와 통치스타일을 반영한 역할 분담의 성격이 강하다. 난관에 처한 행정경제사업은 내각으로 이관하고, 의식상의 행사가 많은 대외사업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김정일은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대외적인

84)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양형섭 대의원(전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개회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 영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라는 것이다. 새헌법에서 밝힌 국방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은 구헌법과 큰 차이가 없지만,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국가기구 체계의 최상위직으로 국정전반을 이끌어간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국가수반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은 군사우위의 위기관리체제의 지속(군사국가화 또는 병영국가화)을 의미한다.

85) 북한은 이번 헌법개정에서 과거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개편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케 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1948년 헌법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가 갖는 임무와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구소련의 경우도 최고 소비에트 간부회 의장이 소련의 의식상의 국가 원수로 활동한 바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공식활동을 피하려 한다. 또한 이러한 권력구조 개편은 김정일의 사상·군사 중시 의지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김정일은 '후계 수령'으로서 당총비서와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에 전념함으로써 대내적인 사상결속과 군사중시의 사회체제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예외국가(Exceptional State)의 등장

1998년의 헌법의 개정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마침내 북한이 일련의 과도기를 종식하고 정상국가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⁸⁶⁾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유혼통치'로부터 벗어나서 김정일 자신의 색깔을 가진 정책을 추진하는 것, 군중심적인 통치를 탈피하여 당중심적인 통치로 복귀하는 것, 국가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내각에 힘을 실어주는 것, 무엇보다도 헌법을 개정하여 "정통 사회주의적 국가권력 구조로 부분적으로 회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⁸⁷⁾

그러나 과연 그런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1998년 9월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이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의 회귀를 의미하며, 거시적으로 볼 때 정상국가화로 볼 수 있는가? 실재는

86) 많은 북한전문가들이 이와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이종석, "북한의 권력구조 재편과 대남전략," 한국정치학회 주최 학술회의 『남북협력과 국가안보』 (1998년 11월 14일, 외교안보연구원); 와다 하루끼(和田春樹)는 자신이 창안한 '유격대 국가(Guerrilla Unit State)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정규군 국가(Regular Army State)로의 회귀를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 정규군 국가는 정상국가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Wada Haruki, "The Structure and Political Culture of the Kim Jong Il Regime: Its Novelty and Difficulti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 *North Korea in Transition and Policy Choices: Domestic Structure and External Relations* (1998년 5월 28일-29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87) 이종석, 앞의 글, p. 4.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국가발전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교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서의 국가발전단계를 보면 1947년~1958년의 국가형성기, 1959년~1972년까지의 국가공고화기, 1973년~1992년의 국가성격의 변화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형성기는 틸리(Charles Tilly)와 만(Michael Mann) 등이 지적하는 것처럼 합법적 폭력조직으로서의 군사기구와 대내적 정당화기제를 갖춘 근대국가의 외형적 틀을 갖추어 나가는 한편, 국가행위자의 통합이 이뤄졌던 시기이다.⁸⁸⁾ 국가공고화기는 국제관계에서 대외적 주권을 행사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국가운영의 제도적 틀을 완비해 나가는 한편 권력승계를 준비해 나가는 시기였다. 국가성격의 변화기는 사회주의적 당-국가체제에 변화를 가함으로써 사인화된 개인의 권력과 권위를 공적 정치제도로 환원시키려는 시도가 벌어졌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정치체제에 심대한 변화를 가했다. 당의 정책결정과정은 정치국의 위상 약화와 비서국의 위상 강화에서 보듯이 형식화되었으며, 심지어 무력화되었다. 1972년 헌법에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규정되었던 중앙인민위원회는 1992년 헌법개정을 통해 그 부속기구인 국방위원회에 사실상 그 자리를 넘겨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보다도 정책결정과정에서 드러난 변화는 더욱 심대하였다. 그것은 기존의 제도적 틀에 의해 보장되었던 국가기구들간의 정교한 역할관계가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의 코포라티스트적 대개양식에 의해 새롭게 규

88) Tilly, “War Making and State Making as Organized Crime,” Peter B. Evans, et al, eds., *Bringing the State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Mann, *The Source of Social Power: Volume II, The Rise of Classes and Nation-States, 1760-19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정되었다는 것이다.⁸⁹⁾ 각 기구들은 더 많은 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정일과의 사적 연계를 통한 충성경쟁을 시도하며, 김정일에 의해 특권을 얻게 되면 타 기구들에 대해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기구들간의 제도적 배열은 흐트러지게 되었으며,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1992년 이후의 체제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 시기가 크게는 국가성격의 변화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앞선 시기, 즉 1972년부터 1992년까지 진행된 국가성격의 변화를 제도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시기로 이해된다. 즉 20여 년간의 제도적 실험을 거친 후 몰아닥친 대내외적 시련 속에서 북한 나름의 위기돌파를 위한 정치구조의 변용을 시도한 것이다. 그 변용의 요체는 군중심의 위기관리체제의 제도화이다.⁹⁰⁾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와 국방위원장의 위상에 대한 재해석, 이른바 “선군혁명사상”이나 “선군혁명영도”라는 담론의 등장,⁹¹⁾당의 군대로부터 수령의 군대로의 군의 위상

89) 키밍스는 이미 북한을 코포라티즘을 개념화하여 설명한 바 있지만, 그가 말하는 코포라티즘은 너무 추상적이거나 거시적이어서 현실을 설명하는 적절한 개념이 아니다. Bruce Cumings, *op. cit.*, pp. 197-230. 여기서 코포라티스트 매개양식은 슈미터(Phillippe Schmitter)나 슈테판(Alfred Stephan)이 말하는 바와 같이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와 각 집단간들의 구체적인 매개양식, 즉 설득, 후원, 경쟁에 의한 통제양식을 의미한다. 상세한 논의는 류길재, “북한체제 ‘변화론’의 재고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국 정치·사회의 새 흐름』 (서울: 나남, 1993) 참조.

90)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서동만, “북한 정치체제 변화에 관한 이론,” 『정치비평』 1998년 가을·겨울호, pp. 130-138 참조. 서동만은 북한의 위기관리체제를 “최고사령관체제”로 비유한다.

91)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군 창건 66주년인 1998년 4월 25일을 기념한 노동신문 사설이다. 사설은 이 용어를 언급하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의 위대한 구상에 의하여 먼저 군대가 창건되었으며, 그에 기초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가 가장 빛나게 해결되어 왔다”고 말하고 이것이 김일성의 선군혁명사상의 위대한 승리라고 주장했다. 김정일도 “수령님의 혁명투쟁역사는 군대를

재정립⁹²⁾ 등은 위기관리체제가 상당히 명확한 제도적 틀의 변화를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볼 때 북한이 단순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다시 과거의 사회주의 당-국가 시스템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는 것은 1972년 이후 진행된 국가변용 과정을 경시했거나, 아직도 북한의 사회주의 당-국가 시스템으로 보려는 관행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북한 당국이 동구사회주의체제 몰락을 보면서 제기했던 수많은 비판과 이와 관련하여 군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근거를 공식 매체를 통해 발표했던 사실로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1998년 개정 헌법이 국가운영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근거로 자주 제시되는 것이 국정운영의 책임 분산, 심지어 권력의 분산인데 이는 북한 국가에서 차지하는 내각의 역할로 볼 때 기능의 위임에 불과하다.⁹³⁾

먼저 창건하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고 이끌어오신 선군혁명영도의 역사"라고 말했다고 한다. 『내외뉴스』 1998년 12월 10일. 특히 군대가 먼저 창건되고 그에 의해 북한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1978년부터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을 1948년에서 1932년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과정은 이미 1970년대부터 착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김정일의 정치방식인 '선군혁명영도'의 기원을 김일성 주석 사망 이듬해인 1995년 1월 1일의 군부대 시찰로 잡고 있다. 『연합뉴스』 1999년 5월 27일.

92) 유영구, "북한의 정치-군사관계의 변천과 군내의 정치조직운영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4권 제3호 (통권 제11호, 1997).

93) 서동만, 앞의 글. 최근 조창덕 내각 부총리는 내각 개편 이후 경제지도사업에서 개선된 것이 많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우선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가 오래 실현돼 경제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지도, 통일적 지도가 더 잘 보장되고 있으며 내각과 위원회, 성 등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규율이 보다 강하게 섰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제1176호(1999년 8월 20일~8월 26일), p. C나2. 이러한 연명으로 볼 때 경제관리체제에서 내각이 구 정무원보다는 많은 권한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사업이 잘 되는 이유

필자가 볼 때 북한의 국가는 정상국가로의 회귀보다는 일종의 예외국가의 고착 또는 예외국가의 정상화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외국가 개념은 폴란차스(Nicos Poulantzas)가 말하는 대로 자본주의 위기시 등장하는 위기관리적 성격을 갖는 국가이다. 그것은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을 분리하고, 지배계급이나 분파로부터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향유하고 있는 국가이다.⁹⁴⁾ 폴란차스의 개념이 북한에 정확하게 부합되지는 않지만, 정치적 위기와 혁명적 상황을 구분하여 정치적 위기 시에 국가가 자신의 모습을 변용시키는 동시에 정권의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려 한다는 논리는 북한에도 원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예외국가의 하위 정권형태로 보나파르티즘, 군사독재, 파시즘을 열거했지만 북한의 경우는 보나파르티즘과 군사독재가 결합된 수정된 형태의 예외국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추구하는 정책방향은 앞서 밝힌 대로 국제환경적 상황을 포함한 객관적·구조적 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지만, 국가의 성격과 정치제도의 제약을 벗어나서 결정되지 않는다.⁹⁵⁾ 정치지도자(국가행위자)의 의도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역시 국가의 성격과 정치제도의 제약 하에 존재한다. 다

가 중앙의 지시에 과거보다 힘이 실려 있기 때문이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시적으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94) Poulantzas, *Fascism and Dictatorship* (Verso, 1970), p. 313.

95) 기본적으로 북한에서의 예외국가의 등장은 국가사회주의와 '수령제' 권위주의라는 두 가지 기본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변화라기 보다는 변용(metamorphosis)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예외국가로서의 북한의 국가성은 제도적 틀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정책선택의 폭을 매우 제한시키며, 정책의 변화를 위해 부분적인 제도적 수정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예외국가란 결국 국가가 추구하는 국가 목표의 달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가 국가 목표와 배치되거나 모순될 때 정책은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 말해서 김정일의 정책정향도 제도적 틀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행위자는 기본적으로 정권의 제도적 틀을 설정할 때 이미 자신의 협애한 이익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국가행위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치적 대응을 시도한다. 이 경우 최우선적인 목표는 권력의 유지와 권력 유지를 위한 제도적 틀의 보존이다. 더구나 통치자와 국가가 일체화되어 있는 북한의 경우 지도자의 의도는 곧 국가의 의도로 파악될 수 있다. 물론 사소하지만 기술적인 차원에서 최고통치자인 김정일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 없다. 그의 퍼스낼러티 분석이나 심리학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북한의 대내외 정책은 예외국가라는 제도적 틀을 유지함으로써 정권안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정된다는 것이다.

3. 김정일 정권과 개혁·개방

1) 북한 경제난의 심화 : 인보와 경제위기의 재결합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북한 GDP 추정결과에 따르면 1998년중 북한의 실질 GDP 기준 경제성장률은 -1.1%로 1990년 이후 연속 9년째 감소추세가 지속되었으나 전년의 -6.8%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건설업 등 대부분의 산업이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농림어업 부문이 전년의 큰 폭 감산에 따른 반등으로 증가하고 제조업은 감소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⁹⁶⁾ 그러나 북한 경제의 위기가 극

96) http://www.bok.or.kr/kobank/owa/act5r?i_lp=periodic&i_top=econews&i_no=1379. 인터넷 사이트 한국은행 보도자료.

복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GDP성장률	-4.2	-1.8	-4.6	-3.7	-6.8	-1.1
농 립 어 업	-7.6	2.7	-10.5	1.0	-3.9	4.2
제 조 업	-1.9	-3.8	-5.3	-8.9	-16.8	-3.3
건 설 업	-9.7	-26.9	-3.2	-11.8	-9.9	-11.4
서비스부문	1.2	2.2	1.5	0.8	1.1	-0.7

북한 경제 침체의 근본적 원인은 먼저 그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체제는 북한 정부수립 당시 동구사회주의체제의 종주국이었던 구소련의 경제체제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북한은 정부수립 이전에 이미 이러한 체제의 도입을 시작했고, 한국전쟁 이후 더욱 강화하여 1958년에 완료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문제는 다른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체제의 결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⁹⁷⁾ 그러나 북한의 경우, 구소련보다 더욱 경직된 스탈린식 경제체제를 고수해 옴으로써 체제가 가진 문제점이 북한에서는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하여, 1980년대 말에 시작된 동구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은 이미 내리막길을 들어선 북한의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말았다.⁹⁸⁾

97) 하상식, "경제체제 개혁과 정치적 변화-북한의 개혁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37집 2호 (1997), pp. 168-169.

98) 최근 북한의 경제위기 및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은 김연철, "체제전환기 북한의 사회주의: 현황과 전망," 『동향과 전망』 1997년 가을호; 김연철, "김정일시대의 북한: 과도기의 정치경제," 『경제와 사회』 창간 10주년 기념호 (1998)

북한의 가장 큰 딜레마는 당장 물질적인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파탄상태의 경제이다. 다른 국가와는 달리 북한경제는 한 분야에 대단히 치우친 왜곡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방대한 군사복합체의 존재이다. 이는 곧 경제의 불균형발전을 의미하는 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경공업의 낙후와 중화학공업의 지나친 비대화로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자연히 국민후생은 질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왜곡된 구조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됨으로써 이제는 자력으로 이를 시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북한의 경제가 상기의 구조적 모순을 지니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의 영향으로 피할 수 없었던 남한과의 극단적 대치,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한 무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북한의 지배층으로 하여금 안보 우선의 거의 편집증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사고는 당시 그들 영토의 끝 부분에 해당하는 동북아에서의 확실한 교두보가 필요했던 구소련의 이해와 일치하게 되었고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국가인 구소련의 경제체제가 북한에 거의 여과 없이 인입되게 됨으로써 거의 유례가 없는 기형적인 북한의 경제구조가 형성된 것이다.⁹⁹⁾

겨울): 김재한, “북한체제의 대내적 위기와 대외적 대응,”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 박형중, “사회주의 경제의 체제전환전략: 급진론과 진화론-동유럽과 중국 개혁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참조. 북한의 이러한 경제위기 중 가장 심각한 것은 1995년부터 본격화된 식량난이다.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해마다 수많은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식량을 찾아 중국으로 탈북하는 북한 주민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식량난은 북한의 체제위기의 가능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중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강정구·법륜 엮음, 『1999 민족의 희망찾기』 (서울: 정토출판, 1999) 참조.

99) “한반도의 분단과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는 유례없는 규모의 물자 축적과 100

북한은 특히 1960년대 초반부터 자주국방이라는 기치 하에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한국에 군사정부가 들어서고, 월남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함으로써 서방과 공산진영의 또 다른 중요한 접전지였던 동남아에서 위기가 고조되었으며, 중국과 구소련간의 갈등이 불거짐으로써 공산진영이 분열되는 등 이러한 외부적인 영향들이 새로운 군사정책의 중요한 원인이었다.¹⁰⁰⁾ 이후 북한의 군사비는 급속히 증가하게 되고 1967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예산에서 군사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연평균 4.3%에 불과했던 데 반해 1967년과 1970년 사이에는 그 비율이 연평균 무려 31.2%를 기록함으로써 거의 10배 가까운 신장세를 보이게 되었다.¹⁰¹⁾ 이후 이러한 추세에 별다른 변화가 없이 오랜 세월이 지남으로써 북한 경제는 구소련과 흡사하게 사실상 거대한 군산복합체에 기반한 대단히 특이한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결

만의 강력한 군대를 유지할 필요성을 정당화시켰다. 대한민국의 속적 이미지와 전쟁준비 때문에 북한은 병영화되었다. 아시아의 어떤 소련의 맹방에서도 이런 종류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북한은 결국 한반도의 냉전과 얽힌뿐만 아니라 소련 군수산업과의 밀접한 관계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군사 위주의 긴밀한 양국관계는 북한의)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국가경제의 번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리나 트리쿠벤코, “북한의 산업: 산업정책의 구체적인 모습, 산업부문별 구조와 전망.” 한국경제신문사, 『북한 경제의 현황과 전망』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2), pp. 115-116.

100) Joseph Sang-hoon Chung, *The North Korea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 (Stanford: Hoover Institute Press, 1974), pp. 94-95.

101) 북한의 국방비가 국민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56년부터 1966년까지는 연평균 3.1%이고 1967년부터 1970년까지는 20%에 이른다. Joseph Sang-hoon Chung, *The North Korea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 (Stanford: Hoover Institute Press, 1974), pp. 94-95. 북한의 국방비가 공식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조선로동당 제5차 당대회에서 이른바 ‘경제·국방 병진노선’이 채택되면서부터이다. 김연철, “북한 경제개혁의 정치경제적 제약: 공업화 전략의 비교 사회주의적 연구,” 『94 통일원 프로젝트』, p. 37.

과적으로 소비재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오늘날에도 이어져 북한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부각되었다.¹⁰²⁾

북한 경제의 모순은 이러한 내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외부적으로도 북한 경제는 대단히 취약하였다. 과거 북한당국이 국제경제의 힘을 빌려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던 바는 아니나 외부경제를 국내적으로 연계하는 기본 순환 메카니즘을 완성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미 오래 전에 드러난 북한 경제의 대외적 실패는 오늘날 북한 경제 문제점의 시원을 이루고 있는데 우선 수출의 부진으로 외화의 획득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자본의 원시적 축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고 나아가 누적된 외채를 상환할 자본 또한 당연히 부족하게 되어 대외적인 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함으로써 대외경제의 총체적 단절이라는 현재의 극한적인 상황이 이미 1970년대부터 잉태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점에 있어서 북한의 과거 경험은 한국이 추진한 산업화 경제발전전략과 가장 극명하게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 북한 경제는 이미 자력회생의 동력을 거의 상실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1년 구소련의 붕괴는 이미 기울어진 북한 경제에 마지막 치명타가 되었다.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양국간의 경제관계는 일순간에 사실상 단절되었는데 과거 북한 경제에서 구소련이 차지했던 비중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구소련의 경제관계 단절은 북한 경제에 매우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 경제는 중요한 에너지 및 자본재 등의 기간

102) 소련의 몰락 이후 모스크바 소재 세계 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IMEMO) 관계자에 따르면 구소련 전체 산업의 약 55% 정도가 군수와 관련된 산업이라고 한다. 양운철, “러시아의 경제개혁과 개혁전망,” (세종연구소 정세분석 93-2), p. 16. 결국 북한도 이와 유사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추정되므로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군수산업에 치중되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산업을 구소련에 상당히 의존해 왔던 이유로 구소련과의 경제관계 단절은 결국 북한 산업의 운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의 당연한 결과로 1990년에 마이너스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부(負)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¹⁰³⁾ 물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돌파구로 1990년대 초 자유무역지대의 설정이라는 보다 획기적인 외자유치책이 시행되었으나 실효성은 없었다.¹⁰⁴⁾ 이후 북한 경제는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이라기보다는 연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로 뿌렸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간신히 지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정치 및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한 국가의 군사력은 장기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된다. 해방 전 남한에 비해 월등했던 북한지역의 공업화, 그리고 한국전쟁 준비를 위해 지원되었던 공산 강대국으로부터의 막대한 지원 등은 상당기간 북한이 한국에 비해 월등한 군사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구소련이 취약한 경제력을 등한시한 채 세계최강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었던 미국과 무리한 군비경쟁을 벌이다 장기적으로는 군비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뒤져 몰락의 길을 걸었듯이, 북한도 비슷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우선 계속되는 경제적 부진은 결국 군사력의 질적 저하로 이어졌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북한 경제의 사실상 몰락으로 한국과 대등한 군비지출을 북한이 감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103) 이찬도, "북한의 대외무역 결합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통일원, 『94 북한 및 통일연구논문집』, pp. 316-317.

104) 동용승, "북한의 향후 대외정책 방향," 『삼성세계경제』 1994년 9월호, p. 1.

2) 북한식 개방정책의 전개

가. 제한적 개방의 '제한성' : 시도와 결과

북한은 경제위기의 심화와 이에 따른 '제2경제'¹⁰⁵⁾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제한된 개혁 및 개방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대표적인 노력이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 등 '3대 제일주의' 정책과 나진·선봉지역 개발과 같은 부분적인 개방을 축으로 하면서, 동시에 제2경제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헌신의 요구, 처벌 및 묵인으로 동시에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1993년 12월 조선로동당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의 실패를 인정하고, 3년간의 완충기를 설정하여 계획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 분야별 경제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3대 제일주의'는 이 완충기에 제기된 과제였으며, 이 과제의 제기는 북한이 전통적인 기조로 삼고 있는 중공업 우선전략의 실패를 보완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경제 분야중 가장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농업, 경공업, 무역 분야를 시급히 회복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농업제일주의'는 농업부문에서 영농에 필요한 트랙터와 자동차, 현대적 농기계들과 화학비료, 농약을 비롯한 여러 농자재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농업에 투입하는 근대적인 영농체제로의 전환

105) 제2경제는 비공식 경제, 2차경제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의 제2경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전홍택, "북한 제2경제의 성격과 기능," 『통일경제』 1997년 2월호;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 (민족통일연구원, 1997); 오승렬, "북한의 경제적 생존전략: 비공식부문의 기능과 한계," 『통일연구논총』 5권 2호 (1996); 김영운, "북한 암시장의 경제사회적 영향," 『통일연구논총』 6권 1호 (1997); 김연철, "북한의 2차경제와 경제정책 변화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9권 2호 (1998) 등을 참조.

을 말한다. 또한 농업제일주의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정치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정치사상교양의 한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¹⁰⁶⁾ 북한의 경지는 논 면적이 많지 않아 대부분 밭농사 위주의 농업이 주가 되고 있으며, 극히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과 운영형태를 갖고 있다. 정책수행에 있어서도 대부분 중앙통제적이고 영농체계가 갖는 집단적 특성으로 인해 농민의 생산의욕은 다분히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 노동생산성은 극히 낮은 편이다.

정책적인 면에서도 1964년 2월 발표한 '농촌테제'의 내용들이 아직도 북한 농업정책과 운용의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공적으로 평가되나,¹⁰⁷⁾ 아직까지 고집하고 있는 '주체농법'이나 자급자족의 원칙은 개혁과 유연성이 결여되어 오히려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식량난이 악화된 한 원인으로도 분석된다.

106) "농업제일주의방침 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 『로동신문』 1994년 6월 25일. 여기서 북한은 자력갱생과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실천투쟁에 앞장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107) 임상철, "절대위기에 직면한 농업 제일주의," 『북한』 제287호 (1995).

1990년대 북한의 곡물수급 추이(두류/서류 포함)¹⁰⁸⁾

단위 : 만톤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전년생산량 ¹⁾	481.2	442.7	426.8	388.4	412.5 ²⁾	345.0	369.0	348.9
도입량 ³⁾	129.0	83.0	109.3	49.0	96.2	105.0	144.0 ⁴⁾	-
합계	610.2	525.7	536.1	437.4	508.7	450.0	513.0	

1) 농촌진흥청, 『북한의 곡물생산량 추정』

2) KOTRA, 『1996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3) 홍수로 인한 재고손실량은 감안하지 않음(북한당국에 따르면 62.6만 톤이 손실됨)

4) 곡물수입량 66만 톤과 외부원조량 78만 톤을 합한 수치임

북한의 경제체제가 갖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식량생산의 감소, 비료와 농약 및 영농자재의 절대적인 부족, 그리고 1995년~1996년의 대홍수 및 1997년의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은 매년 100~150만 톤의 곡물을 들여오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은 1970년대 들어와 기존의 중공업 우선정책의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경공업의 발전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경공업부문에서의 낙후는 지속되고 있으며, 1994년 '경공업제일주의'를 주창한 이후로도 그렇다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 경공업의 발전이 저조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경공업부문에의 저조한 투자, 통제된 내수공급 위주의 자력갱생·자급자족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책, 그리고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개방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경공업제일주의는 인민소비품 생산에 혁신을 일으킨다는 방침으로 소비품의 대량생산 및 품질개선을 추진하고 기존의 경공업

108) 임원혁, 앞의 글, p. 96.

공장을 보수·현대화하여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방공업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공장, 기업소가 유헴자재나 폐자재를 이용하여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1984년 도입된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 및 '정춘실운동'¹⁰⁹⁾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경공업제일주의는 내수용 소비품의 증산뿐만 아니라 경공업의 수출산업 육성을 강조하여 최근에는 주요 수출품인 철강, 금속제품의 부진으로 내수보다는 수공업품, 완구 등의 수출용 제품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업의 경우와 같이 생산시설이 영세하여 소비품 생산증대에 한계가 드러났으며, 경공업의 육성이 실질적으로는 주민생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경공업의 육성을 단지 외화난 타개를 위한 수출증대에 중점을 둠으로써 생필품 부족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설비 노후화로 인해 공장가동률이 상당히 낮으며 연료부족으로 인한 수송의 어려움 때문에 경공업제품의 생산이 큰 폭으로 줄었다.

109) 정춘실운동은 상업기업소들이 자체 실정에 맞게 원자재를 조달하여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예를 들어, 가축기르기) 자강도 전천군 상업관리소 소장인 정춘실을 내세워 시작한 '숨은영웅 따라배우기운동'의 하나이다.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및 산업구조¹¹⁰⁾

단위 : %, 명목기준

	산업별 성장률			산업구조		
	1996	1997	1998	1996	1997	1998
농림어업	1.0	-3.9	4.2	29.0	28.9	29.6
광공업	-9.6	-15.6	-4.1	28.0	25.5	25.6
광업	-11.8	-11.8	-6.6	7.1	6.7	6.6
제조업	-8.9	-16.8	-3.3	20.9	18.8	19.0
(경공업)	-7.1	-12.0	-1.1	6.9	6.5	6.4
(중화학공업)	-9.7	-18.7	-4.3	14.0	12.3	12.6
전기가스수도업	-7.8	-9.6	-9.3	4.3	4.3	4.2
건설업	-11.8	-9.9	-11.4	6.4	6.3	5.1
서비스부문	0.8	1.1	-0.7	32.3	35.0	35.6
(정부)	1.7	2.2	-0.3	22.5	25.1	25.3
(기타)	-0.7	-1.0	-1.4	9.7	9.9	10.3
국내총생산	-3.7	-6.8	-1.1			

1998년 북한의 경공업부문의 성장률은 1997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둔화되었으나, 경공업제일주의를 주창한 이래 북한의 산업에서 경공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직도 감소추세에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외무역을 자급자족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3년 12월 3대 제일주의를 주창하면서 이제는 대외무역을 자립경제를 모색하는 보완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그 성과가 북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 위에서 표방된 무역제일주의

¹¹⁰⁾http://www.bok.or.kr/kobank/owa/act5r?i_lp=periodic&i_top=econews&i_no=1379. 인터넷 사이트 한국은행 보도자료.

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양양을 일으키게 하는 혁명적 방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농업과 경공업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¹¹¹⁾ 무역제일주의의 최고 목표는 단기간 내에 대외무역의 양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북한은 대외무역 형태에서의 방향전환,¹¹²⁾ 대외시장의 적극적인 개척, 무역진흥을 위한 내부여건 조성 및 대외개방과 관련된 법적 조치 등 여러 각도에서 실천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즉, 북한은 교역시장의 다각화, 무역방식의 다양화, 수출상품의 생산기반 확대, 신용제일주의, 무역거래의 자율성 제고 등에 입각한 대외무역의 양적인 성장에 중점을 두고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보완하고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무역제일주의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구사회주의체제의 몰락으로 대외무역이 격감하여 전체 무역규모는 1990년대에 들어와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으며, 1998년에는 수출이 38.2% , 수입이 30.6%의 큰 감소로 전년에 비해 33.9% 감소해 남북한간의 대외무역규모의 격차는 전년대보다 더욱 확대되고 있다.

111) 조강일, "무역제일주의방침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양양을 일으키게 하는 혁명적방침,"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pp. 11-13.

112) 실제로 북한은 기존의 물물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구상무역 형태에서 벗어나 가공무역과 같은 무역형태를 추진했다. 김영운, "무역 제일주의의 성과와 향후 전망," 『북한』 제287호 (1995).

남·북한간 대외무역규모 비교¹¹³⁾

단위 : 억달러, %

	북한 (A)		남한 (B)		B/A (배)	
	1997	1998	1997	1998	1997	1998
교역규모	21.8	14.4	2,807.8	2,255.9	128.6	156.7
수 출	9.1	5.6	1,361.6	1,323.1	152.3	236.3
수 입	12.7	8.8	1,446.2	932.8	111.7	106.0
수출입의존도*	12.3	11.4	59.2	71.2	-	-

* 수출입의존도 = (통관기준 수출입액 / 명목GNI) × 100

북한의 전반적인 대외무역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1988년부터 시작된 남북한간의 교역은 1990년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크게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남한의 IMF사태로 인한 남한의 내수경기 위축, 환율상승 등의 교역여건 악화 등으로 1998년 남북교역규모는 전년보다 28.0% 감소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외화 가득를을 극대화하기 위해 '3대 제일주의'를 추진하였지만, 이는 북한의 전체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으며 또 현재 성공하지도 못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회생을 위해서 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제일주의가 성공하지 못한 기본적인 이유는 첫째, 내부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투자여력이 부족하였고, 둘째, 체제안보에 대한 불안감으로 군사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분야에 대한 재원의 우선배분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셋째, 체제유지에 집착하여 경제회생에 필요한 개혁·개방정책을 적절하게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새로운 경제정책의 실험

113) http://www.bok.or.kr/kobank/owa/act5r?i_lp=periodic&i_top=econews&i_no=1379. 인터넷 사이트 한국은행 보도자료.

은 무기력하게 실패하고만 것이다.114)

남북교역 추이115)

단위 : 백만달러, %

	1995	1996	1997 (A)	1998 (B)	(B-A)	증감률
반 출*	64.4	69.6	115.3	129.7	14.4	12.5
반 입*	222.9	182.4	193.1	92.3	-100.8	-52.2
합 계	287.3	252.0	308.3	221.9	-86.4	-28.0

* 남한 기준

1994년부터 시작돼 1996년에 끝났어야 할 완충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1998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도 완충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3차 7개년계획의 실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현재 경제위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개방, 경제난 타개를 위해 모색한 실리적인 정책과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론 사이에서의 딜레마 등은 북한이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호전되기는커녕 악화일로에 있다. 제2경제의 확산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북한 지도부의 대응은 헌신의 요구와 처벌, 그리고 묵인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14) 임강택, "김정일 체제와 북한의 경제정책-실리추구형 폐쇄주의와 그 딜레마," 북한연구학회 1999년 하계 학술회의 『김정일 체제와 북한의 진로』 (1999년 6월 25일), p. 4.

115) http://www.bok.or.kr/kobank/owa/act5r?i_lp=periodic&i_top=econews&i_no=1379. 인터넷 사이트 한국은행 보도자료.

헌신의 요구는 국가가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이데올로기로 나타나고 있다. 1996년 등장한 '고난의 행군정신'이나 1998년 등장한 '강성대국 건설'¹¹⁶⁾ 등의 구호는 현재의 위기를 인내하면서 극복하자는 북한 지도부의 요구이다. 또한 '혁명적 의리,' '동지애' 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주의와 과도한 사적 이익추구 현상에 대응하고 있다. 물론 과거 이러한 강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것은 경제위기에 따른 광범위한 사회적 이완현상을 극복해보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아울러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1997년 서관히 농업 담당비서 등 농업관련 담당자, 그리고 지난겨울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대외무역담당 고위 관료들이 정책 실패와 부패 등의 혐의로 처벌되어 현직에서 사라졌다. 최근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상당히 많은 관료들도 책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판 사정'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사적 거래와 관련된 경제사범, 개인 비리 사범들이 극형에 처해지는 조치들도 취해졌다.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부패, 비리 등의 범죄행위가 처벌을 통해 억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동적이지만 보다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은 목인이다. 배급 기능이 악화되고, 상품 공급체계가 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이동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이에 대해 여행 제한을 완화시키고, 주민들의 이동을 목인하고 있다. 암시장의 확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목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의 적극적 선택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가가 주민생활을 책임질 수 없는

116) "정론-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년 8월 22일; "사설-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 『로동신문』 1998년 9월 9일.

현재의 조건에서 체제 위협적인 상황이 아닌 한 이러한 묵인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¹¹⁷⁾ 이미 묵인의 정도를 넘어선 법적 수용도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은 북한 경제의 변화된 현실을 수용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성격이 강하다.¹¹⁸⁾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차 제1기회의에서 수정된 사회주의헌법의 경제관련 조항들의 변화는 부분 개혁, 부분 개방이라는 정책방향을 헌법 개정을 통해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¹⁹⁾ 즉 자력갱생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부분적인 개혁과 대외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을 인정한 것이다.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개방 수준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이는 북한의 대내외 경제부문에서 중요한 변화를 유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북한은 주민의 경제생활 향상과 체제유지적 경제개혁, 그리고 제한적인 경제개방 확대 등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번 헌법 개정조치를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또는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도입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른다. 헌법 개정 직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로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는 매우 보수적인 논지를 펴

117) 김연철, "북한의 경제 개혁 전망: 사회적 압력과 정책 선택의 딜레마," 『동향과 전망』 1996년 가을호, p. 57.

118) 김용현,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정책-이래로부터의 '변화'와 위로부터의 '대응'-," 『정치비평』 1998년 가을·겨울호, pp. 184-185.

119) 1998년 수정된 헌법의 경제관련 조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최수영, "북한 헌법 개정에 따른 경제부문 변화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98-06, 1998. 10) 참조.

고 있다. 그 내용은 '자립만이 살 길'이며 중공업 우선의 '우리식 경제구조를 살리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해야 하고,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개혁·개방 바람을 물리치는 강력한 방도는 경제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강력한 정치사상적 위력, 일심단결의 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²⁰⁾

이는 결국 헌법적으로 인정된 수준을 벗어나는 일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그리고 부분 개혁을 추진하지만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서 '부분적인 변화 또는 강조점의 이동을 전체 경제 시스템의 개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큰 혼란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¹²¹⁾

나. 국제환경에의 부적응

1990년대 들어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북한의 경제정책은 무기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경제정책이 무기력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체제 내부의 비효율성과 부적절한 경제발전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생산소유의 국유화와 중앙집권적·계획적 경제관리에 따른 효율성 상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에서 파생된 경쟁력 저하, 군사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우선 투자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누적되면서 북한경제는 축소재생산의 악순환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에 동구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구소련 및 중국으로부터의

120) 『로동신문』 1998년 9월 17일.

121) 김용현, 앞의 글, pp. 187-188.

경제적·군사적 지원 감소라는 외부 충격이 북한경제의 축소재생산 구조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경제침체가 가속화된 것이다. 특히 구소련이 북한에게 1991년부터는 국제가격에 근거하여 거래를 하며 물품대금을 경화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원유 등의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 것은 북한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북한내부의 문제점과 외부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경제는 나라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북한의 공식부문은 거의 마비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1990년 이후 계속해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원자재와 에너지 공급의 부족으로 주요 공장들마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공장 가동률이 20~2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식량부족사태도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 북한의 계획경제체계가 마비상태에 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회의에서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하게 된 배경도 더 이상 공식경제부문의 붕괴를 방치할 수 없다는 북한 지도부의 절박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비된 계획경제시스템을 복구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어느 정도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현재 북한의 경제정책은 극도의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내부지향적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한 외자유치 및 수출확대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였으며,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추진했던 개혁적인 경제정책들도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식량난의 해결방도로 허

용된 농민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되고 공식경제부문은 더욱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더욱이 경제 전반에 걸친 마비현상은 체제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군수산업에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지도부의 위기의식을 자극하여 경제회생을 위하여 시도했던 새로운 경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체제안정까지도 위협하는 자본주의적 요소의 확산을 막고 와해된 계획경제체계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도 대두된 것이다.¹²²⁾

3) 개혁없는 개방의 한계

가. 대외개방의 정치적 논리 : 국제화의 국내적 장벽

심각한 경제난의 와중에서 목인되었던 사적 경제활동의 증가와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사업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자본주의적 요소가 확산되는 등 체제안정을 위협하기에 이르자 북한은 대외개방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8년 9월 헌법 개정 이후 외부세계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를 예상하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게 되자 이를 비웃거나 하듯이 『로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을 통하여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나섰다. 개혁·개방은 “사탕발림 독약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경제개혁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미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우리식대로 끊임없이 개선”해 왔으며, 대외개방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외경제관계도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

122) 임강택, 앞의 글, pp. 4-5.

에서 열어놓을 것은 다 열어놓았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더 개혁할 것도 없고 개방할 것도 없다”고 개혁·개방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하였다.¹²³⁾

또한 공동시설의 형태로 발표된 1999년 신년사에서 김정일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 황색바람도 사소한 비계급적인 요소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에 모기장을 든든히 치고 적들의 내부 와해책동에 최대한의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자본주의적 요소의 유입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내었다.¹²⁴⁾

최근에 와서도 북한은 『로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을 통하여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사소한 요소”도 허용할 수 없다면서 “사회생활의 모두 분야에서 모기장을 든든히 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모기장을 치는 데는 예외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제분야에서는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자본주의적 기업관리 방법과 제국주의의 문을 열어주는 개혁·개방에 추호도 환상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자본주의 병균은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매개물로 하여 자라나고 온사회에 퍼지게 된다”면서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사회주의적 현상, 자본주의적 요소는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그 싹부터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등 자본주의적 요소의 확산을 경계하고 대외개방을 거부하겠다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가 확고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¹²⁵⁾

123) 『로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 1998년 9월 17일.

124) 『로동신문』, 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1999년 1월 1일 공동사설,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125) 『로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 1999년 6월 3일.

대외개방에 대한 거부감을 내비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은, 무엇보다도 외부의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감소하여 체제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는 경우 점차적으로 개혁·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체제불안을 느끼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체제불안을 우려하는 내부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부작용이 적은 부문을 중심으로 지극히 폐쇄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 북한은 외부로부터 실리는 최대한으로 확보하면서 체제 위협적인 요소의 유입은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이 방향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심각한 경제난과 자력갱생의 경제구조, 국방비 부담 과중 등으로 인하여 경제계획 자체를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에게 경제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하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정책에서 노출되고 있는 한계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파생된 북한체제의 취약성에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정권은 체제의 유지가 모든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간주되기 때문에 경제 회생에 필요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약조건이 많아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 결과 생산성 향상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과감한 경제개혁 조치와 대외개방은 꺼리면서도 외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나 자금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외부 출구를 열어 놓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사회통제를 강화하여 거의 소진된 내부자원의 동원을 극대화

시키고 실리를 추구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결국 '실리추구형 폐쇄주의'가 현재 북한의 경제정책이 지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이 개혁·개방에 소극적일 경우, 외부의 경제지원은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개혁·개방정책, 즉 '실리추구형 폐쇄주의' 경제정책으로는 경제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겠다.¹²⁶⁾

나. 전략의 수정 : '앵벌이 전략'

오늘날 북한은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이 처한 조건에서 볼 때 북한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체제이다. 경제난은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신속한 조처를 취하도록 재촉하고 있으며, 식량난은 이미 북한사회의 모습을 상당히 바꿔놓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북한이 경험하고 있는 외교적 고립은 대외정책상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정책상의 변화는 어떠한가? 여전히 북한은 유의미한 정책상의 변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개방과 관련된 정책상의 변화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으며, 경제시스템의 변화, 즉 개혁은 더더욱 지연되고 있다. 외교정책에서도 남한 및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정책상의 행보는 북한이라는 체제가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한 의혹을 더하게 하고 있다. 김일성 사망이래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북한정권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것을 기대했던 외부세계의 입장에서 김정일의 총비서 취임과 국방위원장 재추대라는 사건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이해됐다. 결

126) 임강택, 앞의 글, pp. 10-13.

국 북한정권 역시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조건을 거스르지 못하고 체제를 재정비한 후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북한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에 있어서 위기의 재생산을 시도하는 모험주의적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한편으로는 북한을 블랙박스로 인식하는 외부의 북한에 대한 정세판단을 더욱 불확실하게 함으로써 대외협상력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내부의 단결을 도모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거두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작금 북한이 외부자원을 도입하는 전략은 일종의 '앵벌이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¹²⁷⁾ '앵벌이 전략'은 상대방을 위협하지만 결코 상대방을 심각한 곤경에 빠트리지는 않으면서 경제적 실익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제적 실익의 크기가 막대한 규모에 이르지도 않는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앵벌이가 불쌍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귀찮기도 하고, 또는 앵벌이를 멀리 내쫓기 위해서 혹은 앵벌이를 개과천선(改過遷善)시켜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 앵벌이 전략은 자신이 상대해야 할 상대가 많을수록 효과를 얻는다. 상대가 많아야만 앵벌이에 대한 생각이 복합적이 되고 상대방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앵벌이의 전략이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만일 상대가 하나라면 앵벌이의 전략은 상대에 따라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무차별의

127) 이 표현이 북한을 경멸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하나의 유추로서 사용된 것이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국제정치학에서 오래 동안 회자되었던 공갈정책으로 보면 그 특수한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앵벌이 전략'의 요체는 위협과 실익의 규모 및 성격을 잘 드러낸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복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북한의 앵벌이 전략은 이를 통한 외부 자원의 도입이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촉진시키는 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앵벌이들이 그러하듯이 외부 자원을 새로운 삶의 양식을 위해 투자하는 대신에 기존의 삶의 양식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소모하는 데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대외관계가 개선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북한의 체제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4) 진 명

가. 남북경협외 효과

심각한 경제난은 북한으로 하여금 불가피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인식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북한의 변화를 의미한다.¹²⁸⁾ 북한은 비록 처절하고 절박한 경제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특히 1999년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돌격의 해'로 보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끝장날 수밖에 없다는 각오까지도 피력하고 있다.¹²⁹⁾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분야의 변화는 북한의 본격적인 시장화로의 개혁이나 대외부문의 대폭적인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향후 북한경제의 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 적어도 북한은 기존의 경제정책에 대한 변화를 시도할 수

128) 균형을 포함한 휴전선 이북의 긴장고조 지역을 그들의 적대 세력인 남한 관 광객들에 개방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북한의 변화를 감지하기에 충분하다.

129) "농업생산은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이다. 올해 우리는 농사에 전국가적 힘을 넣어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시설』 1999년 1월 1일.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남북경협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첫째,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북한 내부의 노력이 남한과의 경협 확대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며, 둘째, 북한의 점진적 대외 개방 확대정책도 경협 활성화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셋째, 남한 정부의 북한 포용정책을 비롯한 국내 경기의 회복조짐 등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근거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통일로 이끄는 실천적 수단이다. 단기적으로는 상호 신뢰구축에 기여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북한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을 얻을 수 있게 함은 물론, 이를 통한 남북한간의 접촉면을 확대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시장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향후 통일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¹³⁰⁾ 그러나 대북 협력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북한과 남한이 처해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협 추진 분야와 기업의 사업 대상분야의 선정에 이르기까지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폭넓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남북경협이 경제난에 봉착해 있는 북한을 지원하고 이를 추진하는 남한기업에는 경제적인 이익을, 남북한 전체적으로는 관계개선이라는 정치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데 일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¹³¹⁾

130) 서진영,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가능성,”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효율적인 대북투자 -현황과 대책』 (서울: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p. 11.

이런 점에서 볼 때 남북경협은 첫째, 김정일 체제의 내부 경제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실용주의 노선 및 북한식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추진과 점진적 대외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경협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북한의 식량난, 에너지난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둘째, 특수경제지대의 투자활성화에 부응하는 동시에, 셋째, 관광분야와 같이 외화획득이 용이한 사업과 함께 일반 소비품의 생산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경협 형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은 앞서 기술한 북한 경제정책 추진 방향과 부합하기 때문에 북한이 선호하는 사업이 되기에 충분하다. 둘째, 남북경협은 경협의 실질적 주체인 남한기업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야나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경협이 남한기업으로 하여금 당면한 IMF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한 기업의 아시아 지역 진출은 현지의 저렴한 임금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것을 제3국에 수출하는 패턴이 가장 많다.¹³²⁾ 남한 기업의 대북투자 역시 그와 같은 패턴에 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에는 새롭고 획기적인 역할보다는 북한의 변화방향을 예시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일관된 정경분리 원칙과 대북포용정책을 견지하면서,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대화재

131) 경협을 통한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이라는 정치적인 이득은 사실상 경협이 원만히 추진될 때 달성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뿐 전제가 될 수 없다.

132) 조은호, "1999년은 북한 경제 회생의 마지막 기회," 『통일경제』 1999년 1월호, p. 30.

개를 통해 경험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현실에 입각한 사업계획을 실시하고 손실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수익성과 경제성을 무시한 경쟁적 진출보다는 기업간 자율조정과 공동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지만 이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¹³³⁾

나. 북·일 수교 및 북·미 수교의 효과

북한은 경제난의 극복과 체제유지의 담보를 위해서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북·일, 북·미 관계는 단순히 양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적·간접적 이해당사자들간의 문제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신국제질서 하에서의 동아시아 질서재편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 핵문제의 등장 이후 북한 문제는 단순한 국지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 사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이 과거 자신의 '주적'으로 간주하였던 미국과 일본에 대해 관계개선과 수교를 요구하는 일련의 정책적 자세를 보인 것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¹³⁴⁾

우선 북한이 지니고 있는 외교정책의 성격과 관련해서 살펴 볼 수 있다. 과거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균형전략의 초점은 미국이었다. 즉 북한의 선언적 비난의 주대상인 미국은 북한에게 있어 위협의 근본요인이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과의

133) 김영운, "김정일 체제의 경제정책과 남북한 경제 협력," 『통일연구논총』 제7권 제2호 (1998), pp. 112-124.

134) 김종우, "북한의 대미·일 수교전략과 협상전략," 『북한조사연구』 제1권 2호 (1998), pp. 156-179.

수교는 최대 위협요인의 제거인 동시에 미국을 제외한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안보위험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경제난의 타개를 들 수 있다.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합영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대외개방의 일단을 보여왔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따라서 경제논리에 의한 경제난 타개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한 경제난 타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미·일 수교를 통해 이들 국가들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과거 맹방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지원 명맥이 끊겼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서방국가에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 번째로 북한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들 수 있다. 이는 전술한 두 가지 경우와도 연결되는 것이지만, 북한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김정일체제의 유지를 위해 대내적인 경제난 타개와 대외적인 외교적 고립 탈피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미국과의 수교를 포함해서 일본과의 수교는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 북한의 체제 생존에 대한 국제적인 보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구조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특히 북·일 수교는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국제관계 전반을 결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북·일 수교는 북·미 수교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주한 미군, 주일 미군의 성격 내지는 지위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 전반을 수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김정일 정권과 남북한 관계

1) 1990년대의 남북한 관계와 김정일 정권의 대남정책

가. 불신의 표면화

1990년대 초반을 강타한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북한의 대남정책을 포함한 대외전략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계기였다. 북한은 경제력의 약화로 인한 국방력의 보전을 위해서 핵이라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자 했으며, 이는 남한을 포함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성을 갖춘 핵무기 개발을 통해 국방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는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열위에 처하게 되고, 나아가서 남북간의 군사력 균형도 심각한 불균형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남북관계의 불신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응은 남북관계의 불신구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핵협상에 있어서 남한을 협상당사자가 아닌 존재로 취급했으며, 대미관계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다뤄 나갔다. 김일성은 1994년 신년사를 통하여 “자주권을 옹호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선린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대미관계개선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과 현 군사정전기구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을 제의하였다.¹³⁵⁾

135) 『로동신문』 1994년 1월 1일; 『중앙방송』 1994년 4월 28일.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꺼리는 것은 정권안보의 유지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외부와의 적당한 긴장과 대결에서 나오는 위기의식을 주민동원과 내부단결에 활용하는 이른바 '속죄양'으로서 남한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4년 10월 '북·미 기본합의' 타결 이후 미국이 '주적'에서 제외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과의 긴장관계 유지는 더욱 절실하였을 것이다.¹³⁶⁾ 북한의 대남비방 등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전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김일성 조문파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북한은 다른 이유를 들어 남한과의 대화를 단절하였을 것이다.¹³⁷⁾

이와 함께 김정일은 김일성사후 권력이양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남한과의 관계개선으로 인한 개방의 물결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더욱 남북대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다. 김일성은 남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남북대화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하여 상호 불가침을 합의하였으며, 더욱이 미국으로부터 핵안전보장을 담보 받고 외교관계 개선 및 경제적 지원까지 약속 받은 상태에서 굳이 대내적 파급효과가 클 남북대화에 응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북한은 남한배제전략 속에서 북·미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남북관계를 대미관계의 종속변수로 간주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136) 전체주의 체제는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주적이 필요하며, 이 적이 사라질 경우에는 전체주의 체제의 존립근거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한다. Michael Howard, "Lessons of the Cold War," *Survival*, vol. 36, no. 4 (Winter 1994-95), p. 163.

137) 전현준, "김정일 권력승계와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97-3, no. 10, 1997. 9).

즉, 북·미 적대관계가 해소되어 양국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면 남북관계에도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¹³⁸⁾

이와 같이 김정일 정권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이 정권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남한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남한과의 관계개선 없이는 북·미간의 관계개선이 북한이 원하는 만큼 진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남한과의 접촉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다. 즉,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공조가 유지되는 한 북한은 제한적이거나 남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것이다.¹³⁹⁾

나. 대남 인식의 확립 : 북한식 정경분리¹⁴⁰⁾

북한은 김일성 사망 직전인 1994년 6월 28일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호응함으로써 ‘주 대미회담, 중 남북대화’ 전략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무산됨으로써 북한의 정책변화는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김일성 사후 북한이 실제 추진한 대남정책은 남한 당국을 배제한 채 대미 직접협상을 통한 체제유지 도모 및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함께 남북 공존 모색과 통일전선 전술 강화라는 이중전략 가운데 통일전선 전술에 초점을 두는 것이었다.

북한은 1994년 7월 14일 김일성 사후 김일성 사망에 대한 조문단 방북 환영담화, 제5차 범민족대회개최 등을 통해 통일전선

138) 『평양방송』 1994년 7월 25일.

139) 홍용표, 앞의 글, pp. 14-39.

14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규섭, “김정일 시대의 외교정책: 지속과 변화,” 북한연구학회 1999년 하계 학술회의 『김정일 체제와 북한의 진로』(1999년 6월 25일) 참조.

전술을 계속 구사하는 한편, 남한 정부의 조문단 방북 및 범민족 대회 불허 등의 조치에 대해 대남비방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 사후 최초의 대남제의로 1995년 1월 24일 정당·단체연합회의를 통해 8월 15일 판문점에서 '통일대축전'과 '대민족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¹⁴¹⁾ 이후 북한은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과 남한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비방의 강도를 높이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투쟁 등에 더해 '김영삼 정권 타도'를 선동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1995년 5월 30일 북한 수역을 침범한 우성호를 나포하고 중국 연변에서 안승운 목사를 납치하는 등 남북화해에 역행하는 양태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쌀지원 요청에 따라 1995년 6월 북경에서 남북대화가 재개된 이후 9월까지 3차례에 걸친 쌀회담이 개최되어 북한은 15만 톤의 쌀을 지원 받았으나, 의제를 쌀문제로만 한정시킴으로써 남북당국간 대화를 거부하였다.¹⁴²⁾ 북한은 1996년 4월 한·미의 4자회담 제의에 호응하지 않은 채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을 자행함으로써 대남적화통일 전략이 불변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고 대미 직접협상에 주력한 이유는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과 안전보장확보가 체제유지의 핵심 관건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은 미국이라는 제1의 적이 대미 접근으로 상실되자 남한을 주적으로 대신 설정하고, 대남적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난에 따른 주민불만 증대 등 내적 불만요인의 배출구로 삼아 효율적인 사회통합을 이

141) 『로동신문』 1995년 1월 25일.

142)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5-1996』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85-87.

루고자 하였다고 분석된다.

이와 같이 북한은 김일성 사후 김영삼 정부와의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고, 통일전선전술 지속, 대남도발 등을 추진한 반면, 1997년 5월 '남북적십자 사이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 8월 19일 경수로 부지 준비공사 착공식에서 나타나듯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과 남한 기업인·종교·언론인의 방북 허용 등 민간차원의 교류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김정일은 1997년 8월 4일 통일문제에 관해서는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저작을 발표하여 기존의 '통일3원칙',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규정하고, 전제조건을 내세운 남북당국간 대화재개의사를 표명하였다.¹⁴³⁾

1997년 12월 18일 과거 남한의 민주인사로 간주하였던 김대중 총재의 대통령 당선 이후 북한은 남한의 정책전환을 강도 높게 요구하는 동시에, 당국간 대화 용의를 표명하는 이원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8년 신년 『로동신문』·신문 『조선인민군』 공동사설을 통해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면 남조선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지적한 후, "민족자주냐, 외세의존이나 하는 것은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북한은 남한 당국이 '민족자주'의 입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동시에 연북화해 정책으로의 전환, 콘크리트장벽제거,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

143) 『로동신문』 1997년 8월 20일. 이 저작에서 김정일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실지 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들과 아무때나 만나 민족의 운명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협상할 것이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체 등을 통해 통일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¹⁴⁴⁾ 이와 함께 북한은 남한의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인 1998년 2월 18일 정당·단체연합회의를 개최하여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남한 새정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천명하였다. 이 회의에서 김용순은 보고문을 통해 남북관계 교착의 책임을 남한 김영삼 정부로 전가하는 한편, 남한 당국의 연북화해정책으로의 전환, 국가보안법과 안기부 해체·철폐 등 기존 대남 요구사항과 함께 남북관계의 전환점에 있는 시점에서 긴박한 과제로 외세지배 및 외세의존 배경, 연북화해정책으로의 전환, 합작과 단결, 대화와 협상 등 4개항을 제시하였다.¹⁴⁵⁾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남한의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존 대남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남한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기대를 표명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3원칙과 함께 경수로 건설 및 식량지원, 정경분리에 입각한 경제교류 확대, 특사교환, 남북정상회담 용의 등을 밝혔으나, 북한은 남한 새정부의 대북 정책이 기대한 만큼 획기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않자 3월 28일자 『로동신문』 논평 “우려와 실망을 가져다준 한 달”을 통해 남한 새정부 출범 한 달을 “우려와 실망으로 점철된 한달”로 평가하고, 새정부가 “화해 협력과는 반대로 행동했다”고 주장하였다.¹⁴⁶⁾ 그러나 4월 4일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대리 이성호는 전화통지문을 통해 “비료문제 등 서로 관심사가 되는

144)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새해의 총진군을 다그치자.” 『로동신문』 1998년 1월 1일.

145) 김용순, “북과 남이 단합하여 자주적으로 민족의 출구를 열어나가지.” 『로동신문』 1998년 2월 19일.

146) 『로동신문』 1998년 3월 28일.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차관급 회담”을 제의하였다. 이는 남북당국간 대화를 거부해 온 북한의 이례적인 태도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어서 김용순은 4월 6일 ‘10대강령’ 발표 5주년 기념 보고회 보고문을 통해 여전히 민족자주와 대결상태 해소를 강조하면서도 남한의 대북 정경분리 원칙을 환영하고, 형식에 구애됨이 없는 교류·협력 의사를 표명하는 동시에 대결정책 해소와 대화·협력의 분위기 조성을 촉구하였다.¹⁴⁷⁾

1998년 4월 11~17일까지 남북관계 개선과 비료문제를 포함한 상호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당국간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후, 북한은 김정일이 통일문제에 관해서는 두 번째로 4월 18일 남북 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 50주년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 “온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였다고 4월 29일 공개하였다.¹⁴⁸⁾ 김정일은 이 서한에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천명하는 동시에 남한의 연북화해정책으로의 전환, 반통일적 법률기구의 철폐, 외세의 지배·간섭 반대 투쟁 등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내용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은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애국애족의 립장,련북단합의 립장에 선다면 그들과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고 언급함으로써 남한 당국과의 대화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이러한 김정일의 서한 내용은 남한 새 정부의 “평화·화해·협력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적극적인 대북 화해정책에 대응하여 대남정책의 기본방향을 천명한 것이다.

147) 김용순,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1998년 4월 7일.

148) 김정일, “온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로동신문』, 1998년 4월 29일자.

그러나 남한 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으로의 정책전환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북한은 남한 정부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6월 22일 속초 해안 잠수정 침투, 7월 12일 동해시 해안 무장간첩 시신발견 등에서 나타나듯이 대남무장침투를 계속 추진하였다. 또한 8월 20일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명의의 공개질문장을 발표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한 대화상설기구 설치, 특사파견 용의라는 대북제안을 비판함으로써 기존의 대남주장을 반복하고, 남북당국간 대화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¹⁴⁹⁾ 이와 함께 2월 남한의 정당·사회단체에 대한 서한발송, 5~6월 남한의 노동계와 한총련의 반정부투쟁 선동, '8.15 통일대축전' 개최 등과 같은 통일전선전술을 계속 추진하였다.

2) 남북한 관계의 전망

가. 당국간 회담의 전망 : 정상회담은 가능한가?

남북한간의 정상회담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관계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선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지만 적대국간 정상의 만남은 그 자체로서 커다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정상간의 만남에서 당사국이 처해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한 세부상황에 의견접근이 이루어진다고는 기대할 수 없으나 적어도 남북한간의 향후 진로에 대한 큰 원칙에 합의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 반세기의 남북한간의 역사가 큰 원칙 없이 간헐적이고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에 비추어 정상간의 외교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49) 『로동신문』 1998년 8월 21일.

그 자체로서 양자관계는 역사상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물론 1991년 남북한간의 기본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양자관계의 기본원칙이 마련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정상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와는 그 비중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적대국간의 정상회담은 처음 개최되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일단 성사가 되면 정상간 대화의 채널이 구축될 수 있고 나아가 정상회담이 정례화 되거나 혹은 필요에 따라 열려왔던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진정한 의미에서 외교관계의 복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상징적이며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특히 남북한간의 정상회담은 주목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는 간단하지 않다. 한반도의 분단, 남북한간의 과거관계, 남북한이 처해 있는 국내외적 현실,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추이 등이 모두 고려된 전략적인 선택이 남북정상회담이기 때문이다. 남북한간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회담이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상기의 모든 상황이 호조건으로 작용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는 사실 남북한관계 전체를 포괄하는 큰 이슈인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하나의 중요한 사태의 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가 합치되어야 한다. 다른 국가들의 관계와는 달리 남북한관계의 특징은 남북한이 정상회담의 실익에 대해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남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통하여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반면 북한의 경우 남북한간의 정상회담이 북한의 대내외관계에 비추어 이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북한이 스스로 생각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북한은 남한에 대해 정상

회담이 마치 그들의 이익을 상당히 양보한 시혜인 양 행동하여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시대의 남북한관계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즉 정통 외교로의 복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의 이해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기획되고 추진 및 성사되어야 할 것이다.¹⁵⁰⁾

그렇다면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크게 보아 국제환경, 국내여건 그리고 회담의 효과 등의 세 가지가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1950년대 미국과 구소련간의 대결이 첨예화되었을 때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은 미국의 대외정책과 그들의 대외관계를 조율하며 외교정책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하에서 동독과 서독간의 정상회담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실제로 서독은 유명한 할슈타인 원칙¹⁵¹⁾을 외교의 기조로 삼음으로써 서독의 외교정책에 당시의 국제환경을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었다.

다음으로 국내적 여건 또한 정상회담의 성사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국내 정치 및 경제적 여건이 특정국가와의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는 경우 정상회담의 개최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간의

150) 김기수, 앞의 글, pp. 10-11.

151) 1970년대 이전 서독은 동독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는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할슈타인 원칙을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러한 분단국의 대외관계 원칙은 남한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와는 친교를 안한다는 원칙이 비슷한 시기에 한반도에서도 고수되었다.

정상은 적대국이라는 그 이유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가 힘들다. 이 경우 국내정치적 통합이 적대국에 대한 대항의지에 기초할 수밖에 없으므로 적대국과의 정상회담은 집권세력의 국내정치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 직후 남북간의 정상회담을 상상하기 힘들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우호국가 사이의 신뢰확인을 위한 선린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는 정상회담은 당사국에게 모두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회담이어야 정상간의 회합이 가능한 것이다. 정상회담이 어렵게 개최되었으나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이는 국내외적인 비판에 직면하기 쉽고 따라서 회담 당사국간에 이해와 사전 조율은 정상회담의 중요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¹⁵²⁾

나. 민간 차원의 관계 전망

•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

분단국가의 평화적 통일이나 그후의 안정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쌍방간의 교류협력만큼 그 타당성이 입증된 수단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경제협력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상당수준 진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전혀 접촉이 차단된 분야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남북교역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남북간의 입장차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교류협력이 남북의 정치상황에 크게 구속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한 경향은 물질 교류에 비해 인적 교류쪽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152) 김기수, 앞의 글, pp. 14-15.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측이 정경분리주의적 접근방법을 공유해야 된다. 북한은 체제의 성격상 정경분리 자체가 어렵지만 나름대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갖춰야 할 것이며, 남한은 일관성있게 정경분리를 지켜 나아가야 한다. 남한의 경우 내적으로는 보수강경세력의 저항과 외적으로는 안보논리를 앞세우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라는 강력한 변수로 인하여 정경분리원칙을 지탱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 사정은 더욱 달라지게 된다.

현재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정치상황에 따라서 영향은 있으나 매년 증가일로에 있다. 교류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의 폭이 커질수록 상호신뢰의 누적적 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사회문화적 수준이 경제적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 규제 때문이다. 남한당국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하는 방법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개혁·개방을 강압해서는 안된다. 정치적으로 북한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더욱 경직될 것이고 그 반응은 폐쇄적·폭력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제한된 개방정책 안에서 가능한 분야로부터 교류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¹⁵³⁾

• 대북 민간지원의 활성화

자연재해에 따른 식량난 악화로 북한이 1995년 8월 23일 국제

153) 이우정,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민간경제협력부문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권 2호 (1998), p. 148.

사회에 수해 긴급지원을 요청한 이후, 남한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남한에 의한 대북지원은 주로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민간 차원의 긴급 구호지원·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간접지원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통일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상 세 가지 대북지원의 총량(1995.6~1998.10.31)을 미 달러로 환산하면 3억 1,487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3종의 대북지원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한편, 이를 통해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정부는 동포애의 발로와 인도주의의 구현차원에서 북한의 대남 적대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을 추진해 왔다. 지난 '문민정부'하에서 1995년 6월 남북간 북경 쌀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1995년 6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국내산 쌀 15만 톤이 북한에 제공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하에서는 IMF상황,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정부차원의 대규모 직접 지원은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둘째, 정부 차원의 대북 직접지원과는 달리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도 꾸준히 실시되고 있다. 남북간 직접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인 1995년 11월부터 1997년 5월까지의 대한적십자를 단 일창구로 하여 19차례에 걸쳐 모금된 19억 7,000여 만원(496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자를 국제적십자사연맹을 경유하여 북한에 전달하였다. 1997년 5월 26일 남북적십자간 직접 전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1차분으로 6월부터 7월말까지 옥수수 기준 5만 3,841톤의 식량을 제공하였으며, 이어 동년 7월 25일 남북적십자간 2차분 지원합의에 따라 1997년 8월부터 10월초까지 옥수수 기준 5만 2,888여 톤의 구호물자를 북한에 전달하였다.

남북적십자 창구를 통한 2차에 걸친 대북지원 규모는 1,733만 달러에 이르렀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후인 1998년 3월에는 비료 800톤(옥수수 기준 1,261톤, 18만 달러 상당)이 남북적십자사간 2차 지원의 추가지원분으로 북한에 전달되었다. 이어 3월 27일 남북적십자간 3차분 지원합의에 따라 1998년 4월부터 6월까지 옥수수 기준 5만 4,567톤(935만 달러)에 제공되었고, 1998년 9월 이후 구호물자로 963만 달러의 물품이 북한에 지원되었다. 여기에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한측에 제공한 옥수수 4만 톤 및 한우 501두 등과 정부가 1998년 9월 18일자로 처음 허용한 민간 단체의 개별 지원분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민간단체의 개별지원에는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가 기여한 옥수수 1,000톤과 젓소 200두를 포함, 5개 단체에서 마련한 총 10억 원 상당의 물자가 들어있다. 이후 지금까지 민간단체의 개별지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1995년 9월 이래 금년 10월말까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 대북지원은 도합 4,145만 달러(46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8년 10월말까지 북한에 지원된 것은 1,916만 달러(264억 원)에 이른다.

셋째, 정부는 유엔 기구를 통한 긴급 구호 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수해 발생 직후인 1995년 9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개발계획(UNDP) 등 유엔 기구는 최초로 대북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국제 사회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유엔 기구는 1996년 6월, 1997년 3월, 그리고 1998년 2월 등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국제 사회의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유엔 기구는 국제사회의 기여분을 토대로 대북지원을 본격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1996년 6월 이후 지금까지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개발계획(UNDP) 등을 통해 총 4,142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자 및 기상자재 등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이 가운데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제 기구에 기여한 것은 1,100만 달러(154억 원)에 이른다.

이상에서 언급한 지원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며, 두 번째는 민간 차원의 지원인데, 그 실적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 비교(1998년 10월 31일 기준)

기간	정부 차원	민간 차원
1995	2억 3,200만 달러 (1,850억 원)	25만 달러 (1.9억 원)
	쌀 15만 톤	담요 8,000 매
	직접 지원	국적 경유
1996	305만 달러 (24억 원)	155만 달러 (12.4억 원)
	CSB, 분유, 기상자재	밀가루, 분유, 식용유
	유엔기구 경유	국적 경유
1997	2,737만 달러 (246억 원)	2,049만 달러 (181.4억 원)
	CSB, 옥수수, 분유, 보건의료 등	옥수수, 밀가루, 감자, 라면 등
	유엔기구 경유	국적/남북적십자 경유
1998	1,100만 달러 (154억 원)	1,916만 달러 (264억 원)
	옥수수 3만 톤, 밀가루 1만 톤	밀가루, 옥수수, 식용유, 비료, 한우, 젓소, 비닐, 분유, 설탕 등
	유엔기구 경유	남북적십자 경유
계	2억 7,342만 달러 (2,274억 원)	4,145만 달러 (460억 원)
	옥수수 기준 170.9만 톤	옥수수 기준 25.9만 톤
총계	3억 1,487만 달러 (옥수수 기준 196.8만 톤) *국제사회 7억 2,050만 달러 수준	

대북지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효용성이 있는 사업이다. 우선 현 단계에서 남북한 주민들간의 정서적 유대와 일체감을 조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그럼으로써 남북 화해 및 민족공동체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분만 아니라 통일 후를 내다볼 때 통일 후유증을 사전에 줄이는 길이 되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가능한 한 대북지원은 장려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대북정책은 첫째,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접촉·교

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 북한에 대한 단순 지원에서 남북간 호혜적 교류로 전환해야 한다. 상호 이익성이 없는 일방적·시혜적인 지원은 지속성을 갖기 어려우며, 확고한 제도적 장치의 토대 위에서 안정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구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료·농약·종자 농자재의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계약 재배 등 실현 가능한 남북 농업 협력사업을 많이 발굴·추진해야 한다. 넷째, 앞으로 민간단체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이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는 프로젝트별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북한에 공동으로 지원 또는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컨소시엄 구성방안은 개별 단체들의 재정이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컨소시엄을 형성할 경우 대북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사업의 성사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등 효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민간단체들이 상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대북지원 또는 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단체들이 각자 분야를 특화하여 대북지원이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식은 한정된 자원으로 대북지원이나 협력사업의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컨소시엄의 구성을 통한 공동사업의 추진과 개별 단체들의 사업 특화에는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할 것이다.

동포애와 인도주의의 구현, 나아가 민족 화해와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앞으로도 장려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북 민간지원을 추진하는 해당 인원들에 대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여러 가지 활동상의 제약

과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북 인도적 사업의 신속·원활한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최대한 절차의 간소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북한주민 접촉 승인이나 방북 승인의 처리기간 단축은 절차 간소화 조치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북지원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한 지원 허용, 창구 다원화의 점진적 추진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대북지원의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아가 인도적 지원 및 남북협력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협력 사업·사회·문화협력 사업 외에 별도로 인도적 사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절차의 간소화 및 지원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¹⁵⁴⁾

5. 김정일 정권과 대외관계

북한은 그 동안 공산화 통일을 위한 진영외교논리에 기초하여 대외관계를 형성하여 왔으나, 1990년대 들어와 3대혁명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체제유지를 위해 실리를 중심으로 대외관계를 재정립하게 되었다. 과거 김일성정권이 사회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외교와 중·소간의 견인경쟁을 유발하는 시계 추외교를 전개한 것과 달리, 김정일정권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외교와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경쟁을 촉발시키는 유인외교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적대와 협력의 혼재하는 대미협상과 혁명과 실리가 병존하는 대중동맹의

154) 제성호, "대북 민간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향," 『통일경제』, 1999년 2월호, pp. 55-68.

지속을 통해 체제를 보장받는 한편, 대러 경제협력회복과 대일배
상금 확보를 통해 경제난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¹⁵⁵⁾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5월 5일 CNN 방송 주최 제10회 세계
언론인 국제회의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 해체
를 위한 5대 과제를 밝혔는데,¹⁵⁶⁾ 그 중의 하나가 '미국과 일본의
대북 관계정상화'였다. 김대중 정부는, 그 이전의 정부들과는 달
리, 북한이 가능하면 많은 나라들과 접촉하고 또 가능하면 많은
나라들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
를 해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 북·미 관계 : 적대와 협력의 혼재

북한과 미국 양국은 1994년 10월 북·미간 '기본합의'(Agreed
Framework)를 통해 상대방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포괄적 접근
방식에 기초한 일괄타결을 통해 상호 수용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당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였다. 미
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는 대가로, 대북 정치·경제적
관계정상화-경제제재의 완화 및 해제-의 추구, 대북 핵무기 불위
협 혹은 불사용의 보장, 대북 2,000MW(e)급의 경수로 제공, 흑연
감속로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동결에 따른 대체에너지로서 연간
최대 50만 톤의 중유의 제공 등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북
한에 대해 남북대화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북한을 국제사

155) 김성철 외, 앞의 책, p. 340.

156) 김대중 대통령이 밝힌 5대 과제는 남북한간의 화해협력관계 성취, 미국과 일
본의 대북 관계정상화, 북한개방 환경조성, 한반도에서의 대량살상무기 및 군비
통제 실현, 그리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에로의 전환이다. President Kim
Dae-jung's satellite address, Tenth Annual CNN World Report Conference
(Atlanta: May 5, 1999).

회의 '규칙의 장'으로 이끌어 들여 앞으로 북한의 행동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렛대를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북·미기본합의 직후 미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등장하고, 공화당의회가 클린턴행정부의 북·미기본합의를 비판하고 나오면서 북·미기본합의의 이행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이에 클린턴행 정부는 공화당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북·미기본합의에서 북한에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하는 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 변경의 배경에는 이제 미국으로서는 북한핵 문제를 상당한 정도로 해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바뀔 것이 없다'는 상황 인식과 '북한이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2003년까지 가지 못하고 붕괴할 것'이라는 희망사항도 깔려 있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내지 '해제'의 문제와 '북·미 관계정상화' 문제였다. 북한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파탄에 처해 있었고,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였던 주된 이유도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와 미국의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회복을 꾀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십 년 간 지속되어 온 미국의 반복한 정책의 상징인 경제제재 해제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문제였다.¹⁵⁷⁾

157) 북한은 1998년 6월 22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는 북미기본합의의 "핵심적인 의무사항"이라며 "우리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을 앉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1998년 6월 22일. 이러한 입장은 시급한 식량사정과 관련하여 7월 11일도 반복되었다. 『조선중앙통신』 1998년 7월 11일. 1999년 7월 26일자 북한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는 미국이 "진정으로...우리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인 우리에게 대한 경제제재를 전면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1999년 7월 26일.

또한 양국의 관계정상화는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이름 그대로 유일무이한 최강국 미국이 북한과의 반세기에 걸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국 관계정상화는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이후 정치·외교 및 경제적으로 불리한 국제환경하에 놓여 있었던 북한으로서는 자신의 대외생존의 틀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문제였다.

북·미기본합의에 따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는 통신과 금융에 대한 제한 조치의 해소, 무역과 투자의 장벽 완화를 우선 이행하는 것이었는데, 북·미기본합의 이후 1995년 1월에 미국이 취한 6개항의 경제제재 완화 조치들은 사실상 매우 초보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 그친 조치들이었다.¹⁵⁸⁾ 무엇보다도 제3국에 있는 미국기업들의 대북 교역과 투자가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미국은 북·미기본합의 당시에 비공식적으로 약속하였던 아시아에 있는 미국회사의 자회사들로 하여금 북한에 무역과 투자를 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셈이다.

결국 북·미기본합의의 이행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는데, 북·미 양국은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을 비난함으로써 불행히도 상호불신을 키워 온 셈이 되었다. 클린턴행정부는 “북한이 북·미기본합의를 지켜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미 의회는 북·미기본합의에서 북한핵 문제가 불완전한 상태로 봉합되었다는 점과 북한

158) 미국이 취한 경제제재 완화 조치는 북미간 전화·전신연결을 위한 거래(직통 전화 허용), 북한여행자의 여행 및 여행관련 거래에 관한 신용카드 사용, 언론기관의 사무소 개설, 미국에서 개시되거나 청산되지 않은 금융거래(북한과 제삼국과의 거래)의 청산을 위한 미 은행 시스템의 사용, 북한에 귀속되지 않은 동결자산의 해제, 북한으로부터의 마그네사이트(제철소 내화물질) 수입 허용의 6개항이었다.

이 핵과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포기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난하였다.¹⁵⁹⁾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핵의혹을 제기하고, 북한이 “영변 흑연감속로 원자로 및 관련시설과 동일한 방식의 원자로와 관련시설을 금지한다”는 북·미기본합의의 부속 ‘비밀 합의’(Confidential Minutes)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금창리 시설의 사찰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대북 경수로건설 제공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하여 2003년까지 완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경수로 건설비 마련이 지연됨에 따라, 1999년 8월 15일에야 겨우 본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¹⁶⁰⁾ 따라서 경수로를 약속시한인 2003년까지 완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¹⁶¹⁾ 발전과 난방용 중

159) 당시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된 북미기본합의 문안에 대한 미국 및 한국의 해석, 특히 한국의 해석과 북한의 해석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이 북미기본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북미기본합의의 제3장 3조는 영어로는 “The DPRK will engage in North-South dialogue, as this agreed framework will help create an atmosphere that promotes such a dialogue”로 되어 있다. 이를 한국에서는 “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기본합의문에 의하여 대화를 도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따라 북남대화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당시 북미기본합의 당사자로서 바로 이러한 표현을 한글 원본으로서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대화를 도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남대화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식으로 강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겠다.

160) 백학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익, 제도, 성과,” 백학순·진창수 편, 『북한문제의 국제적 쟁점』 (성남: 세종연구소, 1999), pp. 49-111.

161) 북한은 경수로 건설이 늦어짐으로써 ‘손해를 보는 것은 북한측이라고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로동신문』 1999년 7월 26일.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일본에서 『조선일보』 편집인으로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온 김명철은 “지금도 미국이 북미기본합의에서 약속한 경수로를 2003년까지 완공시킬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해졌으며, 북한은 미국이 어떻게 그 시한을 지키려고 하는지 인내

유 공급은 원래 약속대로 그런 대로 기일에 맞추어 공급되고 있으나, 조금씩 약속 일자가 지체된 상태로 이어져 가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지체에 대해 비난하여 왔음은 물론이다.

이후 금창리 핵시설 의혹과 극적으로 타결된 북한의 미사일문제 등 북·미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양국 모두 관계개선 의사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북·미간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양국 사이에서 적절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북·미 양국간에 상호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이 북·미기본합의에서 북한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신뢰받을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북한이 식량과 경제사정이 저처럼 파탄에 처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량살상무기 등에 관한 어떤 합의를 하여도 북한이 이를 잘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북·미 양국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협조적 행위를 취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상대방이 먼저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그에 따라 자신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어느 한 쪽이 먼저 협조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호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의 고리는 끊기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어느 쪽이 먼저 협조적 조치

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지켜 볼 것"이라면서, "남아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국교수립, 평화조약의 체결, 경제제재의 해제 등과 같은 일련의 정치·군사·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마음 내키지 않아 하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눈감아 주게 하고 2007년까지 경수로 건설을 완성시키는 방법뿐"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 패키지가 협상 테이블에 놓여 있는데, 미국이 이것을 취할 것이냐 마느냐는 미국의 자유인데, 북한은 그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라고 북한의 새로운 입장을 전하고 있다. Kim Myong Chol, "Response to Haksoon Paik's Essay," NAPSNet Policy Forum Online, PFO #99-06B (June 16, 1999). 인쳐넷 사이트는 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9906B_Kim.html.

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이 먼저 협조적 조치를 취하면, 다른 쪽은 상대방을 따라 협조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라 그 상대방은 다시 협조적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 나가면, 서로 신뢰가 없었던 사이에서도 협조가 생겨날 것이다.¹⁶²⁾

결국 북·미 양국간의 관계가, 양측이 협조를 통해 전혀 상호이익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상황이나 상호이익을 내는데 협조가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양국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은 상호이익을 이끌어 내는데 상호 협조가 필요할 것이고,¹⁶³⁾ 일반 외교관례에서 그렇듯, 그리고 1994년 북·미기본합의시에도 그렇듯, 상대방의 상이한 요구들을 타결하는 방식은 불가피하게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 방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핵문제를 비롯하여 미사일 수출문제, 북한의 인권문제 등 많은 요소가 산재해 있다. 더군다나 북·미간에 이러한 장애요소들이 점차적으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미 국내법의 개정문제 및 행정부와 의회간의 공조문제 등은 계속하여 북·미관계 개선의 장애요소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미간의 국교정상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서 점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¹⁶⁴⁾

162) 사실상 이러한 '상대방 따라하기(tit for tat) 전략은 상호간에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받아 왔다. Robert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84), Chaps. 2, 4, 7.

163) Kenneth A. Oye, "Explain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Hypotheses and Strategies," in Kenneth A. Oye, ed., *Cooperation under Anarc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p. 6-7.

16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백학순, "북미·북일 관계개선 문제" 참조.

2) 북·일 관계 : 일시적 파트너

북한핵 문제는 일본의 안보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1991년 5월 하순에 열린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제3차 본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사찰 허용을 국교정상화의 조건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선언하고, 1995년 5월의 제7차 본회담에서는 영변핵 사찰문제에 대하여 북한이 IAEA와 체결한 사찰협정을 환영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불신감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남북상호사찰을 요구하였다. 이는 물론 북한의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국교정상화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이고 북·미간에 북·미기본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일본의 북한에 대한 핵사찰 요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¹⁶⁵⁾

북·미기본합의가 체결되어 북한핵 문제가 당시의 상황에서 그 정도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결되자 일본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10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일본정부는 1999년 5월 4일 KEDO측과 10억 달러 차관공여협정을 체결하고, 6월 29일까지 해서 중의원과 참의원이 이를 승인하는 과정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재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하면, 일본정부는 “국민감정에 비추어 볼 때 KEDO에의 협력은 어렵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 아세안지역포럼 참석 후 가진 한·미·일 3국 외무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고무라(高村) 일본 외상에 의해 반복되었다.

165) 백학순, “앞의글” 참조.

1998년 2월 현재, 일본에서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국민은 지난 몇 해 동안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북한을 꼽았고, 북한에 투자할 일본기업인도, 북한과 수교를 서두르는 정치인이나 관리, 기자, 학자들도 일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⁶⁾ 단지 외무성의 대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들만이 국교정상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북한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1999년 6월말에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와 무라야마(村山) 전 수상의 방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측과 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나, 북한측은 회담 전에 식량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며 협의를 거부하였다.¹⁶⁷⁾ 최근 8월초에도 고무라 외상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수면하의 접촉'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¹⁶⁸⁾

한편, 북한은 양국간의 관계정상화는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주는 '선사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개선에서는 그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지금까지 양국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일본측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은 "과거 범죄에 대한 인정도 사죄도 보상과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¹⁶⁹⁾

1999년 4월 27일 일본 중의원에서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위한 주변유사시법안이 통과되자, 북한은 "주변유사시는 조선반도 유사시를 의미하며, 법 채택의 목적은 다름

166) 김학준, "일본이 보는 남북한 상황," 『동아일보』 1998년 2월 10일.

167) 『동아일보』 1999년 7월 2일.

168) 『동아일보』 1999년 8월 7일.

169) 『로동신문』 1998년 8월 16일, 10월 3일.

아닌 전시동원체제를 수립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일본의 새 지침으로 “조·일관계는 교전관계로 되었다”라고 선언하였다.¹⁷⁰⁾

북한은 또한 일본이 북한 미사일기지에 대한 ‘공습을 기도’하고 있는 데서 ‘백년속적’으로서의 일본의 정체를 똑똑히 보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본이 북·일관계를 ‘교전관계’로 만들어 놓은 조건에서 우리는 “해 볼 테면 해 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⁷¹⁾ 북한이 일본을 백년속적으로 보는 것은 미국을 ‘백년속적으로 보지 않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이처럼 첨예한 대립 하에 있는 북·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신행 미사일 ‘배치’ 방지 및 일본열도를 사정권 안에 두고 이미 배치되어 있는 북한미사일의 ‘제거’ 문제가 일본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는 당장 실현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본은 한·미 양국과 더불어 3자조정감독그룹(TCOG)을 구성하여 북한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페리 제안을 마련하는 등, 한·미·일 3국 공조를 중시하고 있다.

구체적 조치로서 첫째, 무기통제 및 군비축소 협상을 포함한 외교적 조치, 둘째, 미국의 보복 억지력에의 의존, 셋째, 전역미사일 방어체제의 구축, 넷째, 정찰위성 보유, 다섯째, ‘괴선박’을 추격하여 격침시킬 수 있는 소형 고속정 건조 등을 대응책으로서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책은 실제에 있어서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수교협상과 이들 대응책을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본측의 입장이다.¹⁷²⁾

170) 『로동신문』 1999년 5월 1일.

171) 『로동신문』 1999년 7월 25일, 『조선중앙통신』 1999년 7월 26일.

172) *East Asian Strategic Review, 1998-1999* (Tokyo: National Institute for

3) 북·중 관계 : 혁명과 실리의 병존

1980년 말부터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는 불안하게나마 유지되고 있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제기될 수 있으나, 중국의 대 북한 지원은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핵심 요인으로 간주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과 군사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고, 매년 수십만 톤의 식량과 원유 등 전략물자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생명을 연장해 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북한체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중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1960년대 말과 같은 극히 일부시기에 중국과 북한은 갈등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냉전시기 양국은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중국과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봉쇄정책에 직면하여 계획경제체제를 신봉하고 있었으며, 지도부간에는 혁명전쟁과 한국전쟁으로 다져진 긴밀한 유대관계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중국과 북한간에 혈맹관계가 지속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대 북한정책은 냉전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요인들로서는 양국간 통치이념과 정책노선의 괴리, 지도부간 인적 유대관계 약화 그리고 국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들 수 있다.¹⁷³⁾

첫째, 이념과 정책노선간의 괴리이다. 중국과 북한은 1970년대

Defense Studies, 1999), pp. 70-76.

173) 신상진, "중국의 대북한 정책-정책변화 요인과 주요 사안 분석,"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 1999년 춘계 학술회의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변화전망』 (1999년 4월 2일), pp. 2-9.

까지 경직된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하면서 고도의 계획경제에 입각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해 왔다. 또한 양국은 세계의 공산화라는 대의명분 아래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채택하고 대만과 남한에 대한 무력 통일 정책을 서로 전적으로 지지해왔다. 북한은 중국의 정책노선을 답습하였으며,¹⁷⁴⁾ 중국은 북한을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간주하여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였다. 중국과 북한간의 이와 같은 정책노선의 유사성은 양국관계를 긴밀하게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1970년대 말 중국의 실용주의적 지도자들은 경제건설을 통해 국민의 물질적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경제개혁 개방정책을 시행하고 관계정상화를 이룩하였다. 중국이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여 자본주의의 경제적 장점을 대폭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사상해방이 전제되었기 때문이었다.

1977년 7월 등소평(鄧小平)이 복권된 후 중국에서는 모택동(毛澤東)에 의해 후계자로 지목된 화국봉 세력과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실사구시파 간에 '범시론'과 '실천론'을 둘러싼 이론투쟁이 전개

174) 중국과 북한은 경제정책 전개과정에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보여왔다. 중국은 1952년부터 '3대 개조운동'을 통해 경제의 집단화·합작화를 추진하였으며, 북한은 1954년부터 '협동농장'을 조직하였다. 1958년 중국은 소련식 경제발전 정책을 의거해서는 신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대약진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직후인 1959년부터 북한은 '천리마운동'과 '청산리방법'을 통해 농업생산 증대를 독려하였다. 1960년대 중반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운동'을 전개하여 대중의 노동력에 의한 자력갱생적 경제발전을 도모하자, 북한의 김일성은 1973년부터 '3대 혁명소조운동'과 '속도전'을 채택함으로써 중국식정책노선을 답습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신상진, "중국의 개혁·개방 현황과 전망: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모델 수용 가능성과 관련" (민족통일 연구원, 1992), pp. 91-93 참조.

되었다. 모택동의 모든 정책결정과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 다면서 문화대혁명의 정책노선을 옹호하였던 화국봉과 왕동흥(汪東興)이 1978년 12월 당중앙공작회의와 정치국회의에서 자아바 판을 함으로써 모택동 사후 중국에서 전개되었던 사상논쟁은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실사구시파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¹⁷⁵⁾ 이로써 중국은 모택동사상의 경직된 구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4개현대화 건설을 위한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이후 1981년 중국공산당 제11기 6중전회에서 중국은 '역사결의'를 통해 문화대혁명 이후 모택동이 취해 온 정책의 오류를 비판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 사상이 실제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였으며,¹⁷⁶⁾ 1984년에는 공산당 기관지에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더 이상 모든 정치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¹⁷⁷⁾ 기존 통치이념에 대한 중국의 재평가 작업은 1987년 13차 당대회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당시 국무원 총리였던 조자양(趙紫陽)은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입각하여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해 나아갈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개혁·개방과 경제 건설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이며, 마르크스 이론이 중국의 현실에 부합되지 않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여전히 경시하지 않고 있지만, 대북정책 추진시 철저하게 국익을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75) 모택동 사망과 '4인방' 숙청이후 '범시론'과 '실천론'간의 중국 내의 사상논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湯應武, 『抉擇: 1978年以來中國改革的歷程』(北京: 經濟日報出版社, 1998), p. 50-76 참조.

176) 『人民日報』 1981년 7월 1일.

177) 『人民日報』 1984년 12월 10일.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한반도 두 개의 한국 중에 하나에 불과한 실정이며,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무게 중심이 점차 남한으로 옮겨지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1999년은 중국과 북한이 국교를 수립한 지 50주년이 되는 상징적인 해였다. 연내 김정일의 중국방문 가능성이 보도되기도 하였으나 중국의 '수정주의적 지도자'들에 대한 김정일의 불신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실질적으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대담한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 북한의 대미, 대일관계 개선 움직임과 한·중간의 '협력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 등 동북아 국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향후 중국의 대북정책은 더욱 더 이념적 고려보다 현실적 고려에 의해서 전개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지역질서 안정을 저해하는 세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대북정책의 역점을 둘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일반국가간의 관계로 바뀌고 있으며,¹⁷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¹⁷⁹⁾

178) 중국내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1999년 초 상해 사회과학원 아태문제연구소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을 논의하였는데, 이들은 향후 중·북관계가 특수관계에서 정상국가간의 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이를 당·정 지도부에 건의하였다고 한다.

179) 신상진, 앞의 글, pp. 17-18.

6. 김정일 정권의 정책과 북한의 정치체제 전망 : 몇 가지 시나리오와 전망¹⁸⁰⁾

북한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전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어떤 요인과 상황이 어떤 형태의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여기서는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가 제시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앞으로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¹⁸¹⁾

1) 시행착오 속에 현상을 유지하는 시나리오 (muddling through scenario)

이 변화의 시나리오는 김정일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부분적인 경제적·정치적인 개혁과 개방만을 추진하면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현재 파탄 직전의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정권 수립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에서는 지배 블록의 이완현상, 군부 쿠데타, 민중봉기, 본격적인 정치·경제부문의 개혁과 개방 등 정권붕괴나 체제전환의 조짐이 없는 가운데 김정

18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완규, “북한의 변화와 남한의 대북정책,” 『동북아 연구』 1997년 특집호, pp. 132-147 참조.

181) 스칼라피노 교수는 1) 시행착오속에 현상을 유지하는 시나리오(muddling through scenario), 2) 국가붕괴 시나리오(big bang scenario), 3) 정치적 다원주의 및 개방사회 시나리오(political pluralism and an open society scenario), 4) 권위주의적 다원주의 시나리오(authoritarian pluralism scenario)를 제시하고 있다. Robert A. Scalapino, *The Last Leninists: The Uncertain Future of Asia's Communist States* (Washington, D. 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92), pp. 81-89.

일이 기존체제를 고수하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당분간 북한에서는 체제변화 없이 김정일이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김정일은 권력승계를 마치고 당총비서와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고 권력기반과 지도력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경제를 기초로 하는 시민사회의 경험이나 서구형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반체제적 대중운동의 경험, 그러한 대중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조직, 인물, 더욱이 공산주의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대항문화도 존재하지 않는다.¹⁸²⁾ 또한 김정일정권은 150만 정도로 추정되는 지배층의 경제, 군사적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예산'이라고 불리는 친정경제(royal court economy) 부문을 운영하고 있다.¹⁸³⁾ 물론 이 부문 경제운영의 주목적은 지배층의 이반을 방지하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미국과 핵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북한은 일단 대외적 생존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이 계속 기존체제를 고수하면서 제한된 개혁·개방정책만을 추진하고 현재보다 더 극심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민중봉기나 군부 쿠데타의 발발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민중봉기가 성공하는 경우, 남한이라는 '대안국가'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정권, 체제, 국가가 동시에 붕괴될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현상유지 시나리오는 김정일정권이 자원배분정책을 바꾸어 체제위신을 세우기 위해 쓰이는 자본¹⁸⁴⁾과 군사비를 대폭

182) 사카이 다카시, "북한의 정치개혁 가시화되고 있다." 『사회와 사상』 제21호 (1990), p. 57.

183) Vasily Mikeev, "Reform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Requirement, Plans, and Hope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V, no. 1 (Summer 1993), p. 81-95.

삭감하여 경제위기 해소비용으로 전용하고 남한,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 관련당사국들이 김정일정권의 유지를 인정하면서 대규모의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김정일정권이나 관련당사국 모두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김정일정권으로서는 체제위신의 고양과 군사력은 가중되는 경제난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체제의 생존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수단이다. 특히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주세력인 남한과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가 군사적 도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이미 핵문제의 증폭과 같은 심리전략에서 그 성과가 입증되었다. 사실상 북한이 군사적 도발위협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들은 남한을 비롯한 관련당사국들로부터 원조를 받거나 이들과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 따라서 식량지원, 나아가서 체제의 생존도 보장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가중되는 주민의 생활고를 외면하면서까지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 군사적 도발위협 전략을 계속 추구하는 한, 남한을 비롯한 관련당사국들은 주민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 및 생필품지원 이외에는 그 어떤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기존의 생존전략이 한계국면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의 추구하고 남한과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의 모색 등 새로운 전기적 선택(critical choice)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184) 익명을 요구한 중국측(조선측)학자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측 전문가들은 1980년대 이래 이러한 비용을 약 50~1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고 한다.

2) 대붕괴 시나리오(big bang scenario): 국가변화

이 시나리오는 김정일정권과 사회주의체제 뿐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실체가 붕괴되어 사실상 '대한민국'이라는 대안국가에 의해 흡수통일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 동국국가들 중 서독이라는 대안국가의 존재 때문에 동독만이 국가붕괴를 경험한 경우와 동일한 것이다.

김정일정권의 붕괴가 단순히 정권의 변화나 체제변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 국가붕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김정일정권의 붕괴가 지배 블록보다는 피지배 블록, 즉 북한의 인민들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동독에서 호네커정권의 붕괴가 곧 국가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도 동독의 절대적 후원 세력이었던 구소련의 방관 하에 정권붕괴를 인민들이 주도하고 이들이 동독내의 다른 사회주의 정권보다는 서독에 흡수당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즉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다기 보다는 동독의 인민들이 스스로 흡수당하는 통일을 선택한 것이다.

최근 탈북자들 및 북한 방문 인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일성의 사망과 경제위기, 식량난으로 인하여 민중봉기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일련의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사회통제 및 체제이완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북한 주민들 간에는 “식량문제는 수재 때문만이 아니라 인재(人災)때문이기도 하다”는 말을 비밀스럽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늘고 있고 식량과 생필품의 공식배급체계의 와해로 인하여 주민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동원체제와 인민학습체제의 효율성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장마당과 소규모의 개인장사 활성화, 그리고 비공식 변경무역과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 그리고 장마당을 중심으로 '돈장사'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¹⁸⁵⁾ 식량난을 견디다 못해 중

국과 러시아로 탈북하는 주민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이 구소련이나 동구사회주의체제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국가에 저항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2사회 내지 시민사회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경우 시민사회나 반체제적 대중운동, 그리고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조직과 인물이 없고 체제유지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력-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 군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현상이 구소련이나 동구사회주의체제에서처럼 국가에 저항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제2사회 내지 시민사회의 형성으로 연결될 개연성은 크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은 쿠란(Timur Kuran)의 선호위장이론(theory of preference falsification)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 즉 쿠란에 의하면 혁명적 분계점(revolutionary threshold)은 정권에 반대하는 데서 오는 개인적 불이익과 같은 외적 비용(external cost, EC)이 반대를 선호하는 것을 위장하는 데서 오는 내적 비용(internal cost, IC)보다 작아지는 시점, 즉 $RT = EC < IC$ 의 등식이 성립할 때다.¹⁸⁶⁾ 또한 현재로서는 비공식부문의 활성화도 국가의 묵인 하에 공식부문의 역할을 대신하는 정도이지 체제를 부패시키거나 위협하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에서 단기간 내에 국가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국가붕괴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내적으로 김정일정권이 기존의 정책과 체제를 고수하는 가운데 경제위기를 해소하

185) 『중앙일보』 1997년 7월 2일.

186) Timur Kuran, "Now out of Never: The Element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of 1989," *World Politics*, vol. 32, no. 2 (Jan. 1991), pp. 16-21.

지 못하고 억압기제만을 갖고 정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관련 당사국, 특히 남한과 미국 및 중국의 합의하에 연착륙(soft landing)보다는 북한을 조기에 붕괴시키는 경착륙(hard landing)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이다. 경착륙정책은 식량을 비롯해서 일체의 대북지원 및 원조를 중단하고 북한 내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설사 김정일정권이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체제변화를 시도해도 그 회임기간 때문에 식량 폭동이 야기될 수 있으며 그것은 곧 민중봉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붕괴 여부는 북한 내부 요인보다는 오히려 대외적 요인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3) 체제변화 시나리오(system change scenario)

이 시나리오는 김정일정권 또는 김정일정권 붕괴 이후 들어서는 새로운 정권이 구조적인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정치, 경제부문의 개혁과 개방을 단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존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스칼라피노가 제시한 바 있는 권위주의적 다원주의-군부관료권위주의 또는 억압적 발전주의체제(repressive developmentalist system)-내지 정치적 다원주의, 그리고 시장사회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지금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부는 기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적 도발위협을 계속하면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혁·개방만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같이 농가책임제(household responsibility)를 도입하고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나 가격체제를 혁신하는 경제개혁과 경제관리에 있어서 당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등의 일부 정치개혁을 단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

는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노선중 어느 것도 선불리 선택할 수 없는 것이 김정일정권이 당면한 진정한 딜레마이다. 왜냐하면, 전자의 노선을 고수하면 경제위기를 해소할 수 없어서 정권 내지 국가붕괴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노선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구소련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칫 정권붕괴는 물론이고 공산당 지배체제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 시점에서 북한은 어느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일까? 일부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도 중국식 개혁·개방모델을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당-국가체제는 구소련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중앙집권적이며 강력하다. 그리고 분단국가인 관계로 남한이라는 경쟁국이 존재한다. 바로 이 사실이 북한이 중국식 모델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주원인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변화는 어떤 계기로 야기될 수 있는가? 두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가능성이 큰 것은 아니지만 김정일정권이 스스로 체제변화를 모색하는 길이 있다. 두 번째는 김정일정권이 개방과 내지 실용주의과를 주축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로 교체되거나 이들 세력과 군부가 제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체제변화를 시도하는 길이 있다 이 경우 체제의 성격은 일단 권위주의적 다원주의일 것이다.

김정일정권이 스스로 체제변화를 통한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주요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은 권력의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정권의 정당성 내지 존재근거는 '유혼통치'라는 구호가 시사하듯이 주체사상에 입각해서 김일성의 혁명위업을 계승·발전시키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식 사회주

의'의 본질적 요소를 포기 내지 부정해야 하는 체제변화는 김정일 권력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요인은 김정일이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체제 붕괴의 주원인을 경제문제로 보고 있지 않으며,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침체 현상도 사회주의체제 자체의 결함 때문에 야기된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의하면 사회주의체제의 와해는 사상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의 실패, 사회주의 기본원칙 고수의 실패, 중앙집권식 관리방식에 의한 관료주의와 세도주의의 만연, 외부 제국주의세력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내부에 있는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반혁명적 책동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⁸⁷⁾ 또한 김정일은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침체는 사회주의 사상교양을 등한시한 결과로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회주의 사상교양을 포기하고 개인이기주의를 조장시킨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침체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것을 구실로 행정명령식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를 거세하고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¹⁸⁸⁾

이와 같은 사실만을 고려한다면 김정일정권이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체제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187)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428-437; 김정일은 1994년 11월 1일 발표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제하의 논문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의 파산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는 기회주의에 의하여 일시 가슴아픈 곡절을 겪고 있지만 그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재생되고 중국적 승리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로동신문』 1994년 11월 5일.

188)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궤방은 허용될 수 없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19.

실제로 황장엽을 비롯한 많은 탈북자들과 비교적 북한사정에 밝은 중국 관리들의 대부분은 김정일이 건재하는 한 북한에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과 체제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일정권은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본격적인 개혁·개방과 체제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인가? 반드시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다. 본격적인 경제 개혁 및 개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부 정치개혁을 단행하지 않는 한, 당면한 경제난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경제난을 해결하지 않고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한을 비롯한 한반도 관련 당사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위협을 가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북한의 경제사정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관련 당사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의 위협을 수용하여 정권과 체제의 생존을 보장하면서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사정은 부분적인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매년 더욱 악화되어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민중봉기나 정권유지의 최후의 보루인 군부를 비롯한 지배 집단의 응집력이 와해되어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관련 당사국들도 북한의 위협에 항상 순응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보장도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새로운 정책노선을 선택해 왔다. 지금 북한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은 한편으로는 정권과 체제의 생존을 위기로 몰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김정일로 하여금 과거의 유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구조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사실 "북한의 문제는 김정일과 새로운 세대 지도자들이 김일성과 원로 세대 지도자들로부터 물려받은 장기적 문제들이다. 북한의 문제는

김정일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며 북한주민들은 새 지도자들에게 문제해결의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¹⁸⁹⁾ 자유무역지대의 창설과 신무역체계의 도입, 미국과의 핵협상 타결, 1998년 사회주의헌법의 개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김정일은 이미 기존 체제의 고수보다는 변화를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정책변화가 체제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정일정권은 새로운 개혁·개방정책이 정권과 체제 유지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이를 포기할 것이다. 또한 1998년 개정된 헌법에서 나타나는 형식적인 권력의 분산은 그 동안의 경제침체의 책임과 새로이 추진되는 일련의 경제개혁, 개방정책이 만약 실패하는 경우의 책임도 자신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김정일이 개혁·개방에 따른 위험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앞으로 남한과 미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러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이 다소라도 향상되어 간다면 김정일은 유헌통치의 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며 개혁·개방과의 정치적 입지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및 정치개혁과 개방정책은 가속화될 것이다. 그럴 경우, 이 정책은 과거 중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그 자체의 관성으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설사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김정일을 비롯한 지배집단은 과거로 회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오면 북한은 급격

189) Dae-Sook Suh, "Crisis Management in North Korea," *North Korea under Kim Jong Il and South Korea's Policy Option* (Seoul: Seoul Shinmunsa, October 1996), p. 135.

한 국가붕괴보다는 브레진스키가 제시한바 있는 단계별 체제변화-공산주의 퇴행의 4단계¹⁹⁰⁾: 공산주의식 전체주의→공산주의식 권위주의→공산주의이후의 권위주의→공산주의이후의 다원주의-의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4) 김정일정권의 항방

이제 김정일정권이 기존의 정책과 체제를 고수하는나, 아니면 새로운 전기적 선택을 통해서 체제변화를 모색할 것인가의 여부는 북한 자체의 요인보다는 남한과 미국, 일본 등 관련당사국의 대북정책의 성격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들 국가들이 북한의 급격한 정권 또는 국가붕괴보다는 단계별 변화를 선호하여 대북 수교와 자본투자 및 기술이전을 본격화하고 북한이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이용하여 가시적 성과를 얻는다면 반드시 '개혁·개방 = 정권 내지 체제위기'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김정일정권이 존속하는 가운데 점진적·단계적·연속적 체제변화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만약 관련당사국이 북한의 경착륙(hard landing)을 도모한다면 그들은 변화보다는 지금과 같이 계속 군사도발과 공멸위협을 무기로 기존정책과 체제를 고수할 것이고 그것은 급격한 정권 내지 국가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남한과 관련당사국이 1체제 1국가를 지향하는 흡수통일의 비현실성과 피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이 시점에서 대북정책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190) Zbigniew Bre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89), pp. 252-258.

할 것이다. 남북한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민족의 번영을 보장하는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경제회생과 체제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대북정책의 목표가 북한의 국가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관련당사국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하여 '북한살리기'와 '북한변화시키기'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언뜻 생각하면 이러한 일들은 분단을 영속화시키고 갈등과 극복의 대상을 키워주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1민족 1국가 1체제의 완전한 통일로 가는 가장 빠르고 바람직한 길이 될 것이다.

김정일 연구

인 쇄 : 1999년 12월 29일

발 행 : 1999년 12월 30일

발행처 : 통일부 정보분석국

제작처 : 웃 고 문 화 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Tel. 720-2141, 2143

*비매품

